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00-100176-01

DX, AX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 연구

연구수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책임자 김찬동
참여연구원 강보라, 박한빈, 송선미, 김주희, 박정훈
정진우, 한효정, 남경태, 홍지희, 오희영

문화체육관광부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00-100176-01

DX, AX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 연구

연구수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책임자 김찬동
참여연구원 강보라, 박한빈, 송선미, 김주희, 박정훈
정진우, 한효정, 남경태, 홍지희, 오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귀 부와의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본 보고서를
“DX, AX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2월

연구수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책임자 김찬동
참여연구원 강보라
박한빈
송선미
김주희
박정훈
정진우
한효정
남경태
홍지희
오희영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5

제2장 AX 시대 저작권 제도 개선 ····· 7

제1절 AI 학습 데이터 이용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 9

1. 서론 ····· 9
2. 생성형 AI 학습과 저작권 쟁점의 구조 ····· 10
   (1) 생성형 AI 학습행위의 개념과 저작권법적 분석 틀 ····· 10
   (2) AI 모델의 학습 과정 ····· 14
   (3) AI 모델의 학습 과정과 저작권 쟁점 ····· 14
3. 해외 주요국의 동향 및 시사점 ····· 17
   (1) 미국: 공정이용(Fair Use) 기반 접근 ····· 17
      1) 개요 ····· 17
      2) 관련 판례 ····· 18
   (2) EU: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규정 ····· 22
      1) 개요 ····· 22
      2) DSM Directive 제3조 및 제4조 ····· 22
      3) 관련 판례 ····· 24
      4) 관련 보고서 ····· 26
   (3) 일본: 정보분석 목적 이용 조항 ····· 27
      1)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 ····· 27
      2) AI 저작권에 관한 문화청 보고서 ····· 29
      3) 주요 동향 ····· 30
   (4) 영국: TDM 예외 도입 철회 ····· 31
   (5) 싱가포르: 컴퓨터 데이터 분석에 관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신설 ·· 32
   (6) 호주: 호주 정부, TDM 예외 규정 도입 배제 발표 ····· 34

(7) 해외 사례로부터의 정책적 시사점····· 35
4. 현행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에 대한 분석····· 36
(1)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규정의 구조····· 36
(2) 공정이용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과 그 시사점·····38
(3) 공정이용에 따른 AI 학습행위 판단 시 주요 쟁점·····40
(4) 공정이용 법리의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 검토·····42
5. TDM(Text and Data Mining) 예외 규정 도입 논의와 문제점·····42
(1) 국내 TDM 예외 도입 논의의 배경·····43
(2) TDM 예외 도입의 기대효과····· 44
(3) TDM 예외 도입 시 발생 가능한 법리적·정책적 문제·····44
6. 정책적 판단: 공정이용 vs TDM 예외의 비교 평가····· 46
(1) 공정이용 방식의 장점과 한계·····46
(2) TDM 면책 규정 방식의 장점과 한계····· 49
(3) 종합적 판단 및 개선 방안 : 공정이용 중심 접근의 타당성····· 51
7. 결론····· 53
제2절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 방안····· 54
1. 서론····· 54
(1) 연구 배경 및 목적····· 54
(2) 정책적 필요성 및 현행 법제 분석····· 55
1) 정책적 필요성····· 55
2) 현행 법제····· 55
3) 학습 데이터 공개 관련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발의 현황····· 57
(3) 이해관계자 의견····· 58
2. 해외 학습 데이터 공개 관련 법제도 검토····· 59
(1) EU····· 59
1) 범용 AI 모델 제공자의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Obligations)·· 59
2) 범용 AI 모델 학습 데이터 공개 요약 템플릿 전문·····60
3) 검토····· 67
(2) 미국····· 67
1) 연방····· 67
2) 주(州)····· 70
(3) EU AI법과 미국 내 AI 학습 데이터 공개 관련 법안 비교····· 72
3. 국내외 AI 학습 데이터 공개 관련 기술 동향·····73

(1) 데이터 출처 추적 및 메타데이터 관리 기술 ····· 73
(2) 모델 내 데이터 사용 검증 기술 ····· 74
4. 저작권법의 목적과 AI 학습 데이터 투명성 확보의 정합성 분석 ····· 76
(1) 저작권법 목적 ····· 76
(2) 투명성 원칙과의 관계 ····· 76
5. 학습 데이터 공개의 타당성 및 공개 범위 ····· 77
(1) 학습 데이터 공개의 타당성 ····· 77
(2) 저작권 보호와 영업비밀(기업비밀) 보호의 충돌 ····· 78
(3) 기술적 한계 및 방안 ····· 78
(4)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학습 데이터 공개 쟁점 ····· 79
1) 입법 목적의 정당성 ····· 79
2) 수단의 적절성 ····· 80
3) 침해 최소성 ····· 80
4) 법익 균형성 ····· 80
(5) 학습 데이터 공개 수준 및 권리 보장 체계 ····· 81
1) 학습 데이터 공개 제도의 구조적 요소 ····· 81
2) 사전 공개 제도의 특징 ····· 82
3) 사후 공개 제도의 특징 ····· 82
6. 학습 데이터 공개 도입 방안 및 입법(안) ····· 83
(1) 인공지능기본법 내 규정 도입 방안 ····· 84
1) 공개 의무 주체 ····· 85
2) 공개 대상 ····· 86
3) 개정안 ····· 87
(2) 저작권법 내 규정 도입 방안 ····· 87
1) 공개 의무 주체 ····· 88
2) 공개 대상 ····· 89
3) 개정안 ····· 90
7. 결론 ····· 91
제3절 AI 결과물의 표시 방안 ····· 92
1. 서론 ····· 92
(1) 콘텐츠 창작 과정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보편화·가속화 경향 ·· 92
(2)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를 위한 국내외에서의 관련 규제 동향 ····· 92
(3) 권리 귀속 및 침해 책임 등과 관련한 분쟁 발생 가능성 ····· 93

2.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관련 해외 규제 동향 및 기술 현황 ····· 94
(1) 유럽연합, 미국의 주 또는 연방 차원에서의 규제,
각 국가 차원에서의 인공지능 결과물 규제 동향 검토 ····· 94
1) 유럽연합 ····· 94
2) 미국 ····· 98
3) 중국 ····· 101
(2)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방법에 따른 특성 및 장단점,
표시 기술 도입 시 고려사항 및 한계점 극복 방안 ····· 104
1) 가시적 표시 방안 ····· 104
2) 비가시적 표시 방안 ····· 105
3) 표시 기술 도입 시 고려사항 및 한계점 극복 방안 ····· 107
3.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관련 국내에서의 입법적·정책적 논의 ····· 108
(1) 인공지능 기본법 ····· 109
(2) 공직선거법 ····· 112
(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4)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5)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방통위) ····· 119
(6) 소결 ····· 120
4.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제도의 실효성 및 법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규제 방안 등 검토 ····· 121
5. 결론 ····· 125
제4절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실연자 권리 확보 방안 ····· 128
1. 서론 ····· 128
(1) 연구배경 및 목적 ····· 128
2. 해외 주요국에서 디지털 모사 관련 입법 및 정책 대응 현황 ····· 129
(1) 미국 ····· 129
1) 미국저작권청 보고서 ····· 129
2) NO FAKES Act ····· 131
3) No AI FRAUD Act ····· 132
4) 주법 ····· 134
(2) EU ····· 135
3. 디지털 모사 관련 현행 법률 제도를 통한 실연자 보호 ····· 136
(1) 민법상 인격권을 통한 실연자 보호 ····· 136

1) 민법상 인격권 개념 ····· 136
2) 민법상 인격권을 통한 디지털 모사물 대응 가능 여부 ····· 136
가. 음성권 ····· 137
나. 초상권 ····· 138
다. 명예훼손 ····· 139
3) 민법상 인격권을 통한 디지털 모사물 대응 가능 여부 ····· 140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한 실연자 보호 ·· 141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타목의 입법 취지 ····· 141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타목의 요건 ····· 142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타목을 통한
디지털 모사물 대응 가능 여부 ····· 144
(3) 저작권법을 통한 실연자 보호 ····· 146
1) 실연자 보호취지 ····· 146
2) 실연자 의의 ····· 147
3) 실연자 권리 ····· 147
4) 저작권법을 통한 디지털 모사물 대응 가능 여부 ····· 148
4. 디지털 모사물 관련 실연자 보호 방안에 대한 제언 ····· 149
(1) 디지털 모사물 관련 실연자 보호 방안 연구 현황 ····· 149
(2)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실연자 권리 확보를 위한 입법적 제언 ····· 151
1) 법적 성격 ····· 151
2) 정의 규정 신설 ····· 152
3) 디지털 모사물 관련 권리 창설 ····· 153
4) 침해간주 규정 신설 ····· 155
5) 보호기간 ····· 155
6) 권리제한 규정 ····· 156
7) 개정안 ····· 156
5. 결론 ····· 157
제5절 AI 서비스 사업자 책임 제한 방안 ····· 159
1. 서론 ····· 159
(1) AI 서비스의 확산과 콘텐츠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 ····· 159
(2) 새로운 저작권 침해 패러다임의 등장 ····· 160
2. AI 생성 콘텐츠의 책임 귀속 문제 및 저작권법 적용 가능성 ····· 160
(1)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책임 귀속의 불명확성 ····· 160
(2) 저작권법상 OSP 책임 제한 규정 ····· 161

(3) AI 서비스 사업자의 OSP 해당 여부 ····· 168
3. AI 서비스 사업자의 OSP 지위에 대한 분석 ····· 170
(1) AI 서비스 사업자의 유형 분류 ····· 170
1)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 ····· 170
2) 응용 서비스 제공자 ····· 171
3) 통합 서비스 제공자 ····· 171
(2) 전통적인 OSP와 AI 서비스 사업자 간 기능과 역할에 대한 비교 ·· 171
(3) OSP 책임 제한 법리 적용에 있어서의 한계점 ····· 173
1) 각 사업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점 ····· 173
2) 각 사업자의 침해 양상에 있어서의 차이점 ····· 174
(4) RAG 기술의 특수성 ····· 176
1) 기술적 메커니즘과 저작권 침해 문제 ····· 177
2) RAG 기술과 OSP 책임 법리 간의 부정합성 ····· 177
4. AI 서비스 사업자 관련 해외 판례 검토 ····· 178
(1) 중국 ····· 178
1) 광저우 인터넷법원 울트라맨 판결(1차 울트라맨 판결) ····· 179
2) 항저우 인터넷법원·중급인민법원 울트라맨 판결
(2차 울트라맨 판결) ····· 179
(2) 독일 ····· 181
1) 뮌헨 지방법원 GEMA v. OpenAI 판결 ····· 181
2) 함부르크 지방법원·고등법원 LAION 판결 ····· 182
(3) 미국 ····· 184
5.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 186
(1) 현행 OSP 책임 제한 법리의 적용 및 한계 ····· 186
1) AI 서비스 사업자의 OSP 지위 및 면책 규정 적용 여부 ····· 186
2) 직접 침해 책임의 성립 가능성 ····· 187
(2) AI 서비스 사업자의 '주의 의무' 중심의 책임 체계 정립 ····· 187
1) 과정 중심의 책임 판단 기준 등 마련 ····· 187
2) 인공지능 기본법과 연계한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 189
(3) 전체 인공지능 공급망 기반의 역할 분담 논의 ····· 190
1) AI 세이프 하버 모델의 개념 및 취지 ····· 190
2) 모델 도입 시의 고려사항 및 한계점 ····· 191
(4) 권리 구제 및 보상 체계의 현실화 ····· 193
6. 결론 ····· 193

제3장 DX 시대 저작권 제도 개선 ····· 195

제1절 영상물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 행위에 대한 법적 성격 정립 ···· 197

1. 서론 ····· 197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97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199
2. 인터넷 송신 서비스 현황 ····· 200
   (1) 인터넷 실시간 송신 서비스의 주요 유형 ····· 200
   (2) 인터넷 음악 송신 서비스 유형 ····· 203
3. 방송과 통신의 개념 ····· 205
   (1) 방송의 개념 ····· 205
      1) 저작권법상 방송 ····· 205
      2) 방송법상 방송 개념과 저작권법상 방송의 개념 간의 관계 ····· 207
   (2) 통신의 개념 ····· 209
   (3) 방송과 통신의 차이 ····· 210
   (4) 요약 ····· 210
4. 국제조약 및 주요국 입법례 ····· 211
   (1) 국제조약 ····· 211
   (2) 주요국 입법례 ····· 216
      1) 유럽연합 ····· 216
      2) 독일 ····· 217
      3) 영국 ····· 218
      4) 일본 ····· 219
      5) 미국 ····· 222
   (3) 요약 ····· 224
5. 현행 저작권법상 공중송신 규율체계와 한계 ····· 225
   (1) 공중송신 규율체계의 형성과 구조 ····· 225
   (2) 현행 공중송신 규정의 해석과 적용 ····· 227
   (3) 현행 공중송신 규율체계의 구조적 한계 ····· 230
   (4) 영상물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에 대한 저작권법상 법적 성격 ····· 232
      1) 방송으로 보는 견해(방송설) ····· 232
      2) 그 밖의 공중송신으로 보는 견해(기타 공중송신설) ····· 233
      3) 디지털음성송신설으로의 포섭 가능성과 한계 ····· 234
      4) 전송으로의 포섭 가능성과 한계 ····· 235

(5) 영상물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을 둘러싼 주요 쟁점 ····· 235
(6) 유권해석에 의한 현행 적용과 한계 ····· 239
6. 결론 및 입법안 ····· 241
제2절 배타적 이용허락 범위의 확대방안 연구 ····· 246
1. 서론 ····· 246
2.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 방식 ····· 247
(1) 개요 ····· 247
(2) 저작재산권의 양도 ····· 247
1) 의의 ····· 247
2) 계약의 해석 ····· 248
(3) 저작물의 이용허락 ····· 249
1) 의의 ····· 249
2) 이용허락의 종류 및 내용 ····· 250
(4) 배타적 이용권 ····· 252
1) 개요 ····· 252
2)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 255
가. 도입 배경 ····· 255
나. 배타적발행권의 내용 ····· 256
(가) 의의 ····· 256
(나)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등 ····· 256
(다)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제한 등 ····· 257
3) 출판권의 설정 ····· 258
가. 출판의 의의 ····· 258
나. 출판권의 효력 ····· 259
3. 해외의 배타적 이용권 제도 현황 ····· 260
(1) 미국 ····· 260
1) 저작물의 배타적 이용 ····· 260
가. 규정 ····· 260
나. 서면계약 ····· 261
2) 종결권 ····· 262
(2) 독일 ····· 263
1) 배타적 이용권 ····· 263
2) 철회권 ····· 265
(3) 일본 ····· 265

1) 도입 배경……265
2) 내용…… 266
4. 현행 배타적 이용허락 제도의 개선 방안 검토…… 267
(1)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통합에 대한 기존의 논의……267
(2) 배타적 이용허락의 범위 확대 필요성……269
(3) 배타적 이용 제도 개정안…… 271
5. 결론……274
제3절 OSP 책임 제한 규정상의 통지 및 삭제 절차 운용 실태……276
1. 서론……276
2. OSP 책임 제한 제도 개요……277
(1) OSP 의의 및 책임 제한 제도의 도입 배경……277
1) OSP의 의의…… 277
2) OSP 책임 제한 제도의 도입 배경……277
(2) OSP 책임 제한 제도…… 278
1) OSP 유형별 책임 제한 요건……278
가. OSP의 유형……278
나. OSP의 책임 제한 요건…… 279
다. OSP 책임 제한 제도의 적용 범위…… 282
2) 현행 저작권법상 통지 및 삭제 절차…… 282
3. 미국 및 EU 제도 현황…… 284
(1) 미국…… 284
1) 저작권법상 OSP 책임 제한 제도…… 284
2) 미국 저작권청의 최근 논의…… 285
가. 논의 배경…… 285
나. 보고서 주요 내용…… 286
(2) EU…… 293
1) 전자상거래지침…… 293
2) DSM지침……295
가. 개요……295
나. OCSSP 책임 제한……296
(가) OCSSP의 의의…… 296
(나) OCSSP의 책임 제한 요건……297
(3) 소결…… 298

4. 주요 플랫폼의 통지 및 삭제 절차 운용 현황 파악 ····· 298
(1) 개요 ····· 298
(2) 다음카카오 ····· 299
1) 권리 보호 현황 ····· 299
2) 저작권 침해 처리 절차 ····· 299
(3) 네이버 ····· 300
1) 권리 보호 현황 ····· 300
2)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 ····· 301
3) 저작권 침해 처리 절차 ····· 302
4) 저작물 사전 보호 절차 ····· 303
(4) 구글 ····· 304
1) 개요 ····· 304
2) 저작권 관리 도구 ····· 306
가. 웹 양식 ····· 306
나. Copyright Match Tool ····· 307
다. Content ID ····· 308
3) 저작권 침해 처리 절차 ····· 308
5. 결론 ····· 309
제4절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 310
1. 서론 ····· 310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10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 311
2. 신탁 등록제도 개선 방안 ····· 312
(1) 현행 등록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 312
(2) 저작권 신탁의 법적 성질 ····· 314
(3) 저작권 신탁의 특수성 및 등록 현황 ····· 318
(4) 저작권 신탁단체들의 주장의 타당성 검토 ····· 320
(5) 신탁 등록제도 개선 방안 ····· 324
3. 실명 등록제도 개선 방안 ····· 326
(1) 문제의 제기 ····· 326
(2)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 ····· 327
(3) 실명 등록제도 개선 방안 ····· 330
4.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등록제도 개선 방안 ····· 331

(1)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 331
1) AI 시대의 저작권 등록제도 ····· 331
2)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의 문제점 ····· 333
(2) 개선방안 ····· 334
1) 미국 인공지능 결과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 분석 ····· 334
2) 국내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방안 검토 ····· 336
가. AI 활용 사항 기재 ····· 336
나. 생성형 AI 산출물 등록 문제 개선 ····· 339
3) 개정안 제시 ····· 341
가.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9호 신설 ····· 342
나. 별지 제20호의3서식 신설 ····· 343
다. 저작권등록부 서식 개정 ····· 346

제4장 결론 ····· 351

1. AI 학습 데이터 이용에 관한 제도 개선 ····· 353
2.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 ····· 353
3. AI 결과물의 표시 ····· 353
4.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실연자 권리 확보 ····· 354
5. AI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제한 ····· 354
6. 인터넷 실시간 송신 서비스의 법적 성격 재정립 ····· 354
7. 배타적 이용허락 범위 확대 ····· 354
8. OSP 책임 제한상의 통지 및 삭제 절차 ····· 355
9.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 355

참고문헌 ····· 356

보고서 요약

DX, AX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 연구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으로 저작물의 창작·유통·이용 및 침해 대응 방식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행 저작권 법제의 공백과 충돌 지점을 진단하고 9개 과제를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AX 분야에서는 첫째, AI 학습 데이터 이용과 관련해 경직된 TDM 예외 신설보다는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의 해석·운용을 보완하고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둘째, 학습 데이터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 목록 또는 요약정보 공개와 권리자 요청 시 정보 제공을 결합한 단계적 모델을 제안하고, 이용 확인 시 보상 연계를 검토하였다. 셋째, AI 결과물 표시제는 일률적 강제보다 권리관계 확인이 시급한 영역에 최소 의무를 부과하고 산업계 자율 레이블링을 병행하는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디지털 모사물은 실제 실연으로 오인될 수준에 한정해 권리 신설과 영리 목적 부당 이용의 침해 간주 규정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AI 서비스 사업자 책임 제한은 기존 OSP 규정의 한계를 고려하여 서비스 유형별 옵트아웃 준수, 투명성 확보 등 능동적 예방 노력을 조건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DX 분야에서는 여섯째, 영상물의 실시간 송신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여 송신행위에 대한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체계에서 이용자의 이용행위 관점 체계로 수정한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배타적 이용허락 범위 확대를 위해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을 통합한 '배타적 이용권' 도입과 전송을 포함한 모든 이용 형태로의 확장을 제안하였다. 여덟째, 통지·삭제 절차는 대규모 침해 대응을 위한 실효적 자구책이자 OSP 안전지대 확보 장치로 평가되며, 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 아홉째, 등록제도는 신탁 등록 명문화, 실명·이명 등록 합리화,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등록 서식 신설 등으로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권리 보호와 혁신이 공존하는 신뢰 기반 콘텐츠·AI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Copyright Laws and Institutions for the DX and AX Era

This study diagnoses gaps and conflicts in the current copyright legal framework amid rapid changes in the creation, distribution, and use of copyrighted works, as well as in responses to infringement, driven by the spread of digital transformation (DX) and AI transformation (AX), and examines nine selected policy issues. For AX: (1) rather than introducing a rigid TDM exception for the use of AI training data, it is more appropriate to reinforce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fair-use provision (Article 35-5) and to further develop related guidelines; (2) to enhance transparency in AI training data, a phased model is proposed that combines public disclosure of lists or summary information of copyrighted works used for training with disclosure upon rightsholders' request, while considering linkage to remuneration when use is confirmed; (3) AI-output labeling should adopt a dual-track approach, imposing minimal statutory obligations in areas where rights verification is urgent while also promoting industry-led voluntary standards; (4) digital replicas should be subject to a new right and infringement presumptions for unfair commercial use, limited to cases likely to be mistaken for actual performances; and (5) liability limits for AI service providers should be designed in light of the shortcomings of existing OSP rules and conditioned on proactive preventive efforts, including service-type-specific opt-out compliance and enhanced transparency. For DX: (6) real-time transmission of audiovisual works should be reclassified by shifting from a technology-based classification of transmission acts to a user-centered framework focusing on users' acts of exploitation; (7) exclusive licensing should be expanded by introducing a unified "exclusive right of use," integrating the publication right and the exclusive publication right, and extending it to all forms of exploitation, including transmission; (8) notice-and-takedown procedures should be further refined as an effective self-help mechanism for addressing large-scale infringement and as a key mechanism for OSP

safe-harbor eligibility; and (9) the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modernized through explicit statutory recognition of trust registrations, rationalization of registration rules for works registered under a legal name or a pseudonym, and the introduction of new registration forms for works created with the use of generative AI. These proposals seek to reduce legal uncertainty, prevent disputes, and contribute to building a trust-based content and AI ecosystem in which rights protection and innovation can coexist.

01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정보통신기술(ICT)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 아날로그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의미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의 시대를 거쳐왔다. DX 시대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하고 유통하여 이용하는 과정에서 권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방과 해결 방안에 대응하는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본격적인 서비스로 시작된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 AX)의 시대는 저작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인하여 '저작물 이용'과 '저작물 창작'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고, 저작권 체계가 전제로 해 온 인간 중심의 창작 개념, 저작물성 개념의 확장, 침해 대응의 실효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AI 기술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모델을 구축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 학습 데이터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 단계에서의 이용 적법성이 가장 핵심적이고 선행적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저작물의 창작, 유통, 이용이라는 기존 생태계의 가치사슬에 의문을 던지고 있으며, 현행법이 상정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권리 갈등과 법적 논의 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거대언어모델(LLM)과 확산 모델(Diffusion Model) 등 생성형 AI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저작물 학습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물의 이용 문제는 학습 데이터의 공개, 저작물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 산정 등 권리자의 주장과 산업계의 혁신 동력 확보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산출한 결과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딥페이크(Deepfake)와 딥보이스(Deepvoice)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모사물이 실연자의 인격적·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 등은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새로운 규범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창작 생태계의 위축과 인공지능 산업의 법적 리스크 증대로 이어져 국가적 경쟁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AX 시대의 도래가 강조되고 있으나, DX 시대부터 누적되어 온 디지털 유통 환경의 제도적 미비점 역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인터넷 실시간 송신(Streaming) 서비스는 기술적으로 방송과 전송의 경계에 놓여 있으나 법적 지위가 모호한 상태로 놓여 있다. 아울러 배타적 이용허락 설정 범위의 경직성은 다양한 2차적저작물 활용 시장에서의 계약 해석의 문제를 제기되고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책임 제한 절차 역시 고도화된 침해 수법을 따라가지 못해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권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 체계의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K-콘텐츠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차세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수용성과 창작자의 권익 보호라는 양 갈래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독자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법제도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9개 핵심 주제를 선정하고, 실질적인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주제의 경우 법률 개선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심층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DX, AX 시대의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저작권 법제도의 공백과 충돌 지점을 확인하고, 법적 쟁점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학문적 해석과 정책적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 저작권 법령, 판례, 학술 문헌 등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기존 법리의 한계를 규명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해석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법제 분석, 비교법적 검토, 제도 운영 실태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규범적·정책적 평가를 병행하였다. 아울러 연구의 실효성과 정책 적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 수행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8회의 의견 수렴과 3회의 서면자문을 실시하고, 중간보고 1회, 연구점검회의 1회, 워크숍 1회를 개최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해관계의 실질적 균형(Substantial Balance)을 위하여 창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저작권법의 대전제를 유지하면서도, 인공지능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 접점을 찾는 데 주력한다. 기술 중립성 및 유연성(Technology Neutral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래의 기술 변화에도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규범 체계 방안 제시를 지향하였다.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추상적인 제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 조문 개정 및 시행령을 마련하였다.

이에 AX와 관련된 저작권 쟁점 5개와 DX와 관련된 저작권 쟁점 4개를 도출하여 제2장과 제3장에서 각각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AI 학습 데이터 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AI 학습 과정에서 대량 데이터 이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공정이용 접근의 장점과 한계와 TDM 예외 규정 도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출처표시 의무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 및 대체 방안,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해외 주요국 동향을 종합하여 제도적 대안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해외의 배타적 이용허락 제도(미국·독일·일본 등)를 비교하여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고, 국내에서 출판권·배타적발행권 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배타적 이용허락의 범위 확대 및 개정안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OSP 책임 제한 규정상의 통지 및 삭제 절차 운용 실태와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점검한다. 또한 신탁 등록제도 개선, AI 활용 저작물 등록제도 개선 등 등록제도의 정비 과제를 검토한다.

02

AX 시대 저작권 제도 개선

제1절 AI 학습 데이터 이용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제2절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 방안

제3절 AI 결과물의 표시 방안

제4절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실연자 권리 확보 방안

제5절 AI 서비스 사업자 책임 제한 방안

제2장 | AX 시대 저작권 제도 개선

제1절 AI 학습 데이터 이용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1. 서론

인공지능(AI)의 등장과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기존의 저작물 이용 구조와 저작권 제도 전반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AI 모델 구축을 위한 학습 과정에는 대량의 데이터를 요구하고, 학습 데이터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때 어떠한 방식과 조건으로 이용되어야 하는지는 AI 학습에 관한 가장 핵심적이고 선행적인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생성형 AI 산출물이 인간의 창작 시장을 위협하거나 대체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과 우려가 커지면서 저작권자들은 인공지능의 학습에 이용되는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충분한 대가나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1] 반면, AI 산업계는 정부의 'AI 대전환을 통한 AI 3강 국가 도약'이라는 비전에 따라 AI 산업 육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저작권 문제로 인해 AI 학습을 위한 충분한 학습 데이터 확보가 제한되어 AI 산업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2]

이러한 대립은 표면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AI 산업의 혁신 촉진이라는 두 가치 중 어느 한쪽을 위해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충돌로 비추어진다. 그러나 AI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간이 만들어 낸 저작물이 포함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고, 창작 수단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발달된 AI 기술은 인간의 창작을 위해 갈수록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1) 2023년 이전까지 TDM 예외 도입에 유보적이었던 신탁관리단체와 권리자들은,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저작권 침해 위협이 가시화됨에 따라 최근 국내외를 불문하고 TDM 면책에 대해 매우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2) 이대희, "[ET시론] 저작권 문제, 한국 AI 발전을 늦추고 있다", 『전자신문』, 2025년 9월 19일, https://www.etnews.com/20250919000145

하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AI 산업의 혁신 촉진은 선순환 구조를 통해 상생 발전하여야 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창작자의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점이 무엇인가가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AI 학습 데이터의 법적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정한 조건에 따라 원활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생성형 AI 학습과 저작물 이용의 개념적 관계를 정리하고,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쟁점을 분석한다. 또한, 해외 주요국의 제도 및 사례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AI 학습 데이터 이용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생성형 AI 학습과 저작권 쟁점의 구조

(1) 생성형 AI 학습행위의 개념과 저작권법적 분석 틀

"학습행위"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GAI)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저작물이 포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전처리한 데이터를 이용해 모델이 통계적 규칙·패턴을 학습하여 내부 매개변수(Parameter: 어떤 시스템이나 함수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고정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각 단계에서 저작물의 복제·변형이 수반될 수 있다. GAI는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그 결과물이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3]

GAI 모델은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창발적 능력(Emergent Abilities)[4]을 획득하며, 이러한 성능 향상을 위해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개발하고자 하는 모델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와 수준은 달라질

3) GAI 결과물의 생성 그 자체는 "학습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학습행위를 통해 산출된 GAI 결과물의 성격, 종류,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은 학습행위에 대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GAI 결과물 침해에 대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참조.

4) 창발적 능력(Emergent Abilities)이란 모델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커졌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2022년 구글, 딥마인드 및 미국 협력 대학 연구진들은 언어 모델의 연산량 및 파라미터 크기를 키우다 보면, 어느 지점 이후로 갑자기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하는 것을 두고, 언어 모델로부터 특정한 속성이 예측할 수 없이 '창발'된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언어모델은 학습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학습하지 않은 산술 연산, 다국어 번역, 추론 능력 등을 보여준다. Emergent Abilities of Large Language Models(2022.08) 이에 대해 데이터 규모와 테스트 성과의 향상이 실제적인 유용성 증대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Rylan Schaeffer et al., "Are Emergent Abilities of Large Language Models an Illusion?", NeurIPS 2023 (May 2023): 9 등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상당한 규모의 데이터가 요구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GAI 모델이 AI 산출물을 만들어 내기까지 ①데이터 수집, ②데이터 전처리, ③모델 학습, ④모델 평가 및 최적화 단계를 거친다.[5] 각 단계에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이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6], 그 법적 성격은 행위의 기술적 목적과 이용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와 같은 GAI의 산출 공정 중 어느 단계에 있든, 저작권법상 '복제(Reproduction)'를 포함한 저작물 이용행위는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원본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거나,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여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고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용행위의 존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과 제도화 논의의 핵심 전제가 된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작가, 아티스트 및 언론사들과 AI 기업 간의 수많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7]은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되었다"는 사실을 기초로 한다. 만약 복제행위 자체가 부정된다면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할 단계조차 진입할 수 없다. 즉, 법원은 복제행위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그것이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이용인지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DSM Directive[8]) 제3조 및 제4조, 그리고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 등은 일정한 조건하에 TDM을 위한 복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 규정의 존재 자체가 역설적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AI 학습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시인하는 근거가 된다.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저작물 이용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AI 학습행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데이터 수집, 저장, 전처리, 학습 등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저작물 복제 및 이용행위별로 그 법적 성격과 허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규모 크롤링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같이 외부 저작물을 직접 수집·복제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저작

---

5) 각 단계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크게 학습단계와 생성단계로 구분하거나, 수집 및 "선별-학습-배치" 단계로 구분(미국 저작권청 제3부 보고서)하기도 하고, "접근-추출-마이닝-사용"으로 구분(Matthew Sag, The New Legal Landscape for Text Mining and Machine Learning)하기도 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2023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의 구분에 따라 각 단계별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6) 일본 문화청 보고서(2024)에서는 개발·학습 단계에서 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수집/가공', 사전 학습 단계에서의 '입력', RAG 등에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작성하는 경우의 '수집/가공' 단계에서 복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음. AI 저작권에 관한 논점 정리,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도소위원회, 2024., 19쪽.

7) 현재 미국 내 소송 건수: 총 65건 (그 중 3건은 자발적으로 취하됨), https://chatgptiseatingtheworld.com/2025/12/05/updated-u-s-map-of-copyright-suits-v-ai-dec-5-2025-64-suits/, 최종방문 26.1.7.

8)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2019년 4월 17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19/790 및 지침 96/9/EC 및 2001/29/EC의 개정)

권자의 경제적·법적 이익에 대한 영향이 클 수 있어,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 분석은 법적 위험 평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술적·경제적 관점에서 AI 학습 과정은 서로 독립된 복수의 이용행위라기보다 단일한 목적(모델 생성 및 성능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기능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 AI 학습은 데이터를 한 번 복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 및 전처리하고 반복적인 학습을 거쳐 모델의 매개변수를 조정하면서 성능을 평가하는 일련의 연속적인 기술적 과정을 거친다. 데이터 전처리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시적·중간적 복제는 대부분 해당 기술적 과정의 필수적 구성요소이며, 이러한 중간 복제를 개별적 독립행위로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예컨대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등의 상황에서 실제 기술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즉, AI 학습 과정은 개별 복제행위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이용'으로 파악하는 접근이 현실적이다. 만약 AI 학습 과정의 각 단계를 서로 독립된 복제행위로 본다면, 단계마다 개별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져야 하며, 이는 AI 개발에 막대한 법적 불확실성과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해외 판례와 제도 동향을 보더라도 이러한 흐름은 동일하게 관찰된다. 미국 Google Books 사건[9]에서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구글이 수행한 대규모 스캔과 기술적 처리 일체를 '검색 기능 제공이라는 변형적 목적을 위한 기술적 과정'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목적을 고려하여 공정이용을 인정하였다.[10] 특히 최근 판결한 메타(Kadrey v. Meta[11]) 관련 사건에서도 AI 학습 과정을 구성하는 개별 복제행위에 독립적인 침해 책임을 묻기보다는 전체 공정의 목적이 도구적·기능적(Functional)인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물인 모델이 원본 시장을 대체하는지 여부를 통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생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유기적인 '비표현적 이용'으로 파악하려는 사법부의 시각을 반영한다.

9) Authors Guild v. Google, Inc., 804 F.3d 202 (2d Cir. 2015).

10) 미 제2연방항소 법원은 구글의 일련의 기술적 행위를 단계별로 분리된 침해 행위로 보지 않고, 검색 기능 제공을 위한 변형적, 공익적 목적의 이용 전체로 평가하면서, 대규모 복제(전면 스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전체적 맥락에서 공정이용으로 판단한 바 있음. 그 외 Authors Guild, Inc. v. HathiTrust, 755F.3d 87, 97(2d Cir. 2014); Sony Comput. Ent., Inc. v. Connectix Corp., 203 F.3d 596, 606(9th Cir. 2000) 참조.

11) Kadrey v. Meta Platforms, Inc., Case No. 23-cv-03417 (N.D. Cal. Nov. 20, 2023). (이하 'Meta 사건'이라 한다).

일본의 TDM 예외 규정[12] 역시 데이터 수집·처리·분석의 각 단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AI 학습 과정 전체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과 비표현적 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현대의 정보기술 기반 분석·학습행위가 전통적 복제 개념과 달리 연속적·기계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적 반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아래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최근의 앤트로픽(Bartz v. Anthropic[13]) 판결은 이러한 통합적 접근론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해당 법원은 학습 목적의 이용 그 자체는 공정이용의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그 전제가 되는 대규모 불법복제물의 수집 및 보관 행위에 대해서는 학습 과정과 분리하여 별도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생성형 AI와 관련한 법적 평가는 전체 공정의 기능적 가치를 인정하는 흐름 속에서도, 데이터 취득 및 보관 단계의 적법성을 엄격히 따지는 다각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AI 학습행위를 저작권 측면에서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용행위의 성격과 위험도를 파악하는 분석적 접근이 필요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AI 학습 전체가 추구하는 목적, 해당 이용이 저작물의 정상적 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권리자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총괄적 판단 구조가 적절하다. AI 학습 과정에 대한 공정이용 판단은 '단계별 검토'와 '총괄적 목적 판단'이라는 두 축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구조가 타당하며, 이러한 관점은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저작권 보호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는 실효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AI 학습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각 단계에서 저작권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검토한다.

---

12) 제30조의4(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 저작물은 다음의 경우, 그 밖에 해당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을 스스로 향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향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의 종류나 용도 및 해당 이용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작물의 녹음, 녹화, 그 밖의 이용에 관련된 기술 개발 또는 실용화를 위한 시험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정보 분석(다수의 저작물, 그 밖에 대량의 정보로부터 해당 정보를 구성하는 언어, 소리, 영상, 그 밖의 요소에 관련된 정보를 추출, 비교, 분류, 그 밖에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도 같다.)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3. 전 2호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표현에 관한 사람의 지각에 의한 인식을 수반하지 않고 해당 저작물을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과정에서의 이용, 그 밖의 이용(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전자계산기에 의한 실행을 제외한다.)에 제공하는 경우

13) Concord Music Group, Inc. v. Anthropic PBC, Case No. 24-cv-03046 (N.D. Cal. filed May 22, 2024). (이하 'Anthropic 사건'이라 한다).

(2) AI 모델의 학습 과정

AI 학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GAI 학습을 위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원본 데이터(어문, 그림, 음악, 영상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데이터) 수집하게 된다.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주로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활용된다.

〈 학습 데이터 수집 방식 〉

□ 공개 데이터세트 및 공공DB 활용
□ 제3자로부터 데이터세트 확보
  -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이용허락 계약 체결
  - 제3자(비공개 데이터베이스제공자, 데이터 중개업체 등)로부터 민간 데이터세트 확보
□ 웹 크롤링(Web Crawling,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수집)
□ 웹 스크레이핑(Web Scraping, 필요 정보만 선별 추출)
□ 직접 데이터 구축(직접 수집, 설문 등)
□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AI 학습에 사용하는 실제 자료를 모방한 가상의 데이터
□ 오프라인 출처에서 수집 또는 자체적으로 디지털화(예: 디지털화된 아날로그 텍스트 콘텐츠, 이미지 등)

학습에 이용될 데이터를 확보한 이후에는 "데이터 전처리(Preprocessing)"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정제)되고 분할(토큰화) 및 일관성 부여(정규화)가 이루어지며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고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수집된 데이터를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모델 학습(Training)"은 G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전처리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단계로,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노출될 때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델의 매개 변수를 반복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후 검증 데이터셋을 이용한 성능 평가 및 모델 구조나 학습률, 파라미터 조정 등을 통해 GAI 모델에 대한 평가 및 최적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 전반에서 학습 데이터의 반복적 이용과 이에 수반되는 기술적 처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비스 또는 실제 응용 환경에 배포·활용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3) AI 모델의 학습 과정과 저작권 쟁점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며(저작권법 제16조), 우리 저작권법에서의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22호). 복제에는 인쇄·사진 등의 가시적인 복제뿐만 아니라 녹음·녹화 등의 재생 가능한 복제를 포함하며, 복제의 방법이나 수단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저작물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저장하는 때에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한다.

GAI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별로 저작권법상 복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우선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GAI 모델 학습을 위한 학습 데이터가 수집·축척 된다.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는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영상 등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수집·축적하기 위하여 웹크롤링이나 디지털 형태로 저장(다운로드 등)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 행위에 해당하며 저작재산권자에게 부여된 복제권(제16조)과 관련될 수 있다. 나아가 오프라인으로 배포된 도서, 미술저작물 등 디지털화되지 않은 저작물을 디지털화하는 때에도 외형상 저작권법상의 '복제' 행위가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이용자의 복제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 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저작물에 대한 '접근(Access)'의 적법성은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 여부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법적 쟁점으로 다루어진다. 특히 DMCA 제1201조는 저작권자가 설정한 접근 통제 기술을 무력화하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을 제공한다. 이러한 DMCA상의 접근 통제 규정은 저작권법 제106조가 규정하는 독점적 권리(복제권 등)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책임 층위'를 형성한다. 예컨대 미국 판례(MDY Industries, LLC v. Blizzard Entertainment, Inc. 등)는 저작권 침해(Copyright Infringement)와 DMCA상의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DMCA Violation)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다. 즉, 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설령 그 후속 이용행위가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부정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기술적 접근 통제를 우회했다면 DMCA 위반에 따른 독립적인 책무를 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AI 학습 데이터 수집의 정당성 확보가 단순히 '학습 목적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획득 경로의 적법성'까지 아울러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우리나라 저작권법 역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 통제 문제는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를 통해 실질적으로 규율된다. 우리 법 제104조의2는 저작권 보호뿐만 아니라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의 무력화까지 금지하고 있어, 미국의 DMCA와 마찬가지로 이용행위의 정당성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위법성 판단 층위를 형성한다. 따라서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했다면, 설령 그 후속 이용행위가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이용(Fair Use) 등 저작제산권 제한 사유에 따라 그 이용이 인정될지라도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에 따른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AI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 검토는 데이터의 '이용' 단계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데이터 '취득' 경로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독립적이고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GAI 학습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웹 크롤링이나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을 수행할 때, 저작권자가 설치한 접근 제한 기술(예: 로그인 요구, robots.txt, IP 차단, DRM 등)을 우회하여 저작물에 접근하는 경우, 이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에 해당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집·축적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정보 삭제(정제), 분할(토큰화), 일관성 부여(정규화) 등 일련의 기술적 처리를 위해 학습 데이터를 클라우드 등 저장공간에 불러와 처리하게 되며, 이때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저장공간에 고정되므로 저작권법상 복제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모델 학습(Training) 과정 또한 대량의 저작물이 일괄적·반복적으로 처리되고, 이 과정에서 저장공간에 복제물이 저장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 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AI 모델이 자율적으로 생성 과정을 수행하며, 학습된 가중치에 기반한 확률적 계산을 통해 결과물이 산출되므로, 모델 내부에 특정 저작물이 저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14]을 제기한다.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대규모 언어모델이 학습 데이터의 특정 표현을 매개변수에 잔존시키거나 유사 형태로 재현하는 이른바 '암기(Memorization)' 현상이 존재한다고 지적[15]하며, 학습 데이터의 실질적 이용 여부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복제행위란 저작물을 인쇄·촬영·복사·녹음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정된 내용이 실제 인간에 의해 직접 인식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물의 표현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제로 인정될 수 있다. 즉, AI 모델이 수치 벡터화된 학습 과정을 거치더라도, 결과적으로 해당 모델이 특정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고도의 유사성으로 재현해 낼 수 있다면, 이는 모델이 해당 표현을 내재적으로 복제하여 보유하고 있던 것과 다름없다는 규범적 평가를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원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요소가 모델의 매개변수 속에 어떤 형태로든 잠재되어 있다가 결과물로 표출되는 것이라면, 이는 기술적 고정 방식을 불문하고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표현의 복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14) Matthew Sag, "The New Legal Landscape for Text Mining and Machine Learning", 66 Journal of the Copyright Society of the U.S.A. 291, 300~302, 357~358 (2019). 저자는 컴퓨터가 저작물을 처리하는 행위가 인간의 감상과 달리 수학적 함수를 적용하여 추상적인 통계치(Abstract Statistics)를 산출하는 과정임을 강조한다. 특히 텍스트를 데이터로 전환하여 얻은 메타데이터나 분석적 결과물은 저작물에 '관한' 정보(Information About The Work)일 뿐 저작물 '자체'의 표현(Information Of The Work)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원본 저작물의 복제물로 볼 수 없다고 논증한다.

15) Carlini, Nicholas et al. (2023). "Quantifying Memorization Across Neural Language Models."-모델 크기와 기억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LLM의 데이터 잔존·복원 가능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확인 필요), U.S. Copyright Office (2023, 2024).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생성형 AI학습 과정에서의 데이터 재출력 위험, 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포함

보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전처리 및 학습 단계에서 생성형 AI 모델이 학습 가능한 형태를 확보하기 위해 원본 데이터를 분해·가공·변환하는 과정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복제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법상 복제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GAI 학습행위의 각 과정(①데이터 수집, ②데이터 전처리, ③모델 학습, ④모델 평가 및 최적화 단계)에서 저작물의 저장이 이루어지게 되며, 그 저장 매체의 형태를 불문하고 저작권법상 '복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제23조부터 제35조의5)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며,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제46조제1항, 제2항).

3. 해외 주요국의 동향 및 시사점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AI 학습과 관련하여 각국의 저작권법을 통해 학습 데이터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각국의 접근 방법은 크게 미국과 우리나라와 같은 공정이용 규정의 해석으로 접근하거나, 별도 TDM 예외를 규정하여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제도 및 관련 판례, 정책에 관한 동향을 살펴보면서 참고할 수 있는 지점들을 검토한다.

(1) 미국: 공정이용(Fair Use) 기반 접근

1) 개요

미국 저작권법은 제107조에서 공정이용(Fair Use)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별로 법원이 이용행위의 성격을 판단하도록 하는 개방형(Open-ended)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과 이용 행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환경에서 저작권법이 지나치게 경직되는 것을 방지하고, 저작물 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공정이용은 특히 디지털 환경·AI 개발 등 기술 발전 상황에서 핵심적인 법적 판단 기준으로 기능해 왔다.

공정이용 여부는 법문이 제시하는 네 가지 판단 요소, 즉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성격, ③ 이용된 부분의 양과 본질성, ④ 이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미국 법원은 이 네 가지 요소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이용행위가 새로운 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 즉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

여부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16] 특히 Google Books[17], HathiTrust[18] 등 대규모 디지털 분석·검색 사례에서 변형성이 공정이용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공정이용 규정은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의 합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AI 학습·생성 기술을 둘러싼 공정이용 논쟁에서도 그 해석과 적용이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2) 관련 판례

미국은 현재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의 최전선에 있으며, 2025년 현재까지도 60여 건 이상의 다수 판례가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19] 이러한 소송들은 AI 기술 혁신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과 원저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법률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이 중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판결인 앤트로픽(Anthropic), 메타(Meta), 그리고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사건에 대한 검토는 생성형 AI 저작권 담론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앤트로픽과 메타 사건은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과정에서 사용된 도서 데이터의 성격에 따른 '공정이용' 여부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톰슨 로이터 판결은 전문 데이터베이스의 상업적 활용에 대해 공정이용을 부정한 최초의 실질적 판례 중 하나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a) Andrea Bartz et al. v. Anthropic PBC 사건[20]

2025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생성형 AI 모델 Claude의 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진 Anthropic의 저작물 이용 중 일부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만, 불법복제물을 영구적으로 구축하고 보관하는 방식의 이용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1]

Anthropic은 Claude 개발을 위해 다수의 도서를 디지털 라이브러리에 저장하고 일부를 LLM 학습에 사용하였는데, 법원은 이용 목적에 따라 해당 행위를 구분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LLM 학습을 위한 복제는, 생성형 모델이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석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출력물도 원저작물의 표현을 대체하지 않는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16) 네 가지 요소 중 변형성(Transformative Use)을 핵심 요소로 보는 것은 Campbell v. Acuff-Rose Music 판례 이후 확립된 경향을 반영한 해석론으로, 법문상 명시된 기준은 아님
17) Authors Guild v. Google, Inc., 804 F.3d 202 (2nd Cir. 2015).
18) Authors Guild, Inc. v. HathiTrust, 755 F.3d 87 (2d Cir. 2014).
19) ChatGPT Is Eating The World, 2026.1.18. 최종 접속, https://chatgptiseatingtheworld.com
20) Andrea Bartz et al. v. Anthropic PBC, No. 3:24-cv-05417-WHA (N.D. Cal. June 23, 2025)
21) 본 결정은 본안 침해 판단에 앞서 공정이용 여부만을 심리한 약식판결이다.

Use)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이용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쇄본을 구입해 스캔한 사본 역시 외부 배포가 없는 내부적 활용이라는 점에서 공정이용으로 인정하였다.

반면, 불법복제물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도서를 영구적으로 보관한 이용행위는 변형적 목적이 없고, 상업적 판매 시장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과도한 양의 복제를 정당화할 사유도 없다는 점에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특히 불법복제물을 비축해 두는 행위는 "잠재적 활용 가능성만을 염두에 둔 비변형적 이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판결은 LLM 학습 목적의 복제와 불법복제물 보관을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달리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학습 목적의 복제는 공정이용이 될 수 있으나, 데이터 수집·보관 과정에서의 불법적 복제행위는 공정이용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b) Kadrey et al. v. Meta Platforms, Inc. 사건[22)]

2025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Meta가 생성형 AI 모델 Llama 훈련을 위해 작가들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이 제기한 직접 복제 침해 주장에 대해 Meta의 약식판결 신청을 인용하였다. 본 결정은 공정이용 여부만을 판단한 제한적 범위의 결정이며, 불법 배포 주장 등 일부 쟁점은 별도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Meta는 Books3, LibGen 등 이른바 '섀도 라이브러리(Shadow Libraries)'에서 도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인쇄본을 스캔하여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였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원고들은 이러한 무단 복제와 AI 학습이 시장 잠식과 작품 희석(Dilution)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공정이용 판단에서 변형성(Transformative Use)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Meta의 복제가 언어모델 개발이라는 새로운 목적을 위한 변형적 이용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Llama 모델은 이메일 편집, 요약, 번역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원작의 대체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복제량이 저작물 전체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LLM 학습에는 전체 텍스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의 이용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Meta가 사후적으로 모델이 저작물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도록 완화 조치를 시행한 점도 고려되었다. 시장 영향 요소에서도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시장 희석 또는 라이선스 시장 상실 주장에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특히 Llama가 원저작물을 의미 있는 범위에서 재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실험 결과 50단어 이상의 재현이 확인되지 않았고, Meta가 제출한 경제 분석 또한 Llama 출시가 원고들의

22) Kadrey v. Meta, No. 3:23-cv-03417-VC (N.D. Cal.)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국 법원은 Meta의 AI 학습을 위한 복제행위는 변형성이 높고 시장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직접 침해 주장은 기각되었다. 다만, 불법복제물을 통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의 배포 침해 여부 등 일부 쟁점은 향후 별도로 판단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 판결을 생성형 AI 모델 훈련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확정적 선언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판결문의 구체적인 논거를 살펴보면, 법원은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허락 없는 AI 학습 이용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번 메타의 승소는 원고(작가들) 측의 전략적 입증 실패에 기인한 예외적 사례임을 명확히 하여 이번 판결의 결정의 효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판결을 내린 빈스 차브리아(Vince Chhabria) 판사는 판결문 서두에서 생성형 AI 기업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는 관행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법원은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대답(불법 여부)은 '그렇다'일 가능성이 높"으며, "생성형 AI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로 훈련되어 시장에 무한한 콘텐츠를 쏟아낸다면, 이는 인간이 창작할 유인을 극적으로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메타의 AI 모델 훈련이 저작물의 원래 목적과는 다른 새로운 도구를 만드는 것이므로 제1요소인 이용의 목적과 성격에서 매우 변형적(Transformative)이라고 인정하면서도, AI가 저작물 시장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면 이용 목적이 아무리 변형적이라 할지라도 공정이용이 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향후 소송에서 원고가 시장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오히려 AI의 기술적 혁신성(변형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없음을 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Meta 판결은 생성형 AI 학습의 공정 이용을 보편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이는 원고 측이 AI가 초래할 실질적인 시장 위험(시장 희석)을 입증하지 못한 특수한 상황에서 내려진 제한적 판결이며, 법원은 오히려 무단 학습이 원칙적으로 위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공정이용 요소별 판단 정리 〉

구분 / 판단 기준	Meta	Anthropic		
		LLM 학습	중앙 라이브러리 구축	
			합법복제	불법복제
① 이용의 목적과 성격	○	○	○	X
추후 LLM 학습에 이용될 경우			변형적 이용	비변형적 이용
② 저작물의 성격	X	X	X	X
③ 전체 저작물 대비 사용된 부분의 양과 본질	○	○	○	X[23]
④ 잠재적 시장이나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	○	△[24]	X

c) Thomson Reuters Enterprise Centre GmbH et al. v. Ross Intelligence Inc. 사건

2025년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은 Ross Intelligence가 법률 검색 플랫폼 Westlaw의 헤드노트(Headnotes)를 AI 학습에 무단 사용한 행위가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Westlaw 헤드노트가 판결문 요약이라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편집자의 선택·구성 과정에서 최소한의 창작성(Minimal Creativity)이 존재한다고 보아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공정이용과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 네 가지 요소를 개별·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① **이용 목적·성격:** Ross의 이용은 상업적이며 Westlaw 기능을 대체하려는 비변형적(Non-transformative) 이용으로 판단됨.
② **저작물의 성격:** 헤드노트는 창작성은 낮으나 보호 대상 저작물로 인정됨.
③ **이용의 양 및 본질성:** Ross가 상당한 양의 핵심 헤드노트를 학습에 활용하여 원저작물의 본질적 요소를 복제한 면은 있으나, 법원은 학습 단계의 복제량보다 '최종 출력물'에 원저작물의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 요소를 공정이용에 유리하게 평가함.
④ **시장 영향:** Ross의 제품이 Westlaw와 직접 경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시장 대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함.

23) 법원은 Anthropic이 불법복제물을 보유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판단함. 또한 LLM 학습이나 기타 다른 용도에 유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가능한 모든 책을 확보하려던 Anthropic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과도한 복제라 판단하여 공정이용에 불리하게 작용

24) 법원은 Anthropic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종이책을 보관 공간 절약과 검색을 위해 디지털로 변환한 것은 단순한 '포맷 변경(Format Change)'에 불과하다고 보았음. 또한, 해당 디지털 사본을 외부로 재배포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작가)들의 정당한 권리나 시장 수요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판결문 29면 This factor is thus neutral for the purchased library copies converted from print to digital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토대로 Ross의 공정이용 주장을 기각하였다. 본 사건은 생성형 AI를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변형성 부족, 대량·핵심적 이용, 시장 대체 가능성 등이 결합될 경우 공정이용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AI 학습 데이터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 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EU: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규정

1) 개요

2019년 제정된 유럽연합 DSM 저작권 지침(이하 'DSM 지침')은 "패턴, 트렌드 그리고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디지털 형태의 텍스트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자동화된 분석 기술"(DSM 지침 제2조제2항), 즉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이하 TDM)에 관한 제3조 및 제4조 등 규정을 마련하였다. 정보사회지침(InfoSoc Directive)의 포괄적인 복제권 규정으로 인해 TDM 수행 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발생하자, 법적 명확성을 위해 별도의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DSM 지침은 과학 연구를 위한 TDM의 자유 보장은 자명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상업적 영역의 TDM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했다. 네덜란드 대표단의 제안으로 상업적 TDM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선택적 면책 조항이 추가되었고, 유럽의회는 최종적으로 이를 의무적 조항으로 격상시켰다.[25]

2) DSM Directive 제3조 및 제4조

제3조 과학적 연구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1) 회원국은 연구기관과 문화유산기관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그들이 합법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을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하기 위해 복제하고 추출하는 것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보호지침 제5조(a)와 제7조제1항,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2조 및 이 지침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복제물은 적절한 수준의 보안을 갖춰 저장하여야 하고, 연구결과의 검증 등 과학적 연구 목적을 위해 유지할 수 있다.

(3) 권리자들은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이 호스팅되는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4) 회원국은 권리자, 연구기관 그리고 문화유산기관이 제2항과 제3항에 각각 언급된 의무와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합의된 최적 관행을 정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25) P. Bernt Hugenholtz (정보법 연구소(IViR)), 2019.7.24.,The New Copyright Directive: Text and Data Mining (Articles 3 and 4), Kluwer Copyright Blog, https://legalblogs.wolterskluwer.com/copyright-blog/the-new-copyright-directive-text-and-data-mining-articles-3-and-4/

제4조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예외와 제한

(1) 회원국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복제와 추출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지침 제5조(a)와 제7조제1항,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2조, 컴퓨터프로그램지침 제4조제1항(a)와 (b) 그리고 이 지침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예외와 제한을 규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복제물과 추출물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목적으로 필요한 한 보관될 수 있다.

(3) 제1항에 규정된 예외와 제한은 제1항에 언급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이 권리자에 의해,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공중에게 이용 제공되는 경우에 기계가독형 수단 등, 적절한 방법으로 명시적으로 유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4) 이 조항은 이 지침 제3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DSM 제3조는 '연구기관 및 문화유산기관'이 수행하는 복제 및 추출 행위를 면책한다. 문화유산기관은 공공 접근 가능한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 영화 또는 음성 유산 기관으로 정의되며, 연구기관은 비영리 단체 또는 회원국이 공공 연구 임무를 부여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에 따르면 과학 연구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해 복제 및 추출이 가능하도록 하며, 연구 결과 검증을 포함한 과학 연구 목적으로 적절한 보안 수준으로 복제본을 보관할 수 있다. 제7조[26]에 따라 제3조에 반하는 계약 조항은 무효가 된다. 권리자는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보안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조는 제4조와 달리 권리자의 옵트아웃(Opt-out) 권한을 제공하지 않으며, 회원국은 권리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DSM 지침 제4조는 모든 주체가, 모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의 복제 및 추출을 허용하지만, 권리자가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사용을 유보(Opt-out)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SM 지침은 온라인상 공개된 저작물의 경우, 메타데이터 및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포함한 기계 판독 가능한 수단의 사용을 통한 권리 유보만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형태의 이용에서는 계약 조건 또는 권리자의 일방적 선언으로 유보 가능하다. EU AI Act의 공표 이후, 제4조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저작물로 AI 모델을 훈련하는 것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AI Act 제53조는 일반 목적 AI 모델 제공자들이

26) 제7조(공통 규정) (1)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예외와 배치되는 계약 규정은 무효이다.
(2)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5조제5항은 이편에 따라 규정된 예외와 제한에 적용되어야 한다.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6조제4항의 첫째와 셋째 그리고 다섯째 문단은 이 지침의 제3조 내지 제6조에 적용되어야 한다.

참고)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5조(예외 및 제한) 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예외들 및 제한들은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정상적인 이용에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적법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에 따른 옵트아웃 유보를 식별하고 준수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DSM 제3조와 제4조의 경우에도 모든 개별적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와 마찬가지로 3단계 테스트를 준수해야 한다. 즉, DSM 지침 제7조제2항에 따라 TDM 면책규정에 대해서도 3단계 테스트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27], 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대한 훼손 내지 정상적 이용을 불가능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3) 관련 판례

EU 내에서 TDM 예외와 권리자의 옵트아웃(Opt-out) 요건을 둘러싼 법적 판단은 국가별, 심급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옵트아웃의 방식과 관련하여 독일 함부르크 고등법원(2심)[28]은 AI 학습 모델의 전 단계인 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복제행위가 TDM 규정의 적용 대상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연어(영어)로 적힌 이용 거부 의사가 '기계 판독 가능한' 유효한 형태인지에 대해서는 당시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단정할 수 없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1심[29]의 판단을 뒤집었다. 반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뉴스 수집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책임 부정하면서, TDM 면책의 배제를 위한 Opt-out 방식은 기계 판독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GPTBot등 특정 AI 봇을 차단하는 robots.txt 설정은 Opt-out에 해당되지 않는다[30]고 보았다. 이는 옵트아웃의 방식이 표준화되지 않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옵트아웃을 규정한 조문의 해석에 대해서도 EU 내에서 불명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언론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이용한 경우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헝가리 부다페스트 지방법원은 DSM 지침 제4조에 관한 해석 및 적용 범위에 관해 EU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단(Preliminary Ruling)을 통해 질의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CJEU에 회부된 첫 번째 주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질의 내용은 모델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과 아웃풋에 저작물이 포함되는 것이 복제와 공중전달 해당하는지 여부, 훈련 행위가 TDM 예외에 의해 정당화되는지 등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 EU사법재판소가 어떤 답을 내리는지는 입법에 버금가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31]

---

27) 최승재, TDM 예외와 베른 협약의 3단계 테스트,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 위원회 동향
28) OLG Hamburg, Urteil vom 10.12.2025 - 5 U 104/24(Kneschke vs. LAION)
29) 1심은 '자연어'로 작성된 옵트아웃 방식도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의 권리유보 선언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음; LG Hamburg, Urteil vom 27.09.2024 - 310 O 227/2;
30) ECLI:NL:RBAMS:2024:6563, Rechtbank Amsterdam, 13-11-2024, C/13/737170 / HA ZA 23-690
31) 이일호,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AI-저작권 관련 첫 선결적 판단 요청받아,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제8호, 2025.8.

최근 EU에서 TDM 예외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판례로는 독일 음악저작물 관리단체인 GEMA가 거대 언어모델(LLM) 개발 및 운영자인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 OpenAI의 ChatGPT 모델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한 판결[32]이다. 이 사건은 OpenAI의 ChatGPT 서비스가 GEMA가 관리하는 9개 독일 노래 가사를 이용자의 질문(Prompt)에 대한 답변(Output)으로 그대로 또는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재현한 것이 문제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뮌헨 제1지방법원은 LLM 모델 내부에 저작물이 저장되는 현상, 즉 '기억 현상'(Memorization)이 독일 저작권법 제16조에 따른 복제에 해당하여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이러한 모델 학습 과정의 영구적 저장 행위는 TDM(Text and Data Mining) 예외 규정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앞서 헝가리에서는 DSM 지침 제4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CJEU에 선결적 판단을 요청한 반면, 이번 판결은 독일에서 직접적으로 TDM 예외 적용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향후 AI 법제의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33]

EU 내에서의 위 판결들은 결국 TDM 예외를 국내 입법화한 EU 각 국에서 TDM 예외규정이 기술적 맥락과 산업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국가 간 법적 혼선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일자	사건명	주요 쟁점
2024. 9. 27.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 Kneschke vs. LAION	- 데이터셋의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이러한 침해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제한 규정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긍정) - 권리 유보(Opt-out)가 '자연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2024. 10. 30.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 DPG Media 등 3 v. HowardsHome	- 뉴스 수집(News Aggregator) 서비스가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 여부(소극) - TDM에 대한 옵트아웃은 반드시 '기계 판독 가능한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AI 봇만을 차단하는 경우 피고의 TDM 행위에 대한 권리 유보에 해당하지 않음
2025. 3. 10. EU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단 요청	**헝가리 부다페스트 지방법원** Like company v. 구글	- 언론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의 저작권 침해 여부 - 법원은 DSM 지침 제4조에 관한 해석 및 적용 범위에 관해 EU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단(Preliminary Ruling)을 통해 질의 - **(질의내용)** ① 인공지능 챗봇이 보호받는 정도의 길이의 언론출판물과 동일한 결과를 표시하는 경우 이것이 공중전달에 해당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문제된 표시가 챗봇이 관찰한 패턴 속에서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한 결과라는 사실이 중요한지?

32) LG München I, Urteil vom 11.11.2025, 42 O 14139/24.
33)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 내용으로, 박희영, [독일] 뮌헨지방법원, OpenAI ChatGPT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 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슈리포트 2025-11, 2025.11.

일자	사건명	주요 쟁점
		② 패턴을 관찰하고 매칭시킴으로써 모델이 언어적 패턴을 학습하도록 하는 훈련 과정이 복제에 해당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해당 과정은 DSM 지침 제4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 ③ 사용자가 챗봇이 표시하는 텍스트와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하거나 이를 참조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챗봇 제공자에 의한 복제라고 할 수 있는지?
2025. 11. 11.	**뮌헨 제1 지방법원** GEMA v. Open AI	- 원고(GEMA)가 관리하는 노래 가사 및 회원들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것의 저작권 침해 여부 - ChatGPT가 노래 가사를 식별할 수 있게 반복하여 출력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모델 내부에 저작물이 고정된다고 보아 복제권 침해를 인정하였고, GPT 모델 내부에서 발생한 기억 현상(즉 2단계에서의 모델 내부 복제)은 이러한 TDM 예외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 Prompt 화면 표시 및 서버 히스토리 저장은 독립된 복제로 보았으며, 모델 파라미터에 저장된 저작물에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므로 공중접근권 침해도 인정 - 하지만 결과물은 기술적·자동적 생성 과정에 따른 것이고, 저작자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훼손 의도가 없으므로 저작자의 인격권 침해는 없다고 보았음

4) 관련 보고서[34]

유럽의회 법무위원회(JURI)는 생성형 인공지능(GenAI) 확산에 따른 저작권 침해 및 법적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과 생성형 인공지능 – 기회와 과제' 초안 보고서를 마련하였다. 본 보고서는 2026년 1월 상임위원회 표결을 통과하였으며, 현행 디지털 단일 시장(CDSM) 지침의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조항이 GenAI 학습을 규율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GenAI 학습을 위한 별도의 법적 기준 마련과 함께, 권리자가 EU 지식재산권청(EUIPO)의 중앙 집중형 등록 시스템을 통해 기계 판독 가능한 방식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학습에서 제외할 수 있는 실효적인 '거부권(Opt-out)' 보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AI 모델 제공자뿐만 아니라 배포자에게도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의 상세 목록(Itemised List)을 공개해야 하는 강력한 투명성 의무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추론, 검색증강생성(RAG), 파인튜닝 등 후속 활용 단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투명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저작물이 학습에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추정(Irrebuttable Presumption)'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학습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 사실을 인지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34) European Parliament, Committee on Legal Affairs (JURI), Draft Report on Copyright and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2025/2026.

본 보고서는 기존 EU DSM지침 제4조의 TDM 예외 조항이 생성형 AI 학습을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공식화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가진다. 이는 AI 학습을 단순한 데이터 분석 행위가 아닌, 저작권자의 권익과 충돌할 수 있는 특수한 이용 형태로 정의하고 별도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3) 일본: 정보분석 목적 이용 조항

1)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

> **제30조의4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 저작물은 다음의 경우, 그 밖에 해당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을 스스로 향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향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의 종류나 용도 및 해당 이용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저작물의 녹음, 녹화, 그 밖의 이용에 관련된 기술 개발 또는 실용화를 위한 시험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 2. 정보 분석(다수의 저작물, 그 밖에 대량의 정보로부터 해당 정보를 구성하는 언어, 소리, 영상, 그 밖의 요소에 관련된 정보를 추출, 비교, 분류, 그 밖에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도 같다.)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 3. 전 2호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표현에 관한 사람의 지각에 의한 인식을 수반하지 않고 해당 저작물을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과정에서의 이용, 그 밖의 이용(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전자계산기에 의한 실행을 제외한다.)에 제공하는 경우

일본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디지털·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보급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에 대응하고자 저작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35]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와 같은 포괄적인 공정이용(Fair Use) 규정이 없는 일본은 저작물 이용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적인 권리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이에 따라 2009년과 2012년 개정을 거치며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구 제47조의7) 및 기술 개발 시험을 위한 이용(구 제30조의4) 등 한정적인 권리제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기존의 한정 열거식 규정이 가진 유연성 부족 문제를 야기했으며, 이는 신산업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일본 문화심의회는 저작물 이용의 원활화와 법적 명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권리제한규정'의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다.[36] 그 결과 2018년 2월 23일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결정되어 같은 해 5월 25일 공포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

35) 일본의 개정과정에 관한 내용은 고수윤, "디지털저작물에 있어 일본의 유연한 권리제한규정(柔軟な権利制限規定)의 시사점 -비향수이용 규정(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을 중심으로-" 참고, 『계간 저작권』 2019 가을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36)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報告書, 平成29年4月.

해당 개정에 따른 제30조의4는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른바 '비향수이용'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기술 개발 및 정보 해석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고 추상화하여, 저작물의 표현을 인간이 지각하여 즐기는 것이 아닌 컴퓨터를 통한 정보 처리 과정 등 비향수 목적인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급격히 발전하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기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으로, 생성형 AI가 사회적 화두가 되기 이전부터 저작물에 담긴 사상이나 감정을 인간이 향수(享受)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계적·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비향수(非享受) 목적'의 이용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는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은 한때 국제사회에서 '머신러닝의 천국'으로 불릴 만큼 데이터 학습에 우호적인 법적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의5(정보처리에 따른 부수적 이용 등)[37]의 역할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제30조의4가 데이터 학습 단계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규율한다면, 제47조의5는 수집·가공된 정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저작물 이용을 다룬다. 해당 조항은 정보 해석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일부 복제나 공중송신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용 목적이 반드시 '비향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데이터의 학습(입력)과 결과 제공(출력) 단계별로 개별적인 권리제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AI 서비스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체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

37)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의5(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 및 그 결과의 제공에 수반하는 경미한 이용등) ①전자계산기를 사용한 정보처리에 의하여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창출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의 촉진에 기여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해당 행위의 일부를 하는 자를 포함하며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해당 행위를 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공중에 제공등(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저작물(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2항제2호에서 "공중제공등저작물"이라고 한다.) (공표된 저작물 또는 송신가능화된 저작물에 한정한다.)에 관하여, 해당 각 호가 규정하는 행위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행위에 수반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해당 공중제공등저작물 중 그 이용에 제공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그 이용에 제공되는 부분의 양, 그 이용에 제공될 때의 표시의 정밀도, 그 밖의 요소에 비추어 경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경미한 이용"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중제공등저작물에 관련된 공중에의 제공등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임(국외에서 행하여진 공중에의 제공등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행하여졌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 해당 경미한 이용을 하는 경우, 그 밖에 해당 공중제공등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및 해당 경미한 이용의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검색으로 얻고자 하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검색 정보"라고 한다.)가 기록된 저작물의 제호 또는 저작자명, 송신가능화된 검색 정보에 관련된 송신출처식별부호(자동공중송신의 송신출처를 식별하는 글자, 번호, 기호 그 외의 부호를 말한다. 제113조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 그 밖의 검색 정보의 특정 또는 소재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
2. 전자계산기로 정보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
3. 제1호와 제2호의 행위 외에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 처리에 의하여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창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행위이며 국민 생활의 편리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②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준비하는 자(해당 행위의 준비를 위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공중제공등저작물에 관하여 이 항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이용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복제나 공중송신(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다음 조 제2항제2호에서 같다.)을 하거나 그 복제물에 의한 배포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중제공등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및 해당 복제 또는 배포 부수와 해당 복제, 공중송신 또는 배포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등장과 일상화는 평온했던 해당 규정의 해석 체계에 커다란 균열을 가져왔다. AI 학습이 단순히 데이터 분석에 그치지 않고 기존 작가의 화풍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저작물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출력물을 생성하게 되면서, 이를 과연 순수한 '비향수 목적'의 이용으로만 볼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규정 단서 조항에 명시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갈등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에 일본 문화청은 해당 규정의 명확한 해석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3월 'AI와 저작권에 관한 생각(안)' 보고서를 발간[38]하여 특정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학습 방식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논의하는 등, 기존 규정의 유연한 해석과 새로운 규제 필요성 사이에서 정책적 수습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제30조의4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 언론(닛케이·아사이 신문 등)에서는 AI 개발사(퍼플렉시티 등)를 상대로 소송이 다수 제기[39]되는 등 학습 데이터 이용의 한계를 둘러싼 법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가 '비향수 목적'의 데이터 활용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은 자사의 뉴스 콘텐츠가 생성형 AI에 의해 무단으로 요약 및 출력되어 기존 기사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해당 규정의 단서 조항인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논거로 이어지며, 기술 혁신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자유와 원저작자의 경제적 가치 보호라는 두 가치가 법정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제30조의4가 제공하던 '머신러닝의 천국'이라는 법적 안정성은 실제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자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며 새로운 해석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 AI 저작권에 관한 문화청 보고서[40]

일본 문화청은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2024년 3월 'AI와 저작권에 관한 생각(안)'을 최종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도 현행 저작권법 체제 내에서 AI 개발 및 이용 단계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석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AI 학습 단계와 관련하여 해당 보고서 내용의 핵심은 AI 학습단계에서 적용되는 저작권법 제30조의4(비향수이용 규정)의 제한적 해석이다. 일본은 비향수 목적의 학습을 폭넓게 허용해 왔으

38) 일본 문화청, "AI와 저작권에 관한 생각(안)(AIと著作権に関する考え方について)",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기본문제 소위원회, 2024.03.15.
39) 장예영, 저작권동향 2025 제13호-[일본] 닛케이·아사히 신문, 퍼플렉시티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9 참고
40) 장예영, "[이슈리포트] 2024-11: [일본] 문화청, AI와 저작권에 관한 보고서 발표",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11.

나, 이번 보고서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화된 저작물을 판매용 데이터셋으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단으로 추출하여 학습시키는 행위나, 특정 작가의 화풍을 복제하기 위해 해당 작가의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학습시키는 행위 등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제30조의4 규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3) 주요 동향

2025년 10월 출시된 OpenAI의 동영상 생성 AI '소라 2(Sora 2)'는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핵심 지식재산권(IP)을 무단 학습하고 유사 영상을 생성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SNS를 통해 일본을 대표하는 주요 콘텐츠와 흡사한 영상 생성 사례가 확산되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본격화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소라 2 생성 영상의 상당수가 자국 콘텐츠와 유사함을 공식 확인하고 무단 학습 중단을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IP를 "세계에 자랑하는 소중한 보물"로 규정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였다.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OpenAI에 저작권 침해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학습 데이터 이용 방식을 기존의 사후 거부(Opt-out) 방식에서 사전 동의(Opt-in)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41] 다이라 마사아키 일본 디지털상도 OpenAI의 자발적 대응이 미흡할 경우 'AI 추진법(인공지능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OpenAI의 샘 올트먼 CEO는 권리자가 캐릭터 생성에 대해 보다 세밀한 제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생성 영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도입하겠다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AI 기술 발전의 필요성보다 자국 콘텐츠의 저작권과 독창성 보호를 우선시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본 사례는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가 규정한 비향수 목적 학습의 한계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해석이 글로벌 서비스와 충돌하는 대표적인 분쟁 모델이 되고 있으며, 향후 일본의 디지털 및 지식재산 전략 수립에 있어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41) "일본 정부, 오픈AI에 만화·애니메이션 표절 중단 요구", 『AI타임스』, 2025.10.16. (2025.10.17. 수정)

(4) 영국: TDM 예외 도입 철회

영국 정부는 2022년 AI 훈련을 위한 광범위한 TDM 예외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저작권 침해 우려와 창작·콘텐츠 산업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2023년 2월 해당 계획을 공식 철회하였다. 이후 2024년 말 영국 정부는 다시 EU식 TDM 예외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공개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국제 저작권단체(CISAC) 등 창작자 단체는 권리자 통제 약화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국은 현재 비상업적 연구 목적에 한정된 기존의 협소한 TDM 예외만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AI 학습 데이터 이용에 관한 제도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2024년 공개 설문은 AI 혁신 촉진과 창작자 보호 간의 균형을 목표로 하였으며, 정부는 특히 저작권자의 이용 통제권 유지, AI 개발자의 합법적 데이터 접근성 확보, 데이터셋·학습 과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핵심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정부가 제안한 접근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저작권자의 권리 유보(Opt-out) 메커니즘을 전제로 한 TDM 예외 도입이다. AI 학습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확대하되,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권리를 유보하면 해당 저작물의 AI 훈련 이용은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둘째, 비상업적 연구 목적에 한정된 기존 TDM 예외를 상업적 AI 훈련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단, 권리 유보가 없는 자료에 한정하여 대규모 AI 훈련을 허용하는 구조가 제시되었다.

셋째, AI 개발자에 대한 투명성 의무 강화이다. 정부는 데이터셋 공개, 사용 저작물에 대한 감사 가능한 기록, 옵트아웃 준수 확인 등을 포함하는 투명성 규제를 도입하여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넷째, 기술 표준 및 라이선싱 메커니즘 개발을 통해 권리자와 산업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 허락·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집단관리 방식 또는 표준화된 계약·기술적 도구를 활용하여 저작권자 권리 행사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이다.

전반적으로 영국의 논의는 AI 학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권리자의 통제권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TDM 예외를 전면 확대하는 방식보다는 이해관계자의 이익 조정 장치를 동반하는 점진적 접근이 논의되고 있다.

(5) 싱가포르: 컴퓨터 데이터 분석에 관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신설

제243조 (컴퓨터 데이터 분석: 의미) 이 절에서 저작물이나 보호받는 실연의 녹화물과 관련하여 "컴퓨터 데이터 분석"이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작물이나 녹화물로부터 정보 또는 데이터를 식별하고 추출하여 분석하는 행위

(b) 저작물이나 녹화물을 정보 또는 데이터 유형의 예시로 삼아 해당 유형의 정보 또는 데이터 관련 컴퓨터프로그램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행위

예시) 제(b)호에 따른 컴퓨터 데이터 분석의 예로 화상을 이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학습시켜 화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제244조(컴퓨터 데이터 분석을 위한 복제 또는 공중송신) ①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되면 이용자("갑")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복제하는 행위는 허가된 이용에 해당한다.

(a) 저작물

(b) 보호받는 실연의 녹화물

②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복제본 제작 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일 것

(i) 컴퓨터 데이터 분석

(ii) 컴퓨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저작물 또는 녹화물 준비

(b) 갑은 다음 각 목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제물을 다른 자에게 유출(공중송신 등 방법을 불문한다)하지 아니할 것

(i) 갑이 수행한 컴퓨터 데이터 분석 결과 검증

(ii) 갑이 수행한 컴퓨터 데이터 분석 목적과 관련한 합동 연구 또는 조사

(d) 이용자는 복제 대상 자료(이 조에서 "1차 복제물"로 부른다)에 적법한 접근 자격이 있을 것

예시)

(a) 갑이 유료화 벽을 우회하여 1차 복제물에 접근한 경우 갑은 1차 복제물에 적법한 접근 자격이 없다.

(b) 갑이 데이터베이스 이용용 조건을 위반(제187조에 따라 무효가 되는 조건은 제외한다)하여 1차 복제물에 접근한 경우, 갑은 1차 복제물에 적법한 접근 자격이 없다.

(e)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i) 1차 복제물이 저작권 불법복제물이 아닐 것

(ii) 1차 복제물이 저작권 불법복제물인 경우, 다음에 해당할 것

(A) 갑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B) 1차 복제물을 악성 불법 온라인 사이트(사이트가 제325조에 따른 접근 차단 명령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에서 얻은 경우,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던 경우

(iii) 1차 복제물이 저작권 불법복제물인 경우, 다음에 해당할 것

(A)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 불법복제물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B) 갑이 그 밖에 다른 목적의 컴퓨터 데이터 분석 수행을 위하여 해당 복제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③ 명확하게 정리하면, 제1항의 복제물 제작은 복제물 저장 또는 보유를 포함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되면 갑이 저작물이나 보호받는 실연의 녹화물을 공중송신하는 행위는 허가된 이용에 해당한다.

(a) 제(1)항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제작된 복제물을 공중송신 할 것

(b) 갑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자에게 복제물을 유출(공중송신 등 방법을 불문한다)하지 아니할 것

(i) 갑이 수행한 컴퓨터 데이터 분석 결과 검증

(ii) 갑이 수행한 컴퓨터 데이터 분석 목적과 관련한 합동 연구 또는 조사

⑤ 이 법의 목적상, 이 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자료의 복제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a) 자료(또는 자료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녹화물) 공표에 해당하지 아니함

(b) 자료(또는 자료에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결정 시 고려하지 아니함

싱가포르의 컴퓨터 데이터 분석(Computational Data Analysis, 이하 CDA) 규정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중 하나이다. 2021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이 규정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며, 특히 상업적 목적의 이용까지 폭넓게 면책 범위에 포함시킨 점이 특징이다.

싱가포르 저작권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 규정된 CDA 예외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저작물로부터 정보를 식별, 추출 및 분석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이때 비영리적 이용뿐만 아니라 영리 기업의 AI 학습이나 데이터 분석도 면책 대상이 된다. CDA 규정은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지며, 계약 조건을 통해 이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시도는 무효가 된다.[42] 이는 웹사이트의 이용약관 등으로 TDM을 금지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다만, 강력한 계약 배제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문 해석상에서는 '옵트아웃(Opt-out)'의 실질적 허용 여부에 관한 불명확한 지점이 존재한다. CDA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대상 저작물에 대해 '적법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페이월(Paywall) 우회나 데이터베이스 해킹을 통한 접근은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제244조제2항 (d)에 부수된 예시(Illustration) (b)에서는 '이용자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약관(Terms of Use)을 위반하여 접근한 경우 적법한 접근권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187조는 "CDA를 제한하는 계약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지만, 제244조의 예시는 "이용약관(계약의 일종) 위반 시 적법한 접근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만약 저작권자가 이용약관에 "TDM 목적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걸었을 때, 이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이를 제187조에 따른 '무효인 계약 조항의 무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244조 예시 (b)에 따른 '이용약관 위반을 통한 부적법한 접근'으로 볼 것인지가 불분명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조문 구조는 이론적으로는 '계약 오버라이드'를 금지하면서도, 실무적으로는 이용약관을 통해 TDM에 대한 사실상의 '옵트아웃'이나 접근 제한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CDA 규정은 외견상 가장 AI 친화적인 강력한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적법한 접근'의 범위를 둘러싼 정교한 법리적 다툼이 예상되는 복합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

42) 싱가포르 저작권법 제187조제1항 ©
제187조(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허가된 이용) ①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된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제외하거나 제한하려는 계약 조건은 제외나 제한을 의도한 범위에 한정하여 무효이다.
(a) 제6절(공공 소장품)에서 제234조(공표된 어문, 연극 또는 음악저작물의 복제물이나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 사이의 물품 제공)을 제외한 다른 모든 조항
(b) 제7절(컴퓨터프로그램)
(c) 제8절(컴퓨터 데이터 분석)

(6) 호주: 호주 정부, TDM 예외 규정 도입 배제 발표

호주 정부는 2025년 10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조항을 저작권법에 도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43]하였다. 기술·산업계는 광범위한 TDM 예외 도입을 요구해 왔으나, 창작자 단체는 저작권 침해 위험과 시장 잠식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특히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가 TDM 예외 도입을 제안한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논쟁이 심화되자, 정부는 창작 산업의 안정성과 권리자 보호를 우선 고려하여 TDM 예외를 배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호주는 EU·일본과 달리 AI 학습을 위한 일반적 TDM 면책 규정을 도입하지 않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였다.

대신 호주 정부는 저작권과 AI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저작권 및 AI 이해관계자 그룹(Copyright and AI Reference Group)을 구성하여, AI 개발을 위한 집중관리형 라이선스 제도 도입 여부, AI 생성물의 법적 지위 명확화, 경미한 저작권 침해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 청구 포럼(Small Claims Forum) 신설 등 세 가지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러한 결정은 호주가 TDM 예외를 통한 일괄적 면책보다는 AI 시대에 적합한 권리 관리 체계와 저작물 이용 절차의 정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책적 선택을 보여주며, TDM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인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가/지역	면책 근거	영리 목적 허용	Opt-out 제도	특징
미국	공정이용(제107조)	조건부 허용[44]	×	판례 중심 해석
한국	공정이용(제35조의5)	조건부 허용	×	-
EU	DSM 지침 제3조	×	×	이중 구조
	DSM 지침 제4조	○	○	
영국	CDPA 제29A조	×	×	비영리 연구 한정
일본	제30조의4	○	×	광범위한 면책
싱가포르	TDM 면책 규정(제244조) + 공정이용	○	△	광범위한 면책

43) 호주 법무부(Attorney-General's Department), "Albanese Government to ensure Australia is prepared for future copyright challenges emerging from AI", 2025. 10. 26. (2026. 1. 20. 접속), https://ministers.ag.gov.au/media-centre/albanese-government-ensure-australia-prepared-future-copyright-challenges-emerging-ai-26-10-2025

44) 영리 목적 여부는 공정이용 판단의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나, 이용의 변형성이나 공익성이 이를 상쇄하는 경우 등 개별적 판단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임

(7) 해외 사례로부터의 정책적 시사점

2026년 현재 전 세계 주요국은 AI 기술의 혁신 촉진과 창작자 권리 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각국의 경제적·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고유한 법적 노선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EU와 일본, 싱가포르는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이전에 TDM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해당 제한 규정을 통해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용 과정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EU의 경우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옵트아웃(Opt-out)' 제도를 시행 중이나, 그 적용 범위와 기술적 구현 방식이 여전히 불명확하여 실제 창작자 보호 측면에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의회 법무위원회(JURI)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행 CDSM 지침 제4조의 TDM 예외 조항이 생성형 AI 학습을 규율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현행법 적용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규정과 기술적 현실 사이의 간극은 권리자의 옵트아웃 권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현행 TDM 체계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GenAI 학습을 위한 별도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긴급한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 역시 저작권법 제30조의4를 통해 명시적으로 AI 학습을 허용하고 있으나,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TDM 예외 규정만으로 원활하고 안정적인 AI 학습 환경이 완전히 조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미국은 명시적인 TDM 예외 조항을 두는 대신, 전통적인 공정이용 원칙을 통해 AI 학습의 정당성과 창작자 보호의 균형을 개별 사안별로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판례의 축적을 통해 구체적인 이용 행태별 가이드라인을 자연스럽게 형성해 나감으로써 기술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사법적 판단을 통해 권리 침해를 견제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과 호주는 AI 산업의 성급한 지원보다는 창작 생태계의 붕괴를 방지하는 데 정책적 방점을 두고 있다. 양국은 기술 업계의 예외 조항 도입 요구에도 불구하고, 창작물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될 수 있도록 유료 이용 시장 형성을 유도하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2025년 10월, 호주 정부가 TDM 예외 조항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창작자 권리 회복'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AI 개발 단계에서부터 창작자의 가치를 인정하고 법적 예외보다는 시장 기반의 해결책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글로벌 동향은 한국의 입법 및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 역시 단순히 기술 발전을 위해 TDM 예외 조항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는 차원을 넘어, AI 산업이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상 체계'와 '수익 공유 모델' 설계에 행정적·입법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AI 기술과 창작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

4. 현행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에 대한 분석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1)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규정의 구조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2011년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일반적 저작물 이용 제한 규정으로서, 우리 법체계에서 미국식 공정이용(Fair Use) 조항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조항은 기존의 개별적 저작물 이용 제한 규정들이 포섭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용을 합리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일종의 포괄적·보충적 규정으로서, 기술 변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해석 가능성을 전제로 마련되었다. 동 조항의 구조는 크게 ① 포괄적 허용 규정(제1항)과 ② 공정이용 판단요소(제2항)로 나뉘며, 이 두 요소가 결합하여 공정이용 판단의 기본 틀을 이룬다.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인정하는 일반규정으로, 기존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예: 교육 목적 이용, 도서관 이용, 비영리 공연 등)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하에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마련된 포괄적·보충적 규정이다. 이 규정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복제·전송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존의

열거적 제한 규정만으로는 포섭할 수 없는 다양한 이용 형태가 등장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2011년 12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정이용 규정 도입의 취지를 "저작권의 합리적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조화시키고,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45]

제35조의5 제1항은 공정이용의 인정 요건을 규정하는 핵심 조항으로, ①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을 것, ②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4가지 요소를 나열하고 있다. 여기서 제1항은 베른협약을 포함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에 관한 3단계 테스트[46]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제2항은 미국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47]과 유사한 네 가지 요소를 참고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48]

제1항에 따른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이란 해당 저작물이 통상적으로 소비되는 시장에서의 이용 형태를 의미하며, 저작물의 정상적 시장을 대체하거나 침해하는 경쟁적 이용은 원칙적으로 공정이용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또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이란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재산적·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며,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개념은 저작인접권자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항은 제1항의 추상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네 가지 판단 요소를 제시한다.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성, ④ 저작물의 현재 또는

---

45)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2012, 32~33쪽.

46) 3단계 테스트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에서 회원국이 저작자의 권리에 제한 또는 예외를 설정하는 경우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일정한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복제권의 제한에 대해 이른바 3단계 테스트를 천명한 베른협약 제9조제2항 및 이를 이어받아 모든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까지 확대한 TRIPS 협정(제13조)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한이나 예외는 ① 어떤 특별한 경우(Certain Special Cases)에 제한되어야 하고, ②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Normal Exploitation)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③ 권리자의 합법적 이익(Legitimate Interests)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

47)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공정이용
제106조와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학습용으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복제하거나 또는 제106조와 제106조의 A에서 규정한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요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 이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 그 이용의 목적과 성격;
(2)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3) 이용된 부분이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그리고
(4) 그 이용이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내려지는 결정인 경우에, 저작물이 미발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공정이용이라는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48) 이해완,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2019, 814~815쪽.

잠재적 시장·가치에 대한 영향이 그것이다. 이 네 가지 요소는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종합적 고려 요소로 기능하며, 특정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해서 공정이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각 요소의 비중도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이용 목적, 저작물의 특성 등에 따라 상이하게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제2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49] 저작물 이용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위 네 가지 요소만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저작물 이용의 경위나 방법 등 추가적인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50]

결과적으로 제35조의5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 이용(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제·전송·분석 행위 등)에 대해 탄력적 규율을 가능하게 하는 일반 규범으로서 기능한다. 공정이용 조항의 구조는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저작물 이용 형태가 등장하는 현실에서 규범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정 장치로 평가되며, 향후 AI 학습과 같이 전통적 저작권 개념과 일대일 대응하기 어려운 이용 형태에 대해서도 주요한 해석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저작권청의 보고서[51]에서 밝힌 바와 같이 AI 학습과 공정이용의 관계는 제2항의 위 각 네 가지 요소별로 일부는 유리(목적·시장영향), 일부는 불리(이용량)한 양면성을 보이며, 미국의 공정이용 판례에서 보여준 기술적 이용에 대한 유연한 해석이 국내 해석에도 참고될 수 있다. 다만 국내 판례 축적이 저조하고, 제35조의5의 적용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요소별 평가 역시 잠정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정이용 판단은 결국 요소 간 상호조합에 따른 종합적 판단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AI 학습과 관련된 이용행위에 대한 공정이용 여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 수 있다.

(2) 공정이용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52]과 그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축적이 충분하지 않으나, 2024년 선고된 사건(대법원 2021다272001)은 제35조의5 적용의 기본 원칙과 판단 구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근 학계의 분석[53]에 따르면, 이 판결은 공정이용 규정이 어

49) 제35조의5 제2항 ② 저작물 이용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강조는 인용자)

50)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4. 7. 11., 2021다272001 판결)
"… 제2항 각 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생략)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용의 경위나 방법 등과 같이 위 각 호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51) 미국 저작권청, 제3부 인공지능과 저작권, 2025.5.

52)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53) (이일호, 박윤석) 공정이용 판단 기준의 구체화-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에 관한 평석 -;(류시원) 저작권법상

떠한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론적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아래에서는 두 편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공정이용에 관한 해당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을 검토한다.

우선, 대법원은 공정이용 판단의 핵심이 법문상 네 가지 요소의 기계적 적용이 아니라, "이용행위 전체를 둘러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임을 명확히 하였다. 판결은 제35조의5 제2항에 열거된 네 가지 요소가 고려요소에 불과하며, 구체적 사안에서는 저작물 이용의 경위·이용자의 목적·이용 방식 등 비열거 요소도 공정이용 판단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공정이용 판단이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열린 규정으로서 공정이용 조항의 성격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대법원은 공정이용 판단의 중심축이 "저작물의 정상적 시장에 대한 영향 여부"에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해당 사건에서는 이용자가 저작물의 원래 시장을 대체하거나 경쟁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공정이용에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으며, 이는 미국 공정이용 판례에서 '시장 대체효과'를 중시한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선행 연구들은 이를 통해 국내 공정이용 해석 또한 점차 시장 중심 분석(Market-effect Test)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아 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셋째, 판결은 공정이용 판단에서 "이용의 목적·성격과 이용량 요소를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인정하였다. 해당 사안에서는 저작물의 상당 부분이 이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목적이 비영리적이거나 공익적일 경우 이용량만으로 공정이용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AI 학습과 같이 기술적·분석적 이용 등 새로운 유형의 이용행위가 증가하는 환경에서 공정이용 조항이 가진 유연성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학계는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여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판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네 가지 요소의 종합적 고려 구조를 명확히 하고, 비열거적 요소 고려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기술적 이용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는 해석 틀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두 논문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점은, 이번 판결이 공정이용 판단의 방향성을 제시한 데 그 의의가 있으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세밀하게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준거 기준,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해설·가이드라인 마련, 기술적 이용에 대한 별도 고려 요소 등은 여전히 향후 제도적·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공정이용(Fair Use)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평석 –

비록 이번 판결이 AI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은 아니나 제35조의5 공정이용 규정이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론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한다. 공정이용 판단 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비열거 요소가 고려될 가능성을 명확히 한 점, 시장영향 중심의 분석 틀을 마련하고, 대규모 복제에 대한 탄력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점 등 핵심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AI 학습에 대한 해석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 공정이용에 따른 AI 학습행위 판단 시 주요 쟁점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이용 규정을 통해 평가될 수 있으나, 공정이용 판단 요소를 AI 학습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특유의 쟁점과 해석상의 어려움이 나타난다. 이는 공정이용의 기존 판단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AI 학습의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첫째, 공정이용 판단의 핵심 요소인 '해당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AI 학습은 그 특성상 판단의 불확실성이 크다. 특히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저작물 수집 및 복제 과정에서, 해당 저작물의 정상적인 거래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지 혹은 침해 여부를 판단할 시장의 실체가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 현재 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라이선스 시장은 저작물이나 산업 분야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뉴스 언론이나 특정 전문 서적 등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라이선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54], 저작물 전반에 걸쳐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통상 시장이 완전히 정착되었다기보다는 현재 개별 산업군을 중심으로 시장이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수집이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하는지 여부는 실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뚜렷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권리자가 이를 실제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생성형 AI의 경우 학습된 정보가 결과물 생성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로 인해 원저작물의 시장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는 기술적 인과관계, 경제적 대체효과, 창작물 시

54)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AI 개발사와 권리자 간의 라이선싱 계약이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어문 분야에서는 OpenAI와 Reddit, Microsoft와 Informa 간의 데이터 API 활용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미지·영상 분야에서는 NVIDIA 및 Apple이 Getty Images 및 Shutterstock과 다년 계약을 맺고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음악 분야에서는 2025년 말 Suno, Udio 등 주요 AI 플랫폼들이 UMG, WMG 등 메이저 음반사와 저작권 분쟁을 종결하며 라이선스 기반 모델로 전환하였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OpenAI와 Disney 간의 10억 달러 규모 지분 투자를 포함한 캐릭터 사용권 계약(2025. 12.)이 체결되는 등 라이선싱 기반의 AI 비즈니스 모델이 점진적으로 정착되는 추세다.

장의 구조 등에 따라 크게 달라 현 단계에서는 분석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OpenAI 간의 소송[55]에서는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 뉴스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언론사의 구독 시장과 광고 수익 모델을 직접적으로 대체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시장 구조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이용 판단 시 AI 학습이 시장을 침해한다고 평가하는 것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시장영향 요소는 AI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동시에 가장 불확실성이 큰 요소이며, 이는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된다.

두 번째로는 공정이용 판단의 요소 중 저작물의 종류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저작물의 창작성의 정도는 중요한 요소이나, AI 학습 데이터는 텍스트·이미지·영상·문학작품 등이 혼합된 대규모 이종 데이터셋으로 구성된다. 이에 개별 저작물의 종류별로 공정이용 판단을 달리하는 기존 분석 틀을 그대로 AI 학습 데이터 전체에 일괄하여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AI 학습의 양태를 고려할 때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대규모 학습 데이터에는 다양한 성격의 저작물이 혼재되어 있어, 창작성 있는 저작물인지, 사실·기능적 저작물인지, 아니면 저작물성이 없는 단순 데이터인지 등을 법원이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은 공정이용 법리의 실무적 적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AI 학습 과정에서 특정 저작물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기술적·구조적 특성도 공정이용 판단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일반적인 저작물 이용에서는 어떤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이용했는지 상대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나, AI 학습에서는 “이용 여부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AI 학습의 특성상 데이터는 크롤링·전처리·샘플링·토큰화 등 복합적인 단계를 거치며, 특정 저작물이 학습 과정에서 어떤 역할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며, 특정 저작물의 학습 여부를 파라미터로 구성된 모델을 역추적하여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티이미지(Getty Images)와 스태빌리티 AI(Stability AI) 간의 소송[56]에서 쟁점이 된 것처럼, 생성물에 나타난 워터마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습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권리자가 이용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공정이용의 ‘이용량 요소’와 ‘시장 영향 요소’를 분석하기 위한 전제 정보 자체를 불명확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학습 데이터 공개에 관한 의무가 부재한 상황에서, 권리자는 침해 입증의 어려움을 겪고 이용자인 AI 개발사는 사후적 설명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기술적 입증책임의 문제와 직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55) The New York Times Co. v. Microsoft Corp., OpenAI Corp., et al., No. 1:23-cv-11195 (S.D.N.Y. 2023)
56) Getty Images (US), Inc. v. Stability AI, Inc., No. 1:23-cv-00135 (D. Del. filed Feb. 3, 2023)

(4) 공정이용 법리의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 검토

AI 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 이용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현 상태는 현행 법체계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공정이용 조항(제35조의5)은 포괄적 규정을 통해 다양한 기술적·사회적 이용을 수용하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으나, AI 학습과 같은 전례 없는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확립된 판례가 부재하여 적용 가능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해석상의 불안정성은 동일한 데이터 이용행위라 할지라도 개별 사안의 맥락에 따라 침해와 면책 사이를 오가는 결과를 초래하여 저작권 규범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은 AI 개발 기업에 심각한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AI 학습은 본질적으로 방대한 저작물을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과정을 수반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허용 범위가 획정되지 않을 경우 기업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상시적인 침해 소송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과도한 법무 비용을 지출하게 되며, 소송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 활용을 포기하거나 개발 속도를 늦추는 등 기술 혁신의 동력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권리자 측면에서도 공정이용의 불명확성은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를 형성한다. 공정이용 성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창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적법하게 이용되는 것인지, 혹은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침해 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는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소모적인 분쟁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보상 체계나 라이선싱 시장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차단하여 결과적으로 창작 생태계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적 불확실성은 장기적으로 국가 AI 경쟁력 확보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경계가 모호한 환경은 연구기관과 기업의 창의적인 시도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국내 연구 기반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결국 개별 사안에 따른 공정이용 판단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기술 혁신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실질적인 균형을 달성하기보다 이해관계자 모두의 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5. TDM(Text and Data Mining) 예외 규정 도입 논의와 문제점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규율하는 제도적 방안으로는 기존의 공정이용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과 별도의 TDM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이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개

별 사안에 따른 사후적 판단에 의존하는 공정이용 방식이 초래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장되고 있다. 특히 AI 개발사와 기술계 등 산업계에서는 AI 모델 학습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적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요건을 갖춘 TDM 예외 조항의 법제화가 필수적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TDM 예외 규정 도입 논의의 구체적인 배경과 기대 효과 및 잠재적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국내 TDM 예외 도입 논의의 배경

국내에서 TDM 예외 규정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빅데이터의 활용이 경제·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린다. 초기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트렌드 분석, 미래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TDM 기술이 주목받았으며, 나중에는 이러한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과 연계하여 그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이 대량으로 축적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개별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만으로는 새로운 데이터 활용 방식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57]

또한 해외 주요국이 저작권법에 TDM 예외 또는 정보분석 목적 이용 조항을 도입하면서, 국내에서도 국제적 규범 조화의 관점에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U는 DSM 지침 제3조 및 제4조를 통해 연구기관·산업계 모두에게 적용되는 TDM 예외를 도입하였고, 일본 역시 제30조의4를 신설해 정보분석 목적 이용을 폭넓게 허용하였다. 이러한 해외 입법례는 국내 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국내 법제가 국제 경쟁 환경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TDM 예외 도입 요구를 촉발한 요인으로 작용했다.[58]

그러나 2023년 ChatGPT의 등장과 함께 생성형 AI 기술이 인간의 창작 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결과물을 대규모로 산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저작물 학습 과정이 창작자 권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권리자와 개발사 간의 입장 차는 더욱 뚜렷해졌고, 기존의 데이터마이닝 중심 논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쟁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관계 기관은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운영[59]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생성형 AI 시대에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권리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TDM 예외를 도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

57) 정진근 외, 미래 저작권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10., 190쪽.
58) 이러한 논의 배경을 기반으로 2017년 박정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의안번호 10698)을 시작으로 2021년 도종환의원의 저작권법전부개정안(의안번호 2107440)을 포함하여 다수의 TDM 예외 규정 신설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59)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3년부터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권리자와 AI개발사를 비롯하여 학계, 법조계, 기술계 및 관련 부처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다.(언론기사)

이 제기되었다. 특히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이용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 생성물 단계에서의 잠재적 유사성 문제, 권리자의 통제권 약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TDM 예외의 전면적 도입보다는 보다 정교한 검토와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2) TDM 예외 도입의 기대효과

TDM 예외 규정이 도입될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제·저장 등 기술적 이용 행위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일정한 제도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우선 현재 TDM 과정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이용 해석에 의존하고 있어 판단이 일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TDM 예외 도입 시 해당 목적의 기술적 복제나 분석 행위가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설정되어 이용자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일정 부분 높일 수 있다.

또한 TDM 예외 규정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저작물 이용의 적법성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이는 개별 사안마다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과 사법적 리스크를 완화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실무 단계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AI 개발사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3) TDM 예외 도입 시 발생 가능한 법리적·정책적 문제

TDM 예외 규정의 도입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그 적용 범위와 방식에 있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법리적·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

첫째, 저작권 제한에 관한 국제적 표준인 '3단계 테스트(Three-Step Test)'[60]와의 충돌 가능성이다. 저작권법상 예외 규정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시장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TDM 예외가 상업적 목적까지 폭넓게 허용될 경우, 권리자가 향유해야 할 잠재적 데이터 시장의 수익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배타적 권리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결국 창작자의 경제적 유인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데이터 생산이 감소하는 저작권 생태계의 위축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

60) 3단계 테스트 :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제조약과 FTA 협정 등*에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 반드시 3단계 테스트에 합치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을 규정
* 베른협약, WIPO저작권조약(WCT), WTO지재권협정(TRIPS), 한-미 FTA, 한-EU FTA 등
** 3단계 테스트 요건 : ①일부 특별한 경우, ②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을 것, ③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것

최근 발간된 EU 의회 보고서[61]는 현행 EU 디지털 단일 시장(CDSM) 지침상의 TDM 예외 조항(제3조 및 제4조)이 생성형 AI 학습의 '표현적·합성적 특성'을 포함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생성형 AI 모델 학습에 대한 해당 조항의 적용 가능성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적 패턴이나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전통적 의미의 TDM과 달리 저작물의 표현적 요소를 내재화하고 복제하는 생성형 AI 학습에 TDM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저작권 예외 규정의 목적과 한계를 왜곡할 위험이 있으며, 특히 생성형 AI 학습을 위해 저작물을 무단으로 대규모 수집·이용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시장과 충돌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저작권 규범인 '3단계 테스트(Three-Step Test)'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생성형 AI 학습이 TDM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확립된 법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법문의 모호성과 규제의 공백에 기댄 추측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어 TDM 면책규정을 이미 마련하고 있는 EU 내에서도 여전히 TDM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규 라이선스 시장 형성의 저해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이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학습 데이터 거래를 위한 초기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강행적인 예외 규정이 도입될 경우, 이용자는 유료 라이선스 체계로 진입할 동기를 잃게 되어 시장 기반의 해결책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용 이력의 확인 가능성이 낮은 기술적 특성상, 예외 규정은 권리자의 정보 접근권을 더욱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투명한 데이터 유통 구조 구축을 방해하며, 향후 보상 체계를 마련하려 해도 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없어 제도 설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정책적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셋째, 급변하는 AI 기술 속도와 고정된 법 규범 간의 괴리이다. TDM 예외의 적용 범위와 요건을 법률로 명문화할 경우, 기술 발전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의 경직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한 패턴 추출을 넘어 창작적 표현을 모방하거나 변형하는 생성형 AI의 행태를 일률적인 TDM 예외 범주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이 극명하며, 이는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게 만든다. 이러한 한계는 실제 TDM 예외 규정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국가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저작권법 제30조의4 단서 조항인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라는 추상적 문구의 해석을 놓고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EU

61) 유럽의회 법제사법위원회(JURI), "Draft Agenda: Committee meeting, Tuesday 23 September 2025", JURI(2025)0923_1, 2025. 9. 23.

역시 디지털 단일 시장(DSM) 지침 제4조에 명시된 옵트아웃 방식에 대해 표준화된 기술 규격이나 합의된 형식이 부재하여 실효성 등에 관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결국 공정이용 규정과 비교하여 명문화된 TDM 면책 규정을 둔다고 하여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시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저작물의 개별적 특성 및 저작인격권 보호가 소홀해 질 우려가 있다. TDM 예외는 모든 저작물을 '기계적 분석의 대상(Data)'으로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고도의 예술적 가치를 지닌 저작물이나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강하게 투영된 저작물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특히 자신의 저작물이 자신의 신념과 반하는 AI 모델 개발에 사용되거나, 자신의 화풍이나 목소리가 학습되어 경쟁적인 유사 결과물을 양산하는 데 이용되는 경우,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등) 침해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저작물에 일률적인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창작자의 인격적 가치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본연의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크다.

6. 정책적 판단: 공정이용 vs TDM 예외의 비교 평가

(1) 공정이용 방식의 장점과 한계

AI 기술은 최근 몇 년 간 비약적인 성능 향상과 함께 모델 구조, 학습 방식, 활용 영역 전반에서 급속한 진화를 경험하고 있다. 대규모 언어모델(LLM), 멀티모덜 모델, 생성형 AI(Generative AI) 등 주요 기술들은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세대가 교체될 정도로 발전 속도가 빠르며, 이는 전통적인 규제·입법 체계가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모델 규모(파라미터 수)는 1~2년 단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고, 학습 방식도 정적 데이터셋 기반에서 자기지도학습(Self-supervised Learning)[62],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63], 연속적 업데이트(Continual Learning)[64]로 다양화되며 기존의 데이터 이용 방식과 크게 달라지고 있다.

또한 AI의 이용 양태와 형식 역시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초기의 텍스

62) 데이터의 레이블(Label)을 사람이 직접 달지 않고, 데이터 자체에서 정답을 찾아 학습하는 방식이다. 주로 데이터의 일부를 가리고 이를 예측하는 과정을 통해 데이터의 구조적 특징을 스스로 파악한다. Devlin, J., et al., "BERT: Pre-training of Deep Bidirectional Transformers for Language Understanding,"(2018)

63) AI 모델의 출력 결과물에 대해 인간이 선호도를 평가하고, 이 피드백을 보상 신호로 삼아 모델이 인간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최적화하는 학습 기술이다. Ouyang, L., et al., "Training language models to follow instructions with human feedback,"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NeurIPS) 35 (2022)

64)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학습하면서도, 이전에 습득한 지식을 잊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학습 방식이다. 고정된 데이터셋이 아닌 변화하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필수적이다. Kirkpatrick, J., et al., "Overcoming catastrophic forgetting in neural network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2017)

트 기반 언어모델 중심의 활용에서 벗어나, 이미지·음성·영상·센서 데이터 등을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모덜 학습, 특정 작업에 특화된 파인튜닝(Custom/Domain Adaptation), 사용자 상호작용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형되는 에이전트형 AI(AI Agents) 등 이용 구조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AI가 단순한 정보 분석 도구를 넘어 창작, 자동화, 의사결정, 콘텐츠 생성 등 전 산업과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AI 학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범위 또한 기존의 명확한 분류 체계를 벗어나고 있다. 웹 크롤링 데이터, SNS 콘텐츠, 스트리밍 플랫폼 자료, 사용자 상호작용 로그 등 정형·비정형 데이터가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활용되면서, 개별 데이터의 출처·성격·저작권 상태가 사전에 식별되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특성은 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낮출 뿐 아니라, 특정 형태의 이용을 전제로 한 고정적·열거주의 방식의 규율 체계가 기술 현실을 따라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정이용 규정은 개별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과 달리 포괄적 일반 조항으로 마련되어, 새로운 기술 환경과 서비스 모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구조는 기술 발전 속도를 입법이 따라잡기 어려운 현실에서 특히 중요하다. 공정이용은 법률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이용이라 하더라도, 요건 충족 시 권리자 허락 없이 합법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창의적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AI, 빅데이터 분석, 디지털 콘텐츠 창작 등 급격히 변화하는 분야에서 공정이용은 산업 전반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안전판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공정이용은 법원의 해석을 통해 구체적 의미가 형성되므로, 다양한 사례 축적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규범이 점진적으로 명확해지는 특성을 보인다. 미국 등에서 공정이용이 혁신적 기술(예: 검색엔진, 웹 아카이빙, 텍스트·데이터마이닝)의 확산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은 이러한 장점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나아가 공정이용은 저작권 보호와 합리적 이용 간의 균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직된 열거주의 방식보다 이용자·산업계에 더 큰 활용 가능성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공정이용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기술 변화 속도에 대한 제도적 적응력이다. 기술 발전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새로운 이용 형태가 등장할 때마다 그에 맞춘 개별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특정 기술이나 이용 유형을 전제로 한 제한 규정은 시행 시점에는 유효할 수 있으나, 기술이 빠르게 진화할 경우 곧바로 적용 범위가 협소해지거나 규정 자체가 시대에 뒤처질 위험이 크다. 특히 AI와 같이 기술 발전 속도가 가파르고, 이용 형태·데이터 처리 방식·학습 메커니즘이 다양하게 확장되는 분야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공정이용은 기술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일반 조항으로 설계되어 있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 법원의 해석을 통해 합법적 이용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이는 개별 규정 중심의 규제 방식보다 훨씬 높은 입법 효율성을 제공하며, 미래 기술의 등장에 대한 제도적 유연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공정이용은 AI 시대와 같이 기술과 이용 양태가 다변화되는 환경에서, 새로운 제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마련하는 방식보다 더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저작권 규율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처럼 AI 기술은 기술 구조·데이터 활용 방식·이용 형태·산업적 응용 분야 모두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경로로 확장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새로운 유형의 학습 형태나 활용 모델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술 기반 규정이나 특정 이용 유형을 전제로 한 개별 저작권 제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신설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성이 낮으며, 기술 변화 속도에 적응할 수 있는 포괄적·기술중립적 규율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다만 공정이용의 이러한 장점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사례별 법원 판단에 좌우된다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이용자—특히 AI 개발사 등—는 사전에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명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 더구나 법원은 영리 목적 이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태도를 취해 왔으며(대법원 2014.8.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이로 인해 영리적 AI 개발에서 공정이용을 폭넓게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공정이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저작권 침해로 이어져 민·형사상 책임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은 산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이용을 통해 AI 학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여전히 현실적 옵션으로 논의될 수 있다. 공정이용의 유연성을 활용하면 새로운 유형의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안전지대를 마련할 수 있으며, 관련 판례가 축적될수록 예측 가능성 역시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정이용을 중심으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려 한다면, 우선적으로 AI 학습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해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공정이용 판단은 개별 사안의 맥락에 따라 법원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기준을 법적으로 구속력 있게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이드라인 차원에서 일정한 참고 기준을 제시할 경우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AI 학습의 특성을 고려해 공정이용 규정의 실무적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유연성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공정이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출처표시 의무(제37조)가 요구되지만, 대규모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AI 학습에서는 사실상 이행이 어렵다는 현실이 존재

한다.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출처 표시 방식을 완화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 등을 모색한다면 공정이용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AI 산업의 성장과 조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2) TDM 면책 규정 방식의 장점과 한계

TDM 면책 규정은 AI 개발 및 데이터 분석과 같이 대규모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 환경에서, 저작권 제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개별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어 TDM 목적의 복제 및 분석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인 공정이용 조항과 달리 구체적 목적·요건·면책 범위를 법률에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공정이용 규정과 대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리·비영리를 구분하거나, 권리자가 TDM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방식을 도입하는 등 국가별로 다양한 절충형 모델이 존재한다.

TDM 면책 규정의 가장 큰 장점으로 법적 예측 가능성이 주로 언급된다. 즉, AI 개발기업이나 데이터 분석기관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 권리자 허락 없이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 사전 라이선스 협상 비용·시간을 절감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특히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대규모 데이터셋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산업의 특성과 잘 부합하며, 기술 혁신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국가 사례는 TDM 면책 규정이 갖는 잠재적 문제점도 나타내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와 같이 영리 목적을 포함해 목적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TDM을 허용하는 입법모델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포괄적 면책 방식은 저작물의 무단 이용을 사실상 광범위하게 정당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통제하거나 이용조건을 설정할 유인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창작 생태계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저작권법이 전통적으로 구축해 온 “사전 이용허락 원칙”과 충돌할 수 있으며, 국제조약과의 정합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실제로 일본의 TDM 규정이 AI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2025 서울저작권포럼 자료집, 와세다대 우에노 타츠히로 교수 발표).[65]

EU의 TDM 예외는 권리자 보호와 기술발전 간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로 평가되지만, 이 역시 법적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증가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EU는 일반 TDM 예외에 권리자의 옵트아웃을 핵심 요소로 두고 있으나, 대부분의 창작자(특히 소규모·개인 창작자)는 옵트아웃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워 사실상 의사표시 기회를 박탈당할 우려가

65) 타츠히로 우에노, 2025서울 저작권 포럼 자료집(생성형 AI와 저작권 : 정책),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6, 52쪽.

있다. 그 결과, 명시적 의사표시 없이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 권리 행사 능력이 실질적으로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옵트아웃 표시 방식이 국가·플랫폼·권리자별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AI 개발사는 대량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별 저작물 각각의 옵트아웃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이는 TDM 면책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큰 부담과 비효율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기계판독 가능한 'TDM 옵트아웃 등록부' 구축 가능성을 연구 중[66]이며, 다른 관할에서도 활용 가능한 통합 인프라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등록부가 기존 옵트아웃 방식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을 담보하기까지 추가적인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 언론사, 출판사, 집중관리단체, 플랫폼 사업자 등이 자신이 보유한 전체 콘텐츠에 대해 일괄적으로 옵트아웃을 선언할 경우, TDM 면책 규정의 실제 적용 범위가 극도로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AI 개발사가 라이선스를 체결하지 않는 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경우 TDM 면책 규정이 갖는 법적 안정성·혁신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는 상당 부분 약화될 수 있다.

생성형 AI의 본격적인 보편화 이후 글로벌 법제 환경에서 이를 목적으로 한 TDM 면책 규정을 새롭게 도입한 국가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은 신중한 입법적 접근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현재 TDM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는 EU, 일본 등의 사례는 대부분 생성형 AI가 기술적 임계점을 넘기 이전에 입법된 것으로, 저작물의 표현적 가치를 내재화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합성해 내는 생성형 AI의 '표현적 복제' 양태까지 충분히 고려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2025년 발간된 EU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TDM 예외 조항을 생성형 AI 학습의 법적 근거로 삼는 것은 확립된 법리에 근거한 것이 아닌 법문의 모호성에 기댄 추측에 불과하며, 이는 법적 개념을 전체적으로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는 생성형 AI 학습이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 목적을 넘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시장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으며, 단순한 예외 규정의 도입보다는 사전 허가를 기본 체계로 전환하거나 정당한 보상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6) European Commission, "Call for Tenders for a feasibility study on a central registry of opt-outs under the Text and Data Mining (TDM) exception," EC-CNECT/2025/OP/0002, 2025. 1. 23, [URL], (접속일: 2026. 1. 20)

(3) 종합적 판단 및 개선 방안 : 공정이용 중심 접근의 타당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이용 양태의 다양성, 그리고 권리 보호와 산업 혁신 간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새로운 개별 제한 규정인 TDM 면책 조항을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공정이용 규정(제35조의5)을 고도화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중립적이고 유연한 대응 체계의 유지이다. AI 기술은 특정 모델이나 데이터 처리 방식에 고착되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특정 시점의 기술 수준을 전제로 설계된 TDM 면책 규정은 도입 즉시 기술적 노후화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공정이용은 구체적인 기술 명칭이 아닌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에 미치는 영향' 등 본질적인 원칙에 기반하므로, 향후 등장할 예측 불가능한 AI 에이전트나 새로운 학습 메커니즘에도 지속 가능한 규범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생성형 AI의 '표현적 복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TDM이 데이터로부터 정보와 통찰을 추출하는 비표현적 이용에 국한되었다면, 생성형 AI는 저작물의 표현적 가치 자체를 학습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해 내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괄적인 TDM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자칫 저작권법의 근간인 '표현 보호' 원칙을 훼손하고 창작 시장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다. 특히 글로벌 법제 환경에서도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새로운 TDM 예외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TDM 면책 규정의 실효성 확보와 인프라 구축의 선결 과제이다. EU의 사례에서 보듯, TDM 면책 규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계 판독 가능한 옵트아웃과 같은 고도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입법은 권리자에게는 실효성 없는 권리 행사를, 이용자에게는 불명확한 면책 요건으로 또 다른 혼란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정책적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구체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AI 학습의 성격(영리/비영리), 학습 데이터의 정당한 입수 여부, 결과물의 시장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한 'AI 학습 시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공정이용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공정이용의 한계점은 역으로 '라이선스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을 확정해 줌으로써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협상

테이블에서 기준점으로 작용하여, 무분별한 무료 이용 주장을 방지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사전에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송 가능성을 예측하고 불확실성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여 AI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는 제도적 유인책이 될 수 있다.

- **실무적 이행 부담의 완화**

대규모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AI 학습의 기술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법상의 의무 사항을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공정이용 적용 시 출처 표시 의무(제37조)를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로 유연하게 해석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적 필연성에 의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의 단편화·변형이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석 지침(또는 입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정이용 제도가 AI 학습과 관련하여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공정한 학습 데이터 거래 시장 조성 지원**

입법을 통한 강제적 면책에 의존하기보다, 권리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 기반의 해결책'을 강화해야 한다. 데이터 가치 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형별(텍스트, 이미지 등) 학습 데이터 표준 계약 모델을 개발하고, 합리적인 라이선스 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규모 라이선스 협상이 어려운 개별 창작자들을 위해 신탁관리단체 등을 활용하여 AI 개발사에게는 합법적인 데이터 확보 경로를, 창작자에게는 실질적인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품질 학습 데이터의 유통을 촉진하고 저작권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거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적 이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은 기술적 전환기에는 성급한 입법을 통한 고정적 규범의 확립보다는, 공정이용이라는 유연한 틀 안에서 판례와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범을 점진적으로 구체화하는 연성규범(Soft Law) 중심의 접근이 산업의 혁신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저작권 생태계를 보호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7. 결론

본 장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그에 따른 저작권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창작 생태계와 AI 산업의 상생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현재 AI 모델 학습에 수반되는 대규모 저작물 복제행위는 저작권법상 명백한 권리 이용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자칫 창작 생태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최근의 생성형 AI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차원을 넘어 저작물의 표현적 가치를 학습하고 시장을 대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기존의 경직된 개별 제한 규정인 TDM 예외를 신설하는 방식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TDM 예외가 상업적 영역까지 폭넓게 허용될 경우, 저작권법의 근간인 '3단계 테스트'와 충돌할 위험이 크며, 이는 장기적으로 창작 생태계의 위축과 양질의 데이터 생산 감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 변화의 가파른 속도와 이용 양태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술이나 이용 유형을 전제로 한 TDM 예외 규정의 신설보다는 현행 공정이용 규정(제35조의5)을 고도화하고 보완하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 실효적이다. 공정이용은 기술 중립적 원칙에 기반하여 새로운 기술 메커니즘에도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범적 틀을 제공하며, 판례의 축적을 통해 사안별로 정교한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 학습의 성격과 데이터 입수 경로 등을 고려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송 리스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대규모 데이터 학습의 기술적 한계를 인정하여, 공정이용 적용 시 출처 표시 의무를 실무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유연화하거나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실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적 강제 면책에 의존하기보다 권리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표준 계약 모델을 개발하는 등 공정한 학습 데이터 거래 시장이 자생적으로 조성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정된 법 규범의 급격한 확립보다는 가이드라인과 판례를 통해 규범을 점진적으로 구체화해 나가는 방식이, 산업의 혁신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저작권 생태계를 보호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제2절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 방안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25년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은 고영향/생성형 AI에 대한 투명성 일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성 원칙은 주로 인공지능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나 산출물에 대한 설명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실제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된 저작물 등 데이터의 구성과 출처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무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AI 학습에 이용된 저작물 등의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학습 데이터 투명성 확보'란, 인공지능 시스템의 결과물이나 성능에 대한 설명을 넘어, 해당 시스템의 학습 과정에서 어떠한 유형의 데이터와 출처가 활용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서 학습 데이터 공개 제도를 중심적으로 검토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에는 대규모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학습 데이터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는 단순한 기술적 설명의 문제를 넘어 저작권 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규범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는 AI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의 공개 여부, 공개 범위 및 공개 방식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고, 이로 인해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물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분쟁 발생 시에도 실질적인 권리 행사와 입증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AI 학습용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 등의 공개 의무 도입을 위한 법적·정책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나아가 이러한 규율을 인공지능 기본법과 저작권법 중 어느 법률 체계에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 투명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본법과 저작권법 각각에 대한 개정 방향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입법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책적 필요성 및 현행 법제 분석

1) 정책적 필요성

인공지능 기본법 내 투명성 원칙만으로는 저작권 보호와 창작자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기에, 학습 데이터 공개를 통한 책임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에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학습 데이터에 관한 투명성 확보는 창작자 권리 보호의 출발점으로 기능한다. 즉, 투명성은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 접근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정당한 보상이나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저작권법이 지향하는 권리 보장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공정이용과 사회적 신뢰의 관점에서 학습 데이터 투명성은 저작물 이용의 전반적 과정을 일정 부분 공개함으로써, 근거 없는 권리 침해 주장이나 과도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인공지능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투명한 데이터 이용 정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정보 공유와 기술 혁신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균형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법(AI Act)을 통해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유형에 관한 정보 공개를 명문화함으로써, 창작자·저작권자의 권리 실현과 공정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해, 학습 데이터 투명성 확보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기본법 및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현행 법제

- **인공지능 기본법**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인공지능 활용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은 인공지능의 개발·이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접근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제6조제2항제5호)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성격에 머물러 구체적 집행 수단을 담고 있지는 않다.

특히 학습 데이터의 공개 의무나 그 범위·방법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부 조항에서 데이터 활용과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지만, 이는 추상적 지침에 불과하여 학

습 데이터의 출처 확인, 권리자 접근권 보장,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의 증거 확보 등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현행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거시적 지침으로서는 의미가 있으나, 데이터 투명성 확보 및 권리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와 관련한 구체적 규율을 마련하는 입법적 보완이 불가피하다.

- **저작권법**

현행 저작권법 제129조의2[1]는 저작권 관련 분쟁 시 저작권자가 권리 행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주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권리 확인을 위한 사후적 정보 요구에 한정되며, AI 학습용 저작물 등 학습 데이터의 사전 공개나 투명성 확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권리자가 침해 분쟁 발생 이후에만 제한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학습 단계에서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거나 권리를 예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의 별도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1) 제129조의2(정보의 제공) ① 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침해 행위나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가. 다른 당사자
나. 다른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
다. 다른 당사자의 후견인
2.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다른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제공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정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을 신청한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의견을 특별히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누구에게도 그 제공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습 데이터 공개 관련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발의 현황

• 인공지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안, 의안번호 2210815)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 ③ (생 략)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인공지능사업자는 「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저작물 등(이하 "저작물 등"이라 한다)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등이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예외, 제4항에 따른 공개 방법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신 설〉	제31조의2(민관협의체 구성) ① 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 공개 및 저작물 등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사업자, 저작권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사실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사실조사 등) ① ----------.
1. 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1.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2. 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검토 및 시사점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해당 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실 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노력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노력의무만을 두고 있을 뿐 이를 담보할 실질적 기준이나 제재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사실상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문제는 법적 불확정성에 있다기

보다는, 구속력과 실효성이 결여된 의무로 인해 창작자 보호라는 규정 도입의 취지가 약화될 가능성에 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공개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그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안, 의안번호 2210903)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 ③ (생 략) 〈신 설〉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인공지능사업자는 「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저작물 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등이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예외, 제4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

- 검토 및 시사점

개정안은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과정에서 저작물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학습용 데이터 확인 절차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선언적 규정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국 창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개정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무 불이행 시 조사 및 후속 시정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권리자가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로서,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 역시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3) 이해관계자 의견

AI 학습 데이터 공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의견은 주로 산업계(개발사)와 저작권자 간의 인식 차이로 나타나며, 제도화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 공개의 범위와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AI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 데이터 공개가 여전히 필요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공정이용이 인정된다면 별도의 데이터 공개는 요구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 이에 대해 공정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는 문화 산업의 공정한 환경 조성과 권리 보호를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이용 여부는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의 합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실체적 기준인 반면, 학습 데이터 공개는 그러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적·절차적 기반에 해당한다. 즉, 데이터 공개는 저작권 침해를 전제하거나 이를 단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 여부를 인지하고 공정이용 또는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정보 접근 가능성을 보장하는 장치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습 데이터 공개와 공정이용 판단은 상호 대체되는 관계가 아니라, 각각 다른 차원에서 기능하는 제도적 요소로서 구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2. 해외 학습 데이터 공개 관련 법제도 검토

(1) EU

1) 범용 AI 모델 제공자의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Obligations)

EU AI법은 범용 AI 모델(General-Purpose AI Models)의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범용 AI 모델 제공자(Provider)로 하여금 모델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에 대한 충분히 자세한 요약서(A Sufficiently Detailed Summary about the Content used for Training of the General-purpose AI Model)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한다.[2] 이때, EU AI법 전문 제107조에 따라 EU AI 사무국은 요약 서식을 제공하여야 하고, 전문 제108조에 따라 제공자가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의 요약 공개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단, AI 사무국이 저작권 준수 여부에 대하여 학습 데이터의 개별 저작물 단위별 확인이나 평가를 해서는 아니 되며, EU 법률에 규정된 저작권 규칙의 집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EU AI법 제53조제1항 (d)

2) 범용 AI 모델 학습 데이터 공개 요약 템플릿 전문[3)]

1) 일반 정보

1.1 모델 제공자의 신원

제공자 이름 및 연락처:	
공식 대리인 및 연락처:	*제공자가 EU 역외에 설립된 경우에만 해당 (AI법 제54조 참조)*

버전 모델 명칭:	*본 요약서가 적용되는 모델 또는 모델 버전에 대한 고유 식별자(예: Llama 3.1-405B)를 기재하십시오. 집행위원회 설명서의 제(30)항에 따라, 다수의 모델 또는 모델 버전의 요약서 내용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요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해당 모델 또는 모델 버전의 모델 카드(Model Card) 등 추가 공개 문서의 링크를 기재해 주십시오.*
모델 종속성:	*해당 모델이 이미 EU 시장에 출시된 하나 이상의 범용 AI 모델을 수정한 결과물인 경우(미세 조정 포함), 원래 모델(버전)의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해당 모델의 요약서 링크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해당 모델의 EU 시장 출시일:	*해당 모델이 EU 시장에 출시된 날짜를 기재하십시오. (본 요약서가 복수의 모델 또는 모델 버전에 적용되는 경우, 각 모델(버전)의 시장 출시일을 날짜와 함께 적어 주십시오.(집행위원회 설명서 제(30)항 참조)*

1.2 모델 식별

1.3 모달리티, 전체 학습 데이터 크기 및 기타 특성

이 항목에서는 사전처리(Pre-processing)를 거친 후 모델 학습 전에 사용된 전체 학습 데이터에 대한 일반 정보를 기재하십시오.

모달리티 (형식)	**학습 데이터 크기**	**콘텐츠의 종류**
식별 가능한 범위까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모달리티를 선택	*선택한 각 모달리티에 대해, 해당 모달리티의 전체 학습 데이터 크기의 추정치 내의 범위를 선택. 해당 추정에서 동적 데이터셋은 제외할 수 있음*	*선택한 각 모달리티에 대해, 해당 모달리티의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콘텐츠의 유형을 일반적으로 설명*
☐ 어문	☐ 10억 토큰 미만 ☐ 10억에서 10조 토큰 ☐ 10조 토큰 초과 ☐ 또는, 다른 단위를 사용하여 대략적인 크기를 적어 주십시오:	*가능한 콘텐츠 유형의 예로는 소설과 논픽션, 과학 관련 텍스트, 언론 기사, 법률 및 행정 문서, 소셜미디어 댓글, 소스코드 등이 있습니다.*
☐ 이미지	☐ 1백만 이미지 미만 ☐ 1백만~10억 이미지 ☐ 10억 이미지 초과	*콘텐츠 유형의 예로는 사진, 시각 예술 작품, 인포그래픽, 소셜미디어 이미지, 로고, 브랜드 등이 있습니다.*

3) EU, Explanatory Notice and Template for the Public Summary of Trainining Content for Generalpurpose AI Model

모달리티 (형식) *식별 가능한 범위까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모달리티를 선택*	**학습 데이터 크기** *선택한 각 모달리티에 대해, 해당 모달리티의 전체 학습 데이터 크기의 추정치 내의 범위를 선택. 해당 추정에서 동적 데이터셋은 제외할 수 있음*	**콘텐츠의 종류** *선택한 각 모달리티에 대해, 해당 모달리티의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콘텐츠의 유형을 일반적으로 설명*
☐ 오디오[4]	☐ 1만 시간 미만 ☐ 1만 시간~1백만 시간 ☐ 1맥만 시간 이상	*콘텐츠 유형의 예로는 음악 작품 및 음원, 오디오북, 라디오 방송 및 팟캐스트, 개인 간 음성 통신 등이 있습니다.*
☐ 비디오	☐ 1만 시간 미만 ☐ 1만 시간~1백만 시간 ☐ 1백만 시간 이상	*콘텐츠 유형의 예로는 뮤직비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연 영상, 비디오 게임, 동영상 클립, 저널리즘 영상, 소셜미디어 영상 등이 있습니다.*
☐ 기타	*모달리티를 명시하고, 각 모달리티의 대략적인 크기와 단위를 기재하십시오.*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획득/수집의 최종 일자:	*모델 학습을 위해 데이터가 수집/획득된 최종 일자를 월/연도순으로 기재하십시오.. 해당 일자 이후에도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나 동적 데이터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되고 있는지 여부도 적어 주십시오.*
전체 학습 데이터의 언어 특성에 관한 설명:	*해당되는 경우, 학습 데이터(예: 어문, 비디오 또는 음성)에 포함된 언어를 기재하십시오.. 특히, EU 공식 언어의 포함 여부와 범위를 중심으로 적어 주십시오..*
학습 데이터 전체에 관한 여타의 특성:	*해당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관련성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가 및 지역별 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의 전체 학습 데이터와 관련이 있는 여타의 특성을 적어 주십시오..*
추가 설명(선택):	*모델 제공자는 자발적으로 기타 관련 정보를 추가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예: 데이터 규모 산정을 위해 적용된 압축 또는 토큰화 방식,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의 샘플링 빈도/비율 등).*

2) 데이터 출처 목록

이 항목에서는 범용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된 구체적인 데이터 출처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데이터셋은 하나의 사전 구성된(Pre-packaged) 데이터 집합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데이터셋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필터링 또는 사전 처리한 경우에는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고려하지 않으며, 다음의 항목에서 별도로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성데이터 외에 특정 데이터셋이 다음의 두 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적절한 하나의 항목을 선택해서 보고해야 합니다(2.5항 참조).

4) 비디오에 포함된 오디오는 제외되며, 오디오는 '비디오' 모달리티 항목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오디오' 모달리티에 '음성'도 포함된다고 이해한다.

2.1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셋

이 항목에서는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 중, 제3자에 의해 구성되었고, 전체 또는 사전 정의된 단위로 무료 공개되어 쉽게 다운로드 가능한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데이터셋에는 공공 저장소, 온라인 플랫폼, 전문 웹사이트, 커먼 크롤(Common Crawl) 스냅샷 등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셋 및 이들의 집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이 무료로 공개되어 있다고 권리로부터 무조건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라이선스 계약이나 이용 조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 특정 무료 또는 오픈 라이선스는 학습을 위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정 모달리티와 관련하여 공개된 데이터셋 전체 중 하나의 데이터셋이 차지하는 비중이 3%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셋은 '대량 데이터셋(Large Dataset)'으로 간주됩니다. 데이터셋의 크기는 사전처리(예: 필터링) 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보고를 회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분할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모델 학습이 허용된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나요?	☐ 그렇다 ☐ 아니다
만약 '그렇다'이면, 해당 데이터셋이 포함된 콘텐츠의 모달리티를 적어 주십시오:	☐ 어문 ☐ 이미지 ☐ 비디오 ☐ 오디오 ☐ 기타(자세히 적어 주십시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량 데이터셋:	*각 대량 데이터셋에 대하여, 데이터셋의 식별자, 명칭과 접근 가능한 링크를 적어 주십시오. 링크가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데이터 수집의 시작 및 종료 시점이 알려져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알려지지 않았다면 '모름'으로 적어 주십시오). 또한, 전체가 아닌 일부만 학습에 사용된 경우, 해당 부분을 선택한 일반적인 기준이나 방식을 적어 주십시오.*
앞에 기재하지 않은 여타의 이용 가능한 데이터셋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위에 기재하지 않은 여타의 이용 가능한 데이터셋의 경우, 다음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i) 모달리티 유형(예: 어문, 이미지), (ii) 콘텐츠의 성격(예: 개인정보, 저작권 보호 콘텐츠, 사물인터넷 또는 합성데이터와 같은 기계 생성 데이터), (iii) 해당되는 경우, 언어적 특성, (iv) 데이터 수집의 대략적인 시작 및 종료 시점(알려지지 않은 경우 '없음'으로 기재)*
추가 설명(선택):	*모델 제공자는 자발적으로 해당 데이터셋의 크기 및 기타 관련 세부사항 등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2.2 제3자에게서 얻은 비공개 민간 데이터셋

이 항목에서는 제3자로부터 확보한 비공개 민간 데이터셋 중, 공개되지 않았고 2.1항에서 이미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셋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① 모델 제공자와 권리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 간에 상업적 거래 기반의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된 데이터셋(집중관리단체 및 합법적인 콘텐츠 수집 사업자 등의 권리자를 대표하여 집합적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한을 가진 단체를 통한 계약을 포함)(2.2.1항).

② 데이터 중개업체, 비공개 데이터베이스, 기타 제3자의 데이터셋 등으로부터 확보하였으나,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과 상업적 거래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데이터셋 (2.2.2항).

2.2.1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상업적으로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데이터셋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과 상업적 거래 기반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그렇다면 해당 데이터셋이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의 모달리티를 적어 주십시오:	☐ 어문 ☐ 이미지 ☐ 비디오 ☐ 오디오 ☐ 기타(설명을 적어 주십시오)

2.2.2 제3자에게 확보한 민간 데이터셋

제2.2.1항에서 설명된 라이선스가 부여되지 않은 제3자인 비공개 데이터베이스 제공자나 데이터 중개업체 등을 통해 민간 데이터셋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그렇다면 해당 데이터셋이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의 모달리티를 적어 주십시오:	☐ 어문 ☐ 이미지 ☐ 비디오 ☐ 오디오 ☐ 기타(설명을 적어 주십시오)
공개적으로 알려졌다면, 제3자로부터 얻은 민간 데이터셋의 목록을 적어 주십시오:	*공개적으로 알려진 경우, 2.2.1항에서 설명된 방식으로 라이선스를 얻지 않은 제3자의 주요 민간 데이터셋 중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의 식별자 또는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관련 정보에 대한 링크도 함께 적어 주십시오.*
제3자로부터 확보하였으나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민간 데이터셋에 대한 일반 설명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 중에서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앞의 식별자가 기재되지 않은 민간 데이터셋의 경우, 해당 데이터셋의 콘텐츠를 일반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i) 모달리티(예: 어문, 이미지), (ii) 콘텐츠의 성격(예: 개인정보, 저작권 보호 콘텐츠, 사물인터넷 또는 합성데이터 등 기계 생성 데이터), (iii) 해당되는 경우, 언어적 특성*
추가 설명(선택):	*모델 제공자는 자발적으로 해당 데이터셋의 크기 및 기타 관련 세부사항 등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2.3 온라인 출처에서 스크롤 또는 스크랩한 데이터

이 항목에서는 모델 제공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자가 온라인 출처로부터 직접 크롤링하거나 스크레이핑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즉, 제3자가 이미 수집하여 2.1항에서 언급한 커먼크롤 등의 플랫폼을 통해 공개한 공개 데이터셋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공자 또는 그 대리인이 크롤러를 사용하였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그렇다면 사용된 크롤러의 명칭 또는 식별자:	
크롤러의 사용 목적:	
크롤러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예를 들어, 이는 크롤링 과정에서 캡차(Captcha)의 준수, 비밀번호로 보호된 웹사이트 및 유료 접근 제한의 준수, robots.txt 및 기타 관련 프로토콜의 준수 등*
수집 기간:	*월/연도부터 월/연도까지*
크롤링된 콘텐츠 유형 및 온라인 출처에 대한 포괄적 설명:	*지리적, 언어적 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스크레이핑된 웹사이트의 유형(예: 뉴스, 블로그, 소셜미디어, 포럼, 커뮤니티 웹사이트, 사용자 생성 콘텐츠 플랫폼, 문화유산 기관 웹사이트, 교육 사이트, 정부 포털, 개인 블로그, 스트리밍, 게임 플랫폼, 온라인 TV 플랫폼, 합성데이터 라이브러리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크롤링된 콘텐츠의 유형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포함된 모달리티의 유형:	☐ 어문 ☐ 이미지 ☐ 비디오 ☐ 오디오 ☐ 기타(설명을 적어 주십시오)
크롤링된 주요 도메인 이름의 요약:	*인터넷 도메인에서 수집된 콘텐츠가 모델 학습에 사용된 경우, 스크레이핑된 콘텐츠의 규모를 기준으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장 관련성 높은 인터넷 도메인 이름(최상위 및 2단계 도메인, 예: example.com) 목록을 기재하십시오 (해당되는 경우, 모든 모달리티에 걸쳐 대표성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상위 5% 또는 최대 1,000개의 인터넷 도메인 이름 중 더 적은 수를 공개하면 됩니다. 이 목록은 예를 들어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로 제공하거나, 접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추가 설명(선택):	*모델 제공자는 앞의 목록에 요구된 것보다 더 많은 도메인 이름 또는 개별 저작물의 출처 및 URL 등 자발적으로 여타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4 사용자 데이터

이 항목에서는 메일 서비스, 소셜미디어 플랫폼, 콘텐츠 플랫폼, 또는 제공자의 AI 모델 및/또는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포함하여 제공자의 모든 서비스 및 제품을 통해 수집된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2.2.1항에서 설명된 상업적 거래 계약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데이터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모델을 파인튜닝하기 위하여 사용된 사용자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AI 모델과의 사용자 상호작용에서 발생한 데이터(예: 사용자 입력 또는 프롬프트)가 모델 학습에 사용되었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모델 제공자의 기타 서비스 또는 제품과의 사용자 상호작용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모델 학습에 사용되었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그렇다인 경우,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사용된 제공자의 서비스 또는 제품을 일반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포함된 모달리티 유형:	☐ 어문 ☐ 이미지 ☐ 비디오 ☐ 오디오 ☐ 기타(설명을 적어 주십시오)
추가 설명(선택):	*모델 제공자는 자발적으로 여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2.5 합성데이터

이 항목에서는 모델 학습을 위해 제공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다른 AI 모델의 출력물에 직접적으로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하여 만든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모델 증류 또는 모델 정렬(예: 강화학습 기반 AI 피드백 등)을 사용한 경우를 설명해 주십시오. AI 모델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정제하거나 보강하는 경우(예: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 설명 또는 깊이 맵(Depth Map)을 생성하는 등의 AI 생성 메타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이 제2.1항에서 설명된 공개 데이터셋과 관련된 경우, 2.1항에서 보고해야 하며, 모델 제공자를 대신해 제3자가 생성한 합성데이터셋인 경우에는 2.2.2항이 아니라 해당 항목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모델 학습을 위해, 제공자 또는 그 대리인이 만든 AI 기반 합성데이터가 사용되었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만약 '그렇다'라면 합성데이터의 모달리티를 기재하십시오:	☐ 어문 ☐ 이미지 ☐ 비디오 ☐ 오디오 ☐ 기타(설명을 적어 주십시오.)
만약 '그렇다'라면 합성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 일반 목적 AI 모델이 시장에 출시된 경우, 해당 모델의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일반 목적 AI 모델의 명칭을 명시하고, 가능한 경우 해당 모델의 요약서에 대한 링크도 함께 적어 주십시오.*
모델 제공자의 AI 모델 등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모델을 포함하여 이 요약서가 적용되는 모델의 학습을 위해 합성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 기타 AI 모델에 대한 정보:	*합성데이터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 기타 AI 모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십시오.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제공자의 자체 모델도 포함하여 적어 주십시오. 해당되는 경우,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권리행사 및 서식의 다른 항목에서 요구되는 정보 공개 의무의 회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모델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도 함께 적어 주십시오.*
추가 설명(선택):	*모델 제공자는 자발적으로 여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2.6 데이터의 여타 출처

이 항목에서는 예를 들어, 오프라인 출처에서 수집된 데이터, 자체적으로 디지털화한 미디어(예: 디지털화된 아날로그 텍스트 콘텐츠, 이미지), 모델 제공자가 의뢰하여 사람이 레이블링한 데이터셋, 강화학습을 통해 사람이 만든 데이터 등 이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십시오.

모델을 학습하는데 2.1항과 2.5항에 설명되지 않은 데이터 출처가 사용되었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만약 '그렇다'라면, 해당 데이터 출처와 데이터를 서술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추가 설명(선택):	*모델 제공자는 자발적으로 여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3) 데이터 처리 측면

3.1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의 예외 또는 제한에 따른 권리유보의 준수

이 항목에는 AI법 제53(1)(c)에 따라 수립한 저작권 정책에 명시한 대로 제공자가 EU 지침 2019/790 제4조제3항을 준수하여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또는 제한에 따른 권리 유보를 인지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적용한 조치를 기재해야 합니다.

TDM 예외 또는 제한으로부터의 권리 유보를 존중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범용 AI 모델에 대한 실천강령에 서명하였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모델 학습 전에 TDM 예외 또는 제한에 따른 권리 유보를 존중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전후에 구현된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이에는 제공자가 준수한 옵트아웃 프로토콜 및 솔루션 또는 (해당 되는 경우) 데이터셋을 제공받은 제3자가 준수한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추가 설명(선택):	*제공자는 또한 자발적으로 기타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는 또한 AI법 제53조(1)(c)에 따라 저작권 정책의 요약을 공개하도록 권장됩니다. 해당 정책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할 경우(예: 관련 웹 페이지로의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3.2 불법 콘텐츠의 제거

이 항목에는 학습 데이터에 포함될 수 있는 불법 콘텐츠를 유럽연합의 법에 따라 사전에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제공자가 시행한 조치를 기재해야 합니다(예: 블랙리스트, 키워드 필터링, 모델 기반 분류 등). 모델 제공자의 내부적인 사업 관행이나 영업 비밀은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학습 데이터에 유럽연합의 법 아래에서 불법 또는 부정한 콘텐츠, 특히 아동 성착취물, 테러 관련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자료의 무단 사용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권고됩니다. 모델의 기능 향상을 위한 일반적인 데이터 선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용된 조치를 일반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3.3 기타 정보(선택)

데이터 처리에 관한 여타의 관련 정보(선택):	*모델 제공자는 모델 학습 이전 및 이후의 관련 데이터 처리의 절차 및 조치 중에서 유럽연합의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존중 및 행사와 관련된 기타 유의미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됩니다.*

3) 검토

범용 AI 모델 학습 데이터 공개 요약 템플릿은 투명성과 영업비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권리자의 저작물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직접 목록 대신, 크롤링한 상위 10%의 도메인 목록이나 사용한 공개 데이터셋 등 출처의 유형을 묻는다. 이는 개발자가 핵심 영업 비밀을 보호할 여지를 남긴다.[5)]

하지만 EU가 제시한 학습 데이터 정보 공개 템플릿은 AI법이 표방하는 의무적이고 실질적인 투명성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6)]도 있다. 특히 이 양식이 권리자의 저작물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 정보 제공을 배제하고, 크롤링한 상위 10% 도메인 목록이나 데이터 출처의 유형만을 요구하도록 설계된 점은 저작권자나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를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 미국

1) 연방

- AI 네트워크의 투명성과 책임 법안(TRAIN Act of 2025, S. 2455; H.R. 7209)[7)8)]2025년 7월 24일 상원 피터 웰치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AI 모델 학

5) 이철남,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정보 공개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법학회 40주년 기념 추계 공동 학술대회 발표문
6) https://openfuture.eu/blog/a-step-forward-but-not-far-enough-the-eus-ai-transparency-template/
7)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Networks Act(상원 사법위원회 회부/25. 9. 30. 기준)
8) 이전 회기 법안인 S.5379의 후속 법안으로, 2025.7.24. 새 회기에서 재발의됨

습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을 살펴보면, 저작권자는 법원 서기(Clerk)에게 자료제출 소환장(Subpoena Duces Tecum)의 발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은 생성형 AI 모델의 개발자(Developer) 또는 배포자(Deployer)에게 해당 모델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또는 그 일부)을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는 사본 또는 관련 기록(Copies of, or Records Sufficient to Identify with Certainty)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효력을 가진다. 단, 해당 저작권자가 모델 개발자 또는 배포자가 그러한 저작물 중 하나 이상을 생성형 AI 모델 학습에 사용했다는 선의의 믿음(Subjective Good Faith Belief)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소환장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모델 개발자 또는 배포자가 소환장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개발자 또는 배포자가 저작물 사본을 만든 것으로 번복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을 받게 되며, 이는 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소환장에 불응하면 저작물의 복제 사실이 일응 추정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이 개발자에게 전환되며, 개발자는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 또한, 저작권자가 소환장 신청을 불성실 또는 악의적으로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환장 수령인의 소송 신청을 통해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소환장을 통해 받은 정보는 비밀 유지의무가 적용되어 별도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 **생성형 AI 저작권 공개법안**
  (Generatice AI Copyright Disclosure Act of 2024, HR 7913)[9]

2024년 4월 9일 하원 아담 쉬프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학습 데이터셋(Training Dataset)을 작성하거나 해당 데이터셋을 중대한 방식(Significant Manner)으로 변경(업데이트, 정제(Refining), 재학습(Retraining) 등 포함하는 자는 학습 데이터셋에 이용된, 또는 학습 데이터셋을 변경하기 위해 이용된 모든 저작물(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셋의 경우 해당 URL 포함)에 대한 충분히 상세한 요약서를 저작권청에 제공해야 한다.

이때 학습 데이터셋이 사용된 생성형 AI 시스템을 소비자에게 최초로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30일 전까지 요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 전에 이미 소비자에게 제공된 생성형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청장은 제공된 정보를 수록한 공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9) 하원 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하다가 회기 종료로 사실상 폐기됨(2026. 2. 기준)

를 설치 및 유지해야 한다.[10] 규정 위반 시 최소 5,000달러 이상의 금전적 제재(Civil Penalty)에 처한다.[11]

- **인공지능 기반 모델 투명성 법안**
  (AI Foundation Model Transparency Act of 2023, HR 6881)

2023년 12월 22일 하원 도널드 베이어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연방거래위원회(FTC)로 하여금 AI 기반 모델(Foundation Model)의 학습 데이터와 알고리즘 운영에 관한 투명성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모델을 제공하는 사업자(Covered Entity)에게 학습 데이터의 출처, 데이터의 규모와 구성, 데이터 레이블링 및 편집 절차, 모델의 목적과 위험, 과거 수정 내역, 버전과 출시일, 평가 성능 및 고위험 영역(의료, 금융, 선거, 치안, 교육, 취약계층 관련 등)에서의 안전조치 등에 관한 정보를 FTC와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법 시행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FTC는 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과학기술정책실(OSTP), 저작권청, 학계·업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출된 정보는 기관 웹사이트와 FTC 중앙 포털에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공개되며, FTC는 공포 후 2년 이내 최초 검토를 거쳐 이후 매년 규정을 갱신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월간 10만 건 이상의 출력물을 생성하거나, 월간 3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모델 제공자로 한정된다. 오픈소스 모델이나 기존 모델을 기반으로 파생된 모델에 대해서는 대안적 규정채택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 위반 시 해당 행위는 연방거래위원회법상 불공정·기만적 행위로 간주되며, FTC의 집행권한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법 위반 사업자는 FTC 법에 따른 제재를 적용받으며, 동시에 해당 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면책도 누릴 수 있다. 법 시행 2년 후 FTC는 관련 기준의 수립, 이행, 집행에 관한 보고서를 하원과 상원의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법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5 회계연도에 1천만 달러, 이후 매년 300만 달러가 배정된다.

---

10) EU AI법의 경우 범용 AI 모델 제공자가 직접 요약서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위 법안과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 효과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저작권청이 직접 관리한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편의성 및 투명성 구현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학습에 이용된 저작물의 공개에 관한 연방법안 발의(류시원)", COPYRIGHT ISSUE REPORT 2024-16, 5쪽.

11) 미국법에서 "Civil Penalty"는 사인의 법률상 의무 위반을 제재하기 위해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비형사절차를 통해 금전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위의 글, 5쪽 및 각주 31 재인용.

• **인공지능 책임 및 개인정보 보호법**
(AI Accountability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S 2367)

2025년 7월 21일 호울리 상원의원과 블루멘설 상원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 책임 및 개인정보 보호법(AI Accountability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S.2367)」은 개인의 명시적이고 사전적인 동의 없이 데이터가 전용, 수집, 처리, 판매되거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이용되는 행위를 연방법상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가 무단으로 이용되었을 경우 연방법원이나 주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실제 손해액, 이익의 세 배, 최소 1,000달러의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금지명령, 소송비와 변호사 비용까지 구제수단으로 인정한다. 다만 피고가 피해자의 명시적·사전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항변할 수 있지만, 강압이나 기만, 불필요한 조건을 통한 동의는 무효로 본다. 또한 연방중재법 적용을 배제하여 분쟁 전 중재합의나 집단소송 포기 합의는 무효화하고, 법원만이 이 법의 적용 여부와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고지를 통해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고 동의해야 하며, 단순히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나 약관에 포함하거나 링크로 제시하는 방식은 유효하지 않다. 이 법은 주법을 선제하지 않고 최소 기준으로 기능하여, 주법이 더 강력한 권리와 보호를 부여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허용한다.

2) 주(州)

• **캘리포니아 AI 훈련데이터 투명성의 강화법**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Data Transparency, AB 2013)

캘리포니아주는 민법(Civil Code)을 개정하여 제15.2장 제3111조[12]에 따라 AI 시스템 개발

12) 캘리포니아 법전 제 Civil Code 제15.2장 § 3111
2026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 캘리포니아 주민이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 또는 서비스(202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출시된 것 또는 실질적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 그 이용 조건에 금전적 보상(Compensation)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개발한 개발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에 관한 문서를 개발자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a) 해당 시스템 또는 서비스 개발에 사용된 데이터셋에 대한 고수준 요약(A high-level summary), 포함 항목:
(1) 해당 데이터셋의 출처 또는 소유자
(2) 해당 데이터셋이 인공지능 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의도된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는지에 대한 설명
(3) 데이터셋에 포함된 데이터 포인트의 수, 일반적인 범위 및 동적인 데이터셋에 대한 추정치 포함
(4) 데이터셋 내 데이터 포인트의 유형
(5) 라벨이 있는 데이터셋의 경우: 사용된 라벨 유형
(6) 라벨이 없는 데이터셋의 경우: 일반적인 특징
(7) 데이터셋이 저작권, 상표, 특허로 보호되는 데이터인지, 또는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인지 여부
(8) 데이터셋이 개발자에 의해 구매되었는지 또는 라이선스된 것인지 여부
(9) 데이터셋에 '개인 정보(Personal Information)' 또는 '소비자 집계 정보(Aggregate Consumer Information)'가 포함되어

자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조항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생성형 AI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인 및 기업은 이를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데이터셋의 데이터포인트 정보, 데이터셋의 구매 혹은 라이선스 획득 여부, 데이터셋에 개인 정보 포함 여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수범자 관련하여 함께 시행된 캘리포니아 AI 투명성법(SB 942)과 달리 월간 사용자 수 등 정량적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다.[13)]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의무의 주체는 생성형 AI 시스템 또는 서비스 개발자가 되며, ⅰ) 2022년 1년 1일 이후 출시되었거나, ⅱ) 실질적 변경(Modification)이 있었으며, ⅲ)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위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여기서 실질적 변경은 학습 데이터, 모델 구조, 핵심 기능 변경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소비자 대상이면 적용되므로 개발자에는 해외 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다.

위 조항은 형사법이나 행정법상의 규제 조문이 아니라 민사적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이므로 의무 위반 시 기본적으로 민사상 책임(예: 손해배상, 금지청구 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공개법안**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Data: Copyrighted Materials, AB 412)

2025년 3월 10일 레베카 바우어-카한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생성형 인공지능(GenAI) 모델을 훈련시킨 개발자는 학습 과정에서 사용된 등록 저작물과 그 저작권자를 문서화하고,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저작권자가 보유한 자료가 실제로 학습에 사용된 경우 개발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저작물 목록을 제공해야

있는지 여부
(10) 개발자가 데이터셋에 대해 수행한 정제, 처리 또는 기타 수정 여부 및 그러한 작업들의 의도된 목적
(11) 데이터셋이 수집된 기간, 수집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알리는 공지 포함
(12) 시스템 또는 서비스 개발 중 데이터셋이 최초로 사용된 날짜. 해당 생성형 AI 시스템 또는 서비스가 개발 과정에서 합성데이터 생성(Synthetic Data Generation)을 사용했는지 여부. 이 경우, 개발자는 해당 합성데이터의 기능적 필요성(Functional Need) 또는 의도된 목적(Desired Purpose)을 설명할 수 있다.
(b)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훈련 문서를 게시할 의무가 면제된다:
(1) 보안 및 무결성(Security and Integrity)을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을 가진 생성형 AI 시스템 또는 서비스
(2) 국가 항공 우주 내 항공기 운항만을 위한 시스템 또는 서비스
(3) 국가 안보, 군사 또는 방위 목적을 위해 개발되었고, 연방 기관에만 제공되는 시스템 또는 서비스

13) 캘리포니아 AI 투명성법(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 SB 942)의 경우 캘리포니아 내에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월간 방문자 또는 사용자가 100만 명을 초과하는 생성형 AI 시스템 제공자(Covered Provider)에게 (i) 인공지능 탐지 도구의 생성 및 무료 제공 의무, (ii)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고, 해당 자료가 없다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저작권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발자는 이러한 자료와 요청 내역을 모델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기간 동안과 그 이후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모든 학습 데이터를 무료로 공개한 개발자는 법 적용에서 면제된다.

법안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등록 저작물에 대해 근사 콘텐츠 지문(Approximate Content Fingerprint)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자는 이를 활용해 학습 데이터셋에서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근사 지문은 파일의 고유 특징을 추출하여 원본을 재구성할 수 없으면서도 유사성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로, 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 등 다양한 데이터 유형에 적용 가능하다. 이 방식은 구글, 야후 등에서 연구·활용되어 온 기술로, 법안은 이를 통해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법안 위반 시 저작권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위반 건당 1,000달러 또는 실제 손해액 중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 확인 판결(Declaratory Relief),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 기타 적절한 구제를 명할 수 있다.

(3) EU AI법과 미국 내 AI 학습 데이터 공개 관련 법안 비교

	공개 범위	권리자 직접 청구권	제재	적용 예외·특징
EU AI 법	요약(공식 템플릿), 저작권 준수	없음	행정적·금전적	고위험필수, 전체 모델 적용
TRAIN Act	권리자 요청 시 구체적 내역	있음(법원 명령) 소환장	재판·강행	연방행정서브포나 활용
Generative AI Copyright Disclosure Act	모델·데이터셋 단위 상세 명세	없음	벌금(최소 $5,000)	30일전 공지, 데이터베이스
AI Foundation Model Transparency Act	FTC 기준 요약 정보	없음	기관규정 별도	FTC·NIST·OSTP 공동 관리
AI Accountability and Personal Data Act	개인정보/저작권 데이터 명시적 동의	있음(민사 소송)	손해배상·금지	사적권리 강화, 연방 기준 설정
캘리포니아 AB 2013	요약 정보 (출처, 유형 등)	없음	1,000달러/일, 손해배상	연구목적·자체 저작물 예외
캘리포니아 AB 412	권리자 요청 시 저작물별 내역	있음(직접)	행정제재 미약	대부분 모델 적용, 공개 정보 위주

3. 국내외 AI 학습 데이터 공개 관련 기술 동향

(1) 데이터 출처 추적 및 메타데이터 관리 기술

데이터 계보(Lineage)란 데이터를 처음 수집한 시점부터 가공·이동·활용되는 전 과정을 기록하고 추적하는 기술적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Google의 인공지능 개발용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인 Tensorflow(텐서플로)는 메타관리시스템(MLMD)을 통해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데이터셋, 중간 산출물, 실행된 모델 버전 등의 정보를 대해 상세히 기록하며 Google Cloud 등에서 API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14]. 이를 통해 데이터 개발자들은 민감 정보의 경로를 파악하고 데이터 품질의 시스템 레벨부터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2024년 3월 MLCommon는 Croissant 메타데이터 규격을 발표했다. 이 포맷은 기존의 데이터 표현 방식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추가 레이어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하나의 파일 안에 메타데이터, 리소스 파일의 요약, 데이터 구조, ML 시멘틱 등을 표현할 수 있다. Croissant은 웹 데이터 표준인 schema.org 방식에 기반하여 구축되었다. JSON-LD 형태를 취해 사람이 읽기에도, 컴퓨터가 처리하기에도 모두 쉬운 구조를 갖는다. 기술적으로 단순하면서도 실용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OpenLineage는 데이터의 흐름과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기 위한 개방형 표준 플랫폼이다. 이 시스템은 데이터 파이프라인(데이터가 수집·가공·저장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가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사용된다.[15] 최근에는 Apache Flink와 Kafka 등에서처럼 대량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계속 인입되는 스트리밍 환경에서도 OpenLineage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머신러닝(ML)의 스트림 데이터의 계보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MLflow는 머신러닝의 생애주기(Lifecycle)를 관리하기 위한 오픈 소스 플랫폼으로, 모델 학습과정의 실험 추적, 코드와 환경 관리, 표준화된 모델 형식, 모델의 중앙 저장소 등을 지원하는 범용성을 특징이다. 따라서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모델 학습 기록 추적이 가능하다.[16]

최근에는 데이터의 무결성 검증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내부 시스템에 저장된 기록 등이 나중에 수정되거나 위조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IBis라는 시스템은 데이터셋의 출처, 저작권자, 라이선스 정보 등의 핵심 메타

14) https://cloud.google.com/dataplex/docs/about-data-lineage?hl=ko, https://www.tensorflow.org/tfx/guide/mlmd?hl=ko
15) https://cloud.google.com/dataplex/docs/open-lineage
16) https://mlflow.org/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불변적으로 기록한다.[17] 또한, 하드웨어 기반의 무결성 검증 기술도 연구되고 있다. 인텔의 TDX나 AMD의 SEV-SNP는 신뢰 실행 환경(Trusted Execution Envrionment; TEE)과 로그정보를 결합해 머신러닝 전체 파이프라인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한다.[18] 다만 이러한 방식들은 훈련에 약간의 처리 부담을 주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개선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데이터 공급자는 데이터 워터마킹을 통해 데이터의 무단 사용이나 저작권 침해를 추적하기도 한다. 워터마킹[19]이란 텍스트나 이미지 등 데이터 안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서명'을 삽입하여 학습된 모델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도록 유도하는 기술이다. 이와 비슷하게, 데이터베이스 핑거프린팅(Database Fingerprinting) 기술도 연구되고 있다. 이 방식은 데이터베이스에 각 사용자별 고유한 식별 표시를 삽입해 두었다가 데이터가 재배포될 때 배포자를 추적하는 기술[20]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델이 특정 데이터셋을 어느 출처에서 취득하여 학습하였는지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도전하고 있으나, 모델의 학습 방법에 따라 그 성능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2) 모델 내 데이터 사용 검증 기술

한편, 데이터를 직접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인공지능 모델의 데이터 사용을 검증하기 위해 암호화 기술이 도입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영지식 증명[21](Zero-Knowlege Proof, ZKP)은 비밀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특정 사실이 맞다는 것만 증명하는 암호화 기술이다. 인공지능 개발자가 민감한 학습 데이터나 독점적인 모델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규제기관에게 "우리 모델은 특정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학습되었다"거나 "특정 법적 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에게도 실제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으면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데이터 귀속(Attribution) 기술은 특정 모델의 예측에 대한 개별 데이터 포인트의 영향을 정량화하는 방법론을 의미한다.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데이터 귀속 기술을 대규모 LLM으로 확장하는

17) Wang, Qin, et al. "Is your AI truly yours? leveraging blockchain for copyrights, provenance, and lineage." IEEE Transactions on Services Computing (2025).
18) Spoczynski, Marcin, Marcela S. Melara, and Sebastian Szyller. "Atlas: A framework for ml lifecycle provenance & transparency." arXiv preprint arXiv:2502.19567 (2025).
19) Chen, Wendi, Wensheng Gan, and Philip S. Yu. "Digital Fingerprinting on Multimedia: A Survey." arXiv preprint arXiv:2408.14155 (2024).
20) Ji, Tianxi, et al. "Privacy-preserving database fingerprinting." NDSS symposium. Vol. 2023.
21) Peng, Zhizhi, et al. "A survey of zero-knowledge proof based verifiable machine learning." arXiv preprint arXiv:2502.18535 (2025).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LIME(Local Interpretable Model-agnostic Explanations)과 같은 설명 가능한 AI 기법은 모델 예측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 훈련 데이터 포인트를 식별하는 역할을 한다[22]. 이는 모델의 결정이 특정 데이터에 의해 유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다만 계산 복잡도로 인해 큰 모델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여왔다. 최근 2024년 5월 발표된 LoGra/LogIX는 역전파 구조를 활용한 기울기 투영(Gradient Projection)을 통해 처리량을 6,500배 향상시키고 GPU 메모리를 5배 줄여, Llama3-8B-Instruct와 10억 토큰 데이터셋에 최초로 영향력 함수를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23]. 또한, Google은 2024년 12월, 전체사전학습 규모에서의 훈련 데이터 귀속 분석을 최초로 수행하여, 사실적 지식에 영향을 미친 데이터가 반드시 해당 예측에 직접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발견했다. 이는 대형 언어모델이 직접적 문장 암기보다는 패턴 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24]. 한편, 2024년 10월 EMNLP에서 발표된 DDA(Debias and Denoise Attribution)기법은 LLM 미세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팅 오류(Fitting Error)를 활용하여 LLaMA2, QWEN2, Mistral과 같은 모델에서 평균 91.64%라는 최고 수준의 데이터 귀속 AUC(Area Under the Curve)를 달성했다. 이는 모델의 훈련 데이터와 예측 결과 간의 연결성을 더욱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25]

다만 앞에 제시한 방식들은 일반적으로 모델의 일부를 다시 학습(Retraining) 하거나 미세조정(Fine-tuning) 등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TRAK(Tracing with Randomly-projected After Kernel)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으로, 모델을 다시 학습시키지 않고도 데이터 귀속 점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26] 이러한 특징으로 2024년 ICML에서는 TRAK를 대규모 데이터 큐레이션에 활용하는 튜토리얼이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TRAK를 사용하여 저품질 데이터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제거하는 방법을 학습했다[27].

---

22) Ribeiro, Marco Tulio, Sameer Singh, and Carlos Guestrin. " "Why should i trust you?" Explaining the predictions of any classifier." Proceedings of the 22nd ACM SIGKD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nowledge discovery and data mining. 2016. / Xiong, Haoyi, et al. "Towards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XAI): A data mining perspective." arXiv preprint arXiv:2401.04374 (2024).

23) Choe, Sang Keun, et al. "What is your data worth to gpt? llm-scale data valuation with influence functions." arXiv preprint arXiv:2405.13954 (2024).

24) Chang, Tyler A., et al. "Scalable influence and fact tracing for large language model pretraining." arXiv preprint arXiv:2410.17413 (2024).

25) Park, Sung Min, et al. "Trak: Attributing model behavior at scale." arXiv preprint arXiv:2303.14186 (2023).

26) Park, Sung Min, et al. "Trak: Attributing model behavior at scale." arXiv preprint arXiv:2303.14186 (2023).

27) https://ml-data-tutorial.org/

4. 저작권법의 목적과 AI 학습 데이터 투명성 확보의 정합성 분석

(1) 저작권법 목적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을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두 가지 상호 보완적 가치를 동시에 지향함을 명확히 드러낸다. 특히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공개 논의에서, 창작자 권리 보호는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의 무단 활용을 방지함으로써 창작자의 경제적·인격적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공정 이용은 합리적 활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학습 데이터 공개에 관한 논의는 저작권법 목적을 균형 있게 구현하는 방향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 투명성 원칙과의 관계

투명성 원칙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이용 과정 전반에 관한 정보 접근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반적 거버넌스 원리로서, 그 자체가 곧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AI 학습 데이터 공개 논의에서의 투명성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사전에 단정하거나 개별 저작물의 이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저작물 이용에 관한 법적·사회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적 전제조건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습 데이터 투명성 원칙은 저작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실체적 권리를 직접 실현하는 규범이라기보다는, 저작권법이 전제하고 있는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이라는 이중적 목적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절차적 원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즉, 투명성 확보는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작권법상 권리 보호와 공정 이용의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따라서 AI 학습 데이터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독자적 규율 수단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저작권법이 지향하는 권리 보호와 이용 촉진이라는 목적이 기술 변화 속에서도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적 원칙으로 위치 지워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습 데이터 투명성 원칙은 저작권법의 목적과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목적이 현실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정합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학습 데이터 공개의 타당성 및 공개 범위

(1) 학습 데이터 공개의 타당성

학습 데이터는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준비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훈련데이터, 검증데이터, 테스트데이터로 구분된다. 이 중 훈련데이터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학습시키는 핵심 자료로 기능하는 반면, 검증과 테스트 데이터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므로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습 데이터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할 경우, 공개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존재한다.

기업들은 학습 데이터를 핵심 자산 내지는 영업비밀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나, 모든 학습 데이터가 곧바로 이러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학습 데이터에는 공개 데이터와 사적 데이터 등 다양한 유형이 혼재하기 때문에 공개 대상과 비공개 대상의 구분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 출처와 성격에 따라 공개 가능성 및 보호 필요성 역시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서 학습 데이터 공개는 전면적 공개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보 수준을 어떤 범위에서 공개할 것인가에 관한 제도 설계의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학습 데이터 공개가 요구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학습 과정이 외부에서 전혀 확인될 수 없는 경우, 저작물 이용의 적법성 판단과 책임 귀속에 관한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경우 대규모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이 학습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학습 데이터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 공개 없이는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사후적 판단 역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학습 데이터 공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첫째,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이다. 데이터 출처와 유형, 활용 방식에 관한 요약적 정보가 제공될 경우,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이용에 대한 사회적 감시 가능성이 제고되고,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이는 저작권자에게 자신의 저작물 이용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정보 접근의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여부 또는 공정이용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으로 기능한다. 셋째, 개발사와 이용자 측면에서도 공개 기준이 명확해질 경우, 저작물 이용에 관한 법적 위험을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의 AI Act는 학습 데이터의 전면적 공개를 요구하지 않고, '충분히 상세한 요약' 수준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출처 목록, 데이터의 주요 특성, 모델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과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공익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절충적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학습 데이터 공개의 타당성은 인공지능 개발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성, 저작권보호,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나아가 데이터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공개 범위를 차별화하는 것이 법적·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2) 저작권 보호와 영업비밀(기업비밀) 보호의 충돌

AI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가 기업이 막대한 자원과 비용을 투입하여 수집하고 구조화한 결과물로서 상업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산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동일한 데이터에의 접근이 가능할 경우 기업 간 기술 격차가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 데이터는 단순한 자료의 집합을 넘어 시장 경쟁력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은 학습 데이터 공개가 중대한 경쟁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하에서는 학습 데이터 공개의 대상이 학습 데이터 전반이 아니라,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의 포함 여부 및 그 이용과 관련된 정보에 한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학습 데이터 공개는 저작권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라는 서로 다른 법적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의 관점에서는 저작물의 출처와 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영업비밀 보호의 관점에서는 데이터의 상세한 공개가 기업의 독점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29조의2제2항제2호[28]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 제공 의무가 영업비밀 보호라는 별도의 법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습 데이터 공개에 있어서는 투명성과 기업 경쟁력 보호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 공개 범위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기술적 한계 및 방안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규모와 양은 매우 방대하다. 가령, Meta의 Llama-3는 15조 개의 토큰(즉, AI가 읽고 학습하는 기본 데이터 단위)을 기반으로 학습되었다.[29] 따라서 원시 데이터를 사람이 직접 검토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30] 실제로 Kadrey v. Meta Platforms,

---

28) 저작권법 제129조의2제2항제2호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9) "Introducing Meta Llama 3: The most capable openly available LLM to date," AI at Meta 블로그 (2024년 4월 18일) (https://ai.meta.com/blog/meta-llama-3/ 참고)

30) Trembley 대 OpenAI 사건에서 원고는 발견 절차 중 OpenAI의 훈련 데이터셋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단 한 건의 저작권 보호 대상 작품만을 찾는 데 6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검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No. 3:23-cv-03223, D.I. 254,

Inc. 사건에서 법원은 원시 또는 원본 데이터가 “실제로 사용된 데이터셋에 비해 방대하다”며 사건의 필요성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정제된 후 훈련 데이터에 대한 발견 범위를 제한한 바 있다.[31]

이러한 점에서 AI 학습 데이터 공개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시 데이터 자체를 전면 공개하기보다는, 데이터의 출처, 종류, 수량, 정제 과정 등 핵심 정보를 포함하는 메타데이터(Metadata)를 활용하는 기술적 방안이 중요하다. 메타데이터 공개는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학습 데이터 관련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얻을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AI 학습 데이터 공개 정책은 대규모 원시 데이터의 직접 공개 부담을 줄이고,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요약적이고 핵심적인 정보 공개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산업 경쟁력 유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균형 있는 접근은 법적 투명성 확보와 기술적 현실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4)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학습 데이터 공개 쟁점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정해야 하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따른 AI 학습 데이터 공개 규제의 타당성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1) 입법 목적의 정당성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의 차이로 인해 공개(의무)의 주체,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무단 복제나 무단 이용으로부터 권리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는 것이 입법의 정당성 근거가 된다. 이때 공개 의무 주체는 주로 대규모 데이터셋을 수집·활용하는 AI 개발자나 플랫폼 사업자가 될 것이며, 공개 범위 역시 저작권적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물 중심으로 한정될 수 있다. 반면, 투명성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알고리즘 훈련 과정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므로 공개 의무 주체의 범위는 주요 AI 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고, 공개 범위 또한 데이터 처리 과정이나 구조적 편향 가능성에 관한 정보까지 포괄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

1페이지 (N.D. Cal. 2025년 1월 17일).

31) No. 23-cv-03417, D.I. 399, 4-5 (N.D. Cal. 2024년 9월 9일)

목적의 설정은 단순히 방향성을 제시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공개 의무 주체와 공개 범위의 구체적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곧 과잉금지원칙의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 수단의 적절성

AI 학습 데이터 공개 규제가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이 실제로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방대한 원시 데이터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은 기술적 한계와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낮고, 공개 의무 주체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데이터의 전면 공개가 아닌 대안적 방식—메타데이터의 제공, 해시 값이나 색인 정보의 활용, 표본화된 데이터 공개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는 기술적·경제적 현실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완화하는 효과를 지니므로, 과잉금지원칙상 수단의 적절성 요건을 충족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3) 침해 최소성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이 노출되지 않도록 공개 범위와 방법을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 공개 범위는 규제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정보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중복적인 데이터 공개는 지양해야 한다. 또한 공개 방법 역시 단계적·탄력적으로 설계하여, 민감한 영업 정보는 보호하면서도 공익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제재 수단과 집행력은 규제 준수를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 정도가 과도할 경우, 기업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제한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밀한 설계는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규제의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침해 최소성 원칙에 부합한다.

4) 법익 균형성

학습 데이터 공개의 정당성은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을 통해 최종적으로 평가된다. 한편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또는 인공지능 활용의 투명성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이 존재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장, 사적 자치의 존중, 재산권 보호라는 사익이 대립한다. 입법자는 이러한 충돌을 일방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효과적인 공개 제도를 마련하되, 기업의 정당한 이익 또한 충분히 존중할 수 있는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개 대상과 공개 수준을 공

익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영업비밀이나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제한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효용 증진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균형적 제도 설계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의 요구에 부합하며, 학습 데이터 공개 제도의 정당성과 합헌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기능한다.

(5) 학습 데이터 공개 수준 및 권리 보장 체계

1) 학습 데이터 공개 제도의 구조적 요소

학습 데이터 공개 제도는 그 설계의 기본적 기준 중 하나로 공개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개 시점은 기업이 학습 데이터 관련 정보를 모델 개발 단계에서 미리 제공하는지, 아니면 권리자의 요청이나 분쟁 발생 이후에 제한적으로 제공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전자는 '사전 공개(Pre-emptive Disclosure)'로, 후자는 '사후 공개(Post-hoc Disclosure)'로 이해된다. 이러한 구분은 학습 데이터 공개 제도가 실현하고자 하는 규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전·사후 각각의 방식이 어떠한 법적 한계와 현실적 제약을 가지는지를 분석하는 출발점이 된다. 공개 제도 설계에서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사전 공개와 사후 공개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공익적 기능과 사익적 기능을 수행하며, 각국 입법례에서도 두 방식이 조합되거나 분리되어 운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 공개는 모델 개발 또는 배포 이전 단계에서 학습 데이터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사후적 분쟁 발생 이전에 일정한 정보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다만 대규모 모델이 사용하는 방대한 데이터셋의 특성상, 원본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공개하거나 목록화하는 방식은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 때문에 EU AI Act, AB 2013과 같은 실제 제도들은 사전 공개라 하더라도 대체로 범주·출처·유형 등을 중심으로 요약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설계되며,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 강도도 제한적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사후 공개는 구체적 권리 침해가 의심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별 저작물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 공개가 충분하지 못한 환경에서는 권리자가 애초에 자신의 저작물 포함 여부를 알기 어렵고, 정보 비대칭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결국 공개 시점에 따른 사전·사후 구분은 학습 데이터 공개 제도의 규범적 목표, 기업 부담 및 산업적 현실성, 영업비밀과의 조화, 정보 비대칭 해소 수준 등을 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기준으로 기능한다.

2) 사전 공개 제도의 특징

사전 공개 제도는 인공지능사업자가 모델을 제공하기 이전 또는 제공과 동시에 학습 데이터의 구성과 관련된 기본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개 시점이 모델 개발·배포 단계에 위치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때 공개되는 정보는 원본 데이터나 개별 데이터셋이 아니라, 학습 데이터의 범주, 출처, 유형 등 구성에 관한 요약적·범주형 정보를 중심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U AI Act는 사전 공개 제도를 가장 체계적으로 반영한 사례이다. 해당 체계는 모델의 위험도와 기능적 특성을 기준으로 공개의무를 차등화하며, 특히 범용 인공지능(GPAI) 모델 제공자에게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유형, 그리고 저작권 보호 대상 자료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요약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제52조제1항(d)). 또한 GPAI 모델 제공자는 감독기관의 감독을 위해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를 작성·유지하여야 하며(제53조제1항(a)), 이는 요청 시 제출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EU AI Act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의무와 감독기관에 대한 기술문서 제출 의무를 구분하는 계층적(Tiered) 정보공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사전 공개 제도가 전면적 데이터 공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수준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식임을 잘 보여준다.

캘리포니아 주의 AB 2013 역시 인공지능 개발자로 하여금 학습 데이터의 출처·유형·저작권 상태 등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사전 공개 입법례이다. 반면 CCIA 투명성 템플릿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데이터셋 범주화 및 사전 공시를 권고하는 민간 자율 규범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들 제도는 모두 원본 데이터의 전면 공개보다는 요약·부분 공개 중심의 사전 공개 모델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사전 공개 방식의 장점은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AI 개발·활용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데 있다. 반면 기업의 관점에서는 데이터 구성 정보의 공개가 영업비밀 또는 핵심 경쟁력 노출로 이어질 수 있고, 데이터 분류·정제·요약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요약적 정보 제공에 그치는 사전 공개 방식만으로는 개별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실제로 학습에 포함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의 한계도 함께 지적된다.

3) 사후 공개 제도의 특징

사후 공개 제도는 권리자의 요청, 분쟁 발생, 행정적·사법적 절차 등 특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정하여 학습 데이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즉,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사전 단계에

서 광범위한 공개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권리자가 필요성을 제기할 때 정보 접근이 이루어지는 구조다.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03, 2025.6.17.)은 대표적 사례로, 제31조제4항을 신설하여 "권리자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인공지능사업자는 자신이 보유한 절차에 따라 학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사후적·요청 기반(Request-based)의 제한적 공개 방식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구조가 확인된다. Tremblay v. OpenAI 및 Getty Images v. Stability AI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 분쟁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 공개를 명령하되, 보호명령(NDA) 및 보안 환경에서의 제한적 열람만을 허용하였다. 이는 소송과 결합된 전형적 사후 공개 방식이다. 또한 미국 상원 TRAIN Act of 2025는 저작권자가 행정소환(Administrative Subpoena)을 통해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권리자 요청이 있어야만 정보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사후적·절차적 공개 구조에 해당한다.

사후 공개 방식은 권리자 구제의 실효성을 일정 수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침해 의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사후 공개 절차는 분쟁 해결과 증거 확보에 의미 있는 수단이 된다. 다만 사전적 투명성이 부족하여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포함되었는지를 애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를 갖는다. 또한 기업 측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 부담이 집중되고, 행정적·비용적 부담도 누적된다는 문제가 있다.

6. 학습 데이터 공개 도입 방안 및 입법(안)

학습 데이터 공개 제도는 인공지능 학습 과정의 불투명성을 완화하고,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핵심 기제이다. 특히 인공지능 학습 과정이 외부에서 확인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될 경우, 저작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자신의 권리 객체가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고, 그 결과 이용허락 협상이나 침해 대응 등 후속적인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학습 데이터 공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권리자의 정보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저작권법적 보호의 실효성을 회복하는 기능을 가진다.

다만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되는 데이터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 개인정보, 사실 정보 및 통계 등 비저작물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이러한 데이터 이용의 투명성 문제는 특정 권리법 영역에 국한된 쟁점이라기보다,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반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AI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를 인공지능기본법 체계 내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적 정합성 측면에서 가장 타당한 대안이며, 학습 데이터 공개를 AI 생태계 전반의 공적 규제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입법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공지능기본법의 제·개정이 지연되거나 정치적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공개 대상을 저작물로 한정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독립적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는 학습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저작물로 구성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저작권법 내에 인공지능 학습 관련 투명성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권리자와 인공지능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권리자의 실질적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한적·실무적 접근이다. 결과적으로 저작권법 개정안은 권리자의 정보 접근권을 중심으로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모델로 기능한다.

본 장에서는 학습 데이터 공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 모델로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과 저작권법 개정안을 상호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대안으로 설정하여 검토한다. 인공지능기본법을 통한 도입이 AI 거버넌스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타당함을 전제하되, 그 도입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독립적 대안으로서 저작권법 개정안의 논리적 구조와 구체적인 조문 구성 방안을 차례로 논의한다.

(1) 인공지능기본법 내 규정 도입 방안

인공지능기본법 내 학습 데이터 투명성 규정은 데이터셋 전체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구성에 관한 요약적·범주형 정보를 중심으로 사전적 공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인공지능기본법이 지향하는 기술의 신뢰성과 책임성 확보라는 기본법적 목적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동시에, 과도한 공개로 인한 영업상·기술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된다.

다만 사전적 요약 공개만으로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 객체가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침해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학습 데이터 투명성 확보 규율은 모든 인공지능 제공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전 공개 의무와 별개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저작권적 쟁점이 집중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영역에 대해서는 권리자 요청 기반의 사후 정보 제공 의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 즉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물(보호대상물)의 권리자가 자신의 보호대상물이 학습 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여부 및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의 최소한의 확인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이때

제공 정보의 범위와 방식은 권리자의 확인권을 실질화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하되, 영업비밀·보안상 민감 정보·개인정보 등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례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구체적 기준은 하위법령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아가 권리자 요청 절차를 통해 보호대상물의 이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 규율이 책임성 확보로 연결되는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습 데이터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사후적 분쟁으로만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고, 권리자와 사업자 간의 예측가능한 조정·협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결국 인공지능기본법 내 학습 데이터 투명성 규정은 요약적·범주형 사전 공개를 기본으로 하되,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권리자 요청 기반의 사후 정보 제공과 보상 연계를 결합하는 이중 구조를 통해 사회적 신뢰 확보와 권리자 보호 사이의 긴장을 제도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조는 투명성 확보를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하고,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 내에서 실제로 작동 가능한 규율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 공개 의무 주체

인공지능기본법상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의 공개 의무 주체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학습·제공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의 구성과 활용에 관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가 개별 권리침해의 사후 구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인공지능 기술의 투명성·신뢰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 거버넌스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 따라서 공개 의무 주체 설정은 권리침해 여부의 개별 판단과 무관하게, 해당 시스템의 개발·제공 과정에서 정보 접근성과 책임 귀속이 인정되는 주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본 개정안은 학습 데이터에 관한 사전적 공개 의무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한편,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물(이하 '보호대상물')의 권리자가 자신의 보호대상물이 학습 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여부와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용이 확인된 경우 보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구조를 포함한다. 여기서 보호대상물 관련 요청과 정보 제공은 현실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쟁점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사전 공개 의무와 구별되는 사후적 투명성 확보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규율 체계는 공개 의무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권리자 요청에 대한 대응 및 후속조치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자료를 확인·관리할 수 있는 주체에게 의무를 귀속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 점에서 인공지능사업자를 공개 의무 주체로 명시하는 방식은 규범 목적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충족한다.

다만 '인공지능사업자'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학습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이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 주체까지 의무가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공개 의무 주체 자체를 협소하게 설정하기보다는, 공개·제공의 범위와 방식, 예외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정교화함으로써 비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 인공지능기본법상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는 인공지능사업자를 중심 공개 의무 주체로 하되, 구체적 이행 부담은 역할과 책임 범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될 때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개 대상

인공지능기본법에서 학습 데이터 공개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제공 과정에서 요구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율로서, 학습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일정 범위에서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공개 대상은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구성 등 학습 데이터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의 정보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전적 공개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본적 의무로서, 구체적인 공개 항목과 방식은 하위법령을 통해 정하도록 한다.

다만 사전적 공개만으로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 객체가 학습 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본 개정안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물(보호대상물)의 권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보호대상물의 이용 여부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후적 정보 제공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호대상물과 관련한 확인 요청은 생성형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쟁점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 공개 의무를 보완하여 권리자 확인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기능을 갖는다.

결국 학습 데이터 공개의 대상은 사전적으로는 학습 데이터에 관한 일반적 정보 공개를 중심으로 하되, 사후적으로는 권리자 요청이 있는 경우 보호대상물 단위의 이용 여부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하여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그 구체적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교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3)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 ③ (생 략)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 ③ (좌 동)
〈신 설〉	④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이나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물(이하 '보호대상물'이라 한다)의 권리자가 자신의 보호대상물이 학습 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여부와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인공지능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권리자가 자신의 보호대상물을 이용하였음을 확인했을 경우 그에 따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개 방법 및 절차, 확인 절차, 제공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사실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사실조사 등) ① ----------.
1. 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1.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
2. 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

(2) 저작권법 내 규정 도입 방안

저작권법을 통한 학습 데이터 투명성 확보 방안은 인공지능기본법의 시스템 중심 규율과 달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자신의 권리 객체가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인공지능 학습 과정의 불투명성은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등 이용 사실을 알기 어렵게 만들고, 이용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이용허락 협상이나 침해 대응 등 후속적 권리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적 보호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에 인공지능 학습과 관련한 투명성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권리자의 정보 접근권

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인공지능사업자에게는 책임 있는 데이터 이용을 유도하는 규율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개정안은 저작권법 내에서 학습 데이터 투명성을 권리자 요청 기반의 사후적 정보 제공과, 저작물 등 이용 사실에 관한 사전적 공개를 결합한 이중 구조로 설계한다. 우선 저작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 학습을 위하여 저작물 등이 이용되었는지 여부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자에게 확인 요청권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공지능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 객체가 학습 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후적 정보 제공 체계는 저작권법상 권리행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로서,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저작물 등을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한 경우 그 목록 또는 요약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적 확인 절차와 별개로 기본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정당한 이용허락 기반의 거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나아가 요청권 행사 및 정보 제공의 구체적 범위와 방식, 공개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기술 변화와 산업 현실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탄력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저작권법 개정은 권리자의 확인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이용허락이 이루어진 경우의 규제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하위법령을 통해 실무적 운영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다.

1) 공개 의무 주체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학습 데이터 투명성 확보 규정에서 공개 의무 주체는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등을 실제로 활용하면서 관련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권리자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주체를 중심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사업자를 저작권법상 의무 주체로 특정하고, 이를 “인공지능사업자”로 규정함으로써 권리자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목록·요약 공개 의무의 직접적 수범자로 삼는다. 이는 학습 데이터 투명성 확보가 권리자의 권리행사 가능성과 침해 대응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보 접

근성과 이행 가능성이 결합된 사업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저작물 등이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여부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자에게 확인 요청권을 부여하고, 요청을 받은 인공지능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구조는 권리자가 이용 사실을 알지 못해 권리행사가 봉쇄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학습 데이터 이용과 관련한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 체계와 직접적으로 결합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저작물 등을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한 경우 그 목록 또는 요약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되,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어 규율의 비례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이용허락이 이루어진 경우 권리관계가 이미 정리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공개 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나아가 요청권 행사 및 정보 제공, 목록·요약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방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교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도한 부담이나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2) 공개 대상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학습 데이터 투명성 확보 제도에서 공개 대상은 인공지능기본법과 달리 “시스템 수준의 신뢰 확보”보다는,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등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기반을 제공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공개 대상은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물 등 이용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로 구성되어야 하며, 동시에 과도한 공개로 인해 영업비밀·보안·개인정보 등이 침해되거나 인공지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균형을 반영하여,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되는 정보와, 저작물 등 이용 사실에 관한 목록·요약 공개를 결합한 구조로 공개 대상을 설정하고 있다.

우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자신의 저작물 등이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여부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공지능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제공되는 정보는 권리자의 확인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범위에서 구성되어야 하며, 최소한 해당 저작물 등의 이용 여부(포함 여부)에 관한 명확한 회신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 시점·이용 방식·이용 범위 등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으나, 권리자 확

인이라는 목적을 넘어 원본 데이터 제공이나 학습 데이터 전체의 열람을 전제로 하는 방식으로 확대되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인공지능사업자는 저작물 등을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한 경우 그 "목록 또는 요약"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목록 또는 요약은 개별 저작물의 원문이나 전체 데이터셋을 제공하는 의미가 아니라, 학습 데이터 이용의 범위와 성격을 권리자 및 사회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정보 단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개 대상은 예컨대 학습에 활용된 저작물 등의 유형, 수집·확보 경로, 데이터 규모 및 구성의 개요와 같이, 저작물 등 이용의 외형을 설명할 수 있는 범주형 정보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본 개정안은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목록·요약 공개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공개는 본질적으로 이용허락이 없는 저작물 등 이용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규율로 이해될 수 있다.

개정안에서의 공개 대상은 권리자에게는 개별 저작물 등 단위의 확인 가능성을 제공하고, 동시에 목록·요약 공개를 통해 학습 데이터 이용의 범위와 성격에 관한 기본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권리행사의 실효성과 제도의 운영 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3)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 설〉	제00조(인공지능사업자의 저작물 등의 이용에 대한 투명성)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사업자(이하 '인공지능사업자'라 한다)에게 인공지능 학습을 위하여 저작물 등(이하 이 조에서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이 설정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이 이용되었는지 여부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공지능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저작물 등을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한 경우 그 목록 또는 요약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사항의 범위,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결론

학습 데이터 공개 논의의 핵심은 '무엇을 얼마나 공개할 것인가' 이전에, 저작권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투명성이 무엇인지를 재정의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학습 데이터 공개를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산업 규제로 보지 않고,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구조적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여 권리행사의 실효성을 회복시키는 투명성 확보 수단으로 위치시켰다. 이 점에서 학습 데이터 공개는 저작권 보호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확인 가능성을 통해 침해 예방과 분쟁 해결의 출발점을 제공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학습 데이터 공개가 '전면 공개냐 비공개냐'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공개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의 정보가 요청되는 설계 문제임을 드러냈다. 특히 공개의 설계는 (i) 권리관계 판단에 필요한 최소 정보인지, (ii) 해당 정보를 현실적으로 통제·제공할 수 있는 주체에게 부과되는지, (iii) 영업비밀·개인정보·보안상 위험과의 충돌을 비례적으로 조정하는지라는 기준 아래 검토되어야 한다. 이 기준은 학습 데이터 공개 제도가 권리자 보호의 요청과 산업적·기술적 보호이익 사이에서 균형점을 설정해야 할 때, 논의를 정리해 주는 평가축으로 기능할 수 있다.

향후 논의에서 쟁점은 어느 법률에 담느냐의 선택만이 아니라, 요약 가능한 정보의 범위, 비공개 제출·열람 제한과 같은 절차적 안전장치, 권리자의 신청 요건과 남용 방지 장치, 그리고 입증 곤란을 완화할 만큼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기본법상 투명성 규율은 학습 데이터에 관한 정보 공개를 통해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제공 과정에서 요구되는 책임성과 사회적 신뢰 기반을 보완하되, 특히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물(보호대상물)의 권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 여부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권리자 확인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나아가 이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구조는 투명성 확보가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책임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한다. 한편 저작권법상 규율은 권리자에게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이용 여부 확인 요청권을 부여하고, 인공지능사업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권리행사의 실효성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저작물 등 이용에 대한 목록·요약 공개를 통해 기본적인 정보 접근 기반을 보완할 수 있다. 결국 학습 데이터 공개 제도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투명성 확보라는 요청을 충족시키되, 공개와 제공의 범위 및 절차를 정교화하여 "알 권리"와 "보호해야 할 이익"이 함께 유지되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제3절 AI 결과물의 표시 방안

1. 서론

(1) 콘텐츠 창작 과정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보편화·가속화 경향

근래 이미지 생성 분야에서는 미드저니(Midjourney),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등과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단순한 텍스트 입력만으로도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이나 사실적인 이미지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멀티모덜 AI(Multimodal AI)[1] 모델이 일반화되면서 챗 GPT(ChatGPT)나 제미나이(Gemini)와 같은 챗봇 모델을 통해서도 손쉽게 이미지나 영상 생성이 가능하다. 오늘날 디자인 분야에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까지 손쉽게 창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음악 분야에서는 수노(Suno)나 유디오(Udio) 등과 같은 인공지능 기반 작곡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가 장르, 분위기, 악기 구성 등을 간단하게 선택하여 전문적인 수준의 음악 콘텐츠를 생성하고 있으며, 그 외에 뮤직비디오나 광고 영상 등의 제작 과정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창작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한편, 관련된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불러왔다.[2]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기반한 창작 방식의 구조적 변화는 기존의 창작 관념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아울러서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인간이 직접 창작한 콘텐츠 간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면서 창작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물의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 또한 확대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저작권 보호 체계, 창작자 개념, 저작물 이용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제도 전반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를 위한 국내외에서의 관련 규제 동향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딥페이크와 같은 악의적인 정보 조작 방지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규제 방안이 도입되거나 이를 위한 입법적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AI Act)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

1) '멀티모덜 AI'는 여러 모달리티나 데이터 유형의 정보를 처리하고 통합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지칭한다. https://www.ibm.com/kr-ko/think/topics/multimodal-ai 참고.

2) 세계 AI 예술 시장의 규모는 2023년 32억 달러에서 2033년까지 약 404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2024년부터 2033년까지의 예측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CAGR) 28.9%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market.us/report/ai-in-art-market/ 참고.

해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표시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투명성 의무에 관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중국의 「인터넷 정보 서비스 심층합성 관리 규정」,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 방법」, 「인공지능 생성 합성 콘텐츠 표지 방법」 등에서도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표시 의무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한 표시와 관련한 법안들이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으며, 개별 주 차원에서는 이미 표시 의무를 법제화한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이라 한다)에서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를 규정,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인공지능 결과물과 관련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3) 권리 귀속 및 침해 책임 등과 관련한 분쟁 발생 가능성

현재까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한 콘텐츠의 권리 귀속,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 등 문제가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즉, 어떠한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해서 권리 귀속을 인정할 수 있는지, 해당 결과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의 주체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등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제도적으로 또는 해석상으로 정립이 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콘텐츠 창작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지면서 향후 콘텐츠 시장에서의 인공지능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 및 침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명확한 법적 대응 체계와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결과물과 순수하게 인간이 노동력을 투입해 창작한 저작물 간에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과, 적어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역은 표현에 있어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부분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3] 최종 결과물 생성 과정에 따라 그 법적 취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표시 내지는 식별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해서는 국내외 입법 동향에 기초한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한 검토 또한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다.[4]

---

3) 표현 방식에 있어서 일부 차이는 있겠으나 최근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 발간한 보고서, 우리나라 문체부에서 발간한 안내서 등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4) 이는 저작권 제도의 관점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행 저작권법상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결과물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권신탁관리의 대상 또한 될 수 없으나, 해당 사실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저작권사용료가 부당하게 분배됨으로써 저작권신탁관리제도의 신뢰성 저하, 저작권자의 경제적 피해 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

2.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관련 해외 규제 동향 및 기술 현황

(1) 유럽연합, 미국의 주 또는 연방 차원에서의 규제, 각 국가 차원에서의 인공지능 결과물 규제 동향 검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별도의 레이블링이나 고지를 통해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당 결과물이 오로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만들어졌음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현재까지는 유럽연합이나 중국, 미국, 중국 등 일부 국가들에서 드물게 도입하고 있을 뿐이며 표시 대상이 되는 콘텐츠의 유형과 표시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각 국가별로 일정 부분 차이를 보이는바,[5] 이 장에서는 인공지능 결과물의 표시 방안에 대해 규정하는 해외에서의 입법 규제 현황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유럽연합

혁신을 촉진하고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따른 기본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위한 조화로운 규칙을 마련함으로써 중개서비스[6]에 대한 역내 시장의 적절한 기능 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7] 2022년 제정된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에서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s, VLOPs)과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s, VLOSEs)[8]의 제공자에게 특정한 구조적 위험에 맞춘(Tailored to the Specific Systemic Risks)[9] 합리적이고 비례적이며 효과적인 완화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10]

회(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048호) 검토보고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 8., 9쪽,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의견 참고.

5) Tommaso Giardini & Nora Fischer, 「AI Transparency and Explainability(Operationalising the OECD AI Principle 1.3)」, Digital Policy Alert, The St. Gallen Endowment, 2024, p.1.

6) 중개서비스(Intermediary Service)는 단순 전달(Mere Conduit), 캐싱(Caching), 호스팅(Hosting) 서비스로 구성되고, 온라인 검색엔진(Online Search Engine)을 포함한다(Digital Services Act, Article 3 (g), (j)).

7) Digital Services Act, Article 1.

8)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은 유럽연합 내 월평균 활성 서비스 사용자가 4,500만 명 이상일 것을 요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또는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으로 지정된 것을 지칭한다(Digital Services Act, Article 33). 2023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월간 활성 서비스 사용자 4,500만 명 이상인 중개서비스 사업자 중 17개의 온라인 플랫폼(Alibaba AliExpress, Google Play, Instagram, YouTube 등), 2개의 온라인 검색엔진(Bing, Google Search)에 대해 각각 VLOPs, VLOSEs로 지정 결정을 한 바 있다.

9) 제34조에 따른 위험평가(Risk Assessment)에 기초한 것으로, 해당 플랫폼이나 검색엔진의 구조, 위험 특성 등에 부합하는 것을 지칭한다.

10) Digital Services Act, Article 35. 1. (k).

그리고 해당 조치는 실존 인물, 물체, 장소 또는 그 밖의 개체나 사건과 매우 유사하고 진정하거나 진실인 것처럼 보이도록 생성되었거나 조작된 이미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로 구성된 정보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 눈에 띄는 표시를 통한 구별을 보장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그러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 쉬운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생성된 것만을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른바 딥페이크 콘텐츠 중에서도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형식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점 등에서 일정한 한계점을 가진다.[11]

한편, 2024년 유럽의회에서 최종 승인된 인공지능법(AI Act)은 유럽연합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 시장 출시, 서비스 제공 및 사용을 위한 통일된 법체계를 정하여 역내시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이 된 것으로서, 특정한 인공지능 시스템[12]의 제공자[13] 및 배포자[14]에 대한 투명성 의무와 관련한 장에서는 제공자와 배포자의 인공지능 결과물 공개 의무 등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15]

합성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또는 텍스트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범용 인공지능 시스템을 포함)의 '제공자'는 그 결과물이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표시되고 인위적으로 생성·조작되었다는 것을 탐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16] 그리고 그 제공자는 다양한 콘텐츠 유형의 특성과 한계, 구현 비용, 관련 기술 표준에 반영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최신 기술 수준

11) 이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4년 3월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른, 선거와 관련된 온라인상 구조적 위험의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Providers of VLOPs and VLOSEs on the Mitigation of Systemic Risks for Electoral Processes)을 발표한바, 일정한 생성형 인공지능 콘텐츠를 유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VLOPs, VLOSEs에 대해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정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 조치를 취할 것, 특히 딥페이크 목적의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에는 명확히 라벨을 붙이거나 눈에 띄는 표시를 통해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 권고된다. 아울러서 2025년 2월에는 유럽연합 내 선거 과정에서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법 선거 툴킷(DSA Elections Toolkit for Digital Services Coordinators)을 공개하였고, 그에 따라서 VLOPs, VLOSEs는 선거 과정을 훼손하려는 정보 조작 및 딥페이크 활용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2) '인공지능 시스템(AI System)'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작동하도록 설계된 기계기반 시스템으로서, 배포 이후에 적응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목적을 위해 물리 환경이나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측, 콘텐츠, 권고나 결정 등의 결과물을 생성하는 방법을 입력을 통하여 추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AI Act, Article 3 (1)).

13) '제공자(Provider)'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이나 범용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여 자신의 명의 또는 상표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공공기관, 대행기관이나 그 밖의 기구를 말한다(AI Act, Article 3 (3)).

14) '배포자(Deployer)' 개념에는 개인적이고 비직업적인 활동 과정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권한 내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공공기관·대행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AI Act, Article 3 (4)).

15) AI Act, Article 50.

16) 인공지능법 제50조제2항의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은 제5항에서 요구하는 '명확하고 구별할 수 있는 방식'과의 관계에서 해석상의 모호성을 내포한다. 기계 판독이 가능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가시적 표시를 의미하지만(Recital 133 참고), 필연적으로 가시적인 표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제5항에 따라서 가시적인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Thomas Gils, "A Detailed Analysis of Article 50 of the EU's Artificial Intelligence Act", SSRN, 2024, p.14.

을 고려하여,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기술적 해결방안[17]이 효과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하며,[18]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표준 편집을 위한 보조 기능을 수행하거나 배포자가 제공한 입력 데이터나 그 의미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 범죄를 탐지·예방·수사 또는 기소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9]

다만, 해당 예외 규정 또한 수범자의 입장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여기서 말하는 '표준 편집(Standard Editing)'의 범위, 입력 데이터나 의미가 '실질적으로(Substantially)' 변경되는 시점 내지 고려 요소 등의 측면에서 그 판단이 곤란하여 실무상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20]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제공자에게는 모든 결과물에 대한 일반적인 표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가 제시되기도 한다.[21]

한편,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제공자와 달리, '배포자'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 조작되는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서 공개 의무의 대상 및 예외 등에 관해 달리 규정하고 있다.[22]

우선, 딥페이크[23]를 구성하는 '이미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를 생성·조작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배포자는 해당 콘텐츠가 인위적으로 생성·조작되었다는 것을 공개할 의무를 부담한다.[24] 다만, 해당 의무 역시 범죄를 탐지·예방·수사 또는 기소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해당 콘텐츠가 명백히 예술적, 창의적, 풍자적, 허구적이거나 그와 유사한 작품 또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작품의 전시 또는 향유를 방해하지 않는

17) 전문에서는 워터마크, 메타데이터 식별, 암호학적 이력(Provenance)·진위(Authenticity) 증명, 로깅, 핑거프린트 기술 등이 예시된다 (AI Act, Recital 133).

18) 일반적으로 워터마크 기술 및 탐지 도구의 한계 중 하나로서 각기 다른 제공자에게서 개발된 워터마킹 기술과 탐지 도구 간의 상호운용성 부족에 관한 점이 거론된다. 즉, 특정한 제공자의 기술로 생성된 워터마크는 일반적으로 다른 제공자의 탐지 도구로 탐지할 수 없다는 점 등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는데, 인공지능법은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해소할 것을 규정한다. Thomas Gils, op. cit., p.14.

19) AI Act, Article 50. 2.

20) Thomas Gils, op. cit., p.18.

21) Holger Hermanns et al., "AI Act for the Working Programmer", arXiv:2408.01449v1 [cs.CY] 23 Jul 2024, p.18.

22) AI Act, Article 50. 4.

23) '딥페이크(Deep Fake)'는 기존의 사람, 물건, 장소 또는 그 밖의 단체나 사건과 닮고, 진짜이거나 진실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생성·조작한 이미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AI-generated or Manipulated Image, Audio or Video Content that Resembles Existing Persons, Objects, Places or Other Entities or Events and Would Falsely Appear to a Person to be Authentic or Truthful)를 의미한다(AI Act, Article 3 (60)). 해당 딥페이크 개념의 모호성 및 광범위한 적용 대상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자료로, Thomas Gils, op. cit., pp.21~22 참고.

24)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에서 딥페이크 생성 인공지능 시스템의 배포자에게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에서는 매우 유사한 위험 완화 조치를 VLOPs, VLOSEs에게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유튜버가 유튜브에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라면 이론상 세 가지 유사한 투명성 요건이 중첩 적용될 수 있다: ① 인공지능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유튜버가 사용한 합성 콘텐츠 생성 인공지능 시스템 제공자에 대한 표시 의무, ② 인공지능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딥페이크 생성 인공지능 시스템 배포자로서 유튜버에 대한 공개 의무, ③ 디지털 서비스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유튜브의 표시 조치. Thomas Gils, op. cit., pp.23~24.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의무를 완화하고 있다.[25] 그와 같이 의무를 완화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예술과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26]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공중에게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공개되는 '텍스트'를 생성·조작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배포자는 해당 텍스트가 인위적으로 생성·조작되었다는 것을 공개해야만 한다. 즉, 공적 관심사(Matters of Public Interest)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27] 인공지능이 생성한 판타지 소설이나 회사 웹사이트의 상업적 텍스트 등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28] 또한 공중에게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공개될 것을 요하므로 비공개 텍스트는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며, 오락이나 판매 등 완전히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텍스트 또한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볼 것이다.[29] 앞선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예외를 규정하는바, 범죄를 탐지·예방·수사 또는 기소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허용되는 경우 또는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가 인적 검토 또는 편집 통제 절차를 거치고 자연인 또는 법인이 콘텐츠의 발행에 관해 편집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정한다.[30]

인공지능 시스템의 제공자 또는 배포자는 위와 같은 공개 정보를 늦어도 최초의 상호작용 또는 노출 시에 명확하고 구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련된 자연인에게 제공해야만 한다.[31]

그러나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한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제50조 각 규정들은 구체성을 결여하여 실제적으로 그 이행 방식의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즉, 현재의 인공지능법 규정 체계 내에서 인공지능 시스템 제공자와 배포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향후 해당 규정의 준수, 그리고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등이 추가로 제시될 필요성이 제기된다.[32]

특히, 인공지능법 제50조제2항 등에서 정하는 표시 의무에 관한 사항이 과연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해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의 보호 요건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25) AI Act, Article 50. 4.
26) AI Act, Recital 134.
27) 전문에서는 인공지능법이 보건, 안전, 기본권(민주주의, 법치주의, 환경보호 포함)과 관련된 공익을 보호(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하려는 것임을 명시하는바(AI Act, Recital 7, 8), 적어도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텍스트라면 해당 범주 내로 포섭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homas Gils, op. cit., p.26.
28) Thomas Gils, op. cit., p.26.
29) Thomas Gils, op. cit., p.26.
30) AI Act, Article 50. 4.
31) AI Act, Article 50. 5.
32) Thomas Gils, op. cit., pp.30~31.

서도 회의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서로 다른 법률은 각기 다른 정책 목표에 기반을 두고 그에 따라서 설계되며, 평가 기준 또한 제각각일 수 있다. 인공지능법 규정은 대규모 허위 정보 및 조작, 사기, 사칭, 소비자 기만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인 반면, 저작권법은 그와 관련이 없으며 인간의 창작성에 기반을 둔 법제로서 허구적인 설정 또한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즉, 인공지능법에 따른 표시 의무의 대상인지(혹은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인지 여부는 얼마든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바, 저작권에 관한 고려 없이 만들어진 인공지능법의 제반 규정을 만연히 저작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거로써 사용하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33]

2) 미국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를 위한 법안들(AI Labeling Act, AI Disclosure Act, Protecting Consumers from Deceptive AI Act, COPIED Act 등)이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실제 입법에 이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개별 주 차원에서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표시 의무를 규정한 사례들이 일부 있기는 하나, 캘리포니아주 등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미시간주, 플로리다주 등)에는 선거나 정치 광고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등 특정 영역에서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 그 규율 대상이 한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입법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4년 9월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를 위한 규제 법안(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 SB-942)[34]에 서명을 하였으며, 관련된 내용은 2026년 8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35] 이는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 콘텐츠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는지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된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제공자에 대한 인공지능 탐지 도구(AI Detection Tool) 제공,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관련 공지(Manifest and Latent Disclosures) 의무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33) https://legalblogs.wolterskluwer.com/copyright-blog/can-copyright-law-benefit-from-the-marking-requirement-of-the-ai-act/.

34) 이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비즈니스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8부에 제25장을 추가하는 법안이다.

35) 해당 법률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 10월 13일 마련된 개정안(AB-853)으로 인해서 2026년 8월 2일로 그 시행일이 연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시행일에 관한 사항과 함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생성형 AI 호스팅 플랫폼, 촬영 장치 제조사에 대한 투명성 및 공개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520260AB853 참고.

우선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공자(Covered Provider)는 월간 방문자 또는 사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고 해당 주의 지리적 경계 내에서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생성, 코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제작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은 학습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를 포함한 파생 합성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정의된다.[36]

적용 대상 제공자는 인공지능 탐지 도구를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37]:

(1) 해당 도구를 통해 사용자는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콘텐츠 또는 이들의 조합인 콘텐츠가 그 제공자의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생성 또는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2) 해당 도구는 콘텐츠에서 감지되는 모든 시스템 이력 데이터(System Provenance Data)[38]를 출력해야 한다.

(3) 해당 도구는 콘텐츠에서 감지되는 어떠한 개인 이력 데이터(Personal Provenance Data)[39]도 출력해서는 안 된다.

(4) (A) 다음 (B)항에 따라서, 해당 도구는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B) 적용 대상 제공자는 자사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의 보안 또는 무결성에 대한 명백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구에 대한 접근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5) 해당 도구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온라인 콘텐츠로 연결되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해당 도구는 사용자가 적용 대상 제공자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도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해야 한다.

---

36) 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 Section 22757.1. (b), (c).

37) 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 Section 22757.2.

38) '시스템 이력 데이터'란 특정 사용자와 합리적으로 연관될 수 없는 이력 데이터(디지털 콘텐츠에 내장되거나 디지털 콘텐츠의 메타데이터에 포함되어 디지털 콘텐츠의 진위성, 출처 또는 수정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1)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 장치, 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유형에 관한 정보, (2) 콘텐츠 진위성과 관련된 정보. 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 Section 22757.1. (i), (j).

39) '개인 이력 데이터'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이력 데이터를 의미한다: (1) 개인정보(Civil Code, Section 1798.140.에서 정의된 것을 의미, 특정 소비자 또는 가구를 식별하거나, 관련되거나, 설명하거나, 합리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이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특정 소비자 또는 가구와 합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보를 지칭), (2) 특정 사용자와 합리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고유한 장치, 시스템 또는 서비스 정보. 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 Section 22757.1. (g), (h).

한편, 동 법률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하거나 수정한 콘텐츠에 대하여 명시적 공지(Manifest Disclosure)와 잠재적 공지(Latent Disclosure)의 두 가지 공지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40]

우선, 적용 대상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하여 생성 또는 수정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콘텐츠 또는 이들의 조합인 콘텐츠에 명시적 공지를 포함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만 한다[41]:

(1) 해당 공지는 콘텐츠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해당 공지는 명확하고 눈에 잘 띄며 콘텐츠 매체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 해당 공지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영구적이거나 제거하기 매우 어려워야 한다.

그리고 적용 대상 제공자는 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이 생성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콘텐츠 또는 이들의 조합인 콘텐츠에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잠재적 공지를 포함해야 한다[42]:

(1)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 공지는 다음의 모든 정보를 직접 또는 영구적인 인터넷 웹사이트 링크를 통해 전달한다:

(A) 적용 대상 제공자의 명칭

(B)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수정한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의 명칭과 버전 번호

(C) 콘텐츠가 생성 또는 수정된 일시

(D) 고유 식별자(Unique Identifier)

(2) 해당 공지는 적용 대상 제공자의 인공지능 탐지 도구로 탐지 가능해야 한다.

(3) 해당 공지는 널리 수용된 업계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4) 해당 공지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영구적이거나 제거하기 매우 어렵도록 해야 한다.

그 외에도 법률은 적용 대상 제공자가 제3자에게 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라이선스하는 경우, 적용 대상 제공자는 계약을 통해 라이선스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시스템이 생성하거나 변경하는 콘텐츠에 잠재적 공지를 포함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의무와 그 위반 시의 라이선스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43] 그리고 이 장을 위반한 적용 대상 제공

40) 동 법률에서 '잠재적'이란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명시적'이란 자연인이 쉽게 지각, 이해 또는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 Section 22757.1. (d), (e).

41) 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 Section 22757.3. (a).

42) 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 Section 22757.3. (b).

43) 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 Section 22757.3. (c).

자에 대해서는 각 위반 사항당 5천 달러의 민사상 제재금(Civil Penalty)을 지불하도록 규정한다.[44] 이 장의 각 규정은 사용자가 제작하지 않은(Non-user-generated) 비디오 게임, 텔레비전, 스트리밍, 영화 또는 상호작용 경험(Interactive Experiences)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45]

동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 즉 월간 방문자 또는 사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 제공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스타트업 기업들에는 적용될 여지가 크지 않다. 그리고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 제공자가 제공해야만 하는 인공지능 탐지 도구는 자사의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콘텐츠에 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 제공자의 인공지능 결과물을 탐지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본 법률에 따른 인공지능 탐지 도구 제공,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콘텐츠 또는 이들을 조합한 콘텐츠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텍스트나 코드, 그 외의 다른 형태의 인공지능 결과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46][47]

3) 중국

2022년에 제정된 중국의 인터넷 정보 서비스 심층합성 관리 규정(2023년 1월 10일 시행)에서는, 심층합성[48]서비스 제공자[49]의 표시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50] 그에 따르면 심층합성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사용해 생성하거나 편집한 정보 내용에 대해 기술적 조치를 하여 사용자[51]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표시를 추가하고 법률 등 규정에 따라 로그 정보를

44) 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 Section 22757.4. (a) (1).
45) 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 Section 22757.5.
46) https://www.tomkemp.ai/blog/2024/9/18/analysis-of-the-california-ai-transparency-act-sb-942-signed-by-governor-newsom-into-law
47) 당초 법안에서는 텍스트에 관한 것까지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후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https://legiscan.com/CA/text/SB942/id/3010692 참고.
48) 동 규정에 정하는 '심층합성 기술'은 딥러닝, 가상현실과 같은 합성류의 알고리즘 생성을 이용해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VR 등 인터넷 정보를 제작하는 기술을 의미하고, ⅰ) 문장 생성, 텍스트 스타일 변환, 질의응답 등 텍스트 내용을 생성 또는 편집하는 기술, ⅱ) 텍스트를 음성으로 전환, 음성 변환, 음성 속성 편집 등 음성 내용을 생성 또는 편집하는 기술, ⅲ) 음악 생성, VR 오디오 편집 등 비음성 내용을 생성 또는 편집하는 기술, ⅳ) 안면 생성, 안면 교체, 인물 속성 편집, 안면 조작, 자세 조작 등 이미지나 영상 내용의 생체 특징을 생성 또는 편집하는 기술, ⅴ) 이미지 생성, 이미지 강화, 이미지 복원 등 이미지나 영상에서 비생체적 특징을 생성 또는 편집하는 기술, ⅵ) 3D 재구성, 디지털 시뮬레이션 등 디지털 인물 또는 VR을 생성 또는 편집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제23조).
49) '심층합성 서비스 제공자'는 심층합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제23조).
50)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2-12/12/content_5731431.htm 참고.
51) '심층합성 서비스 사용자'는 심층합성 서비스를 사용해 정보를 생산, 복제, 배포, 전파하는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제23조).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6조). 만약 심층합성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한 심층합성 서비스(① AI 대화 로봇, 스마트 라이팅 등 사람을 모방한 텍스트 생성 또는 편집서비스, ② 음성 합성, 음성 모방 등 개인의 신상 특징을 현저히 변화시키는 편집서비스, ③ 안면 생성, 안면 교체, 안면 조작, 자세 조작 등 인물의 이미지, 영상을 생성하거나 개인의 신상 특징을 현저하게 변화시키는 편집서비스, ④ 몰입식 VR 등의 생성 또는 편집서비스, ⑤ 그 밖의 정보 내용을 생성하거나 현저하게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중의 혼동 또는 착각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라면, 생성·편집된 정보 내용의 합리적인 위치나 영역에 명시하여 대중에게 심층합성 상황임을 알려야 하고, 그 외의 심층합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눈에 띄는 식별 기능을 제공하고 심층합성서비스 사용자가 눈에 띄는 표시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제17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심층합성 서비스 표시를 삭제, 변조 또는 은닉할 수 없으며(제18조), 심층합성 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제22조).

아울러서 2023년에 제정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방법(2023년 8월 15일 시행)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52]에 대하여 인터넷정보 서비스 심층합성 관리 규정에 따라 이미지, 비디오 등 생성 콘텐츠에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제12조), 제공자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제21조).[53]

한편, 2025년 공표된 인공지능 생성 합성 콘텐츠 표지 방법(2025년 9월 1일 시행)에서는 인공지능 생성 합성 콘텐츠[54]의 표지에 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55]

우선, 네트워크 정보서비스 제공자(이하 "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심층합성 서비스가 대중의 혼동·착각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인터넷 정보 서비스 심층합성 관리 규정 제17조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면,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생성 합성 콘텐츠에 명시적 표시를 추가해야 한다(제4조). 즉, ① 텍스트의 시작, 끝 또는 적절한 중간 위치에 문자나 공통 기호로 된 표시를 추가하거나, 인터페이스 또는 텍스트 주변에 명확한 안내 표시를 한다. ② 음성의 시작, 끝 또는 적절한 중간 위치에 음성 안내나 음성 리듬 표시를 추가하거나, 인터페이스에 명확한 안내 표시를 한다. ③ 이미지의 적절한 위치에 명확한 안내 표시를 한다. ④ 영상의 시작 화면과 영상 재생 주변에 명확

52)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 및 관련 기술)을 이용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프로그래밍 가능한 인터페이스 등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를 제공하는 조직 및 개인을 말한다(제22조).

53)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307/content_6891752.htm 참고.

54) '인공지능 생성 합성 콘텐츠'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생성하거나 합성한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가상 장면 등의 정보를 지칭한다(제3조).

55) https://www.cac.gov.cn/2025-03/14/c_1743654684782215.htm 참고.

한 안내 표시를 하고, 영상의 중간 및 끝에도 적절히 표시할 수 있다. ⑤ 가상 장면의 시작 화면에 명확한 안내 표시를 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 중 적절한 위치에도 표시할 수 있다. ⑥ 기타 생성 합성 서비스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명확한 안내 표시를 한다.

그 외에도 서비스 제공자는 일반적인 의무로서 생성 합성 콘텐츠 파일 메타데이터에 (인터넷 정보 서비스 심층합성 관리 규정 제16조에 따른) 암시적 표시를 추가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콘텐츠 속성 정보, 서비스 제공자 이름 또는 코드, 콘텐츠 번호 등 제작 요소 정보를 포함한다(제5조).

한편, 네트워크 정보 콘텐츠 유통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생성 합성 콘텐츠의 유통을 규제해야 한다(제6조). 즉, ① 파일의 메타데이터에 암시적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메타데이터에서 생성 합성 콘텐츠로 확인될 경우 게시된 콘텐츠 주변에 명확한 안내 표시를 하여 이를 공중에게 명확히 알린다. ② 메타데이터에 암시적 표식이 없지만 사용자가 생성 합성 콘텐츠로 신고한 경우 콘텐츠 주변에 명확한 안내 표시를 하여 공중에게 알려야 한다. ③ 메타데이터에 암시적 표식이 없고 사용자의 신고도 없지만 명시적 표식이나 기타 생성 합성 흔적이 발견될 경우 콘텐츠 주변에 의심되는 생성 합성 콘텐츠라는 안내 표시를 하여 공중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필요한 표식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게시 콘텐츠에 생성 합성 콘텐츠 포함 여부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알린다. 아울러서 안내 표시를 하여 공중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파일 메타데이터에 생성 합성 콘텐츠의 속성 정보, 유통 플랫폼 이름 또는 코드, 콘텐츠 번호 등 유통 요소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배포 플랫폼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심사할 때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가 인공지능 생성 및 합성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요구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제7조), 사용자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정보 콘텐츠 유통 서비스를 통하여 생성 합성 콘텐츠를 게시할 때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표식 기능을 사용하여 표시할 의무를 부과한다(제10조). 그 외에도 누구든지 본 방법에 따른 표시를 악의적으로 삭제·변경·위조·은닉하거나 이를 위한 도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부적절한 표시를 통해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제10조).

(2)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방법에 따른 특성 및 장단점, 표시 기술 도입 시 고려사항 및 한계점 극복 방안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표시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표시 기술은 기술적 구현 방식 또는 규범적 접근 방식 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겠으나, 크게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가시적(Visible) 표시 방안과 콘텐츠 데이터 내부에 정보를 삽입하여 기계적 판독을 전제하는 비가시적(Invisible) 표시 방안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56] 각 방식은 고유의 특성과 장단점을 가지므로, 정책적 목표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1) 가시적 표시 방안

가시적 표시는 특별한 도구나 기술 없이도 일반 이용자가 AI 활용 여부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이는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허위 정보로 인한 오인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① 텍스트 라벨 또는 안내 문구

텍스트 라벨 또는 안내 문구는 콘텐츠의 특정 위치(예: 이미지 하단, 영상 시작/종료 지점)에 "본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와 같이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가장 직접적인 표시 방식이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의 기술 개발 없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과 모든 이용자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텍스트는 이미지 자르기(Cropping)나 간단한 재편집 과정을 통해 의도적으로 쉽게 제거될 수 있어, 표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또한, 콘텐츠 자체의 미적 가치를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몰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② 시각적 아이콘 또는 심볼

시각적 아이콘 또는 심볼은 인공지능 결과물임을 나타내는 표준화된 기호를 콘텐츠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텍스트보다 시각적으로 간결하여 이용자의 직관적인 인지를 도우며, 언어의 장벽 없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사회적 합의를 통해 표준 아이콘이 정착된

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공지능(AI) 워터마크 기술 동향 보고서」, 2025. 1., 17쪽; BKL, "인공지능 생성물 워터마크 기술 동향, LEGAL UPDATE, 2025. 6. 9., 2쪽; https://huggingface.co/blog/watermarking 등 참고.

다면, 빠르고 효과적인 식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반면, 텍스트 라벨과 마찬가지로 편집을 통해 쉽게 제거될 수 있다는 견고성(Robustness) 측면에서의 한계점을 가지며, 만약 아이콘이나 심볼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과제가 남는다.

③ 가시적 워터마크

가시적 워터마크는 이미지나 영상 전체에 반투명한 텍스트나 로고를 반복적으로 삽입하여 표시하는 기술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콘텐츠의 핵심 부분을 포함한 넓은 영역에 적용되므로, 단순한 자르기만으로는 제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선 방식들보다 높은 견고성을 가진다.[57] 하지만 콘텐츠의 시청 경험과 미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여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높은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워터마크 제거 기술 또한 고도화되고 있어,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취약하다는 명백한 한계를 가진다.[58]

2) 비가시적 표시 방안

비가시적 표시는 콘텐츠의 외형적 변화 없이 데이터 내부에 출처 및 생성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기계적 판독과 진위 검증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콘텐츠의 유통 이력을 추적하고 악의적인 변조를 탐지하는 데 강점을 가진다.

①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방식은 파일 형식(JPEG, MP4 등)이 지원하는 표준 메타데이터 필드(예: EXIF, XMP)에 생성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다. 현재 이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 표준은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하는 C2PA(Coalition for Content Provenance and Authenticity)이다. C2PA는 콘텐츠의 생성자, 생성 시점, 사용된 도구(AI 모델 포함), 편집 이력 등을 암호화하여 기록함으로써 콘텐츠의 출처와 진위(Provenance and Authenticity)를 증명하는 일종의 디지털 '출생증명서' 역할을 한다. 이 방식은 콘텐츠의 원본 품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기계적 판독이 가능하여 자동화된 검증 시스템 구축에 용이하고, C2PA와 같은 표준을 따를 경우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메타데이터는 어도비 포토샵과 같은 전문 소프트웨어나 특정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없이는 일반 이용자가 확인하기 어려우며, 악의적

57) Rongfeng WEI, "Visual Watermark Removal Based on Deep Learning", arXiv:2302.11338v1 [cs.CV] 7 Feb 2023, p.1.
58) Ibid.

인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메타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변조할 경우 추적이 불가능해지는 취약점이 있다.[59]

② 비가시적 워터마크

비가시적 워터마크는 데이터 자체에 인간의 시청각 시스템이 감지하기 어려운 특정 신호나 패턴을 삽입하는 기술이다. 세부적인 방안으로서 공간(Spatial) 기반 워터마크는 이미지나 비디오, 음원 등의 특정 값(예: LSB, Least Significant Bit)을 직접 변형해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방법을, 변환(Transform) 기반 워터마크는 인공지능 결과물을 주파수(Frequency) 도메인으로 변환한 후 변환된 계수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방법을 말한다.[60] 그리고 최근 활용되는 학습(Learning) 기반의 워터마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워터마킹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학습 또는 추론 과정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거나 추출하는 방법을 말하고,[61] 딥러닝 기술의 부상으로 워터마킹 알고리즘의 견고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62] 이는 메타데이터 방식보다 견고하여 제거가 어렵고,[63] 스크린샷과 같은 아날로그 변환 등의 방식에도 일부 저항성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점을 가진다.[64] 하지만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탐지하기 위한 별도의 알고리즘과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며,[65] 기술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정 기업의 독점 기술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66] 또한,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 탐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67]

---

59) Melissa Lawson, “A Forensic Analysis of Digital Image Characteristics Associated to Flickr® and Google Plu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Recording Arts Program, 2017, pp.29~46.

60) 보다 세부적으로 DCT(Discrete Cosine Transform), DWT(Discrete Wavelet transform), Edge Masking 기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앞의 보고서, 20쪽.

61) 위 보고서, 19쪽.

62) Lianshan Liu et al., “Screen shooting resistant watermarking based on cross attention”, Scientific Reports, vol. 15, 2025, p.1.

63) Ingemar J. Cox et al., 『Digital Watermarking and Steganography』, 2nd ed., Morgan Kaufmann, 2007, p.15

64) Lianshan Liu et al., op. cit., pp.3~5.

65) Agnibh Dasgupta & Xin Zhong, “Robust Image Watermarking based on Cross-Attention and Invariant Domain Learning”, arXiv:2310.05395v1 [cs.MM] 9 Oct 2023, p.2~3.

66) 기술 표준의 부재로 인하여 각 기업에서는 자체 워터마킹 기술을 개발해 독점적으로 통제·탐지하고 워터마크가 적용되어도 타 기업에서는 인식이 어려울 수 있는바, 이는 해당 기업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 외에도 해당 업체가 폐업할 경우 그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탐지기의 가용성에 대한 우려 등이 관련된 문제점으로 제시된다. Kateryna Militsyna, “Can Copyright Law Benefit from the Marking Requirement of the AI Act?”, Vol. 56, International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Law, 2025, p.6.

67) Lianshan Liu et al., op. cit., p.12.

3) 표시 기술 도입 시 고려사항 및 한계점 극복 방안

①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C2PA와 같이 업계 전반이 동의하고 참여하는 기술 표준을 확립하는 것이다. 만약 각 플랫폼이나 인공지능 개발사가 독자적인 표시 기술을 채택한다면, 해당 기술의 파편화로 인해 A사 플랫폼에서 생성된 콘텐츠의 진위를 B사 플랫폼에서는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결국 전체적인 신뢰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정 기업이나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국제 표준의 도입 및 확산이 정책적으로 수반되어야만 한다.

② 견고성과 실용성 간의 균형

비가시적 워터마킹처럼 기술적 견고성이 높은 방식은 비용과 복잡성이 높고, 텍스트 라벨처럼 실용성이 높은 방식은 견고성이 낮다. 따라서 가시적 표시와 비가시적 표시를 병행하는 형태의 다층적 접근 방식이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68] 예를 들어, 일반 이용자에게는 즉각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시각적 아이콘을 표시함과 동시에, 언론사나 연구기관, 사법기관 등 전문가와 플랫폼 사업자를 위해서는 C2PA 기반의 메타데이터를 함께 내장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하여 이용자 그룹별 필요에 맞춘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견고성과 실용성 사이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③ 표시 기술의 한계점 인식

어떤 디지털 기술도 화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스피커 소리를 마이크로 재녹음하는 행위까지 완벽히 추적하고 방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본질적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기술의 목표는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변조에 드는 비용과 노력을 비약적으로 높여 악의적 행위를 억제하고, 사후적으로 그 이력을 추적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는 데 두어야 한다.

④ 법·정책적 기반 마련

표시 기술을 도입한다면, 해당 표시를 악의적으로 제거, 변경, 또는 위조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과 유사하게, 적용된 표시 기

68) 권순철, “생성형 AI 콘텐츠 진위 검증을 위한 워터마크 기술의 현황”, SK Shieldus, 2025, 7쪽.

술에 대한 의도적 훼손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금지 행위로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기술적 조치는 법적 강제성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⑤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이용자 역량 강화**

그 외에도 일반 이용자들이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의 의미를 이해하고, 메타데이터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도구에 익숙해지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이 병행되어야 한다.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콘텐츠 이력정보를 자동으로 시각화해 주는 서비스를 개발·보급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이용자를 수동적인 정보 수용자에서 능동적인 정보 검증 주체로 전환하여 사회 전반의 AI 리터러시 향상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한 표시는 단일 기술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제 표준을 중심으로 한 다층적 기술 접근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법·정책적 기반,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 노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의 초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3.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관련 국내에서의 입법적·정책적 논의

현재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한 표시 방안과 관련해서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다소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영역에서의 규제 방안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서 관련 조항을 도입한 상황이다. 그 외에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지난 제21대 국회에 이어 현재의 제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다만, 각 법률(안)에서 규정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의 목적과 취지, 규율 대상 등에 따라서 일정 부분 차이를 보인다. 이에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 대상과 의무 주체, 표시 방법, 별도 규제 필요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현행 인공지능 기본법과 공직선거법,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률 개정안 등의 주요 내용, 관련된 규제를 위한 입법적 논의와 그 이행 방안 등에 관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공지능 기본법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5년 1월 21일에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2026년 1월 22일 시행)은 인공지능 발전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인공지능 결과물을 식별하는 방안 내지 그 표시 방안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확보에 관한 장에서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그 세부 내용으로서 인공지능사업자의 표시 의무 및 고지 의무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우선 인공지능사업자[69]는 고영향 인공지능[70]이나 생성형 인공지능[71]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제31조제1항).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고(제31조제2항), 인공지능시스템[72]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제31조제3항). 그리고 그 밖에 표시 및 고지의 방법, 그 예외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31조제4항).

해당 법률은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제43조제1항제1호). 반면,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위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해당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그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과기부장관

69)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제2조제7호).

70) "고영향 인공지능"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하고, 그 활용 영역에 관해서는 해당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다(제2조제4호).

71) "생성형 인공지능"은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제2조제5호).

72) "인공지능시스템"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제2조제2호).

이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제40조제1항). 조사 결과 인공지능사업자가 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제40조제3항),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별도의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43제1항제3호).

2025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을 발표하며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안)과 관련 고시(안), 가이드라인(안)을 함께 공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수렴을 진행, 연내에 시행령과 고시,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2026년 1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최종본이 공개되기에 이르렀다.[73]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에서는 법 제31조에 따른 투명성 확보 의무와 관련해서 사전고지·표시방법, 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한 고지·표시방법 및 투명성 확보 의무의 예외를 규정하였다(령 제23조).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는 설명서나 이용약관, 화면 등을 활용할 수 있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표시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령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딥페이크 결과물과 관련된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지·표시는 이용자가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이 및 신체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지·표시되어야 한다(령 제23조제3항). 다만, 인공지능 활용 사실이 명백한 경우나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용으로만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그 외에 예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령 제23조제4항).

최종 확정된 인공지능 기본법 및 하위법령 등의 내용에 의하면, 해당 법령에서 상정하는 각 표시의 수단 내지는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표시 의무는 딥페이크 결과물[74]에 대한 것과 달리,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형식'으로도 표시가 가능하다. 즉, S/W를 통해 확인 가능하면 비가시적 표시로도 충분하고 표시를 위한 특정한 기술적 수단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 음성 등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결과물이 순차 유통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인공지능 생태계 내에서 그 실효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와 같은 내용은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하위법령 제정방향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추어 필요최소한의 규제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75] 이는

73) https://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99835&bcIdx=28987.
74)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딥페이크' 역시 모든 유형의 결과물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텍스트'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2026. 1., 5쪽.
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2025. 9., 3쪽.

산업적인 관점에서 여하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저작권의 관점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 법제도 측면에서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한 표시 필요성을 논하는 이유는,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산출물에 불과한 것인지 혹은 인간의 창작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도구로써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 인공지능의 개입 내지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이용자의 입장에서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한 표시는 해당 결과물 이용에 있어서 이용허락이 필요한 대상인지, 즉, 해당 결과물을 그대로 배포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창작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용허락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배분하는 관점에서도 저작물에의 해당 여부를 사전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결국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한 표시가 필요하다면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와 같이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및 탐지를 위한 통일된 형태의 기술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본법 등에서 상정하는 표시 방안은 사실상 실효성이 크지 않으며, 그와 같은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한 표시방법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그 결과물 생성 과정에 인공지능이 개입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내지는 어느 정도로 인공지능이 활용되었는지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단순한 보정에서부터 영상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괄적으로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촬영 영상 일부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단순 보정한 경우 또는 콘텐츠의 일부로서 활용되어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까지 표시 의무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76][77]

---

76) 유사한 내용의 지적에 관해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323호 등) 검토보고서, 2024. 9., 34~35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627호) 검토보고서, 2024. 9., 16쪽 등 참고.

77) 관련해서 MPA Korea 측에서도 영화나 드라마 등의 콘텐츠 산업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의 예외로 별도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2025. 9. 26. AI 결과물 표시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회의 내용).

(2) 공직선거법

2023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신설, 금지의무 및 표시 의무를 각각 명시하도록 하였다(제82조의8). 해당 신설 규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규정의 미비로 선거운동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운용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던 점, 딥페이크 영상은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해 실제 후보자 영상과 구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별도 표기가 없을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이를 실제 후보자의 영상으로 오인할 소지가 높은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이 된 것이다.[78)]

해당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82조의8제1항), 그 외의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딥페이크 영상 등에 표시해야만 한다(동조 제2항). 그리고 딥페이크 영상 등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6(딥페이크 영상 등의 표시방법 등) 법 제82조의8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은 별표 1의3과 같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1의3] (규칙 제45조의6 관련) 〈신설 2024. 1. 19.〉

딥페이크 영상 등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구분		내용
1. 음향	표시사항	이 음향은 실제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입니다.
	표시방법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작과 끝부분에 음성으로 각각 표시한다. 이 경우 재생 시간이 5분을 초과하는 때에는 5분마다 1회씩 전단의 표시를 추가하되 음향 중간에 적절히 표시하여야 한다.
2. 이미지	표시사항	이 이미지는 실제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입니다.
	표시방법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체 크기의 100분의 10 이상의 테두리 안에 배경과 구분되도록 표시한다. 이 경우 테두리 안에는 표시사항 이외에는 표시할 수 없으며, 음향을 포함한 경우 제1호의 표시를 추가하여야 한다(이하 제3호에서 같다).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 12. 19.자, 의안번호 제2125972호 참고.

구분		내용
3. 영상	표시사항	이 영상은 실제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입니다.
	표시방법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체 크기의 100분의 10 이상의 테두리 안에 배경과 구분되도록 상시 표시한다.
4. 기타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위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법 제82조의8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 따른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제261조제3항제4호), 일정한 요건(허위사실 공표) 하에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제250조제4항).

(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5월 31일 강유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048호)에서는 콘텐츠제작자로 하여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발전 속도와 파급력을 감안할 때 이용자들이 인공지능 기술로 작성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관점을 고려한 것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콘텐츠제작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해야만 한다. 그리고 법안에서는 그 표시의 내용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이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인공지능 기본법의 규정과 달리, 콘텐츠산업 진흥법상의 '콘텐츠제작자', 즉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 그 과정의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이 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79]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상 콘텐츠제작자 개념은 누가 해당 콘텐츠의 제작을 주도하는가에 그 초점이 있다고 할 것인바, 출판사나 웹소설·웹툰 CP사(출판 산업), 음반 기획·제

79)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

작사, 독립 레이블 및 프로듀서(음악 산업), 영화 제작사(영화 산업), 게임 개발사(게임 산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또는 방송사(방송 산업) 등이 표시 의무의 주체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문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라는 요건은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는 여러 양상들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그 판단을 위한 일응의 기준이 될 개념 요소로서 '인공지능 기술', '표시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표시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 예측이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된 기술 현황 및 발전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80]

또한 법안에서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내지는 벌칙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81]은 결국 신설 규정을 단순히 선언적 의미의 규정으로 축소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자율적인 규제 방안의 형태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그 외에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6조는 이용자 보호시책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정부'의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콘텐츠제작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다소 이질적인 사항으로 법체계상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4)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0일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713호)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에 대해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및 활용으로 인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됨에도 관련 규제가 미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세부적인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제공자[82]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83]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80) 문화체육관광위원회(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앞의 보고서, 6쪽.
81) 문화체육관광위원회(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앞의 보고서, 7쪽.
82) "정보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42조).
83) 해당 규정에 따른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안 제76조제3항).

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안 제43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84]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해당 표시방법을 지키지 않는 정보가 게재 또는 전시되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할 의무를 부담한다(안 제44조의2).

동 법안에 대해서는 우선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의 주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정보제공자의 경우에는 특정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85] 해당 정보제공자와 콘텐츠제작자가 다른 경우 등을 상정한다면 콘텐츠제작자의 표시 의무가 선행적으로 전제되어야만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정보에는 순수하게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제작 방식에 따라서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가 성립할 수 있음에도 동 법안은 이러한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표시 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결과물을 삭제하도록 강제하는바, (인공지능 기술 등 이용 여부를 판단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확정한 판단만으로 해당 결과물에 대한 정당한 이용행위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서 그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86]

그리고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형태의 부담적 규정임에도 그 표시 대상이 되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규정함으로써 정보제공자가 표시 대상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표시 의무의 대상이 되는 정보 범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87]

2024년 8월 29일 김장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323호)은 김승수 의원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발의된 법률안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

8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

8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713호) 검토보고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 8., 7쪽("인공지능 생성정보의 경우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직접 정보를 생성한 자가 아닌 단순히 정보통신망에 게재되어 있는 정보를 유통하는 자의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정보인지 판별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의무 이행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86) 위의 보고서, 11~12쪽.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성이 없는 정보까지 일괄 삭제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함을 고려할 때 직권표시, 접속제한 또는 이용정지 등 삭제 외의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정보 유통량, 서비스의 종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위의 보고서, 13쪽).

87) 위의 보고서, 7~8쪽.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해당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노력 및 삭제 등의 유통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보를 게재하려는 자에게는 표시 의무의 부과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표시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법안은 제44조의11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들거나 변형함으로써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글,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인공지능 생성물)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들거나 변형한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가상 정보의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고[88] 그 표시방법과 가상 정보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한다.

인공지능 생성물을 제작하거나 편집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려는 자에게는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다른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마련한 방법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가상 정보의 표시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89] 누구든지 해당 가상 정보의 표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 외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상 정보의 표시를 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조치(가상 정보의 표시, 삭제 등 접속 제한)할 의무가 있으며, 글,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생성 또는 수정·편집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자의 경우 인공지능 생성물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 요구된다.

법안에 따른 표시 의무와 관련해서는, 직접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까지 표시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의 경우 (당시 논의 단계에 있던) 인공지능 기본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90][91]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 의무에 관해서는 해당 정보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삭제

88) 해당 표시방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안 제76조제3항).

89) 다만,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 범위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는 가상 정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안 제44조의11 제2항 단서).

9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323호 등) 검토보고서, 2024. 9., 33~34쪽.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91) 그 외에도 앞선 법안에서와 마찬가지로, 표시 의무자(인공지능 생성물을 제작하거나 편집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려는 자) 범위를 실제 의무 이행이 가능한 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점과 표시 의무의 대상 범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세부 사항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이 동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위의 보고서, 32~35쪽.

조치로 인해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우려 사항으로 제시된다.[92][93]

한편, 2024년 9월 4일 조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627호) 역시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의 표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누구든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를 해야 한다.[94] 아울러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전자적 표시를 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할 의무를 부담한다(안 제44조의11).

해당 법안과 관련해서는, 특히 디지털 워터마크와 같은 전자적 표시의 경우 인공지능 개발·이용 사업자가 표시 수단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용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 사업자의 표시 수단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95][96]이 있었던바 관련 입법 방안 마련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24년 10월 28일 김민전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932호)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가상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인공지능 생성물)를 제작 또는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에게 제작 또는 편집이 이루어지는 인공지능 생성물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해당 소프트웨어에 구현하도록 한다. 그리고 인공지능 생성물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려는 자에게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소프트웨어 제작·공급자가 구현한 기능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전자적 방법으

92) 위의 보고서, 35~37쪽.

93) 해당 법안 관련,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표시 강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 제약, 위축 효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인공지능 생성물 여부 판단 곤란 등을 고려하여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현재 표시 기술의 한계, 위임에 따른 예측 가능성 저하, 사업자 부담 및 이용자의 불편 야기, 인공지능 기본법과의 중복 규제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였다. 위의 보고서, 38쪽.

94) 해당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안 제76조제3항).

9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627호) 검토보고서, 2024. 9., 15쪽.

96) 직접 정보를 생성한 자가 아닌 단순히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정보를 유통하는 자의 경우 그에 대한 판단 및 의무 이행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 표시 의무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세부 사항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삭제 의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위의 보고서, 15~19쪽.

로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안 제43조의2).[97]

동 법안의 경우 앞선 법안과 달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에게 표시 도구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가상의 정보 즉, 딥페이크에 한정해서 규율하는 다른 법률안의 경우와 달리 표시 의무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생성물 일반으로 그 범위를 확장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98] 다만, 법안 발의 당시 소프트웨어 제작·공급자는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사업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별도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99][100]

그 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13일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안번호 제2205512호)과 2025년 5월 1일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안번호 제2210304호) 등에서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정보제공자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전용기 의원안)하거나 정보제공자 중에서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공하려는 자에게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의무를 부과(김상훈 의원안)하는 형태로 규정하는 등 표시 대상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한정되는 것인지 혹은 딥페이크 콘텐츠에 한정되는 것인지 등의 요소에서 앞선 법안들의 규정사항들을 선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101]

다른 관련 법안들과의 관계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단순히 표시 의무 위반 그 자체에 대해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영리 목적 제공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제시—"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전용기 의원안), "딥

97)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안 제76조제3항).

98) 반면,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와 관련해서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생성물로서 대상자의 동의 없이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라 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여 규율하고 있다(안 제44조의7제1항 및 제2항, 제72조제1항).

9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932호 등) 검토보고서, 2024. 12., 9쪽.

100) 그 외에도 표시 의무자의 범위를 실제 의무 이행이 가능한 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표시 의무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앞선 법안들에서의 논의와 동일하다. 위의 보고서, 9~11쪽.

101) 기존 법안들에서는 정보제공자, 소프트웨어 제작·공급자, 정보게시자 등 의무 주체에 있어서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전용기 의원안과 김상훈 의원안에서는 동일하게 그 주체를 정보제공자로 정하고 있다.

페이크 영상 등의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표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조·변조·훼손 또는 제거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김상훈 의원안)—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김상훈 의원안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표시방법이 완화되는 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명시—"해당 콘텐츠가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하는 한편,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표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조·변조·훼손 또는 제거하여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정보로 포섭하고 있는 점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102]

(5)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방통위)

2025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사 및 서비스 제공자 등)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다.[103]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 전반에 걸쳐 추구해야 할 4가지의 기본 원칙[104]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의 실행 방식[105]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실행 방식의 하나로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결정 과정을 알리려는 노력'을 제시하는바, 이를 위하여 ① 서비스 제공자[106]에게는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었음을 자율적으로 선택한 방식으로 알리고, ② 해당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한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

---

102) 표시 의무 위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체계 및 불법정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즉, 불법정보 제도는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또한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이나, 표시 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그 위반 행위의 처벌 여부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304호) 검토보고서, 2025. 8., 10~11쪽.

10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197

104) 1.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인간이 적절하게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인공지능시스템 사용에 따른 작동 원리 및 결과,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3.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안전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악의적으로 이용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4.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차별 또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105) 1.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용자 인격권 보호, 2.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결정 과정을 알리려는 노력, 3.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다양성 존중 노력, 4.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입력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관리, 5. 생성 콘텐츠 활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과 참여, 6. 생성 콘텐츠의 건전한 유통·배포를 위한 노력

106) 동 가이드라인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 디지털 도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할 것이 권고된다.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결정 과정을 알리려는 노력'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사례를 제시하는바, 그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었음을 자율적으로 선택한 방식(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가시적 워터마크 표시, 챗봇 형식의 서비스 실행 화면에 안내 문구 표시 등)을 통해 안내할 수가 있다. 그 외에도 서비스 제공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정보 제공 방법으로 출처 표기 혹은 출처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거나(답변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 제공 등)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정보를 제공(이용약관이나 운영정책, FAQ 등을 통한 안내)할 수 있으며, 고객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 추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음을 설시하고 있다.

(6) 소결

현행 인공지능 기본법과 기타 관련된 법률안 등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인공지능사업자의 일반적인 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규정 이외에 별도 규정 마련 필요성 여부에 대한 선행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즉,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른 의무 이외에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 중 하나로 추가 규정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지(예: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수단 제공 의무 등), 인공지능 기본법상의 인공지능사업자 이외에 일반적인 인터넷 사업자 등에 대한 별도 의무 부과 필요성은 없는지, 만약 필요하다면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할 의무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지(예: 확인 및 표시 의무, 신고 절차 마련, 삭제 조치 의무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모델이 오픈소스로 배포되는 경우가 상당하고,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용자가 선택, 결정하게 된다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성은 없는지, 필요하다면 이용자에게 부과할 의무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지(예: 인공지능사업자에 의해 표시된 내용을 유지할 의무, 별도 표시 수단을 사용하여 표시할 의무, 인공지능 결과물의 생성과 관련한 이력정보 등을 부가할 의무 등)에 대한 논의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전체 인공지능 공급망을 고려할 때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열거한 것으로, 각각의 쟁점 또는 의무 사항에 관해서는 그 주체 및 규율 대상, 행위 유형에 따라서 저작권법 이외에도 인공지능 기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의 법률 개

정 내지는 별도의 법률 제정 등을 통한 규율이 오히려 더 적절할 수가 있다.

4.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제도의 실효성 및 법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규제 방안 등 검토

결국 인공지능 기본법 등에 대한 해석론과 별개로 저작권의 관점에서는 별도로 법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앞선 논의에 비추어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저작권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일반적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한 입법 대안을 마련한다고 할 때 중점적인 논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표시 의무의 부과 대상, 즉 표시 주체는 인공지능이 해당 작업에 개입되었는지를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자, 즉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자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앞선 타 법률안에서 상정하고 있던 콘텐츠산업 진흥법상의 콘텐츠제작자,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제공자는 해당 법률의 정의에 따라서 포섭되는 범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에 대응하는 자를 지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저작권법의 관점에서는 저작자 내지는 결과물에 대하여 창작적 기여를 한 자를 의무의 주체로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표시에 따른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외의 이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해서는 해당 표시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문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107][108]

한편, 규율의 대상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된 것으로 한정할 것인지 또는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그 외연을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인공지능'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으로, '인공지능기술'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로 정의가 되어 있으나, 이 또한 분야를 막론하고 적용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용어의 정의로 보기는 어렵고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 가능한 측면이 있다. 특히나 저작권의 관점에서 표시 방안을 논의하는 취지는, 프롬프트 입력 행위만으로 자동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인지 아니면 사람의 창작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표현물인지를 확인하고, 창작 과정에서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하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이므로 비록 논

107) 해당 콘텐츠를 제작한 사람은 물론이고 이를 단순히 배포하거나 전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표시를 삭제하고 이용하려는 유인이 작용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규제의 실효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해당 결과물에 대한 사실 오인에 따른 피해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 비영리 목적 이용 또는 사적 목적 이용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108) 한편, 표시 제도의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촘촘한 형태의 규율 방안을 마련한다면, 인공지능을 직접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이외에도, 인공지능 결과물을 유통하거나 매개하는 사업자 등의 의무 등이 추가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의의 출발점은 인공지능 기술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규율 대상이 되는 기술적 기반을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표시 의무의 대상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인공지능 및 관련 기술의 발전 동향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필요 또한 있으므로 그 근거가 되는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고시와 같은 하위법령을 통해 최대한 상세히 열거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

표시 의무 대상에 관해서는 기술적인 근거와는 별개로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의 규범적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단순히 일반적인 인공지능 결과물과 딥페이크 결과물을 구분하는 차원 내지는 장르별로 표시방법을 차등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인공지능 활용의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표시 대상을 획정하거나 차등화하는 방안 또는 예외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 앞선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방송협회 측에서는 사용자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의도와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나 방송콘텐츠의 경우 대본, 이미지, 음악, 자막 등 여러 요소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인공지능으로 콘텐츠를 전면적으로 제작한 경우와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한 경우를 분리하는 등 해당 콘텐츠 산업의 상황에 맞는 규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109]

아울러서 각 인공지능 사업자 또는 인터넷 플랫폼마다 제각각인 서비스 정책 등을 고려할 때, 보다 통일성 있는 표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표시 방식 등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를 제시하되, 표시를 위한 수단은 가급적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플랫폼 사업자 등 유관 사업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간이하게 해당 표시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상호운용성을 가진 것이어야만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가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인식 가능한 형태의 표시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저작권의 규제 관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것이나, 타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도 언급이 된 것과 같이 일반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 표기된 콘텐츠에 대한 삭제 등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의 경우[110],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생성한, 즉 그 자체로 유해성을 띄는 콘텐츠가 아닌 단순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콘텐츠라는 사실만으로 삭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과

109) 문화체육관광위원회(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앞의 보고서, 11쪽.

110) 딥페이크 콘텐츠를 유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적법한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처리 방침을 공개하고 부적절한 표시가 되었다고 발견·신고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삭제 및 임시조치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 정준화, "딥페이크 식별을 위한 AI 생성물 표시 의무 입법 방안", 『이슈와 논점』, 제227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10. 18., 4쪽 참고.

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지양할 필요가 있다.[111]

한편, 표시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 등과 관련해서는, 콘텐츠 생성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오늘날의 창작 현장 및 관련된 산업 현황 등을 고려할 때 모든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 일부 법률안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영리적 이용행위 등을 요건으로 별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직접적인 제재 규정 이외에 사전적으로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면책 규정을 설정하는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즉, 인공지능 결과물을 생성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경미한 형태의 수정·변경 또는 단순한 도구로써 사용한 경우 등 일정 부분 예외가 필요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유통 단계 또는 이용 단계에서의 표시 삭제·변경 금지에 대해서도 개인적 이용행위 등과 같은 또 다른 예외 규정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 어떤 경우를 표시 의무의 범주 내부 또는 외부로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요건을 법적 책임의 부과를 위한 구성요건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보다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다만, 위와 같은 규제 방식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와는 별개로 이용자의 의무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를 보다 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내 인공지능 산업 육성 차원에서 규제적 접근 방식을 최대한 지양하겠다는 정책적 결단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의 측면에서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설사 그 입법의 목적이 다르다 할지라도 법률 간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전제한다면,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를 사실상 배제한 이용자의 의무 규정만으로는 그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가 있고, 인공지능사업자 이외의 일반적인 이용자 등에게 별도의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가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에서[112] 도리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관련된 의무를 완화하면서 이용자에게는 보다 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해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모든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한 표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내지는 정책적

1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627호) 검토보고서, 2024. 9., 17~20쪽.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권 표시'하거나 '이용 정지 또는 수익 제한'하도록 하는 등 삭제 외의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방통위의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112) 인공지능 이용 콘텐츠에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관하여, 과기부는 인공지능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포함한 콘텐츠제작자를 규제하는 방안의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앞의 보고서, 8쪽.

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기존의 저작권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 추가로 검토될 수 있다. 즉,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의 부과 영역을 저작권의 관점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점, 즉 저작권 등록 내지는 저작권 신탁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에 국한하여 최소화된 형태로 표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저작권 등록이나 신탁관리 제도와 연계한다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결과물의 저작물성 여부, 창작적 기여의 정도 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야 하므로 해당 결과물 생성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력 등에 대한 표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3월 발표한 「인공지능 산출물을 포함하는 저작물에 대한 등록 지침(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을 통하여, 저작권 등록 신청 시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부분을 명시하고 해당 부분을 제외한 인간 저작자의 창작적 기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에 의한 기계적 산출물과 인간의 창작적 표현을 구분하여 저작물성 판단의 근거로 삼기 위함인바, 국내에서도 저작권 등록제도와 연계 시 이와 유사하게 '인간의 창작적 기여'와 'AI의 자동 생성 부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창작 과정을 보다 상세히 기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나 표준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예컨대 C2PA(Coalition for Content Provenance and Authenticity)와 같이 콘텐츠의 출처 및 생성·수정 이력을 기록하는 메타데이터 기술 표준이나 창작 과정에서의 프롬프트 입력 내역, 수정 과정 등을 기록·증명하는 방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제도적, 기술적으로 창작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기록하여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도 추후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인공지능 활용 여부나 기여도에 대한 입증 방안을 사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권리 주장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에 관한 법제도 관점에서의 각 접근 방식을 살펴본다면 위와 같이 기존의 저작권 제도와 결부된 형태의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에 관한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서 이원화된 형태로 각 해결 방안을 구분하여, 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이외에 정책적 측면에서의 접근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면,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표시와 같이 결과물 생성 유형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레이블링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표시를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내지는 지침처럼 제시하는 방식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CCL이 표준화된 기호와 명확한 이용 조건을 통해 저작물의 이용허락 상태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임을 감안할 때,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접근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113] 법률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인공지능 활용 여부 및 그 정도를 표시할 수 있는 표준화된 라벨이나 아이콘 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것이다. 가령, 'AI 전면 생성(Fully AI-Generated)', 'AI 보조 및 인간 주도(AI-Assisted, Human-Directed)', 'AI 단순 도구 활용(AI Tool Used)', 'AI 미사용(AI-Free)'과 같이 인공지능의 개입 수준이나 인간의 창작성 기여 정도에 따라서, 혹은 'AI 생성(AI-Generated)', 'AI 변형(AI-Transformed)', 'AI 편집·교정(AI-Refined)', 'AI 분석·아이디어 제공(AI-Consulted)' 등과 같이 결과물 생성 과정에서 관여된 인공지능의 역할에 따라서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안 등을 상정할 수 있다.[114] 이는 규제를 통한 강제보다 시장의 자율적인 투명성 확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창작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콘텐츠 생태계 내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하는 '콘텐츠 진위 이니셔티브(Content Authenticity Initiative)'나 앞서 언급된 C2PA 기술 표준 등이 이러한 자발적 출처 표시 및 진위 확인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역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및 그 결과물과 관련한 기존 라이선스의 적용 및 표시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115]

5. 결론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 부과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관련 업계에서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을 표명한 바 있으며, 법령 마련을 통한 강제적인 의무 이행 이전에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관련 사항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16] 최근 KBS에서도 인공지

113) Joseph J. Avery et al., "Attributing AI Authorship: Towards a System of Icons for Legal and Ethical Disclosure", Northwestern Journal of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22 (1), 2024, pp.25~26. 그 외에도 사용자가 시스템 작동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가독성(Legibility) 문제에 착안하여 그림, 문자, 추상 등 AI를 위한 시각적 표지 언어의 활용성을 모색한 연구로, Joseph Galen Lindley et al., "Signs of the Time: Making AI Legible", DRS International Conference, 2020 참고.

114) 위의 논문에서는 AIA(Artificial Intelligence Attribution) 시스템을 통한 아이콘 기반의 표시 방안으로서 인공지능의 기여도 내지 역할을 중심으로 'Research(리서치), Writing(작성), Editing(편집), AI-Free(AI 미사용)'의 네 가지 범주를 구분하고 있다. Ibid., pp.29~30. 그러나 이는 텍스트 콘텐츠에 있어서의 인공지능 활용 측면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인공지능 결과물 전반에 통용 가능한 표시 방안 또는 각 콘텐츠의 속성에 따른 표시 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115)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C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faq/#artificial-intelligence-and-cc-licenses; "Introducing CC Signals: A New Social Contract for the Age of AI", https://creativecommons.org/2025/06/25/introducing-cc-signals-a-new-social-contract-for-the-age-of-ai/?utm_source=feedly&utm_medium=rss&utm_campaign=introducing-cc-signals-a-new-social-contract-for-the-age-of-ai 등 참고.

116) 인공지능 이용 콘텐츠에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당시 방송사 측(TV조선, 채널A, MBN, JTBC)에서는 관련 사례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으며 이미 방송법이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들을 통해 일정 정도 규제가 되고 있다는 점 등을 반대 논거로 제시한 바 있다.

능 기술 활용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AI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바 있으며, 그에 따르면 대국민 서비스 및 콘텐츠 생산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밝혀야만 한다.[117]

유관 산업계에서의 자율 규제 움직임은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따른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을 업계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의 오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저작권 제도와의 정합성을 완전히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모든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해 일률적인 표시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은 본 보고서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기술적·현실적 한계 및 산업 위축의 우려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원화된 접근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형태의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법제도적 접근 방안의 측면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근간과 밀접하게 연관된 영역으로 한정하여 최소한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즉, 저작권 등록이나 저작권 신탁관리와 같이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와 인공지능의 자동 생성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큰 영역에 한하여, 생성 과정 및 인공지능 활용 이력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는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한 저작물성 판단과 권리 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118]

둘째, 위와 같은 최소한의 법적 규제 외의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서는 정책적·자율적 접근 방식을 적극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방송이나 통신 분야 등에서의 사례처럼 각 산업계가 자신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장려하고, 정부나 유관 기관에서는 CCL 등의 표시 사례를 참조하여 창작자가 자발적으로 인공지능 활용 여부나 기여도를 표시할 수 있는 표준화된 레이블링 시스템, 기술적 수단을 개발·보급하여 이를 지원해야 한다. 이는 규제를 통한 강제보다 시장의 자율적인 투명성 확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서, 창작자의 자발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콘텐츠 생태계 내 신뢰를 구축하는 데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에 대한 접근은 법적 '의무' 부과라는 강제적 수단과 투명성

117) KBS AI 가이드라인 제5조 (투명성)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 이를 이용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
① 인공지능이 활용된 사실의 표시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공지능이 생성한 글, 이미지, 영상, 오디오가 대국민 서비스 및 콘텐츠 생산에 핵심적인 요소로 활용된 경우 인공지능이 활용된 사실을 시청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시 그 출처도 표시해야 한다.
③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또는 콘텐츠 생산자는 그 활용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8)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등록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관해서는 본 보고서의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부분 참고.

확보를 위한 '자율적' 노력 및 정책적 지원이라는 두 가지 축을 바탕으로, 유연하면서도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과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균형 잡힌 해법이 될 것이다.

제4절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실연자 권리 확보 방안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등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 실연자가 행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실연자가 행한 것으로 오인 혹은 착각될 수 있는 수준의 영상이나 음원 등이 다수 제작되고 있다. 실제, 한국저작권보호원이 2024년 3월 28일부터 약 2주간 유튜브 내 생성형 AI 활용 목소리 무단 도용 커버곡에 대한 유통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연자의 목소리를 무단 도용하여 제작한 AI 커버곡은 총 1,647건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AI 커버곡을 업로드한 유튜브 채널 수는 총 227개 채널이며, AI 커버곡에 목소리가 무단으로 활용된 실연자의 수는 총 254명으로 확인된 바가 있다.[1] 이와 같이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등 관련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실연자의 실연이 대체될 우려가 있는 등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실제 엑스트라 배우들의 역할은 딥페이크 영상 등으로 손쉽게 대체되고 있으며, 성우들은 이미 AI 레플리카[2]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 모사물로 인한 실연자 피해 관련 질의에 대하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미국에서 드레이크와 위켄드의 음성을 따라한 "Heart on My Sleeve"라는 곡이 AI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져 1,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사안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음성 모사가 아닌, 실제 시장에서 실연자의 경쟁력과 수익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실제 실연자의 창작 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실연자의 실연을 기술적으로 모방하는 행위는 실연자의 경제적 손해, 시장 가치의 훼손, 인격권 침해 및 실연 기회의 상실 등의 피해[3]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1) 구혜나, "인공지능(AI) 커버곡과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이슈 리포트, 한국저작권보호원, 7쪽〈https://share.google/LLcItOpy3NKNFGo75, 2025년 9월 16일 최종접속〉.

2) 미국 저작권청보고서는 디지털 레플리카를 개인을 사실적이지만 허위로 묘사하기 위해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하거나 조작된 비디오, 이미지 또는 오디오 녹음으로 정의하고 있음(US Copyright Office, Digital Replicas: Copyright and Artifical Intelligence, Part1, 2024, p.29). 다만, 해당 연구보고서에서는 미국 저작권청보고서의 디지털 레플리카에 해당하는 딥보이스 및 딥페이크 기술 등에 기반하여 타인의 음성, 초상 등을 활용하여 생성된 AI 커버곡이나 영상 등을 디지털 모사라 칭함.

3)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디지털 모사와 관련하여 딥보이스 등 기술에 기반하여 생성된 AI 커버곡 등이 수백만 스트리밍을 기록하면서, 해당 아티스트가 직접 제작한 음원 혹은 음반 등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고, 수익 흐름이 우회적으로 잠식되어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딥보이스나 딥페이크 기술에 기반한 음성 합성이나 영상 등이 실제와 구별이 힘들 정도로 정교해지면서 실제 실연자의 고유성 혹은 브랜드 가치가 희석될 수 있어 이로 인한 시장 가치의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연자의 동의 없이 생성된 콘텐츠가 퍼져 나가고 그 내용이 실연자의 이미지와 상충되거나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경우 실연자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이와 같이 실제 실연자가 행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실연자의 실연 기회 자체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디지털 모사 생성이나 이용행위에 대하여 현행 법제를 통해서는 그 대응에 한계가 있는 등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실연자의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명확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모사로 인해 발생한 혹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실연자 피해 현황 혹은 야기될 우려가 있는 피해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법 제도를 중심으로 실연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해외 주요국에서 디지털 모사 관련 입법 및 정책 대응 현황

(1) 미국

1) 미국저작권청 보고서

미국 저작권청은 23년 3월 초 AI에 의해 야기되는 미국 저작권법 및 정책 관련 이슈를 다루는 AI 이니셔티브(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를 시작하였다. 해당 이니셔티브 주요 활동의 일환으로 AI에 의해 야기되는 저작권법 및 정책적 이슈를 분석하는 3부작 보고서 시리즈 발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보고서(이하,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라 칭함)가 24년 7월 31일에 발표된 디지털 모사물(Digital Replica)[4]이다.[5]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에서는 허락받지 못한 디지털 레플리카의 보호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연방법 차원에서 이에 대한 보호를 논의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언급하며, 현행 법률상 한계와 연방차원의 디지털 레플리카[6]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대하여 권고하고 있다.[7]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레플리카를 "개인을 사실적이지만 허위로 묘사하기 위해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하거나 조작된 비디오, 이미지 또는 오디오 녹음"으로 정의하고 있다.[8] 그러면서 보호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되어서는 안 되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개인을 단순히 연상시키는 것이 아닌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복제물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상업적 가치나 명성의 정도와

4) US Copyright Office, *supra* note 2.
5) 디지털 레플리카에 관한 첫 번째 보고서 발표 이후, 25년 1월 29일 저작물성(Copyrightability)에 관한 두 번째 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마지막 보고서는 AI 모델의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법적 쟁점에 관하여 다룰 예정이다(https://www.copyright. gov/ai/)(최종접속일: 2025년 8월 15일).
6) 본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디지털 모사물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미국저작권청 보고서 파트에서는 미국저작권청에서 사용한 용어를 언급하는 것으로 한다.
7) US Copyright Office, *supra* note 2, at 7.
8) *Id.* at 29.

관계없이 모든 개인을 그 보호 주체로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9]

디지털 레플리카의 보호기간과 관련해서는 활동 중인 예술가의 생계, 살아 있는 사람의 존엄성, 사기 및 잘못된 정보로부터 대중의 안정을 보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이유로 사후 보호기간은 필요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10] 다만, 상업적 가치가 있는 개인이 사망한 시점에 상속인이 사망한 자의 페르소나로부터 이익이나 사용을 제어할 수 있도록 사후 보호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언급하며, 연방법에서 사후 보호를 할 경우 최초로 20년 미만의 보호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페르소나가 계속해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연장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호기간의 설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담과 장기 또는 영구적인 보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11]

디지털 레플리카의 침해행위로서는 저작권법상 배포(Distribution), 출판(Publication), 공연(Public Performance), 전시(Display)와 같이 대중에 대한 유포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12] 그리고 양도와 라이센싱과 관련하여 디지털 레플리카에서 사용을 위해 그들의 이미지 또는 음성의 라이센스를 허용할 수 있으나 권리 전체의 양도는 불가함을 권고하고 있다.[13]

또한, 뉴스, 예술 작품, 패러디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포함하여 헌법에서 보호되는 표현에 디지털 레플리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디지털 레플리카의 무단 사용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 이익형량을 비교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14] 침해에 대한 구제와 관련하여서는 금전적 구제와 금지명령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15]

인공지능에 의한 예술 스타일의 모방과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상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따라 예술가의 스타일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퍼블리시티권 등 다른 법률에 의해서 스타일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점을 언급하며, 스타일의 모방을 디지털 레플리카의 보호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였다.[16]

9) *Ibid.*
10) *Id.* at 32.
11) *Id.* at 32~33.
12) *Id.* at 33.
13) *Id.* at 41.
14) *Id.* at 46.
15) *Id.* at 47.
16) *Id.* at 54~56.

2) NO FAKES Act

디지털 모사물(Digital Replica) 형태의 개인 이미지, 음성 또는 초상 사용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NO FAKES Act 법안은 미국 연방의회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발의되고 있다.

2023년 처음 NO FAKS Act가 논의안으로 제안되었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2024년 NO FAKS Act 법안[17]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헌법적 문제와 법적 모호성 및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주-연방 간 권한 충돌 문제 그리고 Preventing Abuse of Digital Replica Act(PARDRA)와 같은 대체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점과 산업계 및 기술계의 반발 등을 이유로 논의가 지연되며 회기 만료로 폐기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발의된 2025년 법안[18]에서는 이전보다 발전한 AI 기술에 기반한 딥페이크, 음성·이미지 모사 등으로 인한 피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연예인·일반인 모두의 권리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진 가운데, 2025년 4월 9일 2023년 법안을 기반으로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된 내용을 담으면서, 초당적 지지와 산업계의 광범위한 지지[19]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25년 법안은 이전 법안보다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정의 및 사후 갱신 조건, 미성년자 라이선스 요건, 디지털 지문, 온라인 서비스의 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및 책임 제한, 표현의 자유 관련 예외 조항, 주 법률과의 관계, 소급효 등에 관하여 더욱 상세하고 명확한 내용의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25년 법안은 2024년 법안과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 예외 조항 강화, 디지털 지문 개념의 도입과 온라인 서비스의 정의 확대 및 책임 범위 구체화, 소급효 등에 있어서 차이점을 두고 있다.

동 법안에서 규정하는 디지털 모사물을 특정 개인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음성·초상(Likeness)을 사실적으로 컴퓨터로 새롭게 생성한 전자적 표현물로서, 개인의 음성 또는 시각적 유사성으로 쉽게 식별 가능해야 하며, 실제 개인이 실제로 연기하거나 출연하지 않은 음반, 이미지, 사운드 없는 시청각 저작물 포함한 시청각 저작물 또는 전송에 구현되거나, 실제 개인이 연기하거나 출연한 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징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버전으로 규정하고 있다.[20]

---

17) NO FAKES Act of 2024(S.4875); NO FAKES Act of 2024(H.R.9551), NO FAKES Act 법안은 매년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되고 있으나 내용은 동일하다.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상원과 하원에서 동시에 발의하는 것은 비슷한 법안을 양원 모두에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8) NO FAKES Act of 2025(S.1367); NO FAKES Act of 2025(H.R.2794).

19) 음악·영화·연예계(Recording Academy, RIAA, SAG-AFTRA, MPA, Warner Music, Universal Music 등)와 함께, 빅테크(구글, 아마존, IBM, OpenAI, YouTube 등)도 공식 지지를 표명함.

20) S. 1367 Sec.2(a)(2).

그리고 개인은 자신의 음성 또는 시각적 유사성을 디지털 모사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할 권리를 가는데,[21] 이러한 권리는 재산적 권리로 생존 시 양도가 불가능하며, 권리자에 의해 전체로서 또는 부분적으로 그리고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형태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또한, 이 권리는 사망과 동시에 만료되지 아니하며, 사후 권리는 사망 후 70년까지 존속하며, 사망 후 10년 동안 권리 보유자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며, 사망 후 10년이 지난 후에도 권리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권리 보유자가 해당 10년 만료 직전 2년 동안 고인의 음성 또는 시각적 유사성을 활발하고 승인된 방식으로 공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갱신이 승인되면 추가 5년 동안 권리가 존속하며, 이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을 위해서는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22]

No Fakes Act 2025에서는 이전과 달리 디지털 지문(Digital Fingerprint)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정의 규정에서 디지털 지문을 암호화 해시 함수 또는 유사한 함수, 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선택한 기타 디지털 프로세스, 도구 또는 기술에 의해 생성된 전자적 레이블 또는 식별자를 의미하며, 특정 자료에 고유하여 다른 자료와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3]

디지털 모사물의 공개, 배포, 전송 등에 대해서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 모사품의 제작뿐만 아니라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하는 특정 제품, 서비스의 유통 행위까지 책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24] 그 외에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3) No AI FRAUD Act

No AI FRAUD Act[25]는 AI 기술 및 딥페이크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인해 유명 가수 음성을 모방한 노래나 유명 연예인의 초상을 사용한 광고가 제작되는 등 개인의 인격적 요소에 관한 침해 사례 증가로 인해 개인의 음성과 초상(Likeness) 등의 인격적 요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26]됨에 따라 개인의 초상(Likeness)과 음성에 대한 보호를 이유로 2024년 1월 10일 하원에서 발의되었다.

---

21) S. 1367 Sec.2(b).
22) S. 1367 Sec.2(b)(2)(A).
23) S. 1367 Sec.2(a)(1).
24) S. 1367 Sec.2(c).
25) *To provide for individual property rights in likeness and voice*, H.R. 6943, 118th Cong. (2024).
26) H.R. 6943 Sec.2.

권리의 성격, 양도, 상속 여부 및 사망 후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모든 개인은 그들의 초상과 음성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을 구성하는 재산적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전체 또는 일부를 자유롭게 양도 및 상속할 수 있으며, 상업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 후에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27] 다만, 사망 후 초기 10년이 지난 후 2년 동안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의 초상 또는 음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해당 권리는 소멸된다.[28]

침해 행위와 관련해서는 음성 또는 초상권을 보유한 개인의 동의 없이 주(State) 간 또는 외국 간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개인 맞춤형 복제 서비스(Personalized Cloning Service)[29]를 배포, 전송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공중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30] 또한, 디지털 음성 레플리카(Digital Voice Replica)[31] 또는 디지털 디픽션(Digital Depiction)[32]이 해당 음성 또는 초상권을 보유한 개인에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디지털 음성 복제본 또는 디지털 디픽션을 출판하거나(Pbuliches), 공연하거나(Performs), 배포하거나(Distributes), 전송(Transmit)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33] 아울러 위 두 가지 유형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조장, 지시 또는 촉진하는 행위로서, 해당 성명 또는 초상권을 보유한 개인이 해당 행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조장, 지시 또는 촉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34]

침해에 대한 구제로는 침해 행위에 대하여 개인 맞춤형 복제 서비스 침해의 경우 50,000달러, 디지털 음성 복제나 디지털 디픽션 침해의 경우 5,000달러의 법정 손해배상과 함께 실제 피해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35] 다만, 그 피해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한 경우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36] 손해 판단에 있어서 문제가 된 음성 또는 초상의 소유자가 해당 사용이 나타나는 작품의 주요 표현적 목적에 필수적이고 관련이

27) H.R. 6943 Sec.3, 3(b)(1)-(2).
28) H.R. 6943 Sec.3(b)(3)(A).
29) 개인 맞춤형 복제 서비스(Personalized Cloning Service)는 특정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디지털 음성 레플리카(Digital Voice Replicas) 또는 디지털 디픽션(Digital Depictions)을 생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 또는 기능인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툴 또는 기타 기술, 서비스 또는 장치를 의미한다(H.R. 6943 Sec.3(a)(3)).
30) H.R. 6943 Sec.3(c)(1)(A).
31) 디지털 음성 레플리카(Digital Voice Replica)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전체 또는 일부를 생성하거나 변경하고, 개인이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개인의 복제, 모방 또는 유사물을 포함하는 녹음 또는 시청각 작품에 고정된 오디오 렌더링을 의미한다(H.R. 6943 Sec.3(a)(4)).
32) 디지털 디픽션(Digital Depiction)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전체 또는 일부를 생성하거나 변경한 개인의 초상을 복제, 모방 또는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H.R. 6943 Sec.3(a)(2)).
33) H.R. 6943 Sec.3(c)(1)(B).
34) H.R. 6943 Sec.3(c)(1)(C).
35) H.R. 6943 Sec.3(c)(1)(A)(ⅰ)-(ⅱ).
36) H.R. 6943 Sec.3(e)(1).

있는지 여부, 변형적 이용인지 여부 그리고 그 사용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논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손해의 판단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7]

4) 주법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초상·음성·이미지 보호 보장법(Ensuring Likeness Voice and Image Security Act of 2024, 이하 'ELVIS 법'이라 한다)", 일명 엘비스법이 2024년 3월 21일 통과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는 테네시 주의 기존 형법 중에서 개인의 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 소위 "1984 개인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이 본 법으로 개정(대체)된 것이다.

ELVIS 법은 기존 보호 대상이던 성명, 이미지, 초상(Likeness)에 음성을 추가하여 개인의 성명, 이미지, 초상, 음성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특정 개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새로운 형태의 2차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38] 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보호 대상에 추가된 음성은 반드시 사람이 실제로 낸 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통해서 생성되어 생성된 것도 포함하여 특정 개인에 속하거나 특정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음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인의 성명, 이미지, 초상, 음성을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권한 없이 배포, 전송 등을 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39]

뉴욕주는 2021년 디지털 또는 AI 생성물이 개인의 외모, 목소리 또는 연기를 무단으로 재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퍼블리시티권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모사물의 무단 이용을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규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2024년 9월 사망한 사람의 음성이나 모습을 사전 허락 없이 영화나 음악 작품에 디지털 모사물로 생성, 배포, 공표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한 법안을 통과시켰다.[40]

---

37) H.R. 6943 Sec.3(e)(4).

38) Latham & Watkins, "The ELVIS Act: Tennessee Shakes Up Its Right of Publicity Law and Takes On Generative AI," Client Alert, April 8, 2024, available at: https://www.lw.com/admin/upload/SiteAttachments/The-ELVIS-Act-Tennessee-Shakes-Up-Its-Right-of-Publicity-Law-and-Takes-On-Generative-AI.pdf (accessed November 18, 2025).

39) 채은선, "美 테네시주, 「초상·음성·이미지 보호 보장법」(ELVIS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디지털 법제 Brief, 한국자능정보사회진흥원, 2024년 7월 11일 〈file:///C:/Users/%EC%A0%95%EC%A7%84%EC%9A%B0/Downloads/[%EB%B2%95%EC%A0%9CBrief(24-9)]_%E7%BE%8E_%ED%85%8C%EB%84%A4%EC%8B%9C_%EC%A3%BC,_%EF%BD%A2%EC%B4%88%EC%83%81%E2%80%A7%EC%9D%8C%EC%84%B1%E2%80%A7%EC%9D%B4%EB%AF%B8%EC%A7%80_%EB%B3%B4%ED%98%B8_%EB%B3%B4%EC%9E%A5%EB%B2%95%EF%BD%A3(ELVIS%EB%B2%95)%EC%9D%98_%EC%A3%BC%EC%9A%94_%EB%82%B4%EC%9A%A9_%EB%B0%8F_%EC%8B%9C%EC%82%AC%EC%A0%90.pdf, 2025. 11. 18. 최종접속〉.

40) 박유선, "디지털 모사권(Digital Replica Right) 도입을 통한 실연자 보호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제79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24, 377~378쪽.

(2) EU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제4조제1항에서는 '개인 데이터'에 관하여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데이터 주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식별 가능한 자연인은 특히 이름, 식별 번호, 위치 데이터, 온라인 식별자 또는 해당 자연인의 신체적, 생리적, 유전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정체성에 특정한 하나 이상의 요소를 참조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9조에서는 '개인 데이터'를 개인 식별 목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동법 제4조제14항에서는 데이터 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모사물 생성 과정에서 개인의 초상, 음성, 이미지, 동작 등 생체정보가 활용되고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생체정보 처리에 해당하므로 데이터 주체의 사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요하고 있다.

개별 국가의 대응 현황으로 덴마크에서는 AI로 생성된 딥페이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음성, 초상, 신체 이미지 등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개인의 음성, 초상 등 개인을 식별 가능한 신체적 특성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추가하여 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사전 허락 없이 사실적으로 모사하거나 재현한 디지털 모사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 제65a조제1항에서 "실연자의 실연을 사실적으로 모사한 딥페이크물은 해당 실연자의 허락 없이 대중에게 제고오디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 제73a조에서는 "실제와 유사한 디지털로 생성된 개인의 신체적 특징의 딥페이크물은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 대중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덴마크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인적 특성에까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을 확정하여 디지털 모사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41]

41) 이정은, "[덴마크] 딥페이크 규제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저작권동향(2025년 제8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덴마크에서 딥페이크 규제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현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3. 디지털 모사 관련 현행 법률 제도를 통한 실연자 보호

(1) 민법상 인격권을 통한 실연자 보호

우리 민법상 인격권에 근거하여 실연자의 음성, 초상 등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지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민법상 인격권 개념

우리 헌법 제10조제1문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법상 인격권은 이러한 헌법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42] 이러한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성 내지 인격가치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이를 정의하면 "신체·건강·정신·자유·명예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과 인격적 속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그에 대한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모든 권리와 이익들의 총체"라 할 수 있다.[43] 이처럼 인격권은 명예, 성명, 초상, 사적 영역 및 정보 등과 같이 인격과 관련을 맺는 모든 이익에 대한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아주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44]

민법에서 역시 각 개인이 자유롭고 독립한 존재로서 가지는 권리로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 인격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격의 구체적인 형상들이라 할 수 있는 생명·건강·신체·명예·초상·프라이버시·개인정보·성적 정체성 등 다양한 법익에 대한 개별적 인격권을 판례나 학설은 의문의 여지없이 받아들이고 있다.[45]

2) 민법상 인격권을 통한 디지털 모사물 대응 가능 여부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신체, 자유, 명예 등[46]이 침해된 경우 민법 제751조제1항에 근거하여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생명이 침해된 경우에는 민법 제752조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비재산적 손

42) 김재형, "인격권, 그 형성과 전개", 김재형(편), 『언론과 인격권』, 박영사, 2012, 7쪽(1998년 최초 발표).
43) 이재홍, "인격권침해", 곽윤직(편), 『민법주해ⅪⅨ-채권(12)』, 박영사, 2005, 416쪽.
44) 양천수, "인격권의 법철학적 기초-인격권의 구조·성장·분화", 법과 정책연구(제11집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1, 1141쪽.
45) 양창수, 『민법입문(제9판)』, 박영사, 2013, 467쪽.
46) 지원림, 『민법강의(제21판)』, 홍문사, 2024, 1277쪽에서는 인격권과 관련하여 보호 대상을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열거하는 법익들이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도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열거하는 법익들은 제5조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

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초상, 성명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 등 인격권 침해로 인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47] 그리고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역시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민법상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 법원[48]은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디지털 모사를 생성하거나 이용할 경우에는 실연자의 음성과 더불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신체적 특징 중에서도 초상이 중점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음성권, 초상권,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한 디지털 모사 대응 가능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음성권

음성권은 자신의 음성이 허가 없이 녹취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즉, 음성권은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는 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49] 우리 법원은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음성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시한 바 있다.[50]

그러나, 디지털 모사와 관련한 음성권 침해의 경우, 실연자 본인의 목소리가 아닌 기술적으로 재현된 목소리가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성권 침해라 하기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의 입장에서는 실연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자신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임의로 조작되고, 이것이 실연자의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가 된다면 음성권 침해가 될 여지도 있다 할 수 있다.[51] 중국의 사례이긴 하나, 원고의 초상 및 음성과 상당히 유사한 초상 이미

47) 권태상, “인격권 보호체계에 관한 법률적 검토”, 언론중재(Vol. 162), 언론중재위원회, 2022, 14쪽.

48)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판결에서 법원은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 판시하였다.

49) 김용주, “AI 커버곡과 목소리에 대한 보호”, The Journal of Law&IP(제14권 제1호),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2024, 195쪽.

50)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하급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다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6847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나6789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가소114521 판결).

51) 김용주, 앞의 논문, 195쪽.

지와 음성을 활용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여 판촉 활동을 한 사안에서 중국 법원은 딥페이크 영상과 원고의 초상 및 음성 간 유사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실제 원고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의 초상권과 음성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52]

나. 초상권

딥페이크 생성물은 인공지능의 딥러닝에 기반하여 영상과 오디오에 다른 얼굴이나 모습을 합성하고 음성을 넣어 진짜에 가까운 사실적인 다른 영상으로 제작된다는 점에서, 사람의 초상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적 문제의 하나인 초상권의 문제가 제기된다.[53]

초상권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54] 초상권이란 인간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체와 관련한 권리로서 신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다.[55] 우리 법원도 초상권의 개념에 대하여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라 판시하고 있다.[56]

이러한 초상권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크게 촬영거절권, 공표거절권, 초상거절권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 촬영거절권은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공표거절권은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를 의미하며, 초상영리권은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를 의미한다.[57] 따라서, 우리 법상 초상권 침해는 초상 등이 함부로 촬영된 경우, 초상이 동의 없이 공표된 경우 또는 초상이 경제적 이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중국의 판결이기는 하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원고의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노출이 심한 애니메이션 화풍의 이미지로 변형시킨 사안에 대하여 중국 법원은 변형된 이미지가 얼굴·자

52) 백지연, "[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 인공지능 관련 주요 판례(8건) 발표", 이슈리포트(2025-7),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 3~4쪽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54781&pageIndex=1&noticeYn=&brdclasscodeList=&etc2=&etc1=&searchText=&searchkeyword=&brdcl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ALL&nationcode=, 2025. 11. 20. 최종접속〉.

53) 노현숙,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인격권 침해 검토-초상권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제11권 제1호), 언론중재위원회, 2025, 57쪽.

54) 지원림, 앞의 책, 1277쪽.

55) 노현숙, 앞의 논문, 57쪽.

56)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57) 윤기택, "초상권침해의 기준", 한국사회과학연구(제40권 2호),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9, 108~109쪽.

세·외형에서 원고의 형상과 명확히 대응돼 식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SNS 단체대화방에서도 원고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이미지를 노출 이미지로 변형하여 SNS 단체대화방 내에서 부적절한 논의를 유발한 것은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해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으며, 나아가 신체를 왜곡한 이미지를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는 원고에게 모욕감을 주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58]한 바 있다.[59]

다만, 디지털 모사물은 AI 생성물은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적 특성을 추출·조합해 생성된 결과물로 원본 초상을 직접 고정 표현한 복제물로 보기 어렵다. 디지털 모사물은 개인의 음성, 이미지 등 매체에 고정된 권리자의 초상을 직접 복제한 것이 아니라, 학습된 데이터와 AI 모델 알고리즘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로서 새롭게 생성된 표현물이므로 전통적인 초상권 침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다.[60]

다. 명예훼손

빈번한 인격권 침해유형인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이다.[61]

민법상 명예의 관념과 관련하여 인격의 내재적 가치를 말하는 내부적 명예, 인격적 가치의 사회에 의한 승인 또는 평가를 말하는 외부적 명예 및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치판단을 말하는 명예감정의 3가지 관념이 있는데, 불법행위로서의 명예훼손에 있어서 명예의 개념으로는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의 태도였다. 이에, 민법상 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한 주관적인 명예감정의 침해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62]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우선, 피해자 특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의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63] 그리고 사실의 적시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58) 程某诉孙某网络侵权责任纠纷案, 판례 번호 미상.
59) 백지연, 앞의 자료, 6쪽.
60) 박유선,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모사권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38권2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 153쪽.
61) 지원림, 앞의 책, 1281쪽.
62) 이동명,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곽윤직(편), 「민법주해XVIII-채권(11)」, 박영사, 2005, 364~365쪽 참조; 김범진, "명예훼손법상 명예·평판 개념과 그 시사점", 저스티스(통권 제161호), 한국법학원, 2017, 126쪽.
63) 지원림, 앞의 책, 1282쪽.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주관적 평가를 밝히는 의견의 표명, 개진 또는 논평은 사실의 적시와 구별된다할 수 있다.[64]

다만, 우리 법원은 민사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업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65]

3) 민법상 인격권을 통한 디지털 모사물 대응 가능 여부

실연자의 음성이나 초상 등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실연자의 음성권, 초상권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다만, 민법상 인격권을 통한 대응은 침해 후 사후 구제 중심으로 사전의 디지털 모사물 생성을 차단하는 등 사전 차단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디지털 모사물의 생성 혹은 이용에 사용된 음성, 초상 등이 실제 음성, 초상이 아닌 새로운 기술 등에 의해 생성된 것일 경우 즉, 딥페이크, 딥보이스 등의 기술에 의해 제작된 음성, 초상 등이 사용될 경우에는 민법상 음성권, 초상권 침해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연자 관련 단체는 민법상 음성권, 초상권 등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대응은 침해가 발생한 후에나 가능한 후발적 대응으로 침해 발생 이전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으며,[66]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한 대응은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어 실효적 구제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67]

---

64) 지원림, 앞의 책, 1282~1283쪽.

65)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66)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는 디지털 모사물 관련 실연자 보호방안에 관하여 위원회와 진행한 서면 회의에서 민법을 통한 디지털 모사물 관련 실연자 보호 등의 실효적 구제에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그 사유로 침해가 발생한 후에야 손해배상이나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등 사후적 구제에 그친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인 실연자가 직접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고의성,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67)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디지털 모사물 관련 실연자 보호방안에 관하여 위원회와 진행한 서면 회의에서 디지털 모사물 관련 실연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구제의 경우 민법상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는 하나, 사안 발생 시마다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며, 실효적 구제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한 실연자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부정경쟁행위 및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실연자의 음성, 초상 등을 무단으로 활용한 디지털 모사 생성 혹은 이용행위에 대응함에 있어서 성과도용행위를 규제하는 제2조제1호파목 혹은 타인의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제2조제1호타목의 고려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실제 우리 법원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이 지니는 유명성을 제2조제1호파목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로 인정하여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화보집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제제한 바 있다.[68] 다만,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충적 일반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 행위를 적절히 제재하기에 한계가 있어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에 대한 무단사용행위를 별도의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2조제1호타목을 신설하였다.[69]

따라서 이하에서는 제2조제1호타목(이하, '타목'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디지털 모사를 생성하고 이용하는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타목의 입법 취지

부정경쟁방지법은 2021년 법률 개정[70]을 통해 타목에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였다. 타목은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사용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불법상품의 제작·판매 행위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유명성 획득을 위해 상당 시간 투자한 노력에 대한 무임승차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그 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신설되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게 되었다.[71] 현행 재판 실무 등을 고려하여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함으로써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신설되었다.[72]

---

68) 대법원 2020. 3. 26. 자 2019마6525 결정.
69) 채수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의 무단사용행위 규제〉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7846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 3, 2쪽.
70) 법률 제18548호, 2021. 12. 7., 일부개정.
71) 정상조 편집대표,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박영사, 2024, 271쪽(박성호 집필부분).
72) 심현주 외 3인, 「지식재산법 조문별 해설서-부정경쟁장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실용신안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4, 93쪽.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타목의 요건

타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이 요구된다 할 수 있을 것인데, 첫 번째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두 번째로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일 것, 세 번째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일 것, 네 번째로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일 것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첫 번째 요건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과 저명성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개정안 검토보고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는 해당 업계의 종사자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지 여부로서 주지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73]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의미하는 주지란, 어떠한 표지가 해당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동안 형성되어 온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은 일반적으로 유명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74] 즉, 얼굴, 성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 혹은 특정인의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로서, 국내 전역에 연령대와 상관없이 널리 알려진 경우뿐 아니라 일정 지역이나 특정 세대에만 국한되어 알려진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75] 또한,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가치란 유명성을 통해 획득한 고객흡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76]

두 번째 요건인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에는 예시적으로 열거된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뿐만 아니라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로서 인적 식별표지이면 제한 없이 적용이 가능하다.[77] 예컨대 직업 가수의 모자, 선글라스, 수염 등 특징적인 외양과 독특한 행동이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78]

세 번째 요건인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파목[79]의 요건과 공통되는 것으로 우리 법원은 인적 식별표지자와 그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을 가능성이 있는지, 인적 식별표지 사용과 관련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

73) 채수근, 앞의 입법 검토보고서, 7쪽 각주8.
74) 정상조 편집대표, 앞의 책, 274쪽(박성호 집필부분).
75) 특허청,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사항 안내서」, 2022, 10쪽.
76) 채수근, 앞의 입법 검토보고서, 7쪽.
77) 특허청, 앞의 안내서, 8쪽.
78) 정상조 편집대표, 앞의 책, 275쪽(박성호 집필부분).
79)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파목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80] 그 외, 타인의 식별표지 등의 무단 사용이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해하지 않고 정당한 경쟁을 촉진하거나 그 분야의 표준으로서 인적 식별표지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81] 다만, 경쟁관계와 관련하여 반드시 경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으며, 그 범주를 넓게 해석하여 초상 주체가 직접 판매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상품판매의 라이선스를 준 경우라도, 자신의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자와 경쟁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82] 계속해서 자신의 영업을 위한 사용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의 개념을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이 아니고 널리 경제상의 수지계산 위에 서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이더라도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일정한 임대료를 수수하는 등 경제상의 수지계산 위에서 운영되고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83]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은 공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 공익목적을 포함하는 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한 행위라면 경제적 이득의 발생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84] 다만, 이러한 영업은 영리목적 활동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85]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외에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이다.[86]

마지막 요건인 경제적 이익 침해와 관련하여 우선 경제적 이익의 침해가 되는 주체에 관하여 살펴보면, 타목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인적 식별표지의 부당한 이용을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경제적 이익 침해 주체는 인적 식별표지가 사용된 타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

80)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자 2019마6525 결정;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68807 판결.

81) 정상조 편집대표, 앞의 책, 334쪽(박성호 집필부분).

82) 박준석, "인격권과 구별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지에 관한 고찰-최근의 비판론에 대한 논리적 재반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제56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2015, 95~96쪽에서는 인적 식별표지 주체자가 직접 본인의 인적 식별표지를 활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제3자가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으로 활용하여 영업을 행할 경우, 제3자의 행위는 널리 경쟁관계에 있는 인적 식별표지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83) 서울고등법원 2006. 12. 12. 선고 2005나35938 판결.

84) 박경신, "NFT 아트와 유명인의 초상 사용의 허용 범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타목 규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제35권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395쪽.

85) 박준우,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으로(下)-'영업을 위한 사용'과 '공정한 상관행 위반' 및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제66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21, 341쪽에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요건으로서의 '상업적 사용'을 일반조항의 '영업을 위한 사용' 요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며, 영리목적으로 출판한 모델소설에서 유명인의 동일성을 사용하더라도 해당 사용 행위가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부분과 필요불가결한 관계에 있으면 영업을 위한 사용을 부인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비영리목적 또는 공익목적의 캠페인에 유명인의 동일성을 사용하더라도 영업을 위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86) 심현주 외 3인, 앞의 책, 2024, 97쪽.

다.[87] 다만, 그 금지청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는 인적 식별표지의 경제적 가치 등의 성과 구축에 공동으로 기인하였고,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개인은 물론 법인이나 단체(그룹)는 물론 비법인 사단(재단) 등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88] 경제적 이익에는 유형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명성, 업무상 신용, 고객흡입력과 같은 무형의 이익도 포함되며, 그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현실적 혹은 실재적 이익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기대이익이나 잠재적 이익도 포함되는 것으로,[89]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에 비추어 경제나 이익의 개념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90] 다만, 이러한 경제적 이익의 침해는 타인의 인적 식별표지가 갖는 재산상의 손해를 의미하고 정신적인 손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91][92]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타목을 통한 디지털 모사물 대응 가능 여부

위에서 살펴본 요건들을 바탕으로 타목을 통해서 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를 사용하여 디지털 모사를 생성하고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범위 및 그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음성, 초상 또는 특정 실연인을 알아볼 수 있는 특징적인 외향이나 동작 등의 인격표지를 활용하여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하거나 혹은 생성된 디지털 모사물을 이용함에 있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적 식별표지의 주체는 유명인에 한정된다. 따라서, 주지성을 획득하지 못한 실연자의 인적 식별표지 사용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타목의 적용 범위 외에 있다고 할 수 있다.[93]

그 다음으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리 법원은 BTS 화보집 사건[94]에서 연예인의 이름과 시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그 소속사의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인 점을 이유로 통상적인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특정 연예인에 대한 사진 등을 대량

87) 문건영,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타)목 해석의 쟁정 및 금지·손해배상 청구권자”, 산업재산권(제75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23, 264~265쪽 참조.
88) 정문기, “부정경쟁방지법상 유명인의 인적식별표지”, 법학논총(제46권 제4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278쪽.
89) 정문기, 앞의 논문, 278쪽.
90) 심현주 외 3인, 앞의 책 98쪽.
91) 정상조 편집대표, 앞의 책, 276쪽(박성호 집필부분).
92) 최정열·이규호, 「부정경쟁방지법(제6판)」, 진원북스, 2025, 279쪽에서는 경제적 이익의 침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침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면 이로써 경제적 이익의 침해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의 침해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93) 심석찬, “음성 디지털 레플리카의 퍼블리시티권 적용에 관한 비교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8권 제3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5, 15쪽에서는 유명인의 범주와 관련하여 최근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주지성을 갖춘 유명인의 범주를 명확히 확정 혹은 한정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점을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퍼블리시티 보호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94)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마6525 판결.

으로 제작함에 있어 사전에 허락을 구하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상거래 관행이나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실연자의 음성이나 초상 등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디지털 모사를 생성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될 수 있는 AI 커버곡 등에 실연자의 음성을 활용하는 등 디지털 모사물을 제작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도 실연자의 허락을 얻거나 음성, 초상 등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실연자에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허락이나 대가 지급 없이 무단으로 음성, 초상을 활용하여 디지털 모사를 생성 혹은 이용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인적 식별표지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음성, 초상 등의 이용에 대한 대가 등을 지급하지 않고 디지털 모사를 생성하여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하는 등 디지털 모사 생성 혹은 유통 행위 일체를 기계적으로 '영업을 위한 사용'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경제적 대가를 얻기 위한 본인의 영업의 일환으로 실연자의 식별표지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95]

경제적 이익의 침해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경제적 이익의 개념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탄력적으로 해석하되, 정신적 손해가 아닌 재산상 손해에 한정하여 현실적 혹은 실재적 이익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기대이익이나 잠재적 이익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바, 음성, 초상 등의 인적 식별표지 주체인 실연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허락 없이 디지털 모사가 생성되어 이용될 경우 실연자의 실연이 대체되는 등 실연자에 돌아가야 할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96]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타목을 통해서는 유명한 실연자의 식별표지를 해당 실연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디지털 모사를 생성하고 이용하는 행위는 규제가 가능할 것이나 그 외 유명하지 않은 실연자의 음성이나 초상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가 아닌 영리 목적이나 영리 목적 없이 단순히 인터넷상에 유통시키는 행위는 규제할 수 없을 것이다.[97]

---

95) 박경신, 앞의 논문, 395쪽에서도 유명인의 초상을 물리적으로 사영한 NFT 아트가 NFT 거래소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업을 위한 사용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기계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96) 김현숙, "AI 커버곡의 저작권법적 쟁점과 실무적 접근 방안", The Journal of Law&IP(제15권 제1호),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2025, 69쪽에서는 AI 커버곡의 경우 그 콘텐츠가 타인의 성명, 초상, 목소리 등 개인의 고유한 식별 특성을 무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기는 하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얼마나 침해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고, AI 커버곡을 제작한 부정경쟁행위자를 특정하기도 수월하지 않아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이유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I에 의한 음성 등 식별표지 무단 사용의 경우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요건을 보다 넓게 해석하거나 영리목적 사용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에 널리 인식된 자의 음성 등을 무단 사용한 경우에는 일정한 경제적 이익 침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97) 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가 가지는 재산적 이익을 일정한 요건 아래서 보호하고자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타목은 인적 식별표지

(3) 저작권법을 통한 실연자 보호

우리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에 근거하여 실연자의 음성, 초상 등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지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실연자 보호취지

실연자의 보호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녹음·녹화 등의 기술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실연자의 실연을 녹음하여 보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실연자의 실연을 즐기기 위해서는 실연이 행해지는 장소에 있어야 했다. 따라서, 실연자는 극장 등에서 실연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입장료 등을 받으면 되었기 때문에 실연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적 조치 등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연이 행해지는 장소에 있지 않더라도 녹음·녹화물을 통해 실연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실연자의 경제적 지위는 크게 위협받게 되었고, 생실연이 녹음·녹화물로 대체됨으로 인해 실연자의 실연 기회 상실 등의 기술적 실업 문제도 야기되게 됨에 따라, 실연자의 실연에도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해주기 시작하였다.[98][99]

또한, 저작물과 같은 정보의 전달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가수나 연주자와 같은 실연자에게 저작인접권을 인정하여 보호해 주고 있다. 실연자의 경우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노래라고 하더라도 가수의 역량과 창법이나 연주자의 작품 해석 능력과 기량에 따라 이를 듣는 사람의 감흥이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실연을 통한 실연자의 개성 발휘는 저작물의 창작과 유사하거나 이제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실연의 이용태양에 따라서는 실연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될 여지도 있어 우리 저작권법은 실연자에 그가 행한 실연에 대하여 재산권, 보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인격권까지 부여하여 보호해 주고 있다.[100]

자체에 어떤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보호주체가 유명인에 한정되며 일반인은 보호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박성호, "(박성호의 지재공방 98)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애물단지", 법률신문(2024. 12. 4. 기사)〈https://www.lawtimes.co.kr/opinion/203404, 2025. 9. 23. 최종접속〉.

98) 이해완, 「저작권법(제4판)」, 박영사, 2019, 946쪽 참조.

99) 이에, 1928년 베른조약개정 로마회의에서 각국대표에 의해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고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61년 10월 로마에서 인접권 조약 외교회의가 개최되었고, 여기서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Rom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이 체결되었다. 그 외 실연자를 포함한 저작인접권자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과 관련된 논의의 자세한 경위는 박성호, 「저작권법(제3판)」, 박영사, 2023, 373쪽 이하; 이해완, 앞의 책, 946쪽 이하; 半田正夫, 『著作権法概説(第16版)』, 法学書院, 2015年, 260頁이하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100) 박성호, 앞의 책, 376~377쪽 참조.

2) 실연자 의의

우리 저작권법 제2조제4호에서는 실연자에 대하여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 정의 규정에 따라 실연의 범주를 파악함에 있어 중요한 요건은 예능적 방법의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실연에서 예능적 표현은, ① 표현자의 개성이 반영된 해석의 자유 여지가 존재하고, ② 실연자가 그 내적 해석의 결과를 신체적으로 표현하며, ③ 그로 인해 수용자가 정보의 전달을 넘어 지각, 감정, 상상력 등 감각적 인상을 자극받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표현에 대한 해석의 여지와 선택의 자유도가 높을수록(①), 신체적 표현의 숙련도가 높을수록(②), 수용자가 느끼는 감각적 인상의 정도가 높을수록(③) 실연에 해당하기 쉽고, 반대로 갈수록 비실연에 해당하기 쉽다.[101]

실연 중에서 우리 저작권법 제64조제1항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연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실연에 해당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하는 실연,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동법 동조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 동법 동조 동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이 우리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실연에 해당한다. 동 규정에 따라 보호받는 실연을 행한 자는 자신이 행한 실연에 대하여 우리 저작권법상 인접권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3) 실연자 권리

우리 저작권법상 실연자는 자신이 행한 실연에 대하여 인격적 권리로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을 가지며,[102] 저작자 인격권과 동일하게 실연자의 인격권은 실연자 일신에 전속한다. 실연자는 본인의 실연에 대한 재산적 권리로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을 가진고, 방송사업자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이러한 실연자의 권리와 저작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 관계를 음반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하나의 음반에는 ① 작곡자, 작사자인 저작자 ② 가창자, 연주자인 실연자 그리고 ③ 음반제작자의

101) 조영선, "저작권법상 실연 개념에 대한 검토와 재조명", 사법(통권 73호), 사법발전재단, 2025, 604쪽.

102) 실연 행위는 단순한 저작물의 전달 행위가 아닌 저작물을 재해석하는 일종의 창작행위로서 실연자의 인격의 반영물이라는 인식 확산 및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실연이 용이하게 왜곡, 변경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연자에 인격권을 부여하여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실연자의 인격권 보호와 관련한 자세한 경위는 이해완, 앞의 책, 953면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권리가 한데 얽혀 있는데, 이를 건물로 비유하자면 한 장의 음반은 '3층의 권리'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① 작곡자, 작사자인 저작자에게는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하고, ② 가수나 연주자와 같은 실연자에게는 가창한 노래와 연주에 대한 인접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③ 음반제작자는 음을 원반에 고정함으로써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음반에는 ①②③의 세 가지 층위로 이루어진 권리가 중첩하여 존재하며, 따라서 이들 권리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실연자의 권리는 저작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와 구별되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서 독립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용허락 등과 관련된 권리행사를 함에 있어서도 각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03] 즉, 실연자는 자신이 행한 실연에 대하여 저작권자 및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와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실연자는 저작권자, 음반제작자 권리와 관계없이 디지털 모사물 생성 혹은 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실연에 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4) 저작권법을 통한 디지털 모사물 대응 가능 여부

우리 저작권법 제66조에서 제76조의2까지에 따라 실연자는 그의 실연에 대하여 인격권, 재산권 그리고 보상금청구권을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이 미치는 보호범위는 저작권과 달리 실연자가 실제로 행한 실연 그 자체에만 미친다. 따라서, 실연자가 직접 행한 실연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등하여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연자의 권리에 기반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이나, 실연자의 실연이 아닌 음성이나 초상 등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연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127조에서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6조제2항제1호에서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실연자의 인격권 역시 실연 이용과정에서 우리 저작권법 제66조부터 제67조까지 규정하는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서는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는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표시하여

103) 박성호, 앞의 책, 377쪽 참조.

공중에게 제공 또는 제시하는 행위가 실연자의 인격권 침해와 더불어 일반 공중을 기망하여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과 별도로 부정 발행의 죄를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다.[104] 즉, 실연자의 성명이 표시된 실연에 대하여는 성명이 표시된 실연자가 행한 실연이라고 하는 사회적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연자를 사칭한 행위는 이러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다고 보는 것이고, 인격적 권리의 침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법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105] 한편,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위법성이 부정될 여지 또한 있다고 할 수 있다.[106] 우리 법원 역시 본 조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의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판시하였다.[107]

다만,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디지털 모사물의 경우에는 우리 저작권법상 실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디지털 모사물에 실연자의 성명을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 조가 적용될 여지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디지털 모사물 관련 실연자 보호 방안에 대한 제언

(1) 디지털 모사물 관련 실연자 보호 방안 연구 현황

박준우 교수는 “인공지능(AI)이 합성한 실연 보호에 관한 연구(2025)”에서 디지털 모사물 관련 실연자 보호 방안으로 우리의 경우 저작인접권을 통한 실연자 보호 제도가 충실히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실연자 권리인 저작인접권에 기반하여 디지털 모사물[108]로부터 실연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합성 실연을 포함하는 방안이 부담이 된다면

104) 정상조 편,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1333~1334쪽 참조(김형준 집필).
105) 한지영, “저작권법상 성명사칭죄 및 미수범 처벌에 관한 고찰-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제26집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47쪽 참조.
106) 이해완, 앞의 책, 390쪽.
107)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108) 해당 논문에서는 본 보고서의 디지털 모사물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합성 실연’이라 칭하고 있다.

중간 단계로서 저작권법 제124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 '실연 합성 행위'를 '실연자의 권리 침해 간주 행위'로 추가하는 방안도 언급하고 있다.

박유선 교수는 "디지털 모사권(Digital Replica Right) 도입을 통한 실연자 보호에 관한 연구(2024)"에서 인격 표지 주체 허락 없이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하여 이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모사권 도입을 주장하며, 디지털 모사권이 재산적 가치 보호와 인격적 가치 보호 측면을 동시에 지니는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모사권의 법적 성격을 양도가 가능한 재산권으로 보되 재산적 요소와 인격적 요소를 구분하여 재산권과 인격권이 공존하는 복합적 권리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모사권에 관한 연구(2025)"에서는 디지털 모사물 관련 실연자 보호와 관련하여 퍼블리시티권 등 별도 입법을 통한 해결보다는 디지털 모사권을 저작권법 체계 내에서 통합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접근 방법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모사물이 실연자의 초상, 음성, 동작, 실연 등 인격표지의 표현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전제로 저작물 내 구현된 표현 요소에 대한 실연자의 통제권 인정을 통해서 저작인접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현숙 소장은 "AI 커버곡의 저작권법적 쟁점과 실무적 접근 방안(2025)"에서 권리자 동의 없이 개인의 고유한 음성이나 외형을 모사·활용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등 저작권법상 개정 방안 등의 고려가 가능하나, 다만, 이와 같은 방안의 고려에 있어 기존 저작권법의 해석론 적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기술 중립성 원칙과 조화 등을 이유로 저작권법은 보완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 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이라 주장하고 있다.[109]

정진우 선임연구원은 "딥보이스·딥페이크 관련 실연자 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2025)"에서 디지털 모사물을 실연으로 정의한 뒤,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여 생성된 디지털 모사물임을 알면서도 해당 디지털 모사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침해간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 모사물 등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별도의 표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현시점에, 디지털 모사물의 이용행위까지 규제할 경우, 디지털 모사물의 이용행위가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출물 표시 제도 등이 명확히 수립되기 이전에는 디지털 모사물의 이용행위 규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109) 김현숙, 앞의 논문, 68쪽 이하에서 저작권법 개정 이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관련 법률 제정, AI 관련 법률을 통한 규제 및 플랫폼의 역할과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실연자 권리 확보를 위한 입법적 제언

1) 법적 성격

디지털 모사물로 인한 실연자의 기술적 실업 문제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제언에 앞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점이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권리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디지털 모사물에 관한 권리의 창설 등과 관련하여 해당 권리를 실연자의 인격권에 기초한 권리로 파악할 것인지 혹은 재산권에 기초한 권리로 파악할 것인지에 따라 해당 권리의 이용허락, 양도, 사후적 보호 등이 상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모사물과 관련하여 저작인접권이 아닌 실연자(자연인)의 동일성 보호를 통해 디지털 모사물의 생성, 이용 등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미국의 경우 디지털 모사물에 관한 권리의 법적 성격을 재산권의 형태로 프라이버시권의 이익을 보호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110] 이에 따라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나 NO FAKEs Act 등에서는 해당 권리의 라이선스, 이용허락 등은 인정하면서도 생전의 양도는 부정함과 동시에 사후적으로는 상업적 가치가 인정되는 범주 내에서 해당 권리의 존속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해당 권리의 인격적 특성 즉 디지털 모사물이 자연인의 음성, 초상 등의 활용에 기초하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디지털 모사물이 지니는 재산적 특성도 함께 고려한 결과로 보여진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논의는 우리 저작권법상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참고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 체계에서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규율을 논함에 있어서는, 디지털 모사물이 실연자의 실연을 대체함으로써 기술적 실업이나 재산적 이익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한 경제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자가 직접 행한 실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자연인에 의한 모창 등 이른바 '이미테이션 가수'에 의한 실연의 모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법체계를 고려할 때, 디지털 모사물에 관한 권리를 독립된 재산권적 이용권으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이용할 수 있는 성격의 권리로까지 확대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디지털 모사물에 관한 권리의 법적 성격은 재산권적 성격을 중심으로 파악하되, 재산권의 적극적인 행사 범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즉, 우리 저작권법은 실연자가 직접 행한 실연에 대하여 재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실연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연자가 직접 행한 실연이 아닌 기술적 조작 등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 모

110) 박유선, 앞의 논문(주40), 379쪽.

사물에 대해서는 양도나 이용허락과 같은 재산권적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2) 정의 규정 신설

타인의 음성, 초상 등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제작되는 디지털 모사물과 관련하여 실연자의 기술적 실업이나 AI 커버곡 등에 음반제작자 지위가 부여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적 대응 방안 제언을 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디지털 모사물의 범주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111]

디지털 모사물의 범주를 설정함에 있어 실제 실연자가 행한 실연과 구분이 힘든 실연 즉, 실연자의 실연이 대체될 우려가 있어 실연자의 기술적 실업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디지털 모사물로 그 범주를 한정할 경우에는 실연자를 보호하기 시작한 입법 취지와 상응한다는 점에 있어 권리 부여의 정당성 및 기존 법체계를 통한 규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112]

다만, 위와 관련하여 실제 실연자가 행한 실연과 구분이 힘든 디지털 모사물의 범주를 법규정으로 명확히 규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 또한 상당히 주관적이며, 구분이 힘든 사실적 표현의 정도는 기술 발전에 따라 계속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113]

한편, 디지털 모사물의 범주를 실제 실연자가 행한 실연으로 인식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제약 없이 실연자의 음성, 초상 등을 활용해 생성한 모든 디지털 모사물로 확장하여 설정할 경우 그 적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며, 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이점이 있다.[114]

그럼에도, 실연자의 기술적 실업을 야기하지 않는 모든 디지털 모사물 제작 행위에 대하여 규제를 할 경우, 이용자의 자유로운 표현 보호와 이용 충돌 문제 야기 등 일반적 이용행위가 지나치게 통제되고 제한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실연자가 직접 행한 실연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고, 실연자의 예술적 표현 스타일은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는 저작권법상 실연자 보호 방식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기존 저작권법상 실연자 보호 체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저작권법은 자연인의 기술적 재량에 의한 실연의 모방 행위 소위

111) 정진우, “딥보이스·딥페이크 관련 실연자 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 산업재산권(제81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25. 451쪽.
112) 정진우, 앞의 논문, 451~452쪽.
113) 정진우, 앞의 논문, 452쪽.
114) 정진우, 앞의 논문, 2쪽.

‘이미테이션 가수’에 의한 실연의 모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115], 오히려 이미테이션 가수를 또 다른 실연자로 인정하고 그가 행한 모방 실연에 대해서 실연자로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116]

이와 같이 실연자의 기술적 실업 문제에 따른 경제적 지위 약화 등을 이유로 실연자를 보호하기 시작한 입법 취지와 자연인에 의한 모방 실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보면, 디지털 모사물의 범주 역시 실제 실연자가 행한 실연과 구분이 힘든 실연 즉, 실연자의 실연이 대체될 우려가 있어 실연자의 기술적 실업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디지털 모사물로 그 범주를 제한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117][118]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실연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규율해야 할 디지털 모사물의 범주는 그 표현 또는 묘사가 지나치게 사실적이어서 자연인에 의한 실제 실연과 구별이 어려워 실연자의 기술적 실업을 야기시킬 우려가 충분한 디지털 모사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119] 그리고 해당 디지털 모사물의 개념은 대략적으로 딥페이크, 딥보이스 등이나 기술에 기반하여 특정인의 음성, 초상, 동작 등을 묘사하여 생성된 실연으로서 매우 사실적이어서 공중이 음성, 초상, 동작 등이 묘사된 자에 의한 실제 실연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120] 다만,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할 수 있는 기술과 관련하여서는 딥페이크, 딥보이스 등 특정 기술이나 구현 방식에 종속되지 않고, 향후 등장할 새로운 정보처리 기술에 의한 디지털 모사물 생성 등에 대해서도 기술중립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의할 필요가 있다.

3) 디지털 모사물 관련 권리 창설

디지털 모사물로 인해 실연자의 기술적 실업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을 활용하여 디지털 모사물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해당 권리의 주체와 관련하여,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실연자의 음성, 초상, 동작, 실연 등이

115) 우리 법원은 유명 가수의 실연을 모방한 실연에 대하여 원실연과 유사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실연을 모방하였다는 점만으로 원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서울지방법원 1997. 2. 20. 판결 96가단188973 결정).
116) 박성호, 앞의 책, 381면; 이해완, 앞의 책, 959면; 정상조 편, 앞의 책, 792쪽(최정환 집필).
117)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에도 역시 그 권리객체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현재 규율이 필요한 대상은 음악에서의 음성 복제나 실제 인물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비디오나 이미지의 생성과 같이 특정 자연인을 연상시키는 것이 아닌 실제와 구분이 힘든 레플리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US Copyright Office, supra note 2, at 29).
118) 반면, 실연자의 실연을 완전히 대체할 우려가 없거나 위험성이 없는 디지털 모사물이라고 하여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며, 위에서 언급한 수준의 기술적 실업을 야기시키지 않는 디지털 모사물 생성행위와 관련해서는 퍼블리시티권 창설 등을 통한 제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19) 박준우, “인공지능(AI)이 합성한 실연 보호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제38권 제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 80쪽.
120) 정진우, 앞의 논문. 453~454쪽.

사실적으로 모사되고 그 결과 실연자의 실연이 대체될 우려가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디지털 모사물에 관한 권리는 실연자의 기술적 실업 및 재산적 이익 손실 예방이라는 보호 목적에 따라 저작권법상 실연자에게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음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디지털 모사물로 인한 실연자 보호뿐 아니라 타인의 음성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AI 커버곡 등을 제작하는 자에게 음반제작자 지위가 부여되는 문제에 대한 통제 필요성까지 함께 고려하면 본인의 초상, 음성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할 수 있는 권리 창설은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121] 본인의 음성, 초상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할 수 있는 권리를 창설할 경우, 제3자 등에 따른 디지털 모사물의 무단 생성 등으로 인해 실연자의 실연이 대체되는 등의 기술적 실업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122]

그다음으로 생성된 디지털 모사물의 이용과 관련한 복제, 배포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에 관하여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 대상이 되는 그의 실연의 범주를 그의 음성, 초상 등을 활용하여 생성한 인공 실연에까지 확장시키는 방안이나 자신의 음성, 초상 등을 활용하여 생성한 인공 실연에 대하여 복제, 배포 대여 등의 이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방안을 취하든 모두 인공 실연의 이용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123]

다만, 디지털 모사물의 경우 인간의 직접적인 예능적 방법에 의한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감독하는 행위라기 보다는 도구를 조작하는 기술적 처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저작권법상 실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 저작권법은 실연자가 직접 행한 실연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하며, 실제 실연자의 실연과 상당히 유사한 모창 등 스타일의 모방에 대해서는 권리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살펴보면 자신의 음성, 초상 등을 활용하여 자신이 직접 행한 것처럼 묘사한 디지털 모사물에 대해서까지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에 기초하여 재산적으로 이용하여 수익 등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디지털 모사물의 무분별한 생성으로 인한 실연자의 기술적 실업문제 해결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현 상황 및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는 그가 직접 행한 실연에 한정되는 점을 고려하

121) 정진우, 앞의 논문. 454쪽.

122) 정진우, 앞의 논문. 454~455쪽에서는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할 수 있는 권리를 창설할 경우에는 실연자의 기술적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타인의 음성 등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AI 커버곡 등의 음반을 제작하는 행위를 통제할 수 있게 되어 타인의 음성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생성한 AI 커버곡 등의 음반에 대하여 음반제작자로서 지위를 누리는 문제를 상당 부분 제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123) 정진우, 앞의 논문. 455쪽.

여, 디지털 모사물로 인한 실연자의 기술적 실업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디지털 모사물의 생성 외에 디지털 모사물을 재산적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까지 저작권법에서 규율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4) 침해간주 규정 신설

규율 대상이 되는 디지털 모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용 단계마다 용이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할 수 있는 권리를 창설하고, 이용행위에 대한 권리는 창설하지 않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그런데 디지털 모사물에 의한 실연자 보호 측면에서 살펴보면, 디지털 모사물의 생성행위만을 규율하고 이용행위를 전면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것은 실연자의 기술적 실업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할 수 있다.[124]

이에, 디지털 모사물 이용자의 이용행위를 불필요하게 위축시킬 우려를 회피함과 동시에 실연자의 기술적 실업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디지털 모사물 생성에 대한 권리의 침해간주 규정 신설을 통하여 일정 부분 디지털 모사물의 이용행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125]

이에, 기존 저작권 침해간주 규정을 참고하여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디지털 모사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126]

5) 보호기간

디지털 모사물의 권리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모사물에 관한 권리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그 기간도 상이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우리 저작권법상 권리의 법적 성격에 따른 보호기간에 관하여 살펴보면 재산권의 경우 권리자의 사망 후에도 존속하는 반면, 인격권의 경우 권리자의 사망 후에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127] 위에서 살펴본 디지털 모사물에 관한 권리의 법적 성격과 우리 저작권법상 권리의 성격에 따른 보호기간을 고려하여 디지털 모사물에 관한 권리 보호기간을 살펴보면, 디지털 모사물에 관

124) 정진우, 앞의 논문. 456~457쪽.
125) 정진우, 앞의 논문. 457쪽.
126) 정진우, 앞의 논문. 457쪽.
127)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사망 후에도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족은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른 침해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자의 사망 후에도 인격적 이익은 일정 기간 보호된다 할 수 있다.

한 권리를 재산권적 성격의 권리로 파악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사망 이후까지 보호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보호기간은 현행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 존속기간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실연자의 사망 후에도 해당 권리를 인정하는 방안이 해당 규정의 신설에 대한 입법 취지의 측면에서 적절한 것이라 생각한다.

6) 권리제한 규정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할 수 있는 권리의 창설 후, 해당 권리에 대하여도 기존의 권리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적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우리 저작권법 제87조에서는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되는 실연의 이용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에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이용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기존 저작권법의 권리 제한 규정의 경우에는 저작물 혹은 실연의 이용과 관련한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하는 새로운 형태에 대해서까지 기존의 권리 제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다만,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할 수 있는 권리의 창설 및 생성된 디지털 모사물의 일부 이용행위에 대하여 침해 간주 규정을 활용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입법적 제언 내용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생성에 대하여도 일정한 경우 권리를 제한하여 허용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디지털 모사물이 생성되고 난 후에는 그 이용에 대하여 명백히 규제 혹은 통제할 수 없는 구조를 제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할 수 있는 권리 제한에 대한 고려는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디지털 모사물과 관련하여 별도 이용에 관한 권리를 신설하지 않은 이상은 이용행위 중심의 기존 권리 제한 규정을 준용할 필요성 및 새로운 권리 제한 규정의 신설은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

7) 개정안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00. "디지털 모사물"이란 실연자의 음성·초상 또는 그 결합을 컴퓨터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사실적으로 묘사·재현하여 생성된 표현물로서 공중이 이를 해당 실연자가 실제로 행한 실연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제75조(디지털 모사물 생성에 관한 권리)** 실연자는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할 권리를 가진다. **제86조(보호기간)** ①~② (생 략) ③ 디지털 모사물 생성에 관한 권리는 해당 디지털 모사물의 기초가 되는 실연이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기간까지 존속한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 정 안
1. ~ 3. (생 략) 4. 실연자의 허락 없이 생성되었거나, 실연자의 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생성·이용된 디지털 모사물임을 알면서, 이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대여·공연·방송 또는 전송하는 행위

5. 결론

딥페이크·딥보이스 등과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실연자가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실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연자가 직접 실연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준의 '디지털 모사물'이 손쉽게 제작·유통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모사물은 실연자의 명성, 인격적 가치, 경제적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실연 기회의 상실이나 시장가치 훼손 등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고 실연자 권리 보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직접적 규율을 강화하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디지털 레플리카(Digital Replica)를 '개인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지만 허위로 생성·조작된 비디오, 이미지, 오디오'로 정의하고, 이러한 디지털 레플리카의 제작과 유통이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신뢰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방법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 NO FAKES Act 등과 같은 입법 논의는 권리 주체, 보호 범위, 침해 유형, 예외 사유(표현의 자유 등)를 구체화하면서 디지털 모사물 문제를 권리 창설 방식으로 직접 해결하려는 방향을 보여준다. 이는 디지털 모사물이 단순한 윤리적 논쟁이나 산업적 갈등이 아니라, 법제도적으로 명확한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안임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도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규율 가능성을 민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 다양한 법체계에서 검토할 수 있으나, 각각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민법상 인격권(초상권, 음성권, 명예훼손 등)을 통해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는 있으나, 이는 주로 사후적 구제에 의존하는 구조이며 피해자가 침해 사실과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은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 등 경제적 가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할 수 있으나, 적용 범위가 사실상 '유명인' 중심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일반 실연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저작권법상 실연자 권리(저작인접권)는 실연자가 실제로 수행한 실연에 대해 재산권과 인격권을 부여하지만, 디지털 모사물은 '실연자가 실제로 행한 실연'이 아니라 AI가 새롭게 생성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현행 체계만으로는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즉, 기존 법제는 디지털 모사물에 대해 부분적·간접적 대응은 가능하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등장한 새로운 침해 유형을 직접적으로 규

율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확인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디지털 모사물로 인한 실연자 피해 예방을 위한 권리 확보 방안으로서 저작권법 체계 내 입법적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 우선 디지털 모사물에 관한 권리의 법적 성격은, 디지털 모사물이 실연자의 실연을 대체함으로써 재산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적 성격을 중심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이 실연자가 직접 행한 실연에 한하여 재산적 이용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술적 조작 등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 모사물에 대해서까지 재산권의 적극적인 행사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에 따라 디지털 모사물에 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상속과 같은 재산권적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배제하고, 이용허락 역시 독립적인 재산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 처분으로 폭넓게 인정하기보다는, 무단 생성이나 허락 범위를 초과한 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입법적 규율을 위해서는 디지털 모사물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그 범주는 무분별하게 확장되기보다는 실연자의 실연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고도 사실적 모사'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즉, 단순히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정도를 넘어, 공중이 실제 실연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한 수준의 표현물을 규율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한정은 표현의 자유 및 일반적 이용행위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연자 보호의 정당성과 규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권리 내용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모사물로 인한 피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모사물 생성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실연자의 동의 없이 음성·초상 등을 활용해 디지털 모사물이 생성되는 구조를 통제함으로써, 실연자의 실연이 대체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생성행위만 규율할 경우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권리 부여 방식이 아니라 침해간주 규정의 도입을 통해 필요한 범위에서 통제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일반적 활용을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연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호기간은 디지털 모사물 권리의 성격 및 디지털 모사물이 실연자의 실연을 대체하여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해당 권리를 신설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디지털 모사물로 인한 실연 대체 등으로 실연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우려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권리의 존속을 인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제5절 AI 서비스 사업자 책임 제한 방안

1. 서론

(1) AI 서비스의 확산과 콘텐츠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X)의 물결 속에서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했다.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자동 생성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다. 국내의 인공지능 산업은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국내 인공지능 기업의 매출액은 6.3조 원(2023년 5.6조 원), 평균 인공지능 매출액은 30.7억 원(2023년 27.9억 원)으로 추정이 되며,[1] 2027년까지 시장 규모가 4.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는 등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2]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혁신의 이면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특히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이 필수적인 자원으로 존재한다. 인공지능 모델,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LLM)과 이미지 생성 모델은 수십억 개에 달하는 기존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패턴과 구조를 학습한다. 이 학습 데이터의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콘텐츠 산업이다. 한국의 콘텐츠 산업은 2023년 기준 매출액 154조 원, 수출액 133억 달러를 기록하며 K-콘텐츠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치고 있으며, 그 자체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닌 국가 전략 산업이다.[3] 콘텐츠 산업의 성장은 양질의 저작권 자산을 축적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역설적이게도 근래에 와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풍부한 '학습 자료'의 원천으로서의 그 가치가 인정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 두 핵심 성장 산업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동시에 충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 산업은 콘텐츠 산업이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는 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이를 대체하게 될 경우, 콘텐츠 창작자의 경제적 기반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콘텐츠 산업의 보호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저작권 법제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4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 2025, 48쪽.
2) https://zdnet.co.kr/view/?no=20230427153507.
3)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2025, 66쪽, 74쪽.

(2) 새로운 저작권 침해 패러다임의 등장

생성형 인공지능은 단순히 기존의 저작권 침해 유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침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고 있다. 과거의 저작권 침해가 주로 이용자 간 파일 공유(P2P)나 웹하드 등 플랫폼에 이용자가 직접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발생했다면, 인공지능으로 인한 침해는 그 발생 원인과 과정, 규모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첫째, 침해의 자동성 내지는 시스템성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용자의 간단한 명령어(Prompt) 입력만으로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물을 순식간에, 그리고 대량으로 생성해 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상당 부분 개별 이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서비스의 설계 자체에 내재하는 구조적인 부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둘째, 침해의 다단계성이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는 단일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 ① 인터넷상의 방대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수집(Scraping)하여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단계, ② 이 데이터셋을 인공지능 모델에 입력하여 학습시키는 단계, ③ 학습된 모델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단계 등 여러 단계에 걸쳐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그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한 이용자,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아니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한 개발자 중 누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가? 법인격이 없는 인공지능 자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인공지능 공급망에 관여한 인간 행위자들의 책임 분배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권리자는 실효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고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는 예측 불가능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2. AI 생성 콘텐츠의 책임 귀속 문제 및 저작권법 적용 가능성

(1)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책임 귀속의 불명확성

우선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했을 경우,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그 책임 주체를 명확히 특정하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작동 방식이 기존의 법적 책임 원리와 잘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저작권 침해 법리에서 침해 행위자는 '인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 결과물의 경우, 침해 과정에 여러 주체가 복합적으로 관여한다. 첫째,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시킨 '인공지능 모델 개발자'가 있다. 둘째, 이 모델을 활용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가 있다. 셋째, 특정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명령어를 입력한 '이용자'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생성행위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자체가 있지만, 현행법상 인공지능은 법인격이 없어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다층적인 행위자 구조는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든다. 기본적으로 이용자는 단순히 몇 개의 단어를 입력했을 뿐이므로 복잡한 침해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묻기에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 또한, 수많은 이용자를 상대로 권리자가 일일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책임은 인공지능 개발자나 서비스 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이들의 행위가 직접적인 복제·전송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처럼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은 권리자의 권리 구제를 어렵게 만들고,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들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법적 리스크로 작용한다.

(2) 저작권법상 OSP 책임 제한 규정

이러한 배경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에게 현행 저작권법상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 책임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우리 저작권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면책 조항, 이른바 '세이프 하버' 규정(Safe Harbor)을 마련하고 있다.

규정의 입법 취지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정보 유통 플랫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 있다. 만약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들이 올리는 모든 정보의 적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쇄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용자 상호 간의 의사 교류를 통한 자아실현이나 정치적 여론형성집단으로서의 기능 또한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4] 즉,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해 줌으로써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5]

당초 미국에서 1998년 제정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DMCA)에 OSP가 유형별로 일정 요건 하에서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4) 박성호, 『저작권법』, 제3판, 박영사, 2023, 712쪽.
5) 오승종, 『저작권법』, 제6판, 박영사, 2024, 1538쪽.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는데, 이후에 해당 규정은 유럽에도 영향을 주어 2000년 제정된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에도 유사한 내용의 면책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다.[6] 우리나라는 2003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처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도입한 이래, 한·미 FTA와 한·EU FTA가 체결되면서 2011년에 이르러 미국의 DMCA,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의 각 규정을 반영한 현행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제한 규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7]

우리 저작권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한다(법 제2조제30호).

가목의 경우에 대해서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가, 나목의 경우에 대해서는 캐싱 서비스와 저장 서비스, 정보 검색 도구 서비스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며,[8] 이는 현행 저작권법 제102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유형 및 각 면책 요건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당초 2003년 저작권법(법률 제6881호)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그에 대한 책임 제한도 모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으나,[9] 2011년 저작권법(법률 제10807호) 이후로는 현행 저작권법 제2조제30호 가목까지 개념 범위가 확대되었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유형 또한 세분화하여 각각의 면책 요건을 규정하게 되었다.

그 첫 번째 유형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단순 도관(Mere Conduit)으로도 불리며,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 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 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법 제102조제1항제1호).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 통신을 하기 위하여 서버까지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서 망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10]

---

6) 이해완, 『신저작권법입문』, 박영사, 2024, 641쪽.
7) 위의 책, 642쪽.
8) 최경수, 『저작권법 개론』, 제2판, 한울아카데미, 2023, 591쪽.
9) 참고로 2006년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8101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일부 문구가 변경된 바 있다.
10) 임원선, "한·EU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해설", 『계간 저작권』, 제24권 제3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137쪽.

'캐싱 서비스'[11]는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 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 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102조제1항제2호). 즉,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망이나 서버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콘텐츠를 중앙서버와 별도로 구축된 캐시 서버에 자동적으로 임시 저장함으로써 이용자가 캐시 서버를 통해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칭한다.[12]

한편, '저장(호스팅) 서비스'는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로서(법 제102조제1항제3호), 인터넷 카페, 블로그, 웹하드 등 일정한 자료를 하드 디스크나 서버에 저장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말한다. 그리고 '정보 검색 도구 서비스'는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를 의미하고(법 제102조제1항제3호),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의 검색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13][14]

현행 저작권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각 유형별 면책 요건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5]

온라인 서비스 유형 / 책임 면제 요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캐싱 서비스	저장 서비스	정보 검색 도구 서비스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할 것[16]	○	○	○	○
저작물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할 것	○	○	○	○
저작권등에 대한 반복적 침해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할 것	○	○	○	○

11) 여기서 말하는 캐싱(Caching)은 정보처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주 이용되는 디지털 정보를 캐시(Cache)라 불리는 저장공간에 임시적으로 저장한 후에 이를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보의 원래 출처로 다시 가지 않고 임시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이루어지는 캐싱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2012, 56쪽.

12) 임원선, 앞의 논문, 137쪽.

13) 위의 논문, 138쪽.

14) 원래 저장 서비스와 정보 검색 서비스는 호를 달리하여 면책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년 개정된 저작권법(법률 제16933호)에서는 정보 검색 서비스에 관한 제4호를 삭제하고 제3호로 규정을 통일하였고, 현재 저장 서비스와 정보 검색 도구 서비스 간에는 그 면책 요건에 차이가 없게 되었다. 이는 본래 정보 검색 도구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서비스와 구분할 실익이 없음에도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었던 것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정보 검색 도구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송신을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 이외에 3가지의 요건(저작물등이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할 것,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이용한 기술조치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않을 것)을 추가로 필요로 하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2020, 59쪽.

15)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2012, 57~59쪽. 이하 각 요건에 대한 설명은 본 해설서 내용에서 인용.

16) 공통된 면책 요건으로서 '저작물 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그다음으로 제시되는 '저작물 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업로드 및 다운로드의 매개자 역할만 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온라인 서비스 유형 / 책임 면제 요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캐싱 서비스	저장 서비스	정보 검색 도구 서비스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표준적인 기술조치[17]를 권리자가 이용 시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할 것	○	○	○	○
저작물등을 수정하지 아니할 것[18]		○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 저장된 저작물등의 접근을 허용할 것[19]		○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가 명시한 저작물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복제·전송자가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규칙을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20]		○		
저작물등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21]		○		
본래 사이트의 저작물등이 삭제되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대해 저작물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할 것[22]		○		
침해행위에 대한 통제 권한과 능력이 있을 시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할 것[23]			○	○
침해행위 인지 시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할 것[24]			○	○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할 것[25]			○	○

17) 구체적으로 특정 기술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조건(저작재산권자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견일치에 따라 개방적이고 자발적으로 정하여질 것,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온라인서비스 제공 관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아니할 것)을 충족하는 것이면 무방하다.

18) 캐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캐시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수정하지 않은 경우.

19) 원래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원래 사이트에 이용료의 지불 또는 암호나 그 밖의 다른 정보의 입력에 기초한 조건 등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캐시 서버에 접근을 허용한 경우.

20) 저작물 등의 현행화에 관한 '데이터통신규약'의 예시: HTTP 프로토콜, Internet Cache Protocol 등. 예외에 해당하는 예시: 캐싱 운영자에게 10초마다 현행화시키는 규칙을 정한 경우 등.

21) 예를 들어, 광고수익을 위한 Hit Count를 원래 사이트로 돌리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은 경우.

22) 복제·전송 중단요청으로 원서버에서 자료가 삭제되거나 접근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명령을 받아 삭제된 경우, 캐시서버에서도 이를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경우.

23) 저작물에 대한 통제 권한이 있는 저장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용료, 전송속도 상향, 전송속도에 따른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직접적인 금전적인 이익이나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24)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실을 직접 알게 되거나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25) 불법복제물에 대한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는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개인정보관리책임자와 유사하게 저작권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지).

저작권법 제102조제1항에서 정하는 면책 요건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법 제102조제2항).[26] 그리고 제102조제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법 제102조제3항).[27]

결국 저작권법 제102조제1항에서 정하는 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유형에 따른 각각의 면책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이거나, 또는 제10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위 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103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주장자의 중단요구를 받아 복제·전송 등 중단 조치를 취한 경우에 대한 면책 규정으로서, 이른바 통지 및 삭제(Notice and Takedown) 조항으로 불린다. 해당 규정 역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유형에 따른 진행 절차에 관해 별도로 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에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제외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 유형의 경우에는 단순히 인터넷 접속만을 제공하므로 침해 주장의 통지를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유형의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28]

해당 규정에 의하면, 권리주장자는 권리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복제·전송 중단요구를 받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만 한다(법 제103조제1항 및 제2항). 저장 서비스, 정보 검색 도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캐싱 서비스의 경우에는 침해 주장의 통지 내용이 원 서버에서 지워진 자료를 캐시 서버에서 그대로 올려져 있는 것을 내려 달라는 것(삭제)이어서 복제·전송자에게 이를 통보할 필요가 없다.[29]

---

26) 관련해서 대법원은 '금칙어 설정' 또는 '해시값 등록·비교'를 통한 필터링 방식과 같은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그 당시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최선의 조치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기술적 조치 자체도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복제·전송을 선별하여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27) 이는 저작권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유형별 면책요건만 갖추면 되고 그와 별도로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는 않음을 주의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이해완, 앞의 책, 655쪽).

28)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한·EU FTA 이행 개정 저작권법 해설」, 2011, 18쪽.

29) 위의 해설서, 18쪽.

동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03조제3항).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이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103조제5항). 한편,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법 제103조제6항).[30]

한편, 저작권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법 제103조의2),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법 제103조의3), 그리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등(법 제104조)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특히,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2006년 신설된 것으로, P2P·웹하드 등의 불법복제로 인한 영화·음악 등 문화산업의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해당 서비스업체에 불법저작물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필터링)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이 되었다.[31]

해당 규정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

30) 이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에서는, "저작권법 제103조제1항에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는 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의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가 없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침해될 권리 자체가 없었던 경우는 물론 침해될 권리가 있더라도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저작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경우도 정당한 권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1) 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개정 저작권법 해설」, 2007, 39쪽.

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만 한다(법 제104조제1항).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 해당 고시 내용에 따르면,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3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3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34]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간주된다.[35]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는 저작물 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그에 따라서 인지된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 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과 같은 조치들을 지칭한다(시행령 제46조제1항).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와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할 경우 즉시 이행해야만 한다(시행령 제46조제2항).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현재 해당 업무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법 제104조제3항 및 제4항, 시행령 제46조제3항).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법 제142조제1항).

다만, 여기서 말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도 앞서 설명한 저작권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고, 이 규정에 따라서는 기술적 조치를 이행할 행정적 의무만 별도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36]

---

32)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 제공 예시: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사이버 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자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경우.

33) 비용 지급 예시: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34) 상업적 이익 예시: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 사이트 회원 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35)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3호(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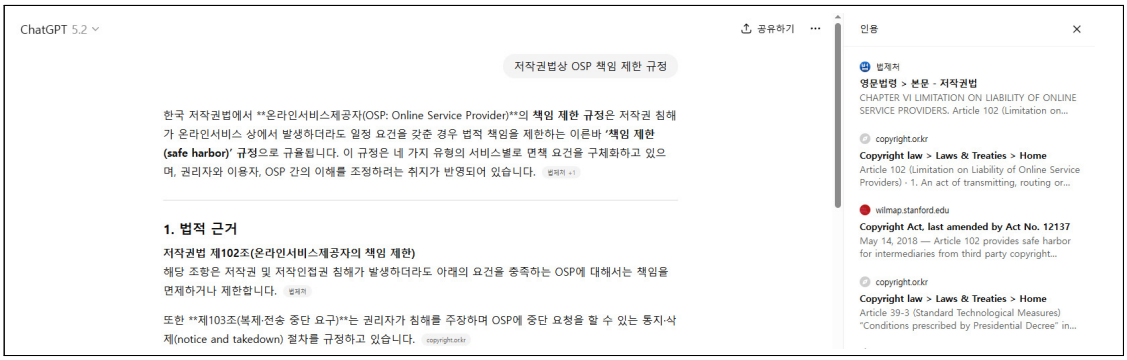
36) 허희성, 『2011 신저작권법 축조개설』, 명문프리컴, 2011, 549쪽.

(3) AI 서비스 사업자의 OSP 해당 여부

사실상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사업 주체가 우리 저작권법상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사업자의 게시판 등에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 등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37]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서는 저작권법상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렵다.[38]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근래 많이 활용되는 인공지능 서비스 상당수는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검색 증강 생성) 기술 등을 접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바, 이는 일반적인 언어 모델의 답변 내용에 대한 출처로 또는 브라우저에 부가된 기능의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일반적인 정보 검색 도구는 섬네일이나 일부 내용 제공을 통해 저작물 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그 자체, 즉 매개적 행위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나 인공지능 서비스에 부가된 형태의 검색 기능은 단순히 답변에 대한 출처로서 기능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 지칭하는 정보 검색 도구는 해당 기능이 주된 목적으로 기능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서비스 방식 또한 특정 유형에 국한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바,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 및 그에 기반한 정보 제공 방식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가 웹 검색을 기반으로 답변 내용을 제공하고 관련된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한도 내에서는 현행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정보 검색 도구 서비스 제공자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ChatGPT 답변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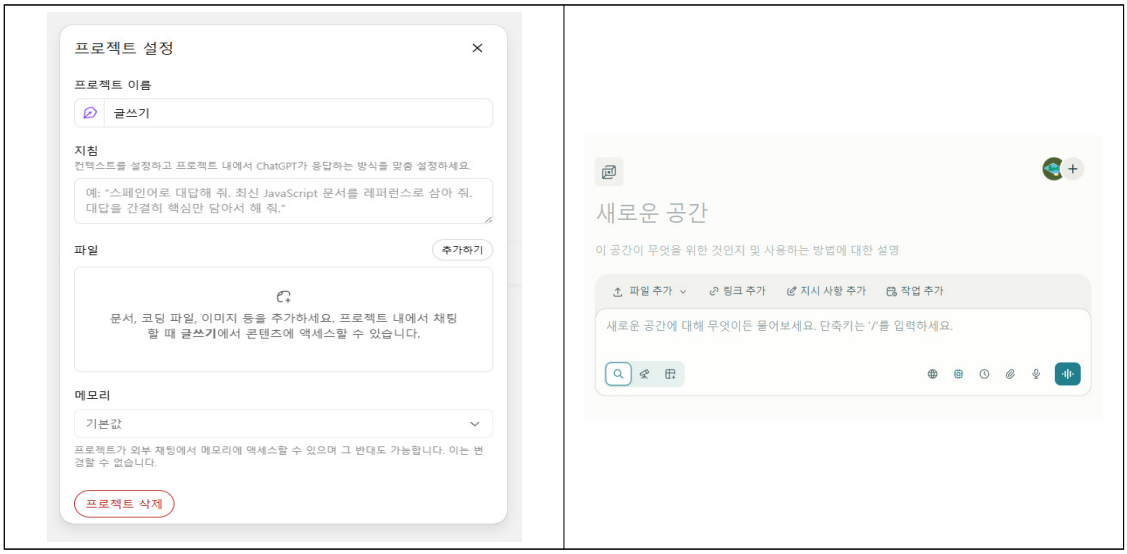
37) 유계환·김윤명,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 IP Focus, 제2024-06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4. 4. 29., 21쪽.

38) Ibid. 해당 보고서에서는 정보 검색과 연계된 서비스 방식이라는 점에서 OSP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AI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용행위에 대한 면책 주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한편, 상당수의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소스 내지 참고 자료로서 활용하도록 저작물 등을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용자가 생성한 인공지능 결과물을 저장하여 언제든지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하거나 편집한 결과물을 다수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39]

물론 기존의 저장 서비스 유형에서와 같은, 해당 콘텐츠를 직접 감상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감상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저장 행위로 보기 어렵고, 주로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소스로써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40] 또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산출물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저작권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규정에서 말하는 '저작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겠으나, 프롬프트 입력 방식 등 인공지능 결과물 생성 과정에 따라서는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41]

〈 ChatGPT의 프로젝트(Projects) 기능과 Perplexity의 스페이스(Spaces) 기능[42] 〉



39) 관련된 사례로 Perplexity의 페이지(Pages)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https://www.perplexity.ai/ko/hub/blog/perplexity-pages 참고.

40) 정보 검색 도구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1유형으로서의 저장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 목적이나 방식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41) '인공지능 산출물'과 '인공지능 결과물' 개념의 구분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025. 6. 30., 12쪽 참고.

42) 위 기능들을 통해서 이용자는 원하는 결과물 도출을 위하여 관련된 자료들을 직접 업로드하거나 해당 자료들이 게시된 링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는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더라도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가 저장 서비스 또는 정보 검색 도구 서비스 제공자로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한도 내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항변 사유로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을 원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AI 서비스 사업자의 OSP 지위에 대한 분석

(1) AI 서비스 사업자의 유형 분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의 생성 및 매개·전달 등 콘텐츠가 시장에서 소비되는 과정에서 각 사업자의 역할 등을 감안한다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 사이에 일정한 간극이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오늘날에 와서는 인공지능이 접목되지 않는 산업 분야를 찾기가 어렵고, 각 분야별로 다양한 형태로 인공지능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저작권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이 적용 가능한 상황과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입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 반영되어야 할 각 요소들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 분배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잡한 인공지능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자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단일한 기준으로 규율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각 유형의 기술적 특성과 사업 모델, 그리고 저작권 침해에 기여하는 역할과 통제 수준을 고려한 차등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

OpenAI, Google, Anthropic 등과 같이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나 이미지 생성 모델 등 범용 인공지능 모델(General-Purpose AI Model)을 직접 개발하고 학습시키는 사업자이다. 이들은 인공지능 공급망의 최상단에 위치하며, 이들이 개발한 모델은 다양한 응용 서비스의 기반이 된다.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은 주로 학습 단계에서 발생한다. 인터넷 등에서 수집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등의 행위가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 이들은 학습 데이터의 수집, 정제 등 학습 과정 전반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통제력을 행사한다.

2) 응용 서비스 제공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모델 개발자가 제공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을 활용하여 특정 목적에 맞는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이들은 B2C(Business-to-Consumer)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B2B(Business-to-Business) 형태로 다른 기업에게 솔루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법률 문서 초안 작성 AI, 마케팅 문구 생성 AI, 교육용 챗봇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특정 분야에 맞게 미세조정(Fine-tuning)하거나 독자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의 책임은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의 잠재적 침해 문제 이외에도 자신들이 제공하는 응용 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과 그 산출물로 인해 발생하는 침해 문제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3) 통합 서비스 제공자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능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결합한 검색 엔진(예: Google AI Overview),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오피스 소프트웨어(예: Microsoft Copilot) 등이 있다.[43] 이들은 전통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정보 검색, 콘텐츠 생성 도구 제공 등)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특히, 검색 기능과 결합될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의 정보를 수집하여 답변을 생성하도록 하는, 이른바 RAG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구분의 방식은 임의적인 것으로서 각 범주 간 경계가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44] 같은 사업자가 여러 유형에 동시에 해당될 수도 있다.[45]

(2) 전통적인 OSP와 AI 서비스 사업자 간 기능과 역할에 대한 비교

이러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의 유형을 현행 저작권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유형(단순 전송, 캐싱, 저장, 정보 검색)과 비교를 해 본다면 그 기능적 측면에서의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

43) 그 외에도 이미지 편집 툴에 AI 생성 기능을 통합한 Adobe Firefly나 메모 및 문서 관리 도구에 글쓰기 보조 AI를 결합한 Notion AI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독자적인 챗봇 서비스와 달리 기존 서비스의 지배력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 방식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4) 예를 들어, 응용 서비스 제공자가 API를 쓰더라도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대량으로 추가 학습(Fine-tuning)시켜 모델의 속성을 상당히 변형한 경우 등이라면 이를 단순한 응용으로 볼 것인지 모델 개발로 볼 것인지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

45) OpenAI나 Google과 같은 기업들은 1) 파운데이션 모델도 만들고, 2) 그것으로 B2C 챗봇(ChatGPT)도 운영하며, 3) 검색 엔진에도 접목을 하고 있다.

각 주체의 기능과 역할을 비교하여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분류	세부 유형	핵심 기능 및 역할	콘텐츠 관여도 및 특성	주요 저작권 쟁점
전통적인 OSP	단순 전송, 캐싱	• 저작물 유통의 단순 매개 및 통로	[소극적·중립적] • 콘텐츠의 내용에 개입하지 않음 • 원본 그대로 전달·저장	• 이용자의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 • 책임 제한 규정(Safe Harbor) 적용 여부
	저장, 정보 검색	• 게시 공간 제공 및 정보 위치 검색 지원		
AI 서비스 사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	• 대규모 데이터 수집 및 학습 •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배포	[능동적·원천적] • 학습 데이터의 수집·정제·가공 • 결과물 생성 알고리즘 통제	• 학습 단계: 무단 복제 등 침해 책임 • TDM 면책 여부
	응용 서비스 제공자	• API 활용 및 특정 목적 서비스 구현 • 미세조정 및 UI 결합	[맥락적·파생적] • 이용자 프롬프트에 따른 결과물 생성 • 특정 분야(법률, 마케팅 등)에 특화	• 산출 단계: 기존 저작물과의 유사성 • 최종 이용자와의 책임 분배
	통합 서비스 제공자	• 기존 서비스에 AI 결합 • RAG 기술 등 활용	[복합적·확장적] • 정보 검색과 콘텐츠 생성을 동시 수행 • 실시간 정보 요약 및 재구성	• 통합적 이슈: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 침해 소지 • 공정이용(Fair Use) 해당 여부

기본적으로 모든 유형의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는 콘텐츠의 생성 및 가공 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이는 이용자의 행위에 대해 간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라고 할 수 있다.[46]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기존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율 방식과 동일선상에서 파악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차이점을 간과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들 각각에 대해서는 각 사업자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6)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에 따르더라도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이 제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여 입력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 수혜자에게 새로운 결과물을 반환하므로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고 단순히 전송하는 것이 아닌바, 단순 도관 및 캐싱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서 그와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혜자가 제공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해당 서비스의 필수적인 요소여야만 하며, 중립적이고 수동적이며 단순 기술적 성격을 가질 것을 요하는 호스팅 서비스로 간주하는 것 또한 어렵다고 할 것이다. Jennifer Cobbe & Jatinder Singh,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Service: Legal Responsibilities, Liabilities, and Policy Challenges”,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Vol. 42, 2021, pp.39~40.

(3) OSP 책임 제한 법리 적용에 있어서의 한계점

저작권법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 제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한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현행 저작권법상의 규정을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과 사업 모델이 기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제한 규정이 전제했던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각 사업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점

첫째, 각 사업자의 역할과 기능상의 차이점이다. 전통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생성하고 게시한 콘텐츠를 저장하고 보여주는, 일종의 수동적 중개자의 역할에 가깝다. 이들은 콘텐츠의 내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단지 플랫폼을 제공할 뿐이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을 받아 능동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모델은 사전에 학습한 방대한 데이터를 조합하고 변형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 처리 과정을 거친다. 즉,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는 단순 중개자가 아니라, 침해 결과물 생성에 깊숙이 관여하는 적극적 행위자 또는 공동의 제작자에 가까운 지위를 갖는다.[47]

이러한 본질적 차이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제한 법리의 근간을 흔든다. 해당 규정의 취지는 서비스 제공자를 제3자인 이용자의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의 경우, 침해적 결과물은 순수한 '이용자 생성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가 아니라,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가 설계하고 학습시킨 시스템과 이용자의 요청이 결합하여 만들어 낸 '시스템 생성 콘텐츠(System Generated Content)'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의 행위(모델 설계 및 학습)가 침해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므로,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책임 문제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48]

---

47) Gabriel Ernesto Melian Pérez, "From Curators to Creators: Navigating Regulatory Challenges for General-Purpose Generative AI in Europ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Technology and E-Commerce Law, 16(2), 2025, p.211; Kavya Mohan & Jansi S, "Determining due diligence principles to enable safe harbour protection for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Publication and Reviews, 5(11), 2024, p. 5391; Yang Lin & Taorui Guan, "From safe harbours to AI harbours: reimagining DMCA immunity for the generative AI era",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20(9), 2025, p.608.

48) 사람이 수행하던 작업에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위험 통제의 전환을 초래하는바, 자동화(Automation)는 그 통제권을 사용자로부터 제조업체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오늘날 학습 능력의 등장(Advent of Learning Ability)으로 인해서 통제권의 일부는 또한 프로그래머에서 트레이너(제조업체일 수 있으나 별개의 주체일 수도 있음)로 이전된다고 할 수 있다. IT 시스템 훈련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1차 및 2차 시장과 같은 새로운 가치 사슬의 출현은 이후 새로운 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이 데이터로 인하여 새로운 잠재적 책임 주체들도 등장함을 의미한다. Herbert Zech, "Liability for AI: public policy considerations", ERA Forum, Vol. 22, 2021, p.149.

둘째, 통제 및 인식 수준의 차이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제한 규정의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서비스 제공자가 시스템상 유통되는 방대한 정보의 불법성을 사전에 모두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는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종류와 출처, 모델의 작동 방식, 그리고 생성될 수 있는 결과물의 유형 등에 대해 전통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통제력과 예견 가능성을 가진다. 물론 모든 결과물을 100% 예측하고 통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켰을 때 어떤 유형의 침해적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상당한 수준에서 기술적 통제 또한 가능하다고 본다.[49]

따라서 수동적이고 중립적인 중개자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에게 무비판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는 오히려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에게 과도한 면책을 부여하여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사업자에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노력을 게을리 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2) 각 사업자의 침해 양상에 있어서의 차이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을 논하는 근거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간접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 면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안전한 저작물 등의 유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즉, 현행 저작권법상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제한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직접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며 해당 행위에 대해서까지 면책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50] 모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책 요건을 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02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은 스스로 특정 저작물 등의 송신을 시작하거나 선별하는 역할을 맡은 경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침해 행위로 보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가 있다.[51]

관련해서 직접 침해와 간접 침해 간의 구분 기준 등이 논의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직접 침해라 함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 이용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간접 침해는 직접적인 이용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침해

49) 특히, 사전 학습 과정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는 저작물 사용 여부에 관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스캔하고 분석하여 무단 활용된 저작물을 식별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필터링할 수 있는 도구와 알고리즘 등을 적용할 수 있다. Yue Yang, "The Study of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Lecture Notes in Education Psychology and Public Media, 34(1), 2024, pp.91~92.

50) 박성호, 앞의 책, 714~715쪽.

51) 이해완, 앞의 책, 647쪽.

책임을 지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52] 다만, 직접적인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규범적인 관점에서 직접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인데, 우리 법원은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이 사건 복제행위를 포괄적으로 의도하고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행위를 전체적으로 통제 및 관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복제행위의 주체는 피고"라고 하여 직접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53][54]

이러한 전제하에서 전통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의 침해 양상을 비교해 보면, 양자는 저작물 이용의 시점과 방식, 침해 결과의 발생 구조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를 가진다.

첫째, 침해 발생의 원인 및 시점에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저작권 침해는 주로 이용자가 저작물을 업로드하거나 공유하는 시점에서 발생한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그 침해 행위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며, 침해 여부 또한 이용자의 행위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은 침해 사실에 대한 인지 이후의 조치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된다. 반면,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저작권 침해는 단일 시점이 아닌 복수의 단계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한다.[55] 구체적으로는 학습 데이터 수집·이용 단계, 모델 학습 단계, 결과물 생성 단계, 결과물의 저장·공유 단계 등에서 각각의 저작물 이용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학습 단계의 경우 이용자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성격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간접 침해와 명확히 구별된다.[56]

둘째, 저작물 이용 방식과 침해 양상에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는 기존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전송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침해물은 원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며 침해 여부 또한 비교적 명확하다. 한편,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의 침해는 대체로 저작물의 직접적 복제라기보다, 학습된 저작물의 표현 요소가 결과물에 재현·변형되어 나타나는 형태로 발생한다. 다수 저작물이 혼합·재구성된 형태로 산출되기 때문에 침해 판단이 복잡해지며 실질적 유사성 판단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여부

52) 이해완, 앞의 책, 609~610쪽.
53) 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86722 판결.
54) 서울고등법원 2005. 1. 25. 선고 2003나80798 판결에서는 P2P 방식의 파일공유 시스템에 대해 제3자와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제1항)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해당 사안에서는 협의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정도로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그 침해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직접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방조 책임은 인정한 사례).
55) Bingjie Xiao, "Reimagining Safe Harbors: A Systematic Review of Liability Frameworks for Generative AI". Lecture Notes in Education Psychology and Public Media. 121(1), 2025, p.56.
56) Yue Yang, op. cit., pp.91~92.

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다. 이러한 침해 양상은 기존의 불법복제물 유통 중심의 온라인 침해 모델과 질적으로 다르다.[57]

셋째, 침해 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와 통제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침해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전제되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 제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반면,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는 침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통제력과 예견 가능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결과물의 생성 과정은 사업자가 설계한 시스템 내부에서 이루어지며 이용자의 프롬프트는 그 작동을 위한 촉발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침해 발생의 원인을 단순히 이용자의 귀책으로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사업자의 기술적·조직적 선택에 따른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넷째, 침해 책임의 귀속 및 규범적 평가에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침해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귀속되고, 서비스 제공자는 일정 요건하에서 방조 책임 또는 관리 책임만이 문제된다. 그러나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에는 저작물 이용행위가 서비스 제공 과정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상당한 경우 직접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규범적인 관점에서 직접 침해의 주체로 평가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58]

이와 같은 차이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의 양상은 단순히 기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 구조를 확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새로운 유형의, '시스템에 기반한' 저작권 침해 구조로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4) RAG 기술의 특수성

한편,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RAG 기술은 저작권법적으로 보다 민감하고 복잡한 쟁점을 발생시킨다. RAG는 기존의 LLM 모델의 한계로 주로 지적되었던 정보 부족(또는 지식 단절), 환각(Hallucination) 문제 등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기술로서, RAG 모델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여 LLM에 전달하는 방식을

57) 보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전통적인 OSP의 침해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의 불법 공유 형태가 주를 이루므로 OSP에 적용되는 '통지 및 삭제 시스템'은 특정 파일이나 URL 등을 지목하여 삭제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으나 AI가 생성하는 결과물은 요청 시마다 실시간으로 생성되며 저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권리자가 사전에 특정 복제물을 지목하거나 삭제 요구를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즉, 동적으로 생성되는 AI 결과물에 전통적인 통지 및 삭제 절차를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제대로 적용을 하더라도 과잉 또는 과소 차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Yang Lin & Taorui Guan, op. cit., p.609.

58)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의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개발자 및 제공자에 대해서 간접 침해 책임을 넘어 직접 침해 책임의 인정 가능성을 긍정하는 견해로, Eleonora Rosati, "Infringing AI: Liability for AI-Generated Outputs under International, EU, and UK Copyright Law". European Journal of Risk Regulation, 16(2), 2025, p.604 참고.

활용, 제공된 정보를 기초로 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제공한다.[59] 해당 기술과 관련된 쟁점 요소에 관해 간략히 살펴본다.

1) 기술적 메커니즘과 저작권 침해 문제

일반적인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은 학습이 완료된 시점의 데이터에 지식이 고정되어 있다. 반면, RAG 모델은 이용자의 질문을 받으면, ① 먼저 인터넷 등의 외부 정보에 기초한 최신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찾아내고, ② 검색된 정보를 바탕으로 LLM이 답변을 생성하는 2단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은 저작권법상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외부 정보를 검색하고 가져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저작물에 대한 '복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그와 같은 복제가 서버 메모리 등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일시적 복제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범주에 포함이 될 수 있고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RAG가 생성하는 답변은 특정 뉴스 기사나 블로그의 글을 요약하거나 핵심 내용을 재구성하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5년 5월 공개된 미국 저작권청(USCO) 보고서에서도 역시 RAG가 원저작물을 요약하거나 축약된 버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이는 공정이용 법리에서 말하는 변형적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한다.[60]

2) RAG 기술과 OSP 책임 법리 간의 부정합성

RAG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는 전통적인 OSP 책임 법리와 정합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를 원본 정보 소스로 연결해 주는 단순한 '정보 검색' 도구가 아니다. 비록 관련된 원본에 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원본 정보의 핵심 내용을 추출하고 가공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굳이 원본 웹사이트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측면이 존재한다. 즉, 원본 콘텐츠 제공자와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그들의 시장을 잠식하는 대체적 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59) 박정훈,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최근 저작권 쟁점 분석: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의 쟁점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49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5, 26~27쪽.

60) USCO,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3: Generative AI Training」, PRE-PUBLICATION VERSION, A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2025, p.47.

RAG 기반 서비스에 대한 책임 제한 논의를 매우 어렵게 만든다.

침해 시점이 불분명한 '과거'의 학습 단계가 아니라, 이용자의 모든 질의에 대해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현재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의 행위가 침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원인을 제공함을 의미하는바, 어떠한 형태의 책임 제한 규정 내지 항변 사유를 적용하더라도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적 분석의 초점이 '학습 데이터의 공정성'에서 '서비스 결과물의 시장 대체성'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이는 RAG 기술이 인공지능 저작권 논의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AI 서비스 사업자 관련 해외 판례 검토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가 전통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 제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각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소송에서의 핵심 쟁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일부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의 판결들은,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가 단순한 중개자가 아닌, 콘텐츠 생성에 관여하는 능동적 행위자라는 측면에 주목하며 기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법리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새로운 형태의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 중국

최근 중국 법원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가 기존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세이프 하버 규정에만 의존하여 면책받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는 '울트라맨' IP 독점 라이선시(중국 내 권리자)가 Text-to-Image 서비스 및 LoRA 기반의 이미지 생성 플랫폼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복제·각색, 정보망 전송권)와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한 사건들로서, 광저우 인터넷법원은 AI 결과물(AIGC) 자체를 저작권 침해물로 보고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책임과 '합리적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며, 이후 항저우 인터넷법원·중급인민법원 판결은 LoRA(Low-Rank Adaptation)[61] 모델을 통해 울트라맨 유사 이미지를 대량 생성·공유하게 한 플랫폼에 대해 정보망 전송권 침해에 대한 방조(간접 침해) 책임을 인정하면서 전통적인 세이프 하버 규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61)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효율적으로 미세 조정하기 위한 기법 중 하나로, 기존의 전수 미세 조정 방식은 모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야 하므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LoRA는 기존 가중치를 고정한 채 일부 저차원 행렬만을 학습시켜 문제를 해결하며, 이를 사용하면 학습에 필요한 파라미터 수를 최대 10,000배까지 줄이면서도 모델의 품질은 기존 방식과 대등하거나 더 뛰어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상세한 내용은 Edward Hu et al., "LoRA: Low-Rank Adaptation of Large Language Models", arXiv:2106.09685 [cs.CL], 2021 참고.

1) 광저우 인터넷법원 울트라맨 판결(1차 울트라맨 판결)[62]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일본 츠부라야로부터 중국 내 울트라맨 시리즈 이미지를 독점 라이선스 받은 상하이 소재의 회사이고, 피고는 Tab(가명)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Text-to-Image (AIGC)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회사이다.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生成一个奥特曼(울트라맨을 하나 생성해 줘)", "奥特曼融合美少女战士(울트라맨+미소녀전사)" 등의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울트라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다. 여기서 쟁점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울트라맨 이미지를 저작권 침해물로 볼 수 있는지(복제·각색), 플랫폼이 단순 중립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인지 혹은 적극적인 침해 주체 내지 방조자인지, 그리고 2023년 제정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방법'이 플랫폼의 주의 의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AIGC 이미지들이 원저작물(울트라맨)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고, 일부 이미지들은 울트라맨의 요소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표현을 결합해 무단 각색한 결과물로 판단하였다. 한편,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울트라맨" 등 키워드만으로 높은 재현율로 울트라맨 이미지들을 생성할 수 있었던바, 이에 대해서는 단순 저장·전송을 넘어서 침해 결과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구조로 보았다. 아울러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방법'에서 요구하는 '합리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민사책임(침해 중지·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에게는 울트라맨 관련 프롬프트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미지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도록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할 의무 등이 부과되었다.

2) 항저우 인터넷법원·중급인민법원 울트라맨 판결(2차 울트라맨 판결)

원고는 광저우 사건과 동일 그룹의 상하이 문화발전회사로 울트라맨 IP의 중국 독점 라이선시이며, 피고는 항저우 소재 AI 플랫폼 운영사로 Text-to-Image 모델과 LoRA 모델 업로드·공유·사용 기능을 제공하였다. 이용자들이 울트라맨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Ultraman Blaze" 등 명칭의 LoRA 모델을 학습하였고, 이후 다른 이용자들이 해당 LoRA를 선택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울트라맨과 매우 유사한 이미지가 대량으로 생성되고 공유되는 형태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울트라맨 LoRA 모델과 생성된 이미지를 플랫폼 홈페이지 내에 게시되도록 하여 울트라맨에 대한 정보망 전송권을 침해하였고 부정경쟁행위도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63]

---

62) (2024)粤0192民初113号判决书. https://www.ciplawyer.cn/articles/152937.html 참고.

63) https://intellectual-property-helpdesk.ec.europa.eu/news-events/news/ultraman-ai-case-china-defining-copyright-liability-generative-ai-providers-2025-02-18_en.

이에 대해 1심 판결(2024. 9. 25., 항저우 인터넷법원)[64]에서는 AI 결과물 중 상당수는 울트라맨 저작물과 높은 유사도를 가지며 전체적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보망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가 직접 저작권을 침해한 주체라기보다는 사용자들의 침해를 용이하게 하고 지속되게 한 방조(간접 침해)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였다.[65]

한편, 2심 판결(2024. 12. 30., 항저우 중급인민법원)[66]에서는 1심의 방조 침해 인정과 배상액에 관한 부분을 유지하고, AI 플랫폼에 대한 책임 법리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였다. 즉, 피고는 자신이 단순 중립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IGC 플랫폼이 침해 위험을 예견할 수 있고, 통제·예방할 기술적 수단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기존의 세이프 하버 법리 적용을 부정하였다. 울트라맨의 LoRA 모델들이 명칭·프롬프트 단계에서부터 "Ultraman"을 노골적으로 사용하였고, 일부 모델(예: Ultraman Blaze)은 1,000회 이상 사용되는 등 침해성이 명백하고 반복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모델 삭제·키워드 필터링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알면서도 방치한 방조 행위로 판단하였다. 해당 판결에서는 플랫폼이 침해적 성격의 콘텐츠·모델을 통해 사용자를 유치하고 유료 서비스 등 수익을 얻은 점도 책임의 가중 요소로 고려되었다.

위 판결들은 베이징 인터넷법원의 2023년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판결(사용자의 창작적 기여를 전제로 한 저작권 인정)[67] 등과 달리, 플랫폼이 기존의 IP를 침해하는 AI 생성·유통하게 한 책임에 방점을 두었다. 그리고 두 판결 모두 2023년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방법' 및 이후의 AIGC 규제 체계에 따른 합리적 주의의무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전통적인 UGC 플랫폼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필터링 의무를 부과하였다. 특히, LoRA 모델처럼 특정 IP를 고정적으로 재현하는 모듈이 공유·재사용되는 경우에는 모델 명칭·태그, 사용 빈도·출력 패턴, 신고·통지 후 조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침해 위험에 대한 고의·과실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64) (2024) 浙0192民初1587号. https://www.ciplawyer.cn/articles/155988.html 참고.
65) https://www.hoganlovells.com/en/publications/when-ai-and-copyright-clash-chinese-courts-find-ai-platform-liable-for-contributory-copyright.
66) (2024) 浙01民终10332号. https://www.ciplawyer.cn/articles/155989.html 참고.
67) (2023) 京 0491 民初 11279号.

(2) 독일

한편, 독일 법원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 등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 최초로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중요한 판결들을 내린 바 있다.

1) 뮌헨 지방법원 GEMA v. OpenAI 판결[68]

원고 GEMA(독일의 음악저작권 관리단체)는 독일어 노래 가사 9곡(예: "Atemlos", "Wie schön, dass du geboren bist" 등)에 대하여 피고 OpenAI, LLC 및 OpenAI Ireland, Lt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GEMA는 ChatGPT가 간단한 프롬프트("'[노래 제목]'의 가사는 무엇인가요?", "누가 가사를 썼나요?", "'[노래 제목]'의 후렴구는 무엇입니까?" 등)만으로 가사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고, OpenAI가 라이선스 계약이나 사용료 지급 없이 GEMA 레퍼토리의 가사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ChatGPT를 학습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노래 가사가 GPT-4, GPT-4o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내에 '기억/암기(Memorization)'되었다고 보고, 문제된 가사들이 모델 파라미터 내에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간접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재현 가능한 형태로 저장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암기는 단순히 통계적 패턴 추출을 넘어서 저작물 자체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사회지침(InfoSoc Directive) 제2조에 따른 '모든 방식·형태의 복제'에 해당하며,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가사는 모델 파라미터에 완전히 통합되어 저작자의 경제적 이용에 대한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법원은 ChatGPT가 사용자 프롬프트에 응답하여 가사를 출력하는 행위는 독일 저작권법 제19a조 및 정보사회지침 제3조에서 정하는 공중전달(Communication to the Public)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본과의 사소한 차이는 무관하며 OpenAI가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 직접 침해의 주체라고 보았다.[69]

OpenAI는 독일 저작권법 제44b조 및 제60d조(DSM 지침 제3조 및 제4조의 국내 이행 규정)에 따른 TDM 예외 조항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한바, TDM은 정보 생성을 목적으로 하나 가사를 암기하는 행위는 이러한 정보 생성을 넘어서는 것으로 TDM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DSM 지침의 취지가 혁신·신기술 촉진뿐 아니라 저작자 보호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안에서는 가사가 모델에 영구적으로 저장되어 분석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70]

---

68) LG München I, Endurteil v. 11.11.2025 - 42 O 14139/24. 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Y-300-Z-GRURRS-B-2025-N-30204?hl=true 참고.
69) https://www.medialaws.eu/gema-v-openai-decision-of-the-munich-regional-court/.
70) Ibid.

2) 함부르크 지방법원·고등법원 LAION 판결

원고 Robert Kneschke는 전문 사진작가로, 자신의 사진을 스톡포토 에이전시를 통해 판매하였다. 한편, 비영리 연구기관인 LAION e.V.(Large-scale Artificial Intelligence Open Network e.V.)는 2021년 하반기에 해당 사진을 포함한 50억 개의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LAION-5B 데이터셋을 구축했다. LAION-5B 데이터셋은 AI 모델 학습 자체가 아니라 이미 학습된 CLIP 모델을 사용하여 이미지와 텍스트 설명(캡션) 간의 일치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이미지를 복제한 것으로,[71] 데이터셋 구축 과정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한 것이 쟁점이 되었다. 원고는 스톡포토 에이전시의 이용약관(ToS)과 웹사이트 소스코드에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스크레이핑·다운로드 금지' 조항이 자연어로 포함되어 있었으므로,[72] 이것이 유효한 '옵트아웃(Opt-out)'에 해당하며 LAION은 TDM 예외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1심 판결(2024. 9. 27., 함부르크 지방법원)[73]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과학적 연구 목적 TDM 예외(독일 저작권법 제60d조, DSM 지침 제3조) 규정의 적용을 인정한 것으로, LAION의 데이터셋 구축이 해당 규정에서 상정하는 과학 연구 목적의 TDM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원고는 저작권법 제60d조제2항[74]에 따라서 LAION이 상업적 기업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재정·컴퓨팅 지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상업적 기업들이 LAION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연구 결과에 우선적 접근권을 가진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한편, 법원은 상업적 TDM 예외(독일 저작권법 제44b조, DSM 지침 제4조)와 관련해서는 제60d조에 대한 판단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Obiter Dictum'(방론) 형식으로 언급을 할

71) 보다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Christoph Schuhmann et al., "LAION-5B: An open large-scale dataset for training next generation image-text models", arXiv:2210.08402 [cs.CV], 2022 참고.

72) "RESTRICTIONS
YOU MAY NOT:
(...)
18. Use automated programs, applets, bots or the like to access the ...com website or any content thereon for any purpose, including, by way of example only, downloading Content, indexing, scraping or caching any content on the website."

73) LG Hamburg, Urteil vom 27.09.2024 – 310 O 227/23. https://openjur.de/u/2495651.html 참고.

74) § 60d Text und Data Mining für Zwecke der wissenschaftlichen Forschung
(2) Zu Vervielfältigungen berechtigt sind Forschungsorganisationen. Forschungsorganisationen sind Hochschulen, Forschungsinstitute oder sonstige Einrichtungen, die wissenschaftliche Forschung betreiben, sofern sie
1. nicht kommerzielle Zwecke verfolgen,
2. sämtliche Gewinne in die wissenschaftliche Forschung reinvestieren oder
3. im Rahmen eines staatlich anerkannten Auftrags im öffentlichen Interesse tätig sind.
Nicht nach Satz 1 berechtigt sind Forschungsorganisationen, die mit einem privaten Unternehmen zusammenarbeiten, das einen bestimmenden Einfluss auf die Forschungsorganisation und einen bevorzugten Zugang zu den Ergebnissen der wissenschaftlichen Forschung hat.

뿐 명시적 판단은 유보하였다.[75]

한편, 2심 판결(2025. 12. 10., 함부르크 고등법원)[76]은 1심 판결을 확정하면서도 일부 쟁점에 관해서는 다른 판단을 제시하였다. 2심 법원은 1심과 달리, LAION의 행위가 독일 저작권법 제44b조(DSM 지침 제4조)의 상업적 TDM 예외에도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LAION이 구축한 데이터셋이 상업적 AI 제공자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제60d조 예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혔다. 특히, 2심 법원은 스톡포토 에이전시 웹사이트의 자연어(Natural Language) 조항이 '기계 가독적(Machine-readable)' 유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는데, 저작권법 제44b조제3항[77]에서 말하는 '기계 가독적'이란 단순히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해석하여 자동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78] 그리고 이는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분쟁 발생 시점의 기술적 역량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79]

위 판결은 저작물 등으로 구성된 학습 데이터셋 생성이 허용되는 조건을 밝혔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다만, 이는 데이터셋을 사용한 인공지능 학습의 허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확장될 수 없으며 사후적인 이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및 책임 문제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결은 사업자로 하여금 권리자의 거부권을 존중하는 조건 하에서의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셋 구축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사업자의 사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80]

독일의 판결들 또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 등이 저작물을 학습하고 출력물로 재현하게 한 과정 전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에 방점을 두었다. 뮌헨 법원은 전통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

75) 다만, 1심 법원은 방론을 통해 자연어로 된 이용 약관이 기술적으로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일 수 있음을 시사한바, 피고가 자체 소프트웨어로 이미지 내용을 분석할 수 있었다면 텍스트로 된 약관 또한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원고의 권리 유보 주장이 성립할 여지를 주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독일] 함부르크 고등법원, TDM은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셋 작성에도 적용된다고 판결(박희영)", COPYRIGHT ISSUE REPORT 2025-18, 4쪽.

76) OLG Hamburg, Urteil vom 10.12.2025 - 5 U 104/24. https://www.itm.nrw/wp-content/uploads/2025/12/5-u-104-24.pdf 참고.

77) § 44b Text und Data Mining
(3) Nutzungen nach Absatz 2 Satz 1 sind nur zulässig, wenn der Rechtsinhaber sich diese nicht vorbehalten hat. Ein Nutzungsvorbehalt bei online zugänglichen Werken ist nur dann wirksam, wenn er in maschinenlesbarer Form erfolgt.

78) "Bei der Frage der Maschinenlesbarkeit kommt es nicht nur darauf an, dass der Text maschinell erfasst werden kann, sondern dass er auch in dem Sinn maschinell interpretiert werden kann, dass er bei einem automatisierten Vorgehen dazu führen kann, dass die vom Vorbehalt erfassten Inhalten nicht ausgewertet werden"

79) 법원의 판단은 2021년 하반기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동일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을 보장하진 않는다. https://openfuture.eu/blog/laion-round-2-machine-readable-but-still-not-actionable/.

80) https://grunecker.de/en/insights/ai-and-copyright-hamburg-court-of-appeal-rejects-appeal-in-laion-case/.

의 중개자로서의 면책 논리를 인공지능 플랫폼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OpenAI를 단순 도구 제공자가 아닌 직접 침해의 주체로 규정하였으며,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 등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각 판결은 모두 EU DSM 지침에 따른 TDM 예외를 엄격히 해석하여 차별화된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볼 것인바, 특히 함부르크 법원은 침해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초로 기계 가독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봄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사업자의 의무가 동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3) 미국

한편, 미국에서 제기된 Andersen v. Stability AI 소송[81]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윌리엄 H. 오릭(William H. Orrick) 판사는 Sarah Andersen을 포함한 예술가들(원고)이 Stability AI, Midjourney, DeviantArt, Runway AI(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정 소장(First Amended Complaint, FAC)에 대한 피고들의 기각 신청(Motions to Dismiss)과 관련하여 2024년 8월 12일자 명령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하였는데, 쟁점은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예술가들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 및 배포 방식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다.

우선 저작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서 법원은 피고들의 직접 및 유도 저작권 침해 기각 신청을 거부하였다. 예술가들이 제시한 AI 모델의 학습 및 작동 방식에 대한 상세한 가설이 증거 조사(Discovery) 단계로 나아가기에 충분한 개연성(Plausibility)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이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관리 정보(CMI)의 제거 또는 변조에 관한 청구는 '출력물이 원본과 동일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With Prejudice, 재제소 불가) 기각되었다. 한편, 랜험법(Lanham Act) 청구, 즉 Midjourney를 상대로 한 허위 보증 및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주장은 인용되었던바, 인공지능 기업이 특정 예술가의 이름을 홍보에 활용하거나 그 스타일을 재현하는 기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계약 위반 및 부당 이득 청구와 관련, DeviantArt에 대한 계약 위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With Prejudice), 부당 이득 청구는 저작권법에 의해 선점(Preempted)되었다고 보아 기각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수정 기회가 부여되었다.

저작권 침해 쟁점과 관련해서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세 가지 주요 저작권 침해 이론을 검토하였다. ① 학습 이론(Training Theory): 피고들이 LAION 데이터셋에 포함된 원고들의 저작물

81) Case No. 23-cv-00201-WHO.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cand.407208/gov.uscourts.cand.407208.223.0_2.pdf.

을 모델 학습에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전 명령과 마찬가지로 Stability AI에 대한 이 청구를 유지했으며, 새로 추가된 Runway AI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해 기각 신청을 거부했다. ② 모델 이론(Model Theory): Stable Diffusion 모델 자체가 원고 저작물의 '압축된 복제본(Compressed Copies)'이거나 '2차적저작물'이라는 주장이다. 법원은 원고들이 모델 내에 저작물의 수학적·알고리즘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다. ③ 배포 이론(Distribution Theory): 모델을 배포하는 행위 자체가 원고들의 저작물에 대한 배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불가능한 논리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모델 내에 원본의 '압축된 복제본'이 들어 있다는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배포 이론 또한 성립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특히, DeviantArt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 DeviantArt는 직접 AI 모델을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Stability AI의 모델을 가져와 자사 서비스(DreamUp)에 적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DeviantArt가 배포한 AI 모델 자체가 원작자들의 작품을 '압축된 복제본' 형태로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간접 침해(Induced Infringement)에 관한 쟁점, 즉 Stability AI와 Runway AI가 사용자들로 하여금 모델을 통해 침해 결과물을 만들도록 유도했다는 점에 대해 법원은 Stability AI CEO의 발언,[82] 원고가 제출한 학계 및 전문가들의 논문 등을 인용하며, 해당 제품이 침해를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해당 결정은 AI 모델이 학습 데이터를 단순히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압축된 형태로 저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본과 유사한 이미지를 재생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다퉈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Plausible) 본 것이며, 나아가 직접 AI를 개발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모델을 자사 서비스에 통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배포)하는 행위만으로도 직접 침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본 결정이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AI 모델이 실제로 원본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후의 증거 조사와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82) Ibid. "Emad Mostaque described it thus: 'Stable Diffusion is the model itself. It's a collaboration that we did with a whole bunch of people … We took 100,000 gigabytes of images and compressed it to a two-gigabyte file that can recreate any of those [images] and iterations of those.'"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수정 소장(First Amended Complaint, FAC)에 인용되었던 내용으로, CEO인 Emad Mostaque가 Stable Diffusion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 발언 즉, "우리는 100,000 기가바이트의 이미지를 가져와 2기가바이트 파일로 압축했으며, 이는 그 이미지들(Any of those Images)과 그 변형물들을 재창조(Recreate)할 수 있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원고는 피고가 단순히 이미지를 학습한 것이 아니라, 원본 이미지를 압축된 형태로 저장하여 다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제품을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5.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법리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기존의 저작권 법체계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성급한 법률의 제·개정은 법적 안정성 저해 내지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현행 법리의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지점에 한해 단계적인 입법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장에서는 현행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진단하고, '주의 의무' 중심의 책임 체계 정립 방안과 함께 학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 공급망 기반의 책임 분배 모델에 관해서 살펴본다.

(1) 현행 OSP 책임 제한 법리의 적용 및 한계

1) AI 서비스 사업자의 OSP 지위 및 면책 규정 적용 여부

현행 저작권법 제102조 등 규정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를 알지 못했고, 침해를 통제할 권한이나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해 책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를 두고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에 따라 단순히 결과를 산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를 기존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개념에 포섭하여 면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모델이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도구적으로 기능할 뿐이므로, 사업자가 침해를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면책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 인공지능은 단순한 '매개'나 '전송'을 넘어,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능동적으로 '생성'하거나 '변형'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최근의 연구 문헌 등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매개변수 설정 등을 통해 콘텐츠 생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을 지적하는바,[83] 이는 유럽사법재판소(CJEU)가 YouTube/Cyando 판결 등에서 제시한 '적극적 역할(Active Role)'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중립적인 중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84]

---

83) Zhangzhi Yang, "Intermediary Liability for IP Infringement in the Age of AI: Duty of Care and Institutional Design", Journal of Cultural Analysis and Social Change, 10(3), 2025, p.1925, 1927.

84)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전자상거래 지침(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영상 공유 플랫폼 또는 파일 호스팅·공유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자들이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불법적으로 공중에 전달하는 보호된 콘텐츠에 대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운영자가 수행하는 역할이 중립적인지, 즉 그 행위가 단지 기술적·자동적·수동적인 것에 불과하여 저장하는 콘텐츠에 대해 아무런 인식이나 통제도 하지 않는지, 아니면 반대로 그 콘텐츠에 대한 인식이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역할(Active Role)'을 수행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CJEU 2021. 6. 22. 판결, Joined

현행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 제한 규정을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해석상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며, 해당 사업자의 기술적 관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직접 침해 책임의 성립 가능성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의 데이터 복제나, RAG 기술을 통해 원본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검색·요약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법리와는 별개로, 사업자의 '직접 침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최근 미국 법원은 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사건[85]에서,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물 복제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무단 학습행위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86] 또한 New York Times v. Perplexity 소송[87] 등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RAG 기술이 원본 기사를 대체하는 수준의 상세한 답변을 제공한다면, 이는 단순한 정보 검색 도구를 넘어선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공중송신권 등 침해 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88]

(2) AI 서비스 사업자의 '주의 의무' 중심의 책임 체계 정립

1) 과정 중심의 책임 판단 기준 등 마련

인공지능 기술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권리 침해의 결과만을 놓고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침해 예방을 위해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책임의 귀속 여부 및 정도 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일종의 의무 기반 책임 제한 모델로 볼 수 있는데,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의 기술적 통제력 및 위험에 대한 예견 가능성, 회수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정도 등에 비례하여 차등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단계에 따른 일정한 조치 의무가 요구될 수 있다. 즉, ① 사전 예방 단계에서는, 불법복제물 등 침해 위험이 높은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셋으로부터 배제하고 적법한 데이터를 선별하여 사용하는 노력, ② 시스템 운영 단계에서는, 이용약관을 통해

Cases C-682/18 and C-683/18, Frank Peterson v. Google LLC 및 Elsevier Inc. v. Cyando AG, ECLI:EU:C:2021:503, para. 106.

85) Thomson Reuters Enterprise Centre GmbH v. ROSS Intelligence Inc. (1:20-cv-00613).

86) 해당 사안에서는 공정이용 판단 시 변형적 이용, 시장 대체 가능성 등의 요소가 적극 고려되었다.

87) The New York Times Company v. Perplexity AI, Inc. (1:25-cv-10106).

88) https://www.cnbc.com/2025/12/05/the-new-york-times-perplexity-copyright.html.

침해 유도 행위를 금지하고 필터링 기술을 도입하여 침해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 결과물 생성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등, 그리고 ③ 사후 대응 단계에서는 권리자의 침해 신고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해당 결과물의 생성을 차단하고, 반복적인 침해를 야기하는 데이터나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조치 등이 고려될 수 있다.[89]

이러한 조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에서 기존의 통지 및 삭제 방식과 같은 사후적 접근 방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부터 합법적 이용을 내재화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서 권리자에게는 더 강력한 보호 수단을 제공하고 사용자에게는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유하도록 하면서도 사업자에게는 그들의 기술적 영향력에 비례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따른 위험을 공정하게 재분배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90]

한편, 정보 검색 서비스에 RAG 기술이 접목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원본 콘텐츠의 시장 대체성과 같은 별도 기준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다. 단순 안내형의 RAG 서비스, 즉 이용자에게 정보의 출처와 링크를 제공하고 원문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보여줌으로써 이용자가 원본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와 시장 대체형 RAG 서비스, 즉 원문의 핵심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약·재구성하여 이용자가 원문에 접속할 필요성을 현저히 낮추는 경우(Zero-Click Search) 각각에 대해서는 침해의 정도,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요구되는 주의 의무의 정도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서 현행 저작권법 규정에 대한 법령 해석 내지 개정의 측면에서는 현행 저작권법 제104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등 규정 취지를 인공지능 서비스에 확장 적용함으로써 각 사업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기술적인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특정 키워드에 대한 금칙어 설정 의무를 포함한 사전 필터링, 생성된 결과물이 학습 데이터 내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모니터링 기술 등의 도입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9)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 및 배포 단계에 맞추어 차등화된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Zhangzhi Yang, op. cit., p.1924, 1927 참조. 그에 따르면, ① 데이터셋 구축(Dataset Construction) 단계에서는 투명성(Transparency) 확보 및 적법한 소싱(Lawful Sourcing) 의무, 즉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데이터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는 의무를 진다. ② 모델 학습(Model Training) 단계에서는 알고리즘 검사(Algorithmic Audits) 및 공정성 점검(Fairness Checks) 의무를 부담하는바, 개발자는 모델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한편, ③ 콘텐츠 배포(Content Dissemination) 단계에서는 선제적 모니터링(Proactive Monitoring) 및 추천 시스템 감독(Recommender Oversight) 의무를 규정,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가 배포될 때, 단순히 삭제 요청에 반응하는 것을 넘어 알고리즘이 침해물을 확산시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90) Zhangzhi Yang, op. cit., p.1925, 1926.

2) 인공지능 기본법과 연계한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의 위험도와 특성에 따라서 차등화된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 즉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법 제2조제4호)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만 하며(법 제31조제1항),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위험관리방안의 수립·운영, 그리고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용 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시행 등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법 제34조). 그 외에도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부과된다(법 제35조).

한편,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즉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법 제2조제5호)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만 하며(법 제31조제1항),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만 한다(법 제31조제2항).

그리고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10의 26승 부동소수점연산)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 이른바 고성능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평가 및 완화,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법 제32조).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인공지능 기본법상의 의무 준수 여부와도 긴밀히 연계될 수 있는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들을 저작권 분야로 확장하여 고영향 인공지능의 경우 학습 데이터의 주요 출처와 종류를 공개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

의 마련이 검토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기본법 제34조의 '학습용 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을 저작권 분야로 확장하여, 인공지능사업자로 하여금 모델 학습에 활용한 데이터셋의 구성 요소, 저작물 포함 비중, 출처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형태의, 이른바 투명성 보고서 발간을 유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는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상을 청구할 근거가 된다. 그리고 권리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 인공지능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기본법 제32조에서 정하는 고성능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 결과에 저작권 필터링 시스템의 유효성 및 권리자 옵트아웃 준수 현황 등을 포함함으로써 기술적 안전성과 저작권 보호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마련되는 안전성 가이드라인에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표준 기술 규격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이 학습 데이터 내의 특정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여 출력하는, 이른바 암기 현상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을 인공지능 기본법상 위험관리체계의 핵심 요소로 반영하고,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정한 안전성 내지 신뢰성 확보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저작권법 준수를 위한 합리적 주의 의무 여부 판단의 중요한 양형 기준 또는 면책 요건으로 고려함으로써 법리적 정합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3) 전체 인공지능 공급망 기반의 역할 분담 논의

1) AI 세이프 하버 모델의 개념 및 취지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제한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는, 이른바 'AI 세이프 하버(AI Safe Harbor)' 모델은 생성형 AI가 데이터 수집, 모델 학습, 서비스 배포로 이어지는 복잡한 공급망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기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단순 매개' 개념을 넘어, 각 단계별 주체에게 기술적으로 이행 가능한 특화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法定)의 면책 구조를 마련하자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주의를 다했는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과실 책임 원칙에서 나아가, 입법적으로 정해진 표준적인 조치들을 준수했다면 설령 침해 결과물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공급자(Data Provider)에게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Provenance) 및 권리 관계 투명성 확보, 데이터셋 내 침해 요소 사전 필터링 의무를, 모델 개발자(Model Developer)에게는 암기 현상(Memorization)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워터마킹 삽입,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의무를, 그리고 서비스 배포자(Service Deployer)에게는 실시간 동적 필터링 시스템 운영, 침해 신고 접수 및 신속한 생성 차단, 반복 침해 이용자 제재 의무 등을 부여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2) 모델 도입 시의 고려사항 및 한계점

이러한 AI 세이프 하버 모델은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에게 법적인 측면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겠으나, 앞서 논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중대한 한계점과 부작용이 우려된다.[91]

① '중립적 중개자' 전제의 붕괴와 법리적 충돌

전통적인 형태의 세이프 하버 모델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에 관여하지 않는 '수동적 통로'일 때 정당화된다. 그러나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는 학습 데이터 선별, 모델 아키텍처 설계, 파라미터 조정을 통해 결과물 생성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들을 단순 중개자로 간주하여 포괄적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스스로 통제하고 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법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92]

② '통지 및 삭제' 제도의 기술적 실효성 상실

기존 세이프 하버 모델의 핵심 기제인 '통지 및 삭제'는 침해물이 특정 위치(URL 등)에 고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인공지능 결과물은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프롬프트에 따라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동적·일시적 특성을 지닌다. 권리자가 특정한 결과물을 신고하더라도 모델 자체에서 해당 저작물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형태의 '머신 언러닝(Machine Unlearning)'은 현재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세이프 하버의 전제 조건인 '신속한 삭제'가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크다.[93]

③ 공급망 구조 내 책임 소재의 파편화 및 희석

오늘날 인공지능 생태계는 데이터 공급자, 모델 개발자, 서비스 배포자 등 다수의 주체가 참여

---

91) 앞선 주의 의무 기반의 모델은 상황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조정하거나 합리적인 수준의 책임을 배분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으나, 세이프 하버 모델은 법정 요건 충족 시 책임을 원천 봉쇄하는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이는 창작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창작 생태계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92) Yang Lin & Taorui Guan, op. cit., p. 606; Bingjie Xiao, op. cit., pp.55~56.

93) Yang Lin & Taorui Guan, op. cit., p. 609; Bingjie Xiao, op. cit., pp.55~56.

하는 복잡한 공급망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특정 단계의 사업자에게 세이프 하버를 부여할 경우에는 각 주체들이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사실상 '책임의 진공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94] 특히 오픈소스 모델의 경우, 면책 요건을 이행할 주체가 불분명해지거나 영세한 배포자에게만 모든 모니터링 책임이 전가되는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

④ 권리자에게 전가되는 과도한 모니터링 부담과 불공정성

만약 AI 세이프 하버가 도입되면 침해 여부를 감시하고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오롯이 권리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대규모로 은밀하게 발생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기반한 저작권 침해의 특성상, 개별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쓰였는지 또는 생성물로 출력되는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결국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형해화하고, 사업자가 기술적 혁신의 성과를 독점하는 반면 그에 따른 침해 리스크와 감시 비용은 권리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

⑤ 자동화된 필터링으로 인한 합법적 표현의 위축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가 면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과도하고 엄격한 자동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상황과 공정 이용으로 허용되는 상황을 구분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맥락에 따른 재해석이나 변형적 이용까지 일률적으로 차단됨으로써,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당한 창작 활동이나 비평 등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범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로써 면책 범위를 명확화하는 것은 그 침해 책임을 과도하게 이용자에게 귀속시킬 우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로 하여금 저작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 제한 규정과 같은 모델을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규율 체계에 직접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기술 표준이 정립되고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맞추어 중장기적인 입법 과제로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94) Yang Lin & Taorui Guan, op. cit., p.608.

(4) 권리 구제 및 보상 체계의 현실화

그 외에도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로 하여금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기술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로봇 배제 표준, 즉 robots.txt와 같은 기술적 수단에 관해서는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거부 의사를 세밀하게 표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저작물 이용에 관한 권리자의 의사를 기계가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술 표준을 마련하거나 민간 표준의 활용을 장려하고, 이를 준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 등을 취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리스크를 실효적으로 완화해 주는 형태의 제도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전체 저작물 시장에서의 거래 활성화 측면 내지 저작권 제도 운용의 차원에서 보자면, 개별 저작권자와의 협상이 쉽지 않은 대규모 데이터 학습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탁관리단체를 통한 '확대된 집중관리(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ECL)' 제도의 도입 방안 등이 추가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용허락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이용의 원활을 기하기 어려운 영역에 한해서는 사업자가 정당한 수준의 보상금을 납부하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法定) 이용허락' 제도를 도입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혁신과 창작자의 권익 보장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최근 언론계 등 일부 권리자 단체에서는 '선(先) 이용 후(後) 보상'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바, 대상 저작물의 범위 설정, 보상 금액의 산정 방식 결정 등에 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6. 결론

인공지능 기술의 폭발적 성장은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넘어, 지난 수세기 동안 공고히 유지되어 온 저작권법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파고와 같다. 본 보고서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과거의 단순 중개자들과 달리 콘텐츠 생성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기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제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있어 본질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과거의 규제 틀에 기술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 인공지능 기술 및 관련 생태계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책임과 보상의 균형점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적 책임의 패러다임을 '결과'에서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과거의 세이프 하버 규정이 침해물이 발생한 '사후'에 얼마나 신속히 삭제하느냐에 집중했다면, 인공지

능 시대에는 사업자가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부터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는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결과물의 일시적·동적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통지 및 삭제' 방식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암기 현상을 억제하며 권리자의 의사가 반영된 데이터 이용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 표준을 내재화하도록 유도하는 체계야말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도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실효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 논의되는 별도의 'AI 세이프 하버' 규정의 신설은 산업 육성 측면에서 매력적일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인공지능 공급망은 데이터 공급자부터 모델 개발자, 서비스 배포자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급한 면책 규정 도입은 책임 소재를 파편화하고 결국 그 리스크를 권리자에게 전적으로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동화된 알고리즘이 침해와 공정 이용의 미묘한 경계를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표현의 위축 현상은 기술 혁신이 지향해야 할 창의성 증진이라는 본질적 가치와도 어긋난다. 따라서 입법적 면책이라는 강력한 방패를 제공하기에 앞서, 인공지능 기본법과 연계된 투명성 보고서 발간, 안전성 가이드라인 준수 등 사업자의 공적 책임이 선행되어야 한다.

혁신과 보호의 공존은 결국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인 인공지능 산업의 특성상 개별 계약을 통한 이용허락은 시장 실패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대된 집중관리'나 '법정 이용허락'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저작물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창작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가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기술은 인간의 창작을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을 증폭시키는 매개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혁신의 걸림돌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뢰의 기반으로 작용해야 한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 기본법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선두주자로 나아가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저작권 정책 역시 이러한 국가적 방향성 안에서 정합성 있게 추진되어야만 한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법의 변화를 앞지르는 '규제 지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착화된 법률 규정보다는 유연한 해석이 가능한 가이드라인과 기술 표준을 먼저 정립하고,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는 시점에 맞춰 단계적인 입법 보완을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혁신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인간 창작자의 가치를 존중하는 균형 잡힌 법체계야말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는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다.

03

DX 시대 저작권 제도 개선

제1절 영상물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 행위에 대한 법적 성격 정립

제2절 배타적 이용허락 범위의 확대방안 연구

제3절 OSP 책임 제한 규정상의 통지 및 삭제 절차 운용 실태

제4절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제3장 | DX 시대 저작권 제도 개선

제1절 영상물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 행위에 대한 법적 성격 정립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인터넷의 등장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미디어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방송의 변천사를 보면, 1970년대에는 일정 공간에 고정된 TV 수상기를 통한 실시간 방송으로, TV를 통해 시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이후 지상파 방송의 시대를 지나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다양한 송신 방식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망을 이용한 방송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방송은 디지털화되고 쌍방향 기능이 가능해지는 등 진화를 거듭하였다. 나아가 인터넷 스트리밍이나 VOD 등과 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송신되는 형태가 보편화되었고, 이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송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다매체 다채널의 시대의 도래로 OTT나 스마트 TV 등을 통해 제공되는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인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서비스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영상물을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이용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물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에 대하여 현행 저작권법상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그 법적 성격을 둘러싼 해석상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영상물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 행위를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등 기존 공중송신의 하위 유형 중 어디에 포섭하는 것이 타당한지, 나아가 기존 세부 권리 체계가 이러한 이용 형태를 적절히 규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연자·음반제작자 등 권리자 측과 방송사·유통사 등 이용자 측은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방송사, 유통사 등 이용자 측은 FAST 서비스와 같은 영상물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 행위 역시 공중송신 중 '방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보다 기존 방송 체계 안에서 포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방송의 형태가 IP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범주를 주파수 대역이나 유·무선 네트워크 등 물리적 수단의 특성만으로는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1]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 의미에서 일방성의 개념 역시 기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며 방송을 더 이상 일방적 정보전달 형태의 저작물 제공 방식에 한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제시된 바 있다.

반면, 실연자 단체 등 권리자 측은 영상물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 행위가 현행 저작권법상 제3의 공중송신 영역에 속하지만 제3의 공중송신 영역으로 볼 경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해당 행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권리자 측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디지털동시송신권의 신설 또는 저작인접권자에게 공중송신권을 부여하는 방향의 입법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현행 저작권법 체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 발전으로 방송과 전송의 구분 기준이 불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상물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 행위를 어떠한 공중송신 유형으로 포섭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해석상의 혼란과 분쟁 발생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문체부 유권해석에 의존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저작물 이용 시장 전반에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문체부는 2008년 IPTV를 통한 실시간 송신을 제3의 공중송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으나, 제3의 공중송신으로 볼 경우, 현행 저작권법상 방송이나 전송 어느 개념에도 명확히 포섭되지 않아,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 행사가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2014년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방송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체계상 명확한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권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해석을 통해 제도적 한계를 보완한 결과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는 영상물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과 같은 새로운 이용 형태를 현행 법체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입법적 정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 개정법률안[2107440]에서 '디지털동시송신'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방송사 측은 새로운 개념 도입 시 저작권자는 별도의 이용허락 요구로 인한 재계약 부담과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해당 내용은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1) 손경한 편저, 「방송과 저작권」, 법문사, 2016, 17~19쪽.

못하였다.

결국 영상물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 행위의 법적 성격 재정립은 단순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해석에 의존해 온 현행 저작권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에서 비롯된다.

이는 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 보호와 이용자의 법적 안정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고, 공중송신 체계 전반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저작권 법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영상물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 행위는 사용료 지급 및 보상금 처리 등 권리처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그 법적 성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먼저 영상물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서비스 유형을 분석한 후, 방송의 개념과 통신의 의미를 살펴보고, 방송과 통신의 차별적 특성을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 행위의 저작권법상 법적 성격을 재정립하고, 그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국제조약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베른협약,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WCT) 및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조약(WPPT) 등 국제조약에서의 방송과 공중송신의 개념을 검토하고,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 저작권법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어 왔는지, 나아가 상호 간에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법제에서 방송과 공중송신의 개념 및 인터넷 실시간 송신에 관한 규정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제도 개선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우리 저작권법상 공중송신 관련 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권리 처리 등 실무적 쟁점과 연계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기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선 방안과 그에 따른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실시간 송신 행위의 법적 성격 정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파악하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기 위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먼저 1차 의견 수렴에서는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영상이 포함된 실시간 송신이 저작권법상 공중송신의 유형 중 어떠한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행 저작권법 체계상 해당 행위를 방송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과 함께, 입법 불비로 인한 해석상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2차 의견 수렴은 방송사, 영상물 제작사, 유통사, 실연자단체 등 권리 처리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방송사, 영상물 제작사, 유통사 등은 동시성이 있는 인터넷 실시간 송신의 경우 방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실연자단체 등은 현행 법체계가 영상이 포함된 실시간 송신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어 권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3차 의견 수렴에서는 FAST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권리 처리 관행, FAST 서비스의 구조, 개인화 기능이 포함된 복합 서비스의 법적 성질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하였다.

4차 의견 수렴은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 질의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인터넷 실시간 송신의 개념 정립에 관한 법리적 분석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음성송신의 존치 여부, '디지털동시송신' 등 새로운 권리 유형의 신설 가능성, 실연자·음반제작자의 권리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송신권 체계 재정비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4차례의 의견 수렴 결과, 인터넷 실시간 송신 행위는 기존의 공중송신 범주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이용 형태가 출현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형태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법적 개념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대체로 공통된 문제의식이 확인되었다.

2. 인터넷 송신 서비스 현황

(1) 인터넷 실시간 송신 서비스의 주요 유형

본 연구에서는 개별 서비스를 나열하기보다는, 인터넷 실시간 송신이 어떠한 기술적·서비스적 구조를 통해 구현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유형을 추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공개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송신인 웹캐스팅, 폐쇄망을 통해 제공되는 방송형 실시간 송신인 IPTV, 그리고 광고 기반 채널 편성을 특징으로 하는 FAST 서비스는 인터넷 실시간 송신의 전형적인 구현 형태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오늘날 저작권법상 공중송신의 유형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던 서비스 중 하나가 웹캐스팅(Webcasting)이다. 국내에서는 웹캐스팅보다는 인터넷방송이라는 용어가 더 널리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터넷을 통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성이나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능동적 참여를 요구하는 서비스"[2], "동영상·데이터정보 등의 콘텐츠를 푸시(Push) 및 스트리밍(Streaming) 기술 등을 기반으로 인터넷 또는 고속망을 통해 전송하

2) 이대희, "방통융합에 따른 저작권 법제도의 개선방향", 〈산업재산권〉 Vol.-No.21, 한국지식재산학회, 2006, 201쪽.

는 것"[3] 등으로 정의된다. 인터넷방송의 경우와 같이 방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웹캐스팅이라는 용어도 웹(Web)과 방송(Broadcasting)의 결합으로 역시 방송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개념상으로는 전통적인 방송과는 전혀 다른 주문형(On Demand) 방식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방식의 서비스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웹에 의한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IP)을 이용하여 기존의 TV 방송에 좀 더 가까운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의 TV를 시청하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IPTV 역시 인터넷방송이나 웹캐스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4] 보는 견해가 있다.

2008년에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과 양방향 콘텐츠가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전통적인 방송과 통신을 모두 아우르는 융합서비스인 IPTV가 등장하면서 기존 방송 개념으로 포섭하기 어려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의 IPTV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IP(Internet Protocol) 방식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실시간 방송과 함께 VOD, 게임 등 각종 콘텐츠 및 전자상거래 등의 양방향 콘텐츠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IPTV란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 광대역 접속을 포함한 인터넷 네트워크 인프라 하에서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디지털 TV 서비스가 전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5] IPTV도 실시간 방송(방송)과 다시보기(전송)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복합된 멀티미디어 방송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광고를 시청하면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FAST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시장 성장세에 있다.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서비스란 스마트TV, 모바일, 웹(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해당 서비스 형태는 일반적으로 광고기반 무료 스트리밍 TV 서비스로, 디지털 플랫폼에서 광고를 보는 대신에 무료로 볼 수 있는 실시간 채널 서비스이며, 광고 기반 주문형 비디오(Advertising Vod, AVod)와 실시간 TV 채널이 혼재된 개념이다.[6] FAST 서비스는 특정 콘텐츠만을 연속 스트리밍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OTT와는 방식이 다르다. 예를 들면, 〈응답하라 1997〉(tvN) 채널이나, 〈무한도전〉(MBC) 채널처럼 인기 높은 과거 드

3) 박익환, "인터넷상 방송 및 전송을 통하여 본 저작권문제", 〈디지털 재산법 연구〉 제1권 제2호,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2002, 135쪽.
4) 윤종수, "저작권법상 방송 및 웹캐스팅의 지위에 관한 고찰", 〈정보법학〉 제11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07, 65~66쪽.
5) 박준석,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따른 IPTV 사업자의 법적 책임", 〈계간 저작권〉 2009년 봄호(통권 제85호), 저작권위원회, 2009, 6쪽.
6) ㈜전자신문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CT 시사상식 2023」,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22, 180~181쪽.

라마나 오락 콘텐츠를 24시간 내내 편성한다.[7] FAST 서비스의 실시간 방송은 특성상 채널 이동만 가능하고, 멈춤, 뒤로가기, 다시 재생 등의 기능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청자는 채널로 진입하여 방송 중인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을 뿐 다른 선택은 할 수 없다.

FAST 서비스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예를 들면 이용자가 TV를 틀어 특정 채널을 선택하였을 때, 해당 채널에서 총 40분짜리 프로그램의 20(분):00(초) 부분이 방송되고 있다면 해당 부분부터 시청하여야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청하거나 특정 시점부터 재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되감기, 빨리 감기 등을 할 수 없고, 특정 콘텐츠에 대해 일시 정지, 뒤로가기, 앞으로 가기 등의 기능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주문하여 이용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이 비주문형이면서 실시간 서비스로 동시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용자(수신자) 입장에서는 '특정 채널을 선택하여' 그 시점에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저작물을 감상'하는 것이므로 이용자 측면에서는 기존 방송과 동일하다고 느낄 수 있다. 갈수록 인터넷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시에 송신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세부 기능도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발전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실에서는 FAST 서비스에 개인화 기능이 추가되는 등 방송과 전송이 포함된 복합서비스의 형태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서비스가 복합된 FAST 자체를 한 가지 개념으로 특정하여 취급하거나 정의할 필요는 없으며, 개인화 방식에 따른 개별 서비스에 대한 법적 성질을 서비스의 유형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한 견해에 따르면 만일 뒤로가기 기능이나 이어보기 기능이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시간이나 횟수 등의 제한이 없이 프로그램의 시청에 이용자의 선택과 자율성이 보장되어 수신의 동시성으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전송과 유사하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웹캐스팅(Webcasting), IPTV, FAST 서비스는 모두 인터넷을 이용한 송신 서비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기술적인 특성과 법적 구조의 차이에 따라 규제 방식과 권리처리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웹캐스팅(Webcasting)은 공개 인터넷망(Open Network)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형태의 서비스로, 특정 방송 편성에 따른 채널형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고 개별 사업자 또는 플랫폼이 독자적으로 구성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형태까지 포괄한다. 기술적으로는 이용자의 접속 요청을 통해 송신이 개시되는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많으나, 이용자가 콘텐츠의 재생 시점이나 편성을 실질적으로 선택하거나 통제하기는 어렵고 다수의 이용자가 동

7) 김종원, "새로운 OTT, FAST의 가치", 〈방송영상 트렌드&인사이트〉 2022 3rd VOL.32,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50쪽.

일 시점에 동일한 내용을 수신한다는 점에서는 실시간·비주문형 송신의 성격을 가진다. 이와 같이 웹캐스팅은 기술적 구조상 쌍방향성이 존재하더라도, 이용자 효용의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방송과 유사한 속성을 나타낸다.

IPTV의 경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서,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송신한 방송 신호를 통신사가 관리하는 폐쇄망(Managed Network)을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를 가진다. 폐쇄망이란 특정 사업자(통신사·기업·기관 등)가 접속 주체, 트래픽 경로, 네트워크 품질(QoS), 가입 인증, 장비 규격 및 대역폭 등을 통제·관리하는 IP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네트워크 품질과 전송 안정성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반면, 인프라 구축과 사업자에 대한 공적 규제 및 진입 요건이 수반된다.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서비스는 웹캐스팅과 마찬가지로 공개 인터넷망(Open Network)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나, 광고 기반의 채널형 편성 구조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공개망은 누구나 접속 가능한 인터넷 환경으로서 접속경로, 혼잡도, 지연 여부 등이 이용 시점이나 지역, 통신사업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네트워크 품질을 사업자가 직접 통제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접근이 가능하고 다양한 단말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과 확장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처럼 웹캐스팅, IPTV, FAST 서비스는 네트워크 구조와 법적 규율 체계에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시청자의 이용 경험 측면에서는 실시간으로 동일한 콘텐츠를 시청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체감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유형을 저작권법상 전송과 유사하게 볼 것인지, 또는 방송에 가까운 실시간 공중송신으로 평가할 것인지는, 단순한 기술적 전달 방식이나 네트워크 구조보다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효용과 이용 양태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인터넷 음악 송신 서비스 유형

인터넷 음악 송신 서비스는 주로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개시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주문형 스트리밍 방식과 모든 이용자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내용을 수신하는 방식의 실시간 송신 형태가 있으며, 방송사업자의 동시송신, 매장음악서비스(BGM)가 있다.

주문형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는 멜론, 지니뮤직, 스포티파이 등이 있으며, 이용자가 선택한 시점에 음원을 스트리밍하는 형태로 전형적인 전송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주문형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도 전송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

사할 수 있으며, 전송권은 배타적 권리이므로 사전에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한다. 사용료 징수 규정상으로는 전송사용료가 적용된다.

지상파 라디오 방송의 인터넷 동시송신은 대표적으로 KBS 콩, MBC mini, SBS 고릴라 등이 있다. 이러한 동시송신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내용을 공중에게 일방향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방송 행위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므로 방송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저작권자는 방송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징수규정에 따라 방송사용료와는 별도로 마련된 웹캐스팅 사용료 중 방송사업자 동시방송 항목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실연자는 생실연에 대하여 방송권을 가지며, 상업용 음반의 방송에 대해서는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음반제작자는 방송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상업용 음반이 방송될 때에는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매장음악(BGM)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샵BGM, Biz Melon, 샵캐스트 등이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가 미리 편성한 음악 채널을 매장이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재생하는 서비스로서 디지털음성송신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공중이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내용을 수신하게 되는 동시성을 가지면서도, 비주문형의 방식이므로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디지털음성송신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징수규정에 따라 웹캐스팅 사용료 중 매장음악서비스 항목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외에 인터넷 음악 송신 서비스의 경우 주문형 스트리밍 방식과 실시간 송신 방식이 혼합된 복합적 형태로 제공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예컨대 일반적인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아티스트·장르 기반 라디오(스테이션) 기능은 이용자의 선택으로 송신이 개시되지만, 이후에는 플랫폼이 편성한 음악이 실시간으로 연속 송신된다는 점에서 주문형 스트리밍과 실시간 송신 방식이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이러한 복합형 서비스를 대상으로 '결합서비스 사용료' 항목을 두고 있으며,[8] 개별 서비스 유형별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합서비스의 특성을 고려여 협의를 통해 최종 사용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9]

8)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제26조의 2(결합서비스의 사용료) 제23조의 2 제5항 이외에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사용료는 협회 규정에서 정한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합서비스의 성격을 감안하여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9)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제26조의 2(결합서비스의 사용료)에 따르면 예를 들어 주문형 스트리밍와 동시방송이 혼합된 복합서비스의 경우 결합사용료 적용 예시로는 [(매출액 x 10.5%(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매출액 × 2.5%(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이렇듯 인터넷 송신 서비스의 구조와 시장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인터넷 실시간 송신 관련 법제 정비의 방향성 설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3. 방송과 통신의 개념

(1) 방송의 개념

1) 저작권법상 방송

저작권법상 방송은 크게 저작물 이용행위로서의 방송과 저작인접권에서의 방송으로 나뉠 수 있다. 저작물 이용행위로서의 방송은 우리 저작권법 제2조제8호에서의 방송의 정의와 관련이 있는데, 여러 차례 법을 개정함에 따라 그 의미도 점차 변화하였다.

1986년 전부개정 때는 방송의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방송"은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차단되지 아니한 동일구역 안에서 단순히 音을 增幅送信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방송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유·무선을 불문하고 내용물이 반드시 저작물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등 베른협약에 비해 방송의 적용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0] 또한 방송의 정의에서 "차단되지 아니한 동일구역 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송신 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하여 공연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함으로써 방송과 공연을 구분 짓고 있다.

2000년 개정법에서는 전송의 개념이 신설됨에 따라 방송과 공연의 정의도 변경되는 등 영향을 끼쳤다. 방송의 정의가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로 변경되었다. 방송의 요건으로 '수신의 동시성'을 명시함으로써 방송권과 전송권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았다.[11] 기존 저작권법에서 방송 정의의 단서 조항으로 존재하던 "차단되지 아니한 동일구역 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송신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문구는 삭제되었고, 이와 함께 공연의 정의도 개정되었다. 개정된 공연의 정의는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제2조제3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송권의 신설을 계기로 저작권법은 공중송신을 방송과 전송으로 구분하는 한편 공연은 공중송신과 구별되는 독립된 이용행위로서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이 가운데 방송은 동시성 요건을 전제로

10) 방석호,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개정판)」,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108쪽.
11) 오승종, 「저작권법(제6판)」, 박영사, 2024, 545쪽.

하는 송신 행위로 한정됨에 따라 기존 개념에 비해 그 개념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공연의 경우는 공간적 차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까지 포함하도록 규정됨으로써 그 개념 범위가 종전보다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12)]

송신을 방송과 전송의 이원적인 권리로만 제한하여 규정한 것으로는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이용 형태의 송신을 포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13)] 2006년 전면 개정을 통해 '공중 송신'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신설하고 하위에 '방송'과 '전송'의 영역을 배치하였다. 따라서 방송을 정의함에 있어 "공중송신 중에서"라는 범위로 한정하여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방송'과 '전송'의 개념 구별은 저작인접권자로서의 방송사업자를 선별하기 위한 정도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평가[14)]된다. 개정법에서 공중송신과 함께 신설된 개념이 디지털음성송신인데, 디지털음성송신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5)] 이는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다는 점에서는 전송과 유사하지만 동시에 수신된다는 점은 방송과 유사하여 기존의 음악 웹캐스팅이 방송인지 전송인지 의견이 분분했던 점을 감안하여 신설된 개념으로, 영상은 제외한 채 음에 한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16)]

저작자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방송권이 미치는 '방송'과 저작인접권의 객체(대상)로서 '방송'은 다른 것이다.[17)] 저작인접권에서의 방송도 이용행위로서의 방송과 저작인접권의 객체(대상)인 저작인접물로서의 방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연자는 그의 (생)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지며,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실연자의 방송권,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 실연자·음반제작자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에서의 방송은 제2조 정의 규정에서의 방송 개념과 동일하게 이용행위로서의 방송행위를 의미한다. 반면에, 저작인접권의 객체(대상)인 저작인접물로서의 방송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의 '방송'은 방송사업자

12) 이호현, "미디어융합에 의한 저작권법상 방송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지식재산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22쪽.
13) 오승종, 앞의 책(주11), 545쪽.
14) 방석호, 앞의 책(주10). 109쪽.
15) 저작권법 제2조제11호.
16) 이호현, 앞의 논문(주12), 26~27쪽.
17) 최경수·오기석, 「디지털방송과 저작권법」, 문화부, 2003, 5쪽.

가 방송신호를 송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은 신호이나, 실질적으로는 방송물이나 방송프로그램의 형태로 보여지는 것이다.

2) 방송법상 방송 개념과 저작권법상 방송의 개념 간의 관계

저작권법상 방송 개념과 방송법상 방송 개념이 차이가 있는데, 이는 방송법은 행정규제를 위한 법률이고, 저작권법은 사유재산권으로서 저작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법률로서 두 법의 제정 목적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양자 간의 용어와 그 해석을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18]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법에서의 방송의 개념과 방송법상의 방송의 개념은 서로 다르므로 매체, 전달방식 등에 따라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이 이용되는 방식에 따라 개념을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과 방송법에서 모두 방송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나,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 등의 발달로 방송의 서비스 형태가 변화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시대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양 법에서 공통적으로 방송은 모두 공중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수신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방송법은 1963년 제정 당시 방송을 "공중에게 수신될 것을 목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현상을 보도·평론하며, 교양·음악·연예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으로 정의하였다. 같은 시기에 저작권법은 방송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나, 방송의 정의가 처음 도입된 1986년 저작권법과 비교해 보면 두 법은 공통적으로 방송을 공중을 대상으로 하며, 수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방송법에서는 무선통신의 송신만을 방송으로 보고 있는 반면 저작권법에서는 무선과 유선 모두를 방송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19]

한편, 1980년 언론통폐합으로 언론기본법이 제정[20]됨에 따라 1963년 방송법은 폐지[21]되었다가 1987년 방송법이 다시 제정되었다. 1987년 제정 방송법은 방송을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과 교양·음악·오락·연예 등을 공중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방송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설비 중심의 규제 추세에 따라 방송의 주체인 방송국의 개념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이때의 방송국은 무선국의 일종으로서 1961년 제정된 전파관리법(1991년 폐지)에 규정된 개념이며, 방송국의 허가가 방송국에 대한 설비 허가와

18) 최경수·오기석, 위의 책(주17), 9쪽.
19) 이호현, 앞의 논문(주12), 95쪽.
20) 법률 제3347호, 1980. 12. 31., 제정
21) 법률 제3347호, 1980. 12. 31., 타법폐지 제2조 (폐지명령)

방송사업에 대한 면허로 이원화되는 체제를 형성하게 된다.[22]

이후 2000년 방송법은 방송을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종합유선방송 등을 포함하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방송을 규정하였다. 다만, 2000년 방송법의 경우 방송서비스를 전송수단에 의해 구분하고 있는데, 전송수단에 의해 방송 사업을 구분하게 되면 새로운 전송수단에 의한 방송형 서비스들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방송 개념이 추가[23]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2004년 방송법에서는 방송을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방송개념을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등으로 구분[24]하고 있다. 방송용어에 대한 정의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종래의 방송법이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개념을 정의했다면, 2004년 방송법에서는 매체별[25] 또는 각각의 미디어적 특성과 주로 제공되는 콘텐츠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별 방송에 대한 유형으로 나눈 것[26]이다. 이는 2000년 방송법 제정 당시 방송의 개념에 포함되지 못했던 지상파 멀티미디어방송, 위성멀티미디어방송, 데이터방송 등 디지털 시대에 각국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신규 방송서비스에 대한 규율 근거가 마련되었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경계영역적 서비스 중 일부가 방송법의 규율체계 내에 포함됨으로써 2000년 방송법보다는 진일보한 방송 개념을 담고 있다.[27]

또한,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방송법에서

---

22) 정두남·정인숙, 「방송개념 재정의를 통한 규제체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7, 260쪽.

23) 황근, "디지털시대에 대비한 방송법 개정 논의의 방향과 한계 : 방송위원회 방송법 개정안 분석을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방송학회, 2003, 108쪽.

24)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25) 지성우, "멀티미디어 시대에 있어 방송개념의 확장 가능성에 관한 연구 : BcN 통합망하에서 인터넷 방송의 규제문제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제16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04, 378쪽.

26) 한종범·이재호·이현규 외, 「방송론 : 아날로그를 넘어 디지털 뉴미디어까지」, DIMA 출판부, 2008, 20쪽.

27) 지성우, 앞의 논문(주25), 378쪽.

말하는 방송사업자는 여러 가지 규제 등을 받는 사업자로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저작권법과 방송법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의 정의에 있어서도 이를 구분하여 달리 봐야 할 것이다.

(2) 통신의 개념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통신을 소식을 전함 또는 우편이나 전신, 전화 따위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8] 통신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기통신, 무선통신, 정보통신 등이 각각의 법률에 따라 정의되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전기통신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29]을 말하는 것으로 방송과 구분되는 협의의 개념으로 송신행위뿐만 아니라, 수신행위까지 규정하고 있다.

전파법에서는 무선통신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신호·문언·영상·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30]으로 무선통신을 말하는데 전기통신이 유·무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을 모두 포함하는 것에 비해 전파법에서의 무선통신은 무선의 방식을 이용한 통신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31]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32]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정보를 제공하고 매개하는 활동과 수단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정보통신망법'에서의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33]로 여기서 "전기통신설비"란 단순한 네트워크(망)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전자적 방식의 기기와 설비(유·무선, 광선, 온라인 네트워크 등)를 모두 포함하므로 여기에서의 통신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행위로 송수신뿐만 아니라, 망에 의해 처리, 보관, 전송되는 모든 정보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2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5년 8월18일 접속,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29)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30) 전파법 제2조제5호의2.
31) 이호현, 앞의 논문(주12), 190쪽.
3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
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2조(정의) 제1항제1호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근거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방송법, IPTV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른 사업자별 개념 구분과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 방식에 따른 개념 구분은 별개로 이해되어야 하며, 저작권법이 개별 사업법의 개념 정의에 맞추어 개념을 정의하거나 그에 따른 구분을 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법상의 개념은 사업적 차원이 아니라, 저작물 이용관계에 따라서만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3) 방송과 통신의 차이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방송은 한정된 전파자원을 이용하며,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만 전파를 송출하거나 수신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의 수신자를 대상으로 무선 또는 유선을 통해 정보를 일방향으로 보낸다. 반면 통신은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서 쌍방향적 교환이 방송과 구분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통신은 양방향적인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방송과 달리 송신영역과 수신영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또한, 방송에서와 같이 수신자를 불특정 다수로 규정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신자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으로 본다.[34]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유선 및 무선의 방식으로 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파생된 '방송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도 이 정의를 이용하고 있으며, 저작권법도 방송 및 온라인상의 송수신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법률 전반의 통일성을 위해 '통신'이라는 용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35]

전통적으로 통신과 방송은 서로 다른 분야로 간주 되어 이에 따른 개념 또한 상이한 것으로 논의 되어왔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신망과 방송망 간의 광대역화 및 복합단말기 등의 출현으로 별개의 분리된 영역이었던 방송과 통신 부분의 망과 서비스의 구분이 점차 소멸되어 가면서 두 영역간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36]

(4) 요약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저작권법은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공중송신 등의 개념을 도입하며 저작물 이용 형태를 세분화해 왔으나, 이들 개념만

34) 이원태·유지연 외, 「방통융합의 사회적 이슈와 정책과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21쪽.
35) 김찬동·박윤석·김세창·안진영, 「공중전달 개념에 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55쪽.
36) 김민호·김현정, "방송통신 융합의 기술적 개념과 법적 개념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46권,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274쪽.

으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송신 서비스를 기존의 법적인 틀 안에 포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송신 행위를 우리 저작권법에서 어떻게 포섭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방송법 등 사업 규제적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기보다는, 기술적 매체나 송수신 방식이 중심이 아닌 저작권법 고유의 목적에 맞게 저작물이 이용되는 방식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 나아가 기술적 매체의 발전과 서비스 형태의 다변화로 새로운 송신 유형을 저작권법 체계 안에서 효과적으로 담아내고 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

4. 국제조약 및 주요국 입법례

(1)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전통적 의미의 방송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이 수신 안테나 등 수신 설비를 통해 수신하는 형태의 송신을 전제로 하며,[37] 특정 수신자와 개별적 연결을 전제로 하는 통신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베른협약은 방송을 포함한 공중전달 권리를 최초로 체계화하고, 저작자에게 부여할 이용행위를 설정한 국제규범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점에서 국제조약상 방송의 개념을 검토하는 것은 저작자 권리부여 범위를 논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새로운 송신 형태를 기존 방송으로 포함할지 아니면 저작물의 공중전달 이용 형태를 별도 법적 권리로 구성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베른협약은 방송에 대한 명시적 정의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통해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로서 무선에 의한 공중전달을 명시하고,[38] 유선이나 재방송에 의한 공중전달, 확성기나 유사 장치에 의한 공중전달 등 다양한 전달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39]

나아가 베른협약은 제14조제1항 (ii) 및 제14조의2 (b)에서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유선에 의한 공중전달, 방송 및 그 밖의 공중전달 등 다양한 이용 형태를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베른협약이 방송을 단순히 무선 송신에 한정된 개념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기술적 전달 수단과 관계없이 저작물이 공중에게 전달되는 이용 형태 전반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베른협약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의 'Communication to the Public'과 동조 동항 제3호

37) 김찬동·박윤석·김세창·안진영, 앞의 책(주35), 9쪽.
38) 베른협약 제11조의2제1항제1호.
39) 정윤경, 「저작권과 방송 콘텐츠 유통」,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88쪽.

에서의 'Public Communication'은 구분되어 이해될 필요가 있다. 'Communication to the Public'이 원거리에 있는 청중에게 전달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Public Communication'은 공간 내에 있는 청중을 대상으로 2차적 전달을 의미하며, 이는 공연의 의미인 'Public Performance'나 낭독의 의미인 'Public Recitation'과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공연의 의미에 가깝다는 점을 알 수 있다.[40]

로마협약에서의 '방송사업자'는 무선에 의한 송신을 행하는 자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로마협약 제3조제(f)항은 "'방송'이란 공중이 수신하도록 무선 방법(Wireless Means)에 의하여 소리, 또는 영상과 소리를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로마협약이 방송의 정의에 유선방송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동 협약의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유선방송을 보호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호되지 않는 것은 오직 동 협약상의 보호일 뿐이다. 로마협약 제12조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또는 그러한 음반의 복제물이 방송(Broadcasting) 또는 공중에의 전달(Any Commucication to the Public)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는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또는 이들 양자에게", "단일의 공정한 보상(A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업용 음반을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직접 사용한 자의 보상금 지급의무에 관한 위 규정은 동 협약 제16조의 유보 규정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임의적 규정이다.[41]

베른협약 등 과거 조약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송뿐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을 통한 통신까지 저작권의 규율대상으로 포섭한 국제규범은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WCT)과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조약(WPPT)이었다.[42] WCT 제8조를 통해 모든 종류의 저작물의 포괄적인 형태의 이용에 대해 공중전달권의 적용 범위를 넓혔다. 특히 디지털 송신이 포괄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까지 확대하였다.[43]

WCT에서는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은 없으며, 제8조에서 저작권자의 공중전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중전달권'은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이시적·쌍방향적 서비스를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44]를 의미한다. 따라서, WCT상 공중전달은 우리 저작권법의 공중송신에 상응하는 개념이며, 공중전달의 개념에

40) Id. 11bis-6.(김찬동·박윤석·김세창·안진영, 앞의 책(주35), 11쪽. 재인용)
41) 허희성,「로마협약과 음반협약의 해설」, 한국저작권법학회, 1986, 33~63쪽.
42) 손경한 편저, 앞의 책(주1), 402쪽.
43) 문화체육관광부,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해설, 1997, 45~46쪽.
44) 이해완, "인터넷방송의 저작권법상 위상정립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2001, 20쪽.

우리 저작권법상 '전송'의 개념에 해당하는 인터넷상의 이용 제공(Making Available)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선에 의한 전달' 개념을 통해 공중전달의 하위 개념으로 방송도 포섭된다고 볼 수 있다.

WPPT에서는 "방송"과 "공중전달"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방송은 "공중이 수신하도록, 무선에 의하여 소리, 영상과 소리, 또는 그 표현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45]하고 있으며, 공중전달은 "방송 이외의 매체에 의하여 실연의 소리, 음반에 고정된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46]하고 있다.

WPPT에서의 방송은 '방송'의 개념을 무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유선 인터넷방송은 구체적인 서비스 방식에 관계없이 '방송'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47] 따라서, 실시간 웹캐스팅을 포함한 인터넷송신이 이러한 '방송'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음은 명백하다.[48]

WPPT 조약상 유선에 의한 방송은 방송의 영역이 아니라 공중전달의 영역에 포섭되어 규율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유선에 의한 방송도 방송의 영역에 포섭하고 있어 WPPT의 방송 영역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다.[49]

베른협약이나 로마협약 또는 WIPO실연·음반조약에서의 '방송'이란 무선방송에 한정되는 개념이지만, 각 조약의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유선방송을 보호하려는 것을 허용되고 있다.[50]

WPPT에는 WCT와 달리, 공중전달의 개념에 우리 저작권법상의 '전송'에 해당하는 '이용 가능화(Making Available)'를 포함한다는 언급이 없는데, 그것은 제10조와 제14조에서 각각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이용 가능화권을 별도로 인정하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중전달의 개념에서는 제외하기로 한 취지이다. 따라서 WPPT에서는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공중전달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아닌 보상청구권(제15조)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용제공행위에 대해서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제10조, 제14조). WCT상의 공중전달의 개념이 WPPT에 비하여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51]

---

45) WPPT Article 2(f).
46) WPPT Article 2(g).
47) 이해완, 앞의 논문(주44), 22쪽.
48) 이해완, "인터넷송신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방향 연구", 〈성균관법학〉 제33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449~450쪽.
49) 김찬동·박윤석·김세창·안진영, 앞의 책(주35), 63쪽.
50) 박성호, "저작권법상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관련 쟁점의 재검토-키메라의 권리, 디지털음성송신권의 생성 및 전개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21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17, 93쪽.
51) 이해완, 앞의 논문(주48), 450쪽.

〈 WCT 및 WPPT상 공중전달 관련 권리 비교 〉

구분	WCT	WPPT
방송권	○	생실연 방송 ○
		(실연이 고정된) 음반 ×
공중전달권	○	×
이용제공권	○	○
방송·공중전달에 대한 보상청구권	×	(실연이 고정된) 음반 ○

〈 WCT 및 WPPT상 공중전달과 이용제공의 관계 〉

WCT	WPPT
	

WPPT 제15조에 따르면 “Broadcasting” 은 WPPT 제10조와 제14조에서의 배타적 권리인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과는 구분하면서도 무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는 방송 이외의 모든 형태의 송신은 “Any Communication to the Public”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에 대한 전달을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보상청구권을 향유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인터넷 실시간 송신을 방송으로 해석하는 것이 국제조약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에서는 저작인접권 보호조약인 로마협약과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현대화하는 등 보완하여 시청각 실연(Audio Visual Performances)의 보호도 포함하였다.[52] 베이징조약 제11조에 따르면 실연자는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그의 실연을 방송하고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53] 방송의 개념은 WPPT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며, WPPT와 마찬가지로 방송, 이용제공, 공중전달을 개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WPPT와 차이점으로는 WPPT의 경우 실

52) WIPO, Main Provisions and Benefits of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2016), p.2.
53) Beijing Treaty Article 11

연자에게 공중전달에 대해 독점적 권리 없이 보상청구권만을 부여하는 반면, 베이징 조약에서는 실연자에게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그의 실연을 방송하고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각국이 배타적 권리 대신에 보상청구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

또한, 우리는 1998년부터 방송과 방송사업자의 정의 등에 대한 사항을 의제로 다루고 있는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이하 SCCR)을 통해 WIPO 방송사업자 조약(안)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송사업자 조약의 의제 중 관련 쟁점으로는 방송과 방송사업자의 정의와 연관하여 컴퓨터 네트워크 송신을 본 조약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되었으며, 관련하여 주요국간 의견 대립이 있었다.

제43차 SCCR에서는 '방송'의 정의에서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한 송신을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인터넷 송신이 방송의 범위에 포함되며, 유선·케이블·위성·컴퓨터 네트워크 방식·기타 수단 등 모든 송신 형태가 방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54]

제44차 SCCR에서는 '컴퓨터 네트워크 송신 제외' 문구를 삭제하고, 제43차에서 제3조(적용범위) 제1항(b)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송신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제44차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다.[55] 또한, 43차 회의 당시 일본은 방송에 대해 "선형(Linear)"일 것 요건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전통적 방송사업자만을 조약 범위로 한정하려는 입장을 표명하여 제44차 때 해당 내용이 방송사업자의 정의에 추가되었다.

제45차 SCCR에서는 조약의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방송'의 정의를 삭제하고 '방송사업자'의 정의에 통합하여 '방송사업자'란 "신호로 전달되는 프로그램을 조합하고 편성하는 등 공중이 수신하기 위한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송신하는 것에 대해 편집 책임을 지고 방송을 기획하는 법인을 말한다. 그러한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은 선형적인 프로그램 흐름을 구성한다."라고 규정하였다.[56] 방송사업자의 정의 규정상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방송은 기술중립적 측면에서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공중이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을 포함하여 어떠한 수단으로든 송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케이블, 위성, 컴퓨터 네트워크 및 기타 수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터넷 송신을 하는 것도 방송사업자로 보고 있다. 다만, 적용범위 조항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송신을 제외할 수 있는 유보 가능 조항을 두어 조약 이행의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즉, 향후 조약이 채택되고 가입을 상정하게 될 경우 제2조 방송사업자의 범위

54) WIPO SCCR/43/3.
55) WIPO SCCR/44/3.
56) WIPO SCCR/45/3.

에 자국법과 정합성 측면에서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의 경우 전통적 사업자로 한정하거나, 인터넷(웹캐스팅)에 대한 송신을 제외하는 등 내용을 명시하여 유보 선언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2) 주요국 입법례

1)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방송사업자의 특정한 온라인 송신 및 텔레비전·라디오 프로그램의 재송신에 관련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행사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이사회 지침 93/83/EEC을 개정하는 2019년 4월 17일 2019/789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은 특정한 유형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송을 보조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과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재송신"에 대한 권리 처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주로 국경을 넘나드는 방송의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57]

이는 방송에 보조적인 온라인 서비스의 초국경 제공을 확대하고 다른 회원국에서 송출되는 TV 라디오 프로그램의 디지털 재송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신국 원칙(Country of Origin Principle)'을 제한된 온라인 서비스로 확대하고, 특정한 조건하에서 인터넷을 통한 재송신 서비스의 권리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58]

1993년 위성방송 및 유선재송신 지침만으로는 위성방송의 온라인 송신에 대응하기 어렵고 온전한 동시수신 목적의 송신 외에도 원방송을 보완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송 후 제한된 기간 내에 다시 접근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른바 Catch-up 서비스)에 대해서도 방송사업자가 규율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논의 등이 있어, 이를 제2조 1.에 '보조 온라인 서비스'(Ancillary Online Service)라는 이름으로 입법하는 등의 내용이 본 지침에 담겨 있다.[59]

이 지침의 핵심 내용 중 첫 번째는 본국적용원칙(Country of Origin Principle)이며, 두 번째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케이블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재송신되는 것에 대한 권리행사는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는 집중관리단체관리 의무조항이고 세 번째는 제한된 직접공급(Direct Injection)에 관한 것이다.

---

57) 조형찬, "저작권법상 공중이용제공-권리의 유형과 방송사업자의 개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지적재산권법전공 박사학위논문, 2024, 332쪽.

58) Tambiama Madiega, "Regulating online TV and radio broadcasting", EPRS(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2019. 3., p.1~2.

59) 박희영, "유럽연합에서 방송사업자의 디지털 플랫폼 활용과 저작권 해결 방안 - 보조 온라인 서비스와 Catch-up 서비스", 〈방송문화〉 제422호(2020년 가을호), 한국방송협회, 2020, 126~139쪽.

독일 정부는 2019년 5월 17일 발효된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EU) 2019/790)과 2019년 4월 17일 발효된 '온라인 위성방송 및 유선 재송신 지침'((EU) 2019/789)을 국내법으로 이행하였다.

2) 독일

독일 저작권법은 방송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제20조에서 방송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라디오 및 텔레비전 무선방송, 위성 무선방송, 유선방송 또는 유사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공중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60]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 저작권법은 우리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유·무선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방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독일 저작권법상으로도 실시간 웹캐스팅은 '공중에 대한 이용제공권'에 의한 규율대상이 아니라 방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라디오나 TV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인터넷상의 동시재송신(Simulcasting)하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방송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61]

독일 저작권법상 방송의 개념에 IPTV 방송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62] 일반 웹캐스팅은 방송 개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63] 이는 단지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한 송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방송 개념에서 제외하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고 그 점에서 방송 개념을 다소간 확대하는 입장을 보이긴 하지만, 적어도 '수신의 동시성'이라는 요소를 방송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방송과 실질적인 면에서의 유사성이 크지 않은 일반 웹캐스팅의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방송으로 보는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64]

독일 저작권법 제19a조에서는 일반 대중이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유선 또는 무선으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권리로 일반 대중의 접근권(일명 이용제공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저작권법상 전송권에 해당하는 권리이다. 또한, 독일의 경우 생실연에 대한 방송권(독

60) 독일 저작권법 제20조.

61) Wolfgang Büscher/Stefan Dittmer/Peter Schiwy, a.a.O., S.2116.(박성호, 앞의 논문(주50), 88쪽. 재인용)

62) "利用可能化との関係を含めて", NBL 1124(2018), 68頁은 이 규정의 "유사한 기술적 수단"에 대하여 "웹캐스팅이나 사이멀캐스팅과 같은 인터넷상의 스트리밍 송신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웹캐스팅을 '유사한 기술적 수단'에 의한 방송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독일 주석서의 입장은 그와는 다른 해석을 시사하고 있다. 이해완, 앞의 논문(주48), 465쪽 재인용.

63) 예컨대 독일 저작권법 주석서 중 하나인 Dreier, Thomas & Gernot Schulze, Urheberrechtsgesetz(3. Aufl.), 2008, §15.30은 "기술적인 구성과 사회적인 외양의 측면에서 웹캐스팅과 사이멀캐스팅은 제20조의 방송과 제19조a의 전송 사이에 위치한다"라고 하면서 독일 저작권법 제15조제2항은 모든 무형적 형태의 이용행위를 포괄하므로, 위와 같은 웹캐스팅 등도 제15조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해완, 앞의 논문(주48), 465쪽 재인용.

64) 이해완, 앞의 논문(주48), 465~466쪽.

일 저작권법 제78조제1항제2호)을 인정하고,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이용한 방송에 대해서는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독일 저작권법 제78조제2항제1호)

3) 영국

영국 저작권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CDPA)은 같은 영미법 체계인 미국 저작권법과는 달리 방송을 규정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 있으며[65] 인터넷송신 중 비주문형에 해당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명확하게 '방송'의 개념에 포함시킨 입법사례에 해당한다.[66]

영국 저작권법은 방송을 시각 영상, 소리 또는 기타 정보의 전자적 송신으로서, (a) 공중의 구성원이 동시에 수신하도록 송신되고, 합법적으로 수신될 수 있거나, 또는 (b) 공중의 구성원에의 제공을 위해 송신하는 자에 의해서만 정하여진 시간에 송신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송신 중 (a) 인터넷과 기타 수단을 통해 동시에 일어나는 송신, (b) 생방송의 동시송신, 또는 (c) 송신을 책임지고 있는 개인이 제공한 프로그램 서비스, 즉 그가 결정한 예정된 시간에 송신하는 서비스의 일부를 형성하는 기록된 동영상 또는 소리의 송신을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다.[67] 이렇듯 영국의 경우에는 방송에 대한 정의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생방송의 인터넷 동시송신'을 방송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인터넷 송신이 라고 하더라도 동시성이나 일방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유사 주문형(Near on Demand) 송신은 방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다. 즉, 우리 저작권법상 방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방송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저작권법상 실시간 웹캐스팅의 경우 방송에 해당한다.[68]

영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방송'을 저작물의 일종으로 보고, 방송사업자에게 저작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특성과 관련성을 가진다. 영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공중전달'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제20조제2항에서 '공중전달'은 전자적 송신에 의한 공중에 대한 전달을 의미하며, 저작물과 관련하여 (a) 저작물의 방송과 (b) 공중의 구성원이 자신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 가능한 그러한 방법으로 전자적 송신에 의해 저작물을 공중에 이용제공 하는 것(우리의 전송)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전달은 우리 법상의 공중송신에 가까운 개념으로 방송과 전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69]

65) 이호현, 앞의 논문(주12), 244쪽.
66) 이해완, 앞의 논문(주48), 463쪽.
67) 영국 CDPA of 1988 s.6(1).
68) 이호현, 앞의 논문(주12), 245~246쪽.
69) 이해완, 앞의 논문(주48), 464~465쪽.

영국의 경우에는 생실연의 방송(공중전달 포함)에 대해서는 실연자에게 방송권(영국 저작권법 제182조제1항(b))을 인정하고, 음반의 공중전달에 대해서는 실연자에게 보상청구권(영국저작권법 제182조D조)을 인정하지만, 영상물의 공중전달에 대해서는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1997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자에게 공중송신권을 인정하고, 공중송신의 개념 안에 방송, 유선방송, 자동공중송신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였다.

4) 일본

일본 저작권법 제2조제1항제7의2는 공중송신을 "공중에 의하여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무선통신 또는 유선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송신(동일한 자의 점유에 속하는 구역 내에서의 송신 제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70] 이는 일본 저작권법상 공중송신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공중 송신과 개념이 거의 동일하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방송은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따른 송신을 말하는 것이므로 방송과 유선방송이 모두 저작권법상 방송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본 저작권법은 무선과 유선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동시성을 지닌 것은 방송 또는 유선방송에 해당하지만, 동시성 없이 공중의 요구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자동공중송신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71]

일본은 공중송신권의 개념 안에 방송, 유선방송, 자동공중송신이 포함되고, 자동공중송신의 개념 안에 송신가능화가 포함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72]

'자동공중송신'이란 공중송신 중에서 공중으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자동적으로 송신하는 것(방송 및 유선방송 제외)을 말한다.[73] '자동공중송신'은 "공중으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일체를 뜻하며, 공중의 개별 구성원이 저작물 등을 수신할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 표지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유·무선도 불문하므로, 방송과 유선방송을 제외한 인터넷 송신 형태의 공중송신이 대체로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신의 동·이시성을 불문하는 개념이다.[74]

우리 저작권법의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정의 중 "그에 따라 이어지는 송신"이 일본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자동공중

70) 일본 저작권법 제2조제1항제7의2.
71) 이호현, 앞의 논문(주12), 249쪽.
72) 松村信夫=三山峻司, 『著作権法要説 - 実務と理論』, 世界思想社, 2009, 124頁.
73) 일본 저작권법 제2조제1항제9의4.
74) 조형찬, 앞의 논문(주57), 290~291쪽.

송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일본 저작권법으로는 '송신가능화'에 해당한다.[75] '송신가능화'는 i) 공중용으로 제공되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된 자동공중송신장치의 공중송신용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거나, 정보가 기록된 기록매체를 해당 자동공중송신장치의 공중송신용 기록매체로서 추가하거나, 혹은 정보가 기록된 기록매체를 해당 자동공중송신장치의 공중송신용 기록매체로 변환하거나 또는 해당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과, ii) 그 공중송신용 기록매체에 정보가 기록되거나 또는 해당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가 입력된 자동공중송신장치에 대하여, 공중용으로 제공되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일련의 행위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해당 일련의 행위 중 최후의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6]

일본은 송신가능화의 유형을 모두 5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먼저 ①공중송신용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자동공중송신에 제공할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는 등의 것을 말하고(우리 저작권법상 전송),[77] ② 정보가 기록된 기록매체를 해당 자동공중송신장치의 공중송신용 기록매체로 추가하는 것은 외부 기록장치를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접속하거나 그 정보가 기록된 기록매체를 동 장치 속에 삽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78] ③ 정보가 기록된 기록매체를 해당 자동공중송신장치의 공중송신용 기록매체로 변환하는 것은 예컨대 이메일 용도로 사용되어 오던 폴더를 이름 바꾸기 등의 기능을 통해 홈페이지용 폴더로 변환하는 등의 것을 말한다.[79] ④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어떠한 장치에 정보를 고정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그대로 자동공중송신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인터넷 방송이나 웹캐스팅이 생중계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을 일컫는다.[80]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성송신은 수신의 동시성을 가지면서 수신자의 요청에 의해 자동적 으로 송신이 개시되는 이른바 기술적 쌍방향성을 가지는바, 이것이 일본 저작권법상으로는 송신가능화의 개념에 포섭된다는 점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일본의 송신가능화는 기술적 쌍방향성만을 요구하고 '수신의 이시성'은 요구하지 않는 개념으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 저작권법상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기타의 공중송신, IPTV에 의한 실시간 송신 등을 모

75) 장민기, "방송 시청 트렌드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 권리 개선 방안 연구-방송의 인터넷 송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24, 81쪽.
76) 일본 저작권법 제2조제1항제9의5.
77) 半田正夫=松田政行編, 『著作権法コンメンタール』(第2版) 1巻, 勁草書房, 2015, 198頁.
78) *Ibid.*
79) *Ibid.*
80) *Ibid*, 199頁; 加戸守行, 『著作権法逐条講義』(六訂新版), 著作権情報センター, 2013, 44頁.

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81] ⑤ 그 밖에, 공중송신용 기록매체에 정보가 기록되는 것은 장치에 고정, 저장됨이 없이 그대로 정보가 입력되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입력되는 정보 또는 매체를 전기통신회선에 접속시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82]

이 경우도 특수한 방식에 의한 것이지만, 우리 법상의 전송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디지털음성송신 또는 기타의 공중송신에 해당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일본 저작권법상은 '자동공중송신 및 송신가능화'와 '방송 및 유선 방송'은 매체의 쌍방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명확히 구별되지만, 우리 법상의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는 것과 '전송'에 해당하는 것 사이의 개념 구별은 일본법상 명확히 행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동공중송신 및 송신가능화의 개념에는 우리나라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 등의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83]

따라서, 일본 저작권법상 '자동공중송신'의 개념은 물론이고, '송신가능화' 개념에도 주문형의 속성을 가진 '전송'만이 아니라 실시간 웹캐스팅 서비스, IPTV의 실시간 송신 등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84]

한편, 일본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방송 시청의 수요가 늘면서 방송사업자들이 자신들의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하였는데 방송의 경우 제한과 예외 규정의 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어 권리처리가 원활하지만, 인터넷상에서의 송신의 경우 권리처리를 위한 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아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송신에 대한 권리처리가 용이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0년 12월 일본 문화청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동시송신', 방송 도중에 처음부터 해당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따라가기 송신', 방송 후에 해당 방송을 일정기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다시보기 송신'을 '동시방송 등'으로 그룹화하여 검토를 진행하였다. '따라가기 송신', '다시보기 송신'은 '방송'과 다른 온디맨드(On-Demand)방식의 서비스로 방송의 범위를 넘어서는 송신이며 '동시송신'과도 달리 같은 정보를 같은 타이밍에 송신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기 송신'이나 '다시보기 송신'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하고 오히려 유선 방송에 의한 동시방송이나, 자동 공중 송신에 의한 동시송신과 비교하여 검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의 동시송신 행위에 대한 법리적 검토 없이 3가지의 행위가 모두 같은 유형과 종류의 행위임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한 것이다. 이에 집중관리단체 등의 권리자 측 다수는 문

81) 이해완, 앞의 논문(주48), 461쪽.
82) 장민기, 앞의 논문(주75), 81쪽.
83) 이해완·김인철·이헌묵,"디지털음성송신의 적격요건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118쪽.
84) 이해완, 앞의 논문(주48), 462쪽.

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일본 예능실연가 단체협의회(CPRA)는 해당 검토에서 WPPT상 배타적 권리 대상이 되는 행위(제10조, 제14조)와 보상청구권 대상이 되는 행위(제15조)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프로그램 동시송신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원활한 권리처리에만 초점을 맞추어 권리자 측으로부터 이용자 중심의 개정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85]

5) 미국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공연권의 개념 범주가 넓어 공연(Perform) 안에 우리 저작권법상 공중송신, 방송, 전송 등을 포함하여 규율하고 있다.

미국은 WIPO 저작권 조약의 '공중송신권'과 WPPT상의 이용제공권(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을 새롭게 도입하여 규정하지 않고 공연권과 배포권 등 기존 권리로 대응하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저작물 송신에 대해서는 '공연'과 '전시' 그리고 '(복제를 수반한) 배포'라는 여러 행위 유형에 따라 이에 관련된 권리(공연권, 전시권, 배포권)로서 대응하고 있으며, 송신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공연권'(내지 전시권)의 문제로서, 복제물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배포권의 문제로서 대응하고 있다.[86]

미국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경우 녹음물을 저작물로 보호함으로써 '녹음물의 저작자'로 보호될 수 있다. 실연자 역시 저작인접권자로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연을 고정할 권리를 부여하는 정도이며[87],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저작인접권자로서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자로 보호된다.

미국 저작권법은 제106조 (6)에 '녹음물'의 공연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는 저작인접권 제도가 없는 미국의 경우 음반제작자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음악저작물 외에 이를 고정한 녹음물을 별도의 저작물로 인정하여 음반제작자를 '저작자'의 지위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88]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 (6)의 공연권은 '녹음물'을 '디지털 송신' 형태로 공중이용제공을 하는 것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배타적 권리이다.[89] 디지털음성송신과 관련하여, 우리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는 이용제공, 즉 전송권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갖고 있지만 디

85) 김세창, "일본의 방송 프로그램 인터넷 동시 송신 관련 개정 논의 경과", 〈이슈리포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86) Ficsor, Mihály, The Law of Copyright and the Internet,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C8.07.(김경숙, "미국 저작권법상 인터넷송신을 위한 권리", 〈재산법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08, 353쪽. 재인용)
87) 이대희,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저작권 쟁점 및 전망", 〈계간 저작권〉 2007 여름호(통권 제78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07, 6쪽.
88) 김현경,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성송신의 법적취급에 관한 고찰 - 미국법제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7권 제3호, 미국헌법학회, 2016, 70쪽.
89) 조형찬, 앞의 논문(주57), 259쪽.

지털음성송신에 대해서는 채권인 보상청구권만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음성송신의 방법으로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여 원칙적으로는 그 권리를 인정하되, 법정허락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두고 있다.[90]

녹음물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방송사업자에 의한 방송을 제외하고)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권리를 공연권의 일종으로 인식하면서, 그 가운데 법정허락 대상이 되지 않고 배타적 권리를 온전하게 인정하는 주문형 송신(우리의 전송)과, 법정허락 대상에 포함되어 면책이 되는 비가입형의 방송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법정허락 대상이 되는 기타의 디지털음성송신을 구별하여 취급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크게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으로 개념 구분을 하는 3분할 체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법정허락을 위한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전송과 동일한 법적 취급을 하게 되는 셈인데, 그러한 경우를 별도의 개념으로 구별한다고 하면, 4분할 체제라고 할 수도 있다.[91]

〈 방송 및 공중전달 관련 외국 입법례 비교 〉

국가	주요법령	방송 및 공중전달	실연자의 권리
독일	독일 저작권법(UrhG) 제제19a조, 20조	- 방송 정의 X - 방송권 규정 (유무선 구분 없이 모두 방송, 실시간 웹캐스팅, IPTV 포함)	(생실연) 방송권 (고정된 실연) 이용제공권, 보상청구권 인정
영국	저작권·디자인·특허법 제6조, 제20조	- 방송에 유선, 무선(실시간 웹캐스팅, 인터넷 동시송신 등) 포함	(생실연) 방송권 (고정된 실연) 음반의 경우 보상청구권
일본	저작권법 제2조 (공중송신-방송. 유선방송, 자동공중송신- 송신가능화)	- 방송은 무선과 유선방송 구분 - 자동공중송신은 동시성이 없이 공중의 요구에 의해 행해지는 인터넷 송신 형태의 공중송신 (전송, 실시간웹캐스팅, IPTV 실시간 송신 포함)	(생실연) 방송권, 유선방송권, 송신가능화권 (고정된 실연) 송신가능화권, 음반의 경우 보상청구권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6)	- 공연에 공중송신, 방송, 전송, 인터넷을 통한 송신 포함 - 방송은 공연의 한 형태로 별도 규정× - 녹음물에 대해 디지털 오디오 전송을 통한 공중공연 권리 부여	- 생실연과 고정된 실연을 구분하여 보호하지 않음 - 실연자에 저작인접권 개념이 없음

90) 김현경, 앞의 논문(주88), 77~78쪽.
91) 이해완, 앞의 논문(주48), 458~459쪽.

(3) 요약

국제조약을 국내법에 이행함에 있어 저작권법상 방송의 개념을 어떠한 범위로 설정할 것인지는 회원국의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인터넷 실시간 송신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권리행사와 사용료 산정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이 요구된다.

유럽연합, 독일, 일본의 입법례는 모두 기술 발전에 따른 방송·통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방송 개념을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한 형태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유럽연합은 2019년 온라인송신 및 재송신에 관한 지침을 통해 온라인 송신 및 일정 기간 내 재시청이 가능한 '캐치업'서비스와 같은 이용형태를 방송사업자의 권리체계 내에서 규율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이는 온라인 송신 및 재송신(인터넷을 통한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방송사업자의 권리체계 내에서 규율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전통적 방송과 온라인 송신 간의 경계를 상당 부분 완화하였다. 독일은 2021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중파 방송의 재송신 개념에 인터넷 재송신을 포함하고,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사이멀캐스팅 등 온라인 동시송신을 방송 행위로 포섭함으로써, 기술적 매체가 아닌 이용행위의 실질적 특성을 기준으로 방송권의 적용 범위를 재정비하였다.

일본은 2021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따라가기 송신(キャッチアップ送信)' 개념을 도입하여, 인터넷 동시중계와 유사하나, 한정된 이시성을 부여함으로써, 실시간 방송 중 늦게 접속한 이용자도 처음부터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대신,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기반 방송 서비스를 유연하게 수용하기 위한 입법적 조정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저작권법 개정 전 2020년 일본 문화청 검토 당시에는 기술적, 법리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권리자 측의 반발이 있었고, 방송사업자의 원활한 권리처리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실연자 등의 권리 보호 측면은 등한시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국제조약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우리는 그러한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송신에 대해 기술적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고 저작물 이용 방식에 따른 서비스 형태에 대해 법리적으로 명확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한, 권리자와 이용자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형평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송신 환경에서의 제도적 균형을 모색하여야 하며, 국제조약과의 정합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해외 입법례는 공통적으로 기술적 송신 방식의 차이보다는 '공중에 대한 실질적 이용제공'이라는 본질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이용자의 접근권 간의 조

화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공중송신권의 범위를 기술적 형식이 아닌 저작물 이용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재정립하는 방향으로의 논의가 필요하다.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존 저작권 법체계가 새롭게 등장한 송신 형태를 적절히 포섭하지 못하는 경우에 제도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해석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

5. 현행 저작권법상 공중송신 규율체계와 한계

(1) 공중송신 규율체계의 형성과 구조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의 상위 개념으로 '공중송신'을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 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제7호).

당시 우리 법에서 말하는 방송은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수신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쌍방향의 방송이나 송신의 경우에 적합한 정의라고 할 수 없었다. 또한, 우리 법에서 말하는 방송이 디지털 송신의 개념까지 염두에 두고 입안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92]

우리 저작권법은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중송신 개념 신설 이전부터 단계적인 보완 입법을 추진해 왔다. 2000년 1월 개정(2000.7.1. 발효)에 의하여 저작자에게 전송권을 인정하였으며, 2004년 개정(2005.1.17. 발효)에 의하여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이 인정되었다.[93]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저작물 이용 형태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방송·전송 구분만으로는 다양한 송신행위를 포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94]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 개정법에서 공중송신 개념이 신설되었다. 공중송신이라는 상위 개념을 신설한 취지는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의 세 가지 하위 개념만을 포함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공중에 대한 다양한 송신 형태까지 포괄할 수 있는 열린 개념을 도입하려는 데 있다.[95]

---

9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멀티미디어와 저작권-각국의 동향과 우리 저작권법상 문제점 점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5, 41~23쪽.
93) 이대희, "한국 저작권법제와 인터넷", 〈계간 저작권〉 2012 겨울호(통권 제100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160~161쪽.
94) 오승종, 앞의 책(주11), 544~545쪽.
95) 박성호, 「저작권법(제3판)」, 박영사, 2023, 334쪽.

아울러 2006년 개정법에서는 기존의 음악 웹캐스팅이 방송에 해당하는지, 전송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을 정리하기 위하여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전송 제외)"을 디지털음성송신으로 정의하고, 이를 공중송신권의 일종으로서 새롭게 도입하였다.[96]

한편, 2006년 개정 과정에서 공중송신 개념이 신설되면서 기존에 독립된 지분권으로 규정되어 있던 전송과 방송은 공중송신권의 하위 개념으로 포섭되었다. 그 과정에서 개정 전 방송의 정의에는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개정 저작권법상 공중송신의 정의 규정에 이미 해당 문구가 포함됨에 따라 방송의 정의에서는 동어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조문을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상 방송의 개념에는 유·무선 송신이 모두 포함되며,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송의 개념보다 넓은 것이다. 또한, 저작자는 무선 또는 유선에 의한 모든 송신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고, 유선방송사업자도 저작인접권자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국제조약이나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 비하여 보호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97]

이같이 공중송신의 하위 유형을 구별해 온 제도적 배경에는, 각 이용행위에 대하여 저작물의 잠재적 수요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전제로 고려한 점이 있다. 즉, 시·공간적 제한이 없을수록 저작물 이용의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그에 비례하여 권리 제한의 요건이나 권리 처리 구조를 달리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현행법상 공중송신이라는 상위 개념의 하위 범주로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등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저작재산권 제한에서 구체적 행위 유형별로 다르게 규정된 부분이 많고, 저작인접권에서도 그 법적 취급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은 무형적 이용행위를 시·공간적 제한이 있는 공연, 시간적 제한만이 있는 방송, 시·공간적 제한이 없는 전송으로 구별한 것으로 시·공간적 제한으로 인한 이용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공연보다는 방송이, 방송보다는 전송이 권리 제한에 있어 요건을 엄격히 하고 제한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98]

다만, 인터넷 기반 송신 환경에서는 동시성과 이시성, 일방향성과 쌍방향성이 결합되거나 혼재된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 경험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구분의 실질적 의미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의 구분체계만으로는 새롭게

96) 심동섭, "개정 저작권법 해설", 〈계간 저작권〉 2006년 겨울호(통권 제76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48~49쪽.
97) 최경수·오기석, 앞의 책(주17), 6쪽.
98) 신재호, "지적재산법과 기술의 긴장관계"-IT 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법의 대응을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 Vol.2009 No.55, 세창출판사, 2009, 105쪽.

등장하는 송신 유형을 일관되게 규율하거나 그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기 어려운 한계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현행 공중송신 규정의 해석과 적용

현행 저작권법은 공중송신의 하위 개념으로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개념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신의 동시성과 이시성, 그리고 기술적 일방향성과 쌍방향성이라는 개념 요소를 전제로 하고 있다.

'수신의 동시성'이란 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수신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없고 누구나 동시에 같은 내용을 보거나 들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진 것을 말하며, 반대로 '수신의 이시성'이란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자신이 수신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것을 말한다. '수신의 이시성'은 정보의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주문에 따라 정보 제공의 시간 등이 정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문형' 또는 '주문성'이라는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99] 이에 따라 수신의 동시성과 이시성은 공중송신 하위 개념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 되며, 현행 저작권법은 방송·디지털음성송신에 동시성 요건을, 전송에 이시성(개별 선택) 요건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

공중송신의 유형 구분 기준으로는 이와 함께 '기술적 쌍방향성'과 '기술적 일방향성'이 제시되어 왔다. 일방향 송신(One-way Communication)'이란 정보(신호, 콘텐츠)를 보내는 쪽에서 받는 쪽으로 일방적으로 송신하는 형태를 말하며, 지상파 방송을 비롯하여 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기술적 쌍방향성'이란 수신자의 PC 또는 휴대폰 등으로부터 특정 IP 주소에 대한 송신 요청이 정보 제공자가 관리하는 서버에 입력되면, 그 때로부터 요청받은 IP 주소로 자동으로 정보의 송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100]

즉 '쌍방향 송신(Interactive Communication)'은 전화와 같이 쌍방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송·수신 시스템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음악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하여 주문하고, 그에 따라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주문형 서비스나 지상파 방송의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101] 다만 디지털음성송신에서 말하는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는 전송과 같은 주문형(On-demand) 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며, 송신 개시 방식에 관한 기술적 특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102]

---

99) 이해완, 앞의 논문(주48), 437쪽.
100) 松田政行, 『著作権法プラクティス』, 勁草書房, 2009, 104頁.
101) 오승종, 앞의 책(주11), 562~563쪽.
102)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제4판)」,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147쪽.

이 요건은 전송의 '개별 선택(주문형)'과 구별되는 것으로, 디지털음성송신이 여전히 비주문형 서비스임을 전제로 한다. 즉 누구나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부분을 수신하는 '동시성'이 그 본질적 속성이다.

실제로 '수신의 동시성'이 있는 경우 중에도 이러한 기술적 쌍방향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 경우 자동으로 송신되는 정보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예컨대 음원의 첫 부분부터, 혹은 영상물의 첫 장면부터 송신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용자들과 동일하게 해당 시간에 제공되는 부분 또는 장면이 송신된다. 이는 인터넷의 기술적 혹은 매체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한 웹캐스팅 및 IPTV의 실시간 송신이 이러한 기술적 쌍방향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하여 디지털케이블방송 등의 방송은 설사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의 경우와 달리, 방송국에서 수신자의 구체적인 송신 요청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정보를 방송 영역 내의 각 가정의 수신기까지 송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니라 '방송'에 해당한다.[103]

이와 같이 공중송신의 하위 개념을 구분하는 데 있어 전통적으로는 '수신의 동시성' 이외에 기술적 구조에 따른 송신 방식의 일방향성 또는 쌍방향성도 주요 기준으로 제시되어 왔다. 이른바, 기술적 기준설에 따르면 '방송'은 송신자가 불특정 다수의 수신자에게 일방적으로 신호를 송출하는 기술적 일방향성(One-way Transmission)을 가지며, '전송' 및 '디지털음성송신'은 이용자의 요청 또는 개별적 접근에 따라 송신이 이루어지는 쌍방향성(Interactive or On-demand Transmission) 의 속성을 가진다고 본다.

이에 반해, 송신의 개시가 기술적으로 일방향적이냐 쌍방향적이냐는 기술적 작동상의 차이에 불과하며,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이른바 '이용자 중심설' 또는 '이용자 효용 기준설'에 따르면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의 효용이나 저작물 이용 방식의 측면에서 볼 때, 송신 방식의 기술적 차이는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용자의 콘텐츠 선택 및 통제 가능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104]

이러한 이용자 중심적 관점에서 실제 서비스 유형을 살펴보면 IPTV의 지상파 재송신은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송신한 방송 신호를 별도의 IPTV 사업자가 수신하여 자사의 폐쇄망을 통해 시청자에게 다시 송신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사이멀캐스팅(Simulcasting)은 전통적인 방송사업자

103) 이해완, 앞의 논문(주48), 439쪽.

104) 하동철, "방송·통신 융합시대에서 디지털 송신에 대한 저작권법 규율방안 연구", 미디어와 경제문화(6-1호), SBS, 2008, 104~105쪽; 윤종수, 앞의 논문(주4), 78쪽; 오승종, 이용자 중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밝힌 서면 자문 의견(25.10).

가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을 지상파 등 기존 매체와 인터넷 등 다른 매체를 통해 동시에 송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두 형태는 송신 주체나 기술적 매체에는 차이가 있으나, 불특정 다수의 수신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일방향적으로 송신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방송의 본질적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IPTV의 지상파 재송신과 사이멀캐스팅 모두를 '방송'의 범주로 해석하는 것이 저작권법 체계상 일관되고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오승종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WIPO 방송조약 논의에서도 웹캐스팅을 전통적 방송의 실시간 재송신(사이멀캐스팅)과 독자 프로그램의 실시간 웹캐스팅으로 구분할 뿐, 음성과 영상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해석이 국제적 논의의 방향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기술적 매체나 송신 방식의 세부 차이를 기준으로 권리 보호 범위를 달리하는 것은 국제 기준과도 괴리된 접근이며, 우리 저작권법에서 디지털음성송신과 방송을 구분하는 요소로 제시하는 '쌍방향성' 역시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기술적 차이에 불과할 뿐 실질적 의미가 없으며, 수신의 동시성이라는 효용 측면에서는 두 서비스 모두 사실상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결국 IPTV의 지상파 재송신과 사이멀캐스팅은 그 서비스 방식이나 이용자가 느끼는 효용의 면에 있어서도 기존의 방송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법적 취급에 있어서도 방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는 입장이다.

한편, 오늘날 대부분의 정보통신 서비스는 방송과 통신의 기능이 융합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그 성격이 통신에 더 가까운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전통적 의미에서의 방송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고, 방송과 통신의 구분을 전제로 한 기존의 법제 구조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디지털 송신에 대한 법적 취급을 저작권법상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서 공중송신 개념 및 유형 구분의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한다.[105]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방송에 한정되지 않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새로운 공중전달방식이 일반화된 시대에는 공중송신권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106] 결국 현행 공중송신 규정이 전제로 하는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이라는 유형 구분은, 서비스 구조 및 이용 양상이 복잡해지는 환경에서 해석과 적용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 요소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용자가 콘텐츠의 선택과 시청 방식을 주도하는 형태로 이용 태양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쌍방향의 의미를 송신의 개시 방식보다는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저작물)을 선택/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기술 환경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간 공중송신의 유형 구분에 있어서는 주로

105) 박성호,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현암사, 2006, 230쪽.
106) 손경한 편저, 앞의 책(주1), 62쪽.

기술적 전달방식에 입각한 기술 기준설이 적용되어 왔으나, 인터넷 기반 융합서비스 환경에서는 이러한 접근만으로는 이용 형태를 구분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변화된 이용 환경을 고려할 때에는, 기술적 형식보다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효용과 이용 양태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이러한 해석상의 어려움은 방송과 통신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던 과거의 매체 환경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오늘날의 기술 환경과도 맞물려 있다. 과거에는 저작권법상 개념보다는 전통적인 매체 환경과 기술적 특성,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방송과 통신을 비교적 명확히 구분할 수 있었다. 이는 당시의 정보통신기술이 지금처럼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기술적 한계가 방송과 통신의 법적 구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이러한 구분 자체를 점점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전통적 구분 기준이었던 '불특정 다수 대 특정인', '일방향 대 쌍방향성'이라는 대칭적 구도는 이미 현실에서 그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이로써 방송과 통신의 기능이 융합된 서비스가 일반화된 환경에서는, 기존의 이분법적 구분을 전제로 한 공중송신 규율체계가 오늘날의 이용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행 공중송신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영상물이 포함된 실시간 송신과 같은 새로운 이용 형태에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3) 현행 공중송신 규율체계의 구조적 한계

현행 저작권법은 송신의 대상을 '음'에 한정함으로써 영상이 포함되지 않은 '음'에 대한 인터넷 실시간 송신을 '디지털음성송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상'도 포함한 인터넷 실시간 송신, 즉 '디지털영상송신'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입법적 공백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음성과 영상이 결합된 인터넷 실시간 송신, 즉 IPTV 실시간 재송신, 영상 웹캐스팅, FAST 서비스 등과 같은 송신 형태는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중 어느 개념으로도 명확히 포섭되기 어려운 해석상 불명확성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공백은 기술 발전에 따라 이용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개념 체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술중립성의 관점에서도 그 적용의 한계를 드러낸다.

또한, 저작권법에서는 디지털음성송신과 방송을 구분하는 요소로서 "쌍방향성"을 들고 있으나, '쌍방향성'과 관련된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게시"된다는 요건은 이용자(시청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IPTV에서 채널을 변경하는 것과 지상파에서 채널을 변경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다르다는 사

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용자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단순한 기술적 구분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국제조약의 관점에서 볼 때, 디지털음성송신은 WIPO저작권조약이나 WIPO실연·음반조약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WPPT는 방송을 "공중이 수신하도록 무선 수단에 의하여 소리, 소리와 이미지, 또는 그 표현을 공중에서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디지털음성송신 역시 WPPT상 방송의 범주로 포섭될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음성송신은 미국을 제외하면 독립된 권리로 인정된 사례가 없는 특이한 입법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인터넷 실시간 송신과 관련된 쟁점으로는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등 현행 저작권법상 공중송신의 규율 체계 정립, 산업계의 권리 처리 및 보상금 부담 문제 등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쟁점은 인터넷 실시간 송신 행위에 대한 법적 성격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따라 사용료 체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구조 및 시장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이 크다.

학계는 대체로 디지털 송신 형태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강조하면서도 공중 송신 체계의 설정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일부의 경우는 '디지털 송신'을 유지하되 디지털동시송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존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 존치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는데, 이는 보상금 체계와 직결되는 만큼 학계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방송사·유통사·FAST 서비스 업계 등 산업계에서는 권리처리 및 보상금 지급 부담 문제, 유형 구분의 모호성 등을 우려하며 방송의 개념을 확장하거나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선호하였다. 반면, 실연자단체 등은 실연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디지털동시송신 개념 도입을 요구하였다.

종합하자면 의견 수렴 결과 이해관계자 간 견해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인터넷 실시간 송신 행위를 현행 저작권법상 공중송신의 유형 중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산업계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공중송신 규율 체계를 재정비함에 있어서는 대안별 계약구조의 변화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국제조약과의 정합성, 보상금 체계, 이해관계 조정 요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구조적 한계는 특히 영상이 포함된 인터넷 실시간 송신에서 규율 공백 및 이중 보상 등의 문제로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영상물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 행위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쟁점을 검토한다.

(4) 영상물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에 대한 저작권법상 법적 성격

영상물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은 현행 공중 송신의 유형 가운데 어디에 포섭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학설은 해당 행위를 방송으로 볼 것인지,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을 해석상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공중송신의 포괄적 유형으로 파악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영상이 포함된 웹캐스팅 등의 실시간 송신을 방송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보호해야 한다는 '방송설', 기술적으로는 디지털음성송신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보호의 측면에서는 영상물에 포함된 음성을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디지털음성송신설', 방송은 일방향적인 동시수신을 전제로 하고 디지털음성송신은 음성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를 포괄적인 '기타 공중송신'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그 밖의 공중송신설' 등이 있다.

음성만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지만, 영상만을 송신하거나 음성과 영상을 함께 송신하는 형태는 현행 저작권법상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중 어느 범주에도 명확히 속하지 않게 된다. 특히, 디지털음성송신 제도 도입 이전에는 수신의 동시성을 기준으로 방송으로 볼 여지가 있었으나, 현재는 디지털음성송신이라는 별도의 개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방송으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 영상을 포함하는 인터넷 실시간 송신의 저작권법상 법적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지가 주요한 쟁점이 된다.

1) 방송으로 보는 견해(방송설)

방송설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인터넷방송은 매체가 인터넷일 뿐 일반 방송처럼 듣거나 보는 이가 선택의 여지없이 일방적으로 수신만 하는 경우, 송신되는 내용이 음반이라면 디지털음성송신이 되고 영상 또는 그 밖의 저작물이라면 방송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터넷상의 음악 웹캐스팅은 디지털음성송신에 따른 권리 보호를 받게 되며, 영상물을 포함하는 웹캐스팅은 방송의 범주에 포함 시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본다.[107] 이는 우리 저작권법상 음의 송신만을 규정하고 그 밖에 영상의 송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송신의 대상이나 수단을 가리지 않고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것을 모두 방송으로 본다.[108]

그러나, 방송설에 대해서는 디지털음성송신이라는 개념을 방송과 분리하여 정의함으로써 웹캐스팅이 방송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백히 한 것으로 "음성이 아닌 영상의 웹캐스팅의 경우도 이를

107) 심동섭, 앞의 논문(주96), 49쪽.
108)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제7판)」,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149~150쪽.

방송에 포섭시킬 여지가 없어지고 만 것"이며, 이와 같이 "분리하였음에도 영상의 경우에는 방송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109]

한편,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IPTV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현행 저작권법상 "방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제2조제8호)는 "방송"을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송신이 방송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송신의 수단 또는 기술적 차이에 관계없이 수신의 동시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음성송신'이라는 새로운 송신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하여 달리 해석되거나, 나아가 이를 법이 규율하고 있지 않은 '제3의 공중송신'등 다른 송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저작권법상 방송인지 여부는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상의 지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있다.[110]

우리 하급심 판례에서도 '마이티비'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자들로부터 일정한 요금을 받고 케이블방송사로부터 수신한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등의 방송 신호를 인터넷에 적합한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실시간 재전송 서비스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여 사후에 시청할 수 있도록 예약녹화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111]에서 '실시간 재송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영상의 실시간 웹캐스팅에 대한 법적 성격을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영상물의 실시간 웹캐스팅을 방송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 밖의 공중송신으로 보는 견해(기타 공중송신설)

디지털음성송신을 방송의 개념으로부터 분리하여 기술적 쌍방향성이 있는 경우 방송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백히 한 것으로 이로 인해 영상의 웹캐스팅에 대해 방송에 포섭할 여지가 없어졌다는 견해가 있다. 즉, 영상의 웹캐스팅은 공중송신의 영역 중 방송이나,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의 어느 영역에도 포함되지 않는 제3의 공중송신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이다.

저작권법 개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에 따르면, '방송'의 특징은 수신의 동시성, 비쌍방향성, 비주문형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용자의 개별적 선택이나 상호작용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비주문형 서비스만이 '방송'의 개념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술적 쌍방향성이 존재하는 송신 형태는 방송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방

109) 윤종수, 앞의 논문(주4), 79~80쪽.
110)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1049(2013. 4. 17.)
1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28. 자 2009카합4625

송의 예로 지상파방송,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DMB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영상이 포함된 웹캐스팅을 '방송'으로 포섭하지 않고, 별도로 '기타의 공중송신' 영역이 존재함을 명확히 한 바 있다.

3) 디지털음성송신설으로의 포섭 가능성과 한계

음성이 수반되는 영상의 웹캐스팅에 대해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우리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성'송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성과 영상이 함께 수반되는 영상의 웹캐스팅의 경우 문리적으로는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공중송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보호의 측면에서는 '디지털음성송신'으로 취급하여 보호하면 된다는 입장이다.[112]

그러나 박성호 교수는 이 견해를 취하더라도 실연자의 권리 보호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비판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실연자의 실연이 수록된 동영상 웹캐스팅을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이를 유추 적용하더라도 이는 독점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 징수단체를 통하여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를 상대로 보상청구권이라는 채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점, 둘째, 실연자는 보상금 징수단체를 통하여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실연이 녹음된 디지털 음원 등을 실시간 송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실연이 녹화된 영상물을 실시간 송신/재송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실연자는 실연이 녹화된 IPTV 실시간 재송신과 같은 동영상 웹캐스팅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금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영상이 포함된 실시간 웹캐스팅을 단순히 디지털음성송신의 보호체계에 포섭하려는 해석에 대해서는 현행법 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디지털음성송신의 보호범위가 '음의 송신'에 한정되어 있는 이상, 영상이 포함된 송신을 이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실연자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만약 이러한 해석을 유지한다면, 논리적으로는 IPTV 실시간 재송신이나 영상이 결합된 웹캐스팅 사업자에게까지 디지털음성송신의 범위를 확장 적용해야 하나, 이는 디지털음성송신의 본래 입법취지와 문언을 벗어난 무리한 확장 해석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한편, 우리 저작권법에서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을 도입한 것은 미국 저작권법의 디지털음성송신권에 관한 입법에서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고 하면서 우리 저작권법에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을 도입한 입법관여자들은, '새로운 기술'에 입각한 공중전달방식에 대해 전통적인 방송이나 방

112)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개설(제9판)」, 세창출판사, 2015, 122쪽.

송 유사의 범주로 파악하여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여 대응한 것으로 '기술중립주의'에 반하는 입법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113]

4) 전송으로의 포섭 가능성과 한계

영상물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을 '전송'으로 파악하려는 접근도 검토 대상이 된다.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핵심 요소로 하며, 이용자가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시성(주문형) 구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동일한 콘텐츠가 이용자별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송신되거나, 이용자가 재생 시점이나 구간 등을 통제할 수 있는 형태(예: 주문형 다시보기, 특정 시점부터 재생, 회차를 연속 시청하는 '몰아보기')가 서비스의 본질을 이룬다면, 전송으로 분류하는 것이 체계상 자연스럽다.

그러나 영상물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은 이용자가 송신되는 편성 자체를 선택·통제하기 어렵고, 다수 이용자가 동일 시점에 동일 부분을 수신하는 동시성(비주문형) 속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전송의 전형적인 이시성 구조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인터넷 실시간 송신은 IP 기반 구조상 이용자의 접속이나 요청을 통해 송신이 개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용자가 콘텐츠의 편성이나 재생 시점을 실질적으로 선택·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송과 같은 주문형 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단순히 기술적 작동 방식만을 기준으로 이를 전송으로 파악할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전통적 방송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실시간 시청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법적 평가가 기술적 차이에 의해 좌우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권리처리 및 보상금 체계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업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결국 영상물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을 전송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접속·요청 등 기술적 작동 구조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이용 태양이 실질적으로 '이시성(주문형)'에 가까운지, 또는 '동시성(실시간 수신)'에 가까운지, 나아가 이용자가 콘텐츠 선택과 통제에서 실질적인 주도권을 갖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5) 영상물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을 둘러싼 주요 쟁점

영상물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은 현행 공중송신 유형 중 어디에 포섭할 것인지가 불명확하여, 권리자 측에서는 보호의 사각지대가, 이용자 측에서는 권리처리 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예측

113) 박성호, 앞의 논문(주50), 99~100쪽.

가능성 저하가 문제로 제기된다. 특히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중 어느 범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권리 범위, 권리처리 방식, 보상금 부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이는 단순한 개념 논쟁을 넘어 산업 전반의 법적 안정성과 직결되는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상으로는 방송설, 디지털음성송신설, 그 밖의 공중송신설 등이 제시되어 왔고, 각 견해는 수신의 동시성 여부, 기술적 송신 방식(일방향성·쌍방향성), 이용자의 선택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인터넷 실시간 송신을 별도의 유형으로 포섭하려는 입법 논의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디지털동시송신 개념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도종환 의원안은 영상물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을 기존 공중송신 체계와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으로 규율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해당 의원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 도종환 의원 발의 전부개정 저작권법률안(디지털동시송신 관련) 주요 내용 〉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12. "디지털동시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의 송신(전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것은 "방송"으로 본다. 13. "디지털동시송신사업자"는 디지털동시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4. ~ 39. (생 략)
제94조(디지털동시송신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디지털동시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디지털동시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동시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디지털동시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7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동시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105조(디지털동시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동시송신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디지털동시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7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97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111조(저작인접권의 제한) ①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6조,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제36조제2항, 제38조, 제40조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디지털동시송신사업자는 제97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 정 안
③ 제108조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78조제1항(「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송신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수 있다. **제112조(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 ①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을,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실연자가 제89조부터 제95조까지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자"는 "실연자"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가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89조에 따른 복제권, 제90조에 따른 배포권, 제93조에 따른 방송권, 제94조에 따른 디지털동시송신권, 제95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을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한 경우(제131조제3항에 따라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9조 및 제60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31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89조에 따른 복제권, 제90조에 따른 배포권, 제93조에 따른 방송권, 제94조에 따른 디지털동시송신권 및 제95조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부칙] 제2조(디지털동시송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송신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12조(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와 같은 도종환 의원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으며, 그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 2020 저작권법 전부개정(도종환의원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주요 내용 〉

구분	의 견
학계	• WIPO 방송 신(新)조약(안) 제정을 둘러싼 논의, WIPO 저작권조약 등 해석론, 디지털송신 자체를 방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독일(저작권법 제19조의a, 제20조)과 영국(저작권법 제6조) 등에서의 입법론에 비추어, - 디지털송신을 방송과 구별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디지털음성송신은 물론이고 그 영상송신을 모두 방송 개념에 포함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
	• 디지털동시송신은 "음과 영상 등"을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바, "등"에서 포섭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 디지털동시송신사업자는 디지털동시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되는데, 유튜브 기타 유사 서비스를 라이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디지털동시송신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인지
	• 대법원 판결에서 디지털음성송신과 방송과의 구별에 대한 DJ Feed 판결을 참고하면 이렇게 정의해서 규정정비를 하는 것은 타당함
	• 기존 방송 개념 중 디지털동시송신 형태의 제외를 명시하였고, 디지털동시송신 및 디지털동시송신사업자 개념 정의, 디지털동시송신권 신설, 관련 보상의무 규정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려고 하는 바, - 그동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었던 내용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안에 동의

구분	의 견
	• 기존 방송 개념 중 디지털동시송신 형태의 제외를 명시하는 것은 방송과 디지털 송신의 관계를 구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라 생각됨 – 방송과 디지털동시송신 구별이유가 디지털동시송신사업자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지 않고자 함이고 저작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가 없다면, 방송사업자와 디지털동시송신사업자만의 정의를 달리 정의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제73조의2(디지털동시송신권) 단서에서 73조 방송권과 달리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녹화된 실연"을 예외한 것과 같은 취지로 73조 단서에서도 녹화된 실연을 추가하여야 하지 않을지 의문
	• 현장의 실무를 반영하여 디지털음성송신을 디지털동시송신으로 확대개편하는 기본방향은 찬성함 – 각 유형의 사업자가 허가 내지 승인을 받는 형태에 구속되어 저작물이용료와 보상금이 결정되는 현재 관행을 감안, 관련 서비스제공 유형에 따른 저작권법상 보상금 규정은 제반 실무관행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산업계	• '동시 수신'이라는 방송적 외향에 '송신 개시 요청(주문)'이라는 전송적 외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중송신에 대해서는 '방송'의 개념 정의를 수정하는 것으로 충분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며,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해 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 IT 기술 발전으로 방송 신호의 제공 과정이 디지털화되면서 일종의 주문성을 가지는 IP(Internet Protocol) 방식이 일반화된 바, 이용자 입장에서는 전통적 형태의 신호 제공과 구별할 수 없으므로 별도 개념의 입법 필요성이 없음 – 개정안에 따를 경우 디지털방송사업자는 '방송'이 아닌 '디지털동시송신'을 하는 것이 되어 불필요한 오해 야기
	• 디지털동시송신 개념 신설은 장래 분쟁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과거 디음송 정의를 이용한 '유사전송'사건 분쟁이 영상분야에 재현될 수 있음 – 회색영역인 디음송의 존재가 문제이며, 디음송을 삭제하고 방송 또는 전송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 – 디음송 폐지가 어렵다면 현행대로 두는 것이 방법으로 보이며, 대법원 판결 등으로 '유사전송'에 대한 판단기준이 정립되어 있어 적어도 더 이상의 시장 분쟁은 없을 것임
	• 현행 저작권법은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면 상업용 음반의 제작자 및 상업용 음반 제작에 참여한 실연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에 영상이 포함되어 '디지털동시송신'이 되면, 방송사가 방송사용보상금을 지급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디지털동시송신사업자가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중지급 문제)이 발생
	• 현재 저작권법상 디음송을 영상이 포함된 디지털동시송신권으로 확대할 경우, 방송권과 디지털동시송신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며, 이용자와 권리자의 혼란을 발생시켜 다양한 분쟁이 예상됨 –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권리 확대보다 방송에 대한 정의 확대 변경 논의가 우선 필요하며, 디지털동시송신에 대한 정의 도입시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규정 마련 필요
	• 영상물 특례조항에 따라 영상제작자에게 양도 추정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디지털동시송신을 할 경우 추가 보상금 또는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저작권료를 이중 지급한다는 문제가 발생 – 실연자 허락을 받아 녹음·녹화된 경우 면제 조항이 있기는 하나 영상저작물 특례 조항에 따라 만들어진 영화가 포함되어야 함 – 영화는 영상물 특례 조항에 따라 실연자들에게 복제, 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양도받았다는 점에서 다른 영상물과 차이가 있으며, 디지털동시송신권이 도입되어도 지급의무가 없음
	• 법률상 실시간디지털영상송신 영역을 음반제작자의 보상금 영역으로 포섭하고 방송으로 유권해석 되었던 것을 명확하게 정리한 입법의 방향에 찬성

구분	의 견
	• 디지털동시송신은 인접권자에게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인접권자 보상금으로는 방송보상금과 디음송보상금이 있었는데, 과거에 기타 공중송신으로 봐서 보상금수령대상이 아니게 되어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 디지털동시송신 개정으로 (종전)디음송 보상금 대상을 '공표된 음반'에서 '상업용 음반'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음(상업용 음반이 아닌 음반이 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다만, '상업용' 요건 자체가 너무 넓으며 모호한 개념이므로 모든 보상금 조항에서 '상업용'을 삭제하는 것도 검토 필요
기타	• 방송/전송/디지털동시송신의 구별 실익이 없음 – 기존 디지털음성송신 및 개정안 디지털동시송신 구별 무의미 – 대부분의 방송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방송과 디지털동시송신을 구분하는 것은 혼란만 야기 – 기존 디지털음성송신을 삭제하거나 방송에 포섭하여 분쟁 최소화 필요

학계에서는 디지털동시송신을 방송의 개념에 포섭해야 한다는 견해와, 기존 공중송신 체계와 구별되는 별도의 유형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 의견이 나뉘었다. 다만 공통적으로는 디지털동시송신 개념의 정의와 적용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산업계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이미 방송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동시송신 개념에 영상이 포함될 경우 이중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권리처리 부담 증가 및 서비스 위축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방송·전송·디지털동시송신의 경계를 세분화하는 것 자체가 시장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반면 실연자단체 등 권리자 측에서는 인터넷 실시간 송신 영역에서 실연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실연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도종환 의원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의견은 뚜렷하게 대비되며, 인터넷 실시간 송신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따라 권리 구조와 보상체계, 나아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영상물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이 단순한 개념 정립의 문제를 넘어, 이해관계자 간 이익 조정이 수반되는 핵심적인 쟁점임을 시사한다.

(6) 유권해석에 의한 현행 적용과 한계

현행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성송신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음의 송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영상이 포함된 실시간 송신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영상이 포함된 인터넷 실시간 송신 행위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 이를 방송으로 볼 것인지, 디지

털음성송신으로 볼 것인지, 또는 기타 공중송신으로 파악할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상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방송의 정의는 송신 수단이나 기술적 방식이 아니라 '수신의 동시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IPTV를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방송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또한 우리 법원도 하급심 판례에서 케이블 방송 신호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전송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 침해를 인정하는 등, 영상물이 포함된 실시간 웹캐스팅을 방송과 유사한 공중송신의 영역으로 평가하는 해석을 제시해 왔다.

이처럼 현행 실무에서는 주무부처의 유권해석과 일부 판례를 토대로, 영상이 포함된 인터넷 실시간 송신을 수신의 동시성 측면에서 방송과 유사한 공중송신으로 파악하여 권리 처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이러한 접근은 해당 행위를 저작권법상 '방송'이라는 유형으로 명확히 포섭하기보다는, 공중송신의 포괄적 범주 내에서 실무적 필요에 따라 해석상 유연하게 처리하는 방식에 가깝다.

그러나 유권해석이나 판례에 의한 해석을 통해 현행 규정의 공백을 보완하는 방식은, 변화하는 서비스 구조와 이용 태양을 전제로 할 때 권리 범위와 보상 기준을 안정적으로 확정하는 데 본질적인 한계를 지닌다. 특히 저작권법 체계상 저작자는 포괄적인 공중송신권에 근거하여 비교적 유연한 권리 행사가 가능한 반면,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는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등 법률이 유형별로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리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영상물이 포함된 인터넷 실시간 송신이 기존의 어떠한 송신 유형에도 명확히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저작인접권자의 보상금 청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권리자 측에서는 보호의 사각지대와 보상체계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 측에서도 어떠한 권리 범주와 절차에 따라 이용허락 및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 그 결과 권리 처리 과정에서의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결국 해석에 의한 보완만으로는 현행 저작권법 체계 하에서 영상이 포함된 인터넷 실시간 송신 행위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및 입법안

이에 따라 공중송신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입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현행 공중송신의 하위 개념으로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나눈 범주에서 디지털음성송신을 삭제하고, 공중송신의 개념에서 방송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던 음의 송신과 영상이 포함된 실시간 송신은 모두 방송의 범주에 포함하였고, 공중송신에는 전송을 포함시켰다.

방송사업자를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사업자는 저작인접권자로서 권리를 향유하는 경우와 방송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방송사업자는 저작인접권자로서 복제권(제84조), 동시중계방송권(제85조), 공연권(제85조의2)을 가지며, 저작물의 이용자로서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제75조 및 제82조)에 보상금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14] 방송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권리자로서의 방송사업자와 이용자로서의 방송사업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중송신 개념에서 방송을 분리하고, 기술의 일방향성과 쌍방향성 기준에서 이용자의 관점에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준으로 체계를 변경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시송신의 경우에는 저작자나 저작인접권자에게 권리 내용에 변화는 없으나, 동시송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동시송신의 경우에는 저작자에게는 방송권이 추가되었으나, 기존 권리 내용에는 변화는 없다.

생실연을 제외한 녹음된 실연의 동시송신에 대한 청각실연자의 경우 녹음된 실연에 대한 방송사업자에게 받는 방송보상금과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게 받는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에서 방송을 하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송보상청구권으로 법적 형태만 조정하였다.

청구의 상대방을 방송을 하는 자로 확대하여 청각실연자는 기존 방송사업자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유튜버나 SNS 운영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생실연을 제외한 녹화된 실연의 동시송신에 대한 시청각실연자의 경우 제100조제3항에 따라 시청각실연자의 권리는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영화나 드라마를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하고, 이 방송을 디지털로 실시간 송신하는 경우, 즉 OTT나 FAST 서비스될 경우 시청각실연자는 권리를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디지털 실시간 송신의 경우에는 보상청구권이 적용되도록 하여 시청각실연자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

114) 김찬동·박윤석·김세창·안진영, 앞의 책(주35), 65쪽.

음반제작자의 경우 이시송신의 경우에는 권리 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나, 동시송신의 경우에는 방송보상금과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에서 방송보상청구권으로 법적 형태만 일원화하였다.

청각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녹음실연 및 녹화실연의 동시송신에 관하여, 종래 방송보상금과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으로 구분되어 형성된 요율과 산정 구조를 전제로 하면서, 디지털음성송신과 디지털 영상송신을 방송의 범주로 포섭함에 따라 보상청구의 명칭과 법적 형태를 방송보상청구권으로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보상금과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간의 기존 요율 체계를 전제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송'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상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청각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녹음실연 및 녹화실연의 동시송신에 관한 보상은 종래의 요율과 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동시송신에 한하여 보상청구의 명칭과 청구 구조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현행 보상금 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보상금 및 보상금수령단체가 종전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개정 규정에 따른 보상 기준 및 지정 체계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적용례 및 경과조치 등을 마련하여, 이중징수 등 제도 운영상 혼선 발생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 이시송신, 동시송신 비교표 〉

<table>
<tr><th colspan="4" rowspan="2">구분</th><th colspan="2">이시송신</th><th colspan="2">동시송신</th></tr>
<tr><th>현행</th><th>개정안</th><th>현행</th><th>개정안</th></tr>
<tr><td colspan="4">저작자</td><td>공중송신권</td><td>공중송신권</td><td>공중송신권</td><td>공중송신권
방송권</td></tr>
<tr><td rowspan="5">저작
인접
권자</td><td rowspan="4">실연자</td><td rowspan="2">청각</td><td>생실연</td><td>-</td><td>-</td><td>방송권</td><td>방송권</td></tr>
<tr><td>녹음실연</td><td>전송권</td><td>전송권</td><td>방송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td><td>방송보상
청구권</td></tr>
<tr><td rowspan="2">시청각</td><td>생실연</td><td>-</td><td>-</td><td>-</td><td>-</td></tr>
<tr><td>녹화실연</td><td>전송권</td><td>전송권</td><td>-
(제100조3항)</td><td>방송보상청구권</td></tr>
<tr><td colspan="3">음반제작자</td><td>전송권</td><td>전송권</td><td>방송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td><td>방송보상
청구권</td></tr>
<tr><td colspan="4">방송사업자</td><td>-</td><td>-</td><td>동시중계
방송권
(OTT 불명확)</td><td>동시
방송권
(OTT 명확)</td></tr>
</table>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중송신"이란 ----------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
〈신 설〉	가.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등을 송신하는 행위(방송은 제외한다)
〈신 설〉	나.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송신을 포함한다. 이하 "전송"이라 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 ------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
〈신 설〉	가. 공중에게 송신하는 행위
〈신 설〉	나.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송신 행위
8의2. (생 략)	8의2. (현행과 같음)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9. ---------- 제2조제8호 가목에 해당하는 방송을 ----------.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삭 제〉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은 제외한다.	〈삭 제〉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삭 제〉
13. ~ 36. (생 략)	13. ~ 3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방송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 ---------- ---------- 영상저작물

현 행	개 정 안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상업용 영상저작물"이라 한다)----------. ----------.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상업용 ----------. ----------.
제73조(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방송권) ----------. ---------- 녹음되거나 녹화된 ----------.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방송 보상청구권) ①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이나 녹화된 상업용 영상저작물을 사용하여 방송을 한 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보상청구권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대상과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매년 제2항에 따른 단체와 방송을 하는 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삭 제〉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2(실연자의 공연 보상청구권) ①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보상청구권 ----------.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음반제작자의 방송 보상청구권) ① 음반제작자는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을 하는 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보상청구권 ----------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삭 제〉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의2(음반제작자의 공연 보상청구권) ① 음반제작자는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한 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 보상 ----------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5조(동시중계방송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85조(동시방송권) ---------- 자신의 방송을 동시에 중계하여 방송---.
제85조의2(공연권)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85조의2(공연권) ---------- 자신이 한 방송의 시청에 대한 ---------- ----------.

부 칙

제00조(방송·공연 보상청구권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5조, 제76조의2, 제82조, 및 제83조의2에 따른 보상금은 각각 제75조, 제76조의2, 제82조,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으로 본다.

제00조(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에 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6조에 따른 보상금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5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보상 기준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종전의 제83조에 따른 보상금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보상 기준에 따른다.

제00조(보상금단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5조제2항, 제76조, 제76조의2제2항, 제82조제2항 및 제83조,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단체는 이 법 시행에 따른 지정된 단체로 본다.

제2절 배타적 이용허락 범위의 확대방안 연구

1. 서론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은 저작물의 창작과 유통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종이책 중심의 전통적인 출판을 넘어 이제 전자책,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디지털 형태로 확장되었으며, 저작물의 이용 방식은 복제·배포를 넘어서 복제·전송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현행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은 복잡해진 저작물 이용 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권리에 국한되어 종이책에 대한 출판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배타적발행권은 기존의 발행 방식에 더하여 전송할 권리까지 포괄하여 전자책 등 디지털 출판을 염두에 두고 도입된 권리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출판계약이 종이책과 전자책 발행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와 이용자는 이 두 가지 권리를 별도로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이원화된 구조는 계약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어 왔다. 권리자 측면에서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배타적 이용권의 설정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저작권법상 배타적 권리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자 한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을 통합하고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모든 저작물 이용 형태로 확대하는 배타적 이용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배타적 이용권의 도입은 단순히 기존의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은 통합하는 것을 넘어서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따른 저작물 이용 질서를 재정립하고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가 상생하며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을 통합한 배타적 이용권 도입의 법적 타당성, 정책적 필요성, 그리고 입법 설계 방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저작물 이용 체계의 재구성을 모색하고, 나아가 저작권법이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 방식

(1) 개요

저작물의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창작자 스스로 창작물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음악이나 도서와 같은 창작물의 경우 창작자가 관련 제작 설비를 스스로 갖추고 음반이나 도서를 출간하거나 대본을 쓴 작가가 자신의 대본으로 영상을 직접 제작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경우 창작자인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권적인 계약을 통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창작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개별 저작권자가 복잡하고 광범위한 저작권 이용 계약을 일일이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대리하여 행사하고 있다.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사용료를 일괄 징수하여 권리자에게 분배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저작권자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 저작재산권의 양도

1) 의의

저작권의 양도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의미한다. 창작 즉시 발생하는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속한 권리(제14조)로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제45조).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전송권, 방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다. 이와 같은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각각의 저작물 이용 형태별로 나누어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저작권법은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제45조제2항), 예를 들어 어문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한 경우라도 명시적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번역이나 영화 제작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권리 유보 추정 조항의 취지는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다른 지분권과는 다르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하거나 개작하는 등의 행위가 전제되는 것이어서 다른 지분권과는 이질적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1]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그 특성상

1) 박성호, 「저작권법」 제3판 박영사, 2023, 425쪽; 허희성, 2011 「신저작권법 축조개설(上)」, 명문프리컴, 2011, 310쪽.

변형해서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기 때문에 유보 추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45조제2항 단서).

저작권법은 단순히 저작재산권의 일부 양도가 가능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 지분권에 대한 양도, 지분권을 보다 세분화한 권리의 양도, 기한부 양도, 지역을 한정한 양도도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본다.[2] 특히 저작재산권의 기간을 정하여 양도하는 기한부 양도는 기간이 만료하면 저작권자에게 저작재산권이 복귀하기 때문에 그 실질은 '배타적 이용권'에 가깝다. 그러나 하급심 판결 중에는 계약서의 제목을 '저작권 양도 계약서'라고 하고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채권인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으로 해석한 사례가 있다.[3]

2) 계약의 해석

저작권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상대방에게 채권적 권리를 부여하는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거나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저작권 계약의 내용이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인지 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계약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으로 해석하고 있다. '의심스러울 때는 저작자의 이익으로'[4]라는 저작권법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라고 본다. 대법원은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 계약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됨이 상당하며,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5]

저작권 계약과 관련하여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매절(賣切) 계약'이라는 표현이 있다. 매절 계약이란 출판업계에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데 매절 계약의 정확한 의미는 발행 부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용어이다.[6] 그런데 매절 계약이라는 용어를 저작재산권 양도의 개념으로 오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법원도 '저작물 이용 대가를 판매 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괄 지급하는 형태로서 소위 매절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그 원고료로 일괄 지급한 대가가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2) 박성호, 앞의 책(주1), 426~427쪽.
3) 서울고등법원 2007. 2. 7. 선고 2005나20837 판결.
4) 계승균, "in dubio pro auctore", 「창작과 권리」 제36호, 세창출판사, 2004, 117쪽.
5)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2040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0250 판결 등.
6) 박성호, "(48) 저작권법 분야에서 오용(誤用)되는 '매절'(買切)이라는 용어", 법률신문, 2023.11.22.자.

소명이 없는 한 이는 출판권 설정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계약이 저작권 양도 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매절 계약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한 사례[7]가 있다. 최근 대법원은[8] '음원공급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한 사례에서도 계약서에 '매절'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더라고 그 계약을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매절'은 저작물의 출판계약에서 그 출판 대가를 발행 부수에 관계없이 미리 일시불로 지급받고 인세는 배제하기로 하는 출판 대가의 지급 방식을 일컫는 것으로도 사용되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사안의 '음원공급계약'을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으로 해석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저작물의 이용허락

1) 의의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저작물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제3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체결할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비배타적 성질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타인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다. 저작물의 '이용'이란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지분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행위를 의미한다.[9] 이용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계약을 통해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저작권법 제46조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10]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을 이용허락하는 경우에도 권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저작권 불행사의무를 최저한의 구성요소로 한다.[11]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이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제46조제3항). 일반적으로 채권은 그 성질이나 당사자의 반대표시가 없다면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12] 그러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저작물의 이용은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 또는

---

7)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6. 1. 선고 94카합3724 판결.
8)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2040 판결.
9) 박성호, 위의 책(주1), 434쪽.
10)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11) 박성호, 위의 책(주1), 435쪽.
12)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명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저작재산권자로 하여금 실제적인 저작물의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13]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제46조제2항). 이용 방법이란 출판, 녹음, 공연, 방송과 같은 이용 태양, 부수와 같은 이용 수량, 일정한 지역에서의 공연과 같은 이용 장소, 문고본이나 전자책, CD, 녹음 등과 같은 세부적인 이용 방법을 포함하고, 조건이란 이용 대가의 지급 조건, 우선 이용권의 부여와 같은 특약 조건 등이 있다.[14]

2) 이용허락의 종류 및 내용

우리가 제46조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설명하는 경우 이용허락을 받는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는 채권적인 권리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준물권적인 성질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은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 외의 준물권적 성질의 저작재산권의 이용권은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설정할 수 없다. 제46조제2항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자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허락의 내용은 채권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독점적 이용허락과 단순 이용허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저작권자가 저작물 이용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이용허락을 하지 않을 채권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고 준물권적인 배타적인 효력을 가지는 권리가 이용자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법(제100조)이나 상표법(제95조)의 경우 독점·배타적인 성질의 전용실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단순 이용허락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저작물 이용허락을 다수의 이용자에게 허락하는 것이 가능하다. 배타적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의 의미는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직접 저작권자의 지위에서 침해정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작재산권자가 갑에게 독점적인 이용허락을 하고 그 후에 을에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용허락을 하였다면 갑은 저작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갑이 직접 을에게 이용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15] 그 명칭이 독점적 이용허락이든 단순 이용허락이든 현행 저작권법상 이용허락은 채권적인 권리에 해당하고, 이용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침해자에게 직접

13) 허희성, 앞의 책(주1), 320쪽.
14) 박성호, 위의 책(주1), 440쪽; 허희성, 위의 책(주1), 317~317쪽.
15) 허희성, 위의 책(주1), 316쪽.

침해 정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다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제3자가 불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민법 제404조에[16] 의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인 저작권자 가지는 침해정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 대법원도 독점적 이용허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17] '소리바다' 사건에서 대법원은 '저작권법은 특허법이 전용실시권 제도를 둔 것과는 달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용허락 계약의 당사자들이 독점적인 이용허락을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이용권자가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서, 이용허락의 목적이 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가 스스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독점적인 이용권자로서는 이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하면 달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도 아니어서 독점적인 이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현행 제123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용자가 이용허락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함께 불법행위인 저작권 침해의 문제도 발생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위반의 내용을 고려하여 저작물의 이용 방법에 대한 위반은 저작권 침해가 되고 단순한 조건 위반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용권자가 부담하는 의무 관계를 근거로 저작권법에 의해 규정된 의무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 의무로 구별하여 전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후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유력한 견해가 있다.[18] 이에 따르면 서울에서 공연을 허락받은 이용권자가 진주에서 공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계약의 효력이 아니라 공연권의 효력 자체가 진주에 미치기 때문이고, 대가의 지급을 조건으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저작권의 효력은 저작물의 무단 이용을 금지하는 것에만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대가지급 의무의 위반은 계약의 효력으로서 부담하는 의무에 대한 위반이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19]

---

16)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판결.
18) 박성호, 위의 책(주1), 445쪽.
19) *Id.,* 446쪽.

계약당사자들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허락의 범위를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20] 이용허락 범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이용 방법이 출현한 경우 이와 같은 방식의 이용을 기존의 계약에 의해 포섭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 법원은 '새로운 매체가 기존의 매체시장을 대체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허락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21] 이 판결에서 법원은 CD 음반은 LP 음반을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용허락 계약체결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CD 음반의 발행도 이용허락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4) 배타적 이용권

1) 개요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이라는 무형의 표현 정보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준물권적 권리로 다루어지고 있다.[22] 저작재산권을 준물권적인 권리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입법정책의 결과이지만 저작재산권의 관리가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현실을 감안한다면 저작권자가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권리는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채권적인 권리로 전락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23] 준물권이란 물권에 준하는 독점·배타적인 지배권을 의미한다.[24]

물권이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이는 물권이 채권과 달리 특정인에 대한 청구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25] 여기에서 물권의 객체인 '물건'이란 민법 제98조에 따라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내용으로 하므로, 그 지배가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지 위해서는 권리자의 독점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성질, 즉 배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물권에서 말하는 배타성이란,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병존할 수 없는 내용의 권리가 동시에 둘 이상 성립할 수 없는 성질을 의미한다.[26] 다시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4가합36876 판결.
2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판결; 계승균, "저작물이용허락계약해석에 관한 비판적 고찰", 「창작과 권리」 제67호, 세창출판사, 2012, 174쪽.
22) 오승종, 「저작권법」 제5판, 박영사, 2020, 410쪽.
23) 허희성, 앞의 책(주1), 315쪽.
24) 오승종, 앞의 책(주22), 410쪽.
25) 송덕수, 「신민법강의」 제13판, 박영사, 2020, 343쪽.
26) *Id.,* 345쪽.

말하면 물권은 동일한 물건 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물권이 중첩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 독점적 지배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직접 지배성으로부터 배타성이라는 성질이 도출되고, 그 결과 하나의 물건에는 병존할 수 없는 내용의 물권이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다고 이해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채권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물권과 같은 배타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저작물 이용허락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인 권리로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권리가 병존할 수 있다.[27]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 이용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미국, 독일의 입법례와 달리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내용 중 복제, 배포, 전송에 한정해서 배타적인 이용을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이라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복제'란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제2조제22호), '배포'란 저작물 등(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28]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23호). 또한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하는 것(제2조제10호)을 의미한다. 복제권과 배포권이 결합된 출판권 및 출판권과 전송권이 결합된 배타적발행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밖의 이용 방법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이용권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배타적 이용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자를 포함하여 제3자의 저작물 이용도 불가능하다.

저작물의 배타적 이용은 제정 저작권법부터 규정되었는데 1957년 제정 저작권법(법률 제432호, 1957. 1. 28. 제정)은 저작물의 이용 방법 중 '출판'과 '공연'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의 설정을 허용하고 있었다. 제정 저작권법은 '출판'의 의미를 문서, 회화 등의 저작물을 인쇄술 기타의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제9조), '공연'의 의미를 각본, 악보, 음반, 영화 등의 저작물을 상연, 연주, 상영,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 연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제정 당시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설정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었으나 설정 공연권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공

27) 송덕수, 위의 책(주25), 346쪽.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연의 성질은 출판과 달리 일시적인 것이어서 개별 약정으로 특약이 없는 한 단기로 하는 것이 실정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29] 출판권 설정에 대한 내용은 1986년 전부개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공연권에 대한 규정은 설정 실적이 전혀 없어서 1986년 전부개정에서 삭제되었다.[30] 그러나 지금과 같이 K-Pop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K-Pop 그룹들의 공연이 세계를 무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연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의 설정에 대한 수요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 제정 저작권법상 출판권 설정 및 공연권 설정 규정 〉

제47조(설정) 저작권자는 그 저작물의 출판을 인수하는 자에 대하여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48조(출판권자) ① 출판권자는 설정행위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는 가진다.
② 출판권자는 출판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각 출판물에 저작권자의 검인을 첩부하여야 한다. 단 출판권자가 저작권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9조(존속기간) 출판권은 설정행위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설정일로부터 3연간 존속한다.
제50조(양도입질)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입질할 수 없다.
제51조(출판의무) ①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출판권설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저작물을 출판하여야 한다.
②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
제52조(통지의무) 출판권자가 출판물을 재판, 중판하는 경우에는 저작자로 하여금 수정증감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사전에 저작자에게 그 취지를 통하여야 한다.
제53조(수정가감권) 저작권자는 각판의 복제완료까지 그 저작물에 정당한 범위내의 수정증감을 가할 수 있다.
제54조(별도출판권) 저작권자인 저작자가 사망한때 또는 설정행위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출판권설정 후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전집기타의 편집물로 집록하거나 또는 전집기타의 편집물의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로 출판할 수 있다.
제55조(소멸통고권) ① 출판권자가 출판권설정 후 6월 이내에 출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출판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저작권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② 출판의 불가능한 경우 또는 출판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통고한 때에 출판권이 소멸한다.
제56조(소멸청구권) 저작권자는 전조의 경우에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또는 출판을 중지함으로써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조(대항요건) 출판권의 득상, 변경과 입질은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44조의 규정은 출판권의 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제58조(침해) 출판권의 침해에 대하여서는 본법중 제6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저작권침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공연권) 저작권자는 그 저작물의 공연을 인수하는 자에 대하여 공연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0조(동전) 공연권자는 설정행위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연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61조(동전) 공연권설정에 관하여서는 본장 출판권설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제49조의 준용에 있어서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9)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6쪽; 장인숙,「저작권법개론」복간,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196쪽.
30) 허희성, 앞의 책(주1), 366쪽.

현행 저작권법은 제7절에 배타적발행권을 두어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에 관련 내용을 담고 있고, 제7절의2에서 출판에 관한 특례를 제63조와 제6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출판권 설정에 대한 규정은 배타적발행권에 대한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다. 1986년에 제정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도 제정 당시에는 제16조에 단순 이용허락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 2000년 전부개정(법률 제6233호, 2000. 7. 29. 시행)을 통해 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 발행권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2002년 개정(법률 제6843호, 2003. 7. 1. 시행)을 통해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의 내용에 전송을 추가하였다.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법률 제9625호, 2009. 7. 23. 시행)을 통해 폐지되고 저작권법에 통합되었다.

2)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가. 도입 배경

배타적발행권은 한미-FTA를 국내법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2011년 12월 2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제11110호, 시행 2012. 3. 15.)을 통해서 도입되었다. 한미-FTA에서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집행, 특히 민사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보유한 자에 대해서만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미-FTA 제18.10조(지적재산권 집행)[31] 제4항은 '각 당사국은 모든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를 권리자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권리자란 '제18.10조의 목적상, "권리자"는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협회 또는 조합을 포함하고, 지적재산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32]

배타적발행권 도입 당시의 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출판권과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 배타적 권리를 모든 저작물의 발행 및 복제·전송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타적발행권에서 출판권을 제외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31)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보고서에는 '지식재산권'이라는 표현을 원칙적으로 사용하나, 한미-FTA의 내용은 공식 번역문에 따라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32) 박성호, 위의 책(주1), 453쪽.

나. 배타적발행권의 내용

(가) 의의

2011년 12월 2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배타적발행권은 구 저작권법에 규정된 출판권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종전에 인정되었던 저작물의 배타적 이용 범위가 복제·배포에서 전송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 이는 출판권이 전통적인 종이책의 발간을 전제로 한 권리였다면 배타적발행권은 모든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디지털 방식의 배타적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배타적발행권은 독점적으로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배포·전송(이하 '발행등')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재산권자는 이러한 권리를 설정할 수 있고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사람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는 저작재산권자에 우선하여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복제·배포·전송의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위반하여 발행등의 행위를 했다면 배타적발행권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계약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계약 위반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그치지만 배타적발행권 침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상이다(제136조제1항제1호). 배타적발행권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연, 음반, 방송과 같은 저작인접권(제88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제96조). 특약이 없는 경우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은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하지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한 경우에는 5년간 존속한다(제59조제1항).

(나)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등

배타적발행권자는 원고 등을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발행등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특약이 없으면 관행에 따라 저작물을 계속 발행등을 해야 하며 발행등의 의무 및 계속 발행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지할 수 있고 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제60조). 배타적발행권 소멸의 효력은 배타적발행권자가 소멸 통지를 받은 때에 발생한다(제60조제3항).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의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특약이 있었거나 존속기간 중에 이미 대가가 지불된 경우라면 배타적발행권자는 복제물의 배포가 가능하다(제61조).

특약이 없는 한 배타적발행권자는 복제물에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해야 한다(제58조제3항). 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표지의무가 없다. 이 조항의 취지는 배타적발행권의 설정자인 저작재산권자가 받게 될 보수의 계산과 징수를

쉽게 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인은 도장에 한하지 않고 서명이나 무인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배타적발행권자가 이 표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142조제3항). 개정 전에는 표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법률 제20841호, 2025. 9. 26. 시행)을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변경하였다. 저작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물을 다시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내용을 수정·증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자에게 다시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58조의2). 배타적발행권자의 재판 발행등의 이용에 대한 통지의무는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수정·증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서 저작자가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자에게 재판 발행등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담한다.[33]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수정·증감권은 저작인격권인 동일성 유지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제한 등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제62조제1항).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의 지명도나 사회적 신용도 등을 고려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배타적발행권에 대한 권리 양도나 질권의 설정은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34] 배타적발행권에 대한 양도나 질권의 설정은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한다(제54조제2호·제3호).[35] 따라서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배타적발행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전자책을 발행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에는 저작재산권도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저작자가 사망한때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추모하기 위한 전자책으로 만들어 이용할 수 있다(제59조제2항).

---

33) 박성호, 위의 책(주1), 468쪽.

34) *Id.*

35)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출판권의 설정

가. 출판의 의의

저작권법은 '출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출판'을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하고(출판법 제2조제3호), '전자출판물'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출판법 제2조제4호).

저작권법에서 '출판'의 의미는 설정 출판권에 관한 제63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서 또는 도화'는 원칙적으로 종이 등과 같은 유형물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지만 문서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되므로[36] 반드시 유형물을 전제로 할 필요는 없다.[37]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면 '출판'의 의미를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발행'이란 저작권법 제2조제24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소유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발행'이란 유형물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 규정에 따른다면 '출판'이란 종이책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반면 '전자출판'이란 저작물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전자책 등을 간행하는 것으로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최종 이용자에게 온라인으로 전송하거나 오프라인으로 배포하는 경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38] 따라서 독점적으로 종이책을 발간하기 위해서는 '출판권'을 설정해야 하고, 전자책은 별도의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통해서 배타적 이용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

3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37) 박성호, 앞의 책(주1), 459쪽.

38) 박성호, "전자출판의 법적 의미와 그 한계", 정보법학 제14권 제2호, 2013, 55~56쪽.

나. 출판권의 효력

출판권설정계약은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간에 체결되는 출판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계약을 말한다. 출판권설정계약도 낙성불요식 계약으로 이에 따라 출판권자는 배타적·독점적인 출판권을 취득하게 된다.[39] 출판권설정계약은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과는 달리 '승계적 이전'이 아니라 '설정적 이전'이므로 권리가 종국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어서 출판권이 소멸하면 저작재산권은 제한이 없는 원래의 상태로 복귀한다.[40] 우리나라, 일본 또는 독일처럼 출판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이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출판권의 성립을 '권리의 양도'로 법정하거나 출판계약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저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이전함으로써 출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41]

출판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또는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 제63조는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복제권자'가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판권자는 출판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즉, 저작물의 복제·배포에 한정해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 제63조에 의한 출판권은 준물권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판권자는 제3자의 출판권 침해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저작재산권자의 지위에서 침해정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판권자는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서 복제하여 배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원작 그대로'란 저작물을 그대로 재현·복제하는 것을 말하며, 오기 등의 수정은 복제권의 범위에 속하므로 가능하다고 보지만 실무상으로는 복제권자에게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42] '원작 그대로'의 상태만이 출판권 설정의 대상이 되며 번역, 각색 등 2차적저작물로 복제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43] 예를 들면 만화 번역판의 경우 그림 부분은 '원작 그대로'가 적용되지만 글 부분의 경우 번역이 되므로 '원작 그대로' 복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44] 대법원은 '원작 그대로'의 의미를 원작을 개작하거나 번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지 않고 출판하는 것을 의미할 뿐 원작의 전부를 출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침해자가 출판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한 양'을 복제한 경우

39) 박성호, "전자출판의 법적 의미와 그 한계", 정보법학 제14권 제2호, 2013, 58쪽.
40) *Id.*
41) *Id,* 60쪽.
42) 半田正夫·松田政行 編, 著作権法 コンメンタール 2 第2版, 平成21年(2024), 勁草書房, 977면.
43) *Id.*
44) *Id.*

에는 출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45] '원작 그대로' 출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특약이 없는 경우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제63조의2, 제59조제1항). 제정 저작권법(1957년)에서는 출판권의 존속기간을 '출판권의 설정일'로부터 3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구 저작권법(1986년)에서 '맨 처음 출판한 날'로 한 것은 출판권을 설정하고도 원고 등의 입수나 출판을 위한 준비행위 등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출판권의 실질적인 활용 기간을 고려하여 그 기산점을 최초의 출판일로 한 것이다.[46] 출판권의 존속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47]

3. 해외의 배타적 이용권 제도 현황

(1) 미국

1) 저작물의 배타적 이용

가. 규정

미국은 저작물의 배타적 이용(Exclusive License)을 '저작권 이전(Transfer of Copyright Ownership)'으로 포섭하면서 저작권의 양도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배타적 이용은 저작권법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01조는[48] '저작권 이전'이란 그 효력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제한되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어느 배타적인 권리의 양도, 저당, 배타적 이용 또는 그 밖의 송달, 양도 또는 담보의 제공을 의미한다. 다만, 비배타적 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저작권 양도와 배타적 이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양도와 배타적 이용을 모두 '저작권 이전'의 개념으로 포섭하고 있다.[49]

미국 저작권법 제201(d)(1)항은 '저작권의 소유권은 양도의 방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있으며 유증하거나 관련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동산처럼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1(d)(2)항은 저작권에 포함된 배타적인 권리들과 제106조에 명시

45)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도3115판결.
46) 허희성, 앞의 책(주1), 386~387쪽.
47) 박성호, 앞의 책(주1), 464쪽.
48) §101. Definitions A "transfer of copyright ownership" is an assignment, mortgage, exclusive license, or any other conveyance, alienation, or hypothecation of a copyright or of any of the exclusive rights comprised in a copyright, whether or not it is limited in time or place of effect, but not including a nonexclusive license.
49) 한국저작권위원회, 앞의 보고서(주29), 48쪽.

된 권리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양도할 수 있고 분리하여 소유할 수 있다. 특정한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는 그 권리의 범위 안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모든 보호와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배타적 이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동일하게 자신이 직접 민사소송 절차를 청구할 수 있고 저작권자와 동일하게 복제물(제401(a)항)이나 음반(제402(a)항)에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자 표시를 할 수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501(b)항은 '저작권에 근거하는 배타적 권리의 법적 또는 수익적 소유자는 제411조(등록과 민사상 저작권 침해 소송)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행하여진 그 특정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소유자에 대하여 저작권청의 등록부에 의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당해 저작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소송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자에게 고소장 사본과 함께 소송에 관한 통지서를 송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당해 소송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이익에 영향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이러한 통지서를 송달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법원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자의 공동소송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자의 소송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저작권 등록을 전제로 배타적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직접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나. 서면계약

미국 저작권법은 배타적 이용을 포함한 '저작권 이전'의 경우 그 효력 발생 요건으로 서면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 이전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50] 서면은 합의와 동시에 체결해야 한다.

저작권의 이전은 법률의 효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 증서' 또는 '이전에 관한 각서'가 서면으로 작성되고 이전되는 저작권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이에 서명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지 않다(제204(a)항). 따라서 배타적 이용을 포함하는 '저작권 이전'은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서면계약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공증 서류는 배타적 이용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 저작권법은 공증 서류가 다음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권 이전'의 증거로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1) '저작권 이전'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그 증

50) 한국저작권위원회, 앞의 보고서(주29), 58쪽; 김혜선, "저작물의 배타적 이용에 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95쪽.

명서가 미국 내에서 선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의하여 발급되거나, (2) '저작권 이전'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그 증명서가 미국의 외교관이나 영사 또는 선서를 받을 수 있고 그 권한이 외교관이라 영사의 증명서에 의하여 증명된 자에 의하여 발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이전'의 증거로써의 효력이 인정된다(제204(b)항).

등록은 배타적 이용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등록을 한 경우 저작권 이전 또는 그 밖의 저작권에 관련한 문서는 등록을 위하여 제출된 문서에 실제 서명이 있거나 원본과 다르지 않다고 서약된 공증 서류가 첨부된 경우에 저작권청에 등록될 수 있다(제205(a)항). 또한 공증 서류는 저작권 등록규칙에 따라 전자문서로 저작권청에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은 저작권 양도나 배타적 이용뿐만 아니라 모든 저작권과 관련한 문서를 등록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51] 따라서 비배타적 이용의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등록증명서가 발급된다. 먼저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저작물이어야 하고(제504(c)(2)항), 등록할 문서가 작성자에 의한 서명이 있는 문서의 원본 또는 그 등본이어야 하며(제504(a)항), 등록할 문서에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제504(c)(1)항),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제504(b)항). 이와 같은 배타적 이용에 대한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문서에 기술된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통지(Constructive Notice)의 효력이 있고(제205(c)항), 배타적 이용권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분쟁에서 우선순위를 가지는 효과가 있다(제205(d)항). 저작권 이전은 양도, 저당, 배타적 이용 또는 그 밖의 송달,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이 중 2개 이상의 저작권 이전이 경합되는 경우의 우선순위는 등록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이루어진 이전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미국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205(c)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통지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방법으로 등록된 때 또는 후에 이루어진 이전이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우선한다. 그러나 나중에 이루어진 이전이 먼저 등록되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이용료를 지급한다는 계약에 따른 선행하는 이전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선의로 이루어진 때에는 나중의 이전이 우선하게 된다(제205(d)항).

2) 종결권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일정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종결권(The Right of Termination)이라 한다. 이를 통해 저작자는 자신이 양도하거나 배타

51) 한국저작권위원회, 앞의 보고서(주29), 59쪽.

적 또는 비배타적인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을 일정한 요건하에서 되찾을 수 있게 된다(제203조).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종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합의하였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제203(a)(5)항). 종결권의 취지는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가 시장에서 자리 잡은 후 창작자에게 그 창작 행위로 인해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두 번째의 기회를 주도록 하려는 것이다.[52]

종결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저작자가 한 '저작권 이전' 또는 '비배타적 이용'이다(제203(a)항). 다만, 유언으로 한 계약, 업무상저작물, 외국법에 근거한 계약은 종결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종결권은 1978년 1월 1일 이후에 권리가 부여된 경우라면 권리가 부여된 이후 35년이 지난 때로부터 기산하여 5년의 기간 동안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제203(a)(3)항). 권리 부여 시 미발행이었던 저작물은 발행될 날로부터 35년 또는 권리가 부여된 날로부터 40년 중 빨리 도래하는 기간의 말부터 기산한다.

종결권은 저작자가 사망하면 상속되고 지분권의 과반수로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03(a)(2)항).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공동저작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없으면 '저작권 이전'이 불가능하고,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저작권 이전'을 한 경우에는 공동저작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03(a)(1)항). 종결권의 행사는 사전에 저작권청이 규정한 요건을 준수하여 서면으로 해야 하고, 종결권이 행사되면 이전된 권리는 종결일로 지정된 날짜에 저작자에게 복귀한다(제203(b)항).

(2) 독일

1) 배타적 이용권[53]

독일은 저작권 양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배타적 이용권' 또는 '단순 이용권'의 설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저작물의 이용권 설정에 관한 내용은 저작권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다. 저작물 이용권은 저작물

52)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의 보고서(주29), 48쪽; Korman v. HBC Floria, Inc.,182 F.3d 1291(11th Cir., 1999); Scholastic Entertainment, inc. v. Fox Entertainment Group, Inc., 336F.3d 9982(9th Cir. 2003).

53) 제31조(이용권의 설정) (1) 저작자는 다른 자에게 저작물을 개별적 또는 모든 이용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용권)를 부여할 수 있다. 이용권은 단순 또는 배타적 권리로서 장소적, 시간적 및 내용적으로 제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
(2) 단순 이용권은 타인의 저작물 이용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이용권 보유자에게 허락된 방식으로 이용할 권리를 부여한다.
(3) 배타적 이용권은 타인의 저작물 이용을 배제하면서 이용권 보유자에게만 허락된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이용권을 설정할 권리를 부여한다. 저작자의 이용을 유보하도록 약정할 수 있다. 제35조는 영향을 받지 않고 존속한다.
(4) 삭제
(5) 이용권의 설정 시 이용 방법이 명시적이고 개별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어떤 이용 방법에까지 권리가 미치는지는 양 당사자 사이에 근거가 된 계약의 목적에 의해 정해진다. 이는 이용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단순 또는 배타적 이용권인지 여부, 이용권과 금지권의 효력 범위 및 제한의 문제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을 개별적 또는 모든 이용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제31조제1항). 저작물 이용권의 종류는 독일 저작권법상의 개별 저작재산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관념에 따라 구별 가능하고 경제적 및 기술적 관점에서 하나의 단일하고 독자적인 이용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면 모두 가능하다.[54] 저작물 이용권은 배타적 이용권과 단순 이용권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배타적 이용권자는 추가적으로 이용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제35조) 이용권을 양도하려면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하다(제34조).

독일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소극적 금지권과 적극적 이용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55] 소극적 금지권은 제3자에 대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적극적 이용권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배타적 이용권은 이러한 두 가지 권리를 모두 보유하는 설정적 승계로 이용권의 범위 내에서 저작자를 제외하고는 이용권자에게 배타적 이용이 보장된다. 반면 단순 이용권은 적극적 이용권은 부여되지만, 소극적 금지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56] 그러나 적극적 이용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단순 이용권자는 자신의 이용권과 저촉되는 배타적 이용권이 나중에 체결된 경우에도 배타적 이용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이용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배타적 이용권자에게 단순 이용권자의 존재를 통지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위반하면 배타적 이용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해석하고 있다.[57]

삭제된 구 저작권법 제31조제4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저작물 이용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물 이용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실효성 및 타당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였고 결국 2007년 10월 26일 개정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이용 방법에 대한 저작물 이용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이용방법에 대한 계약은 서면계약(제31a조제1항)을 할 것과 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다(제31c조).

제31조제5항은 저작물 이용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독일 법원의 '목적양도이론'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저작권을 이용허락하고 나머지 권리는 저작자에게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이다.

54) 한국저작권위원회, 앞의 보고서(주29), 22쪽.
55) 한지영,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에서 라이선시의 법적 보호", 계간 저작권 2013 가을호, 15쪽.
56) *Id.*
57) K. Fromm/W. Nordemann, Urheberrecht, 13., uberarbeitete Auflage, 2024, §33 Rdnr. 1.

2) 철회권

독일 저작권법은 불행사로 인한 철회권(제41조)과 변경된 신념에 의한 철회권(제42조)을 규정하고 있다. 배타적 이용권자가 그 이용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아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이 상당히 침해된 경우에는 저작자가 그 배타적 이용권을 철회할 수 있다(제41조). 이 규정의 취지는 저작자가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권자가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으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일반에게 공개되어 자신이 그 저작물을 창작하였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이익(인격적 이익)이 침해받기 때문이다.[58] 제41조의 철회권은 배타적 이용권이 설정된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행사할 수 없으며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적절한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 권리는 사전에 포기할 수 없으며 철회권의 행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자는 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저작자가 저작물 이용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저작물이 더 이상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과 부합하지 않아서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이용한다면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2조). 이 규정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저작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제42조의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사망 전에 저작자에게 철회에 대한 권리가 있었고, 철회의 의사표시가 방해되었거나 유언을 통해 철회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2조제1항).

철회권을 행사한 이후에 저작자가 다시 저작물 이용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저작물 이용권자에게 권리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제42조제4항).

(3) 일본

1) 도입 배경

일본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대한 양도 및 이용허락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은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가 가능하고(제61조), 저작권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제63조). 특허법은 전용실시권이라고 하는 독점·배타적 효력을 가진 이용권 제도를 두고 있지만 저작권법에는 출판권을 제외하고 독점·배타적 효력을 가지는 이용권 제도가 없다.[59]

일본 저작권법 제63조는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대항요건으로서 등록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채권적 효력만을 가진다. 다만 출판

58) 한국저작권위원회, 앞의 보고서(주29), 33쪽.
59) 中山信弘, 著作権法 第3版, 有斐閣, 2020, 528頁.

에 대해서는 저작물 이용의 전형적인 형태이므로 출판권이라는 준물권적 이용권의 규정을 두고 있다.[60]

구 일본 저작권법은 종이책을 대상으로 하는 출판권 설정에 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었고 전자책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전자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종이책에 대한 출판권설정계약과 전자책 발행에 대한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책에 대한 출판계약은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복제가 발생하는 경우 출판사가 직접 권리구제를 할 수가 없어서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사이의 권리 처리에 어려움이 존재하였다.[61] 이에 일본 문화청은 전자책에 대한 출판권 설정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2014년 3월 14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4년 4월 2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개정으로 출판권자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출판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출판권의 설정을 받아 출판물의 불법 이용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62] 구체적으로는 인쇄 등에 의해 복제하는 출판권(제80조제1항제1호)과 해당 복제물을 공중송신하는 제2호의 출판권(제80조제1항제2호)이 규정되었다.

2) 내용

일본 저작권법은 제79조부터 제88조까지 출판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 규정된 출판권 규정은 2015년 1월 1일에 시행된 개정안이다. 일본 저작권법 제80조는 출판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하는 바에 의해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배포의 목적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할 권리(기록매체에 기록된 전자적 기록으로서 복제할 권리를 포함)와 기록매체에 기록된 저작권의 복제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 이전 저작권법에서는 출판권자가 타인에게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할 수 없는 것으로 금지되었으나 개정을 통해 저작권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복제나 공중송신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 규정으로 인해 출판권자가 다른 플랫폼 사업자에게 출판권을 다시 이용허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63] 그러나 출판권자가 본조를 위반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출판권을 다시 이용허락하는 경우에 저작권자는 침해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64]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에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의 출

60) 中山信弘, 앞의 책(주59), 540頁.
61) *Id.,* 123頁.
62) 半田正夫·松田政行 編, 앞의 책(주42), 958頁.
63) 中山信弘, 위의 책(주59), 528쪽, 545頁.
64) 半田正夫·松田政行 編, 위의 책(주42), 980頁.

판행위 또는 공중전송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저작물에 대한 전집이나 편집물을 제작할 수 있다(제80조제2항). 출판권자는 원고 등의 인도 등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종이책으로 출판하거나 디지털로 출판할 의무가 있고 계약에 따라 계속해서 출판을 하거나 공중송신할 의무도 발생한다(제81조제1항).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이 다시 복제되거나 디지털로 출판하는 경우 저작물에 대한 수정 및 증감을 할 수 있고(제82조제1항), 디지털 출판의 경우에는 저작자에 대한 통지의무가 없지만 종이책으로 다시 복제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제82조제2항). 종이책 또는 디지털 출판에 의한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만,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의 출판(복제 또는 공중송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한다. 출판권자가 출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판권을 소멸시킬 수 있고(제84조제1항) 관행에 따라 계속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의 보유자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출판권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제84조제2항). 일본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이 더 이상 자신의 신념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출판권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출판권자에게 발생한 통상의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제84조제3항). 이는 독일 저작권법 제42조의 변경된 신념에 따른 철회권과 유사한 규정에 해당한다.

출판권의 설정, 이전, 변경이나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등은 등록 없이도 당사자 간에 효력이 인정되지만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제88조).

4. 현행 배타적 이용허락 제도의 개선 방안 검토

(1)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통합에 대한 기존의 논의

2021년 1월 15일 발의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도종환 의원)은 출판권을 삭제하고 배타적발행권에 출판권을 흡수하여 배타적발행권으로 통합하는 법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는 현행 저작권법은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복제·배포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만 전송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최근 디지털 시대 전자출판물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기 위하여 배포권과 전송권을 포함하는 '배타적발행권'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출판권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저작자나 출판자의 입장에서도 출판권이 배타적발행권으로 별개의 규정으로 운영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65]

65)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제2107440호)] 검토보고, 2021.2. 40쪽.

〈 저작권법 전부개정안(도종환 의원) 〉

제7절 배타적발행권

제76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④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배포권·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77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①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③ 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복제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저작물의 수정증감) ① 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① 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중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또는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또는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8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지) ①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지한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통지를 받은 때에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발행등을 중지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1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배타적발행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다.
1. 배타적발행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

제8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제한 등) ①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6조,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0조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우리나라에 출판권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57년 제정 저작권법이었다. 그로부터 55년이 지난 2012년 3월 15일부터 배타적발행권 제도가 시행되었다. 원칙적으로 출판은 발행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출판권에 관한 규정은 삭제해야 하지만 출판업계의 오랜 관행과 의견을 반영하여 출판권을 배타적발행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남겨두게 된 것이다.[66] 저작권 분야에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출판'이라는 표현이 저작권법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한 업계의 반발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두 배타적 이용권의 통합은 불발에 그쳤고 디지털 방식의 저작물 이용을 대상으로 하는 배타적발행권과 기존의 출판권이 함께 존재하는 방식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출판계에서도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 '출판계 권리 확대 방안 도출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출판권을 배타적발행권으로 통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을 폐지하고 모든 저작권 지분권을 배타적 이용권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67]

(2) 배타적 이용허락의 범위 확대 필요성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지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물권의 경우 독점·배타적인 권리의 특성으로 인해 제3자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우리 민법은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독점·배타적 성질을 가지는 권리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설정할 수는 없고 법률에 규정을 한 것만이 인정받을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물 이용권을 배타적인 것과 비배타적인 것으로 나누어 저작권자 및 저작물 이용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68] 나아가 배타적 이용 제도의 확대는 외국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도모에 기여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서류상 '저작권 양도'의 방식으로 국내의 저작물 이용자들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배타적 이용 제도를 모든 저작물 이용 형태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필요한 우회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69]

---

66) 박익순 외, "배타적발행권 본격 도입 8년, 출판권과의 통합이 필요하다", 저작권 문화, 2020. 9. vol. 313. 8쪽.
67) 박익순 외, 「출판계 권리 확대 방안 도출 연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4, 54쪽.
68)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의 보고서(주29), 96쪽.
69) *Id.,* 97쪽.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양도(제45조)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제46조)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배타적 권리를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에 인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그 표현이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이든지 상관없이 채권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고 배타적 이용은 준물권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판권이나 배타적발행권은 누구에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이다. 저작물의 배타적 이용에 관한 방법이나 내용은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에 규정이 되어야만 권리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를 물권법정주의라고 한다.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독점·배타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용권자는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여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자신의 이용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저작권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고려될 수 있는 것이 저작물의 배타적 이용 제도이다. 타인의 저작물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저작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배타적 권리를 설정하는 방안이다. 저작권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행위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저작자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저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재산적 권리를 보유하면서 저작물에 대한 타인의 이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기를 원할 것이다.

저작권자는 채권적 저작물 이용허락 또는 준물권적 저작물 이용 중 선택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경제적으로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이용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저작권자, 저작물 이용자 그리고 저작물을 향유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독점·배타적인 안정적 권리를 원하는 이용자를 위해서 저작권자가 부득이하게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3) 배타적 이용 제도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6. ---------- 배타적 이용권자 ----------.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7. ---------- 배타적 이용권자 ----------.
28. ~ 36. (생 략)	28. ~ 36. (현행과 같음)
제11조(공표권) ① (생 략)	제11조(공표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 배타적 이용권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2. ---------- 배타적 이용권 ----------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 ---------- 배타적 이용권----------
제7절 배타적발행권	제7절 배타적 이용권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제57조(배타적 이용권의 설정) ① 저작재산권자---------- 이용하고자 ---------- 대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 "배타적 이용권"이라 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 이용---------- 배타적 이용권----------.
③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	③ ---------- 배타적 이용권을 ---------- "배타적 이용권자"----------

현 행	개 정 안
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배타적 이용권의 ---------- 이용----------.
④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배포권·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 저작재산권---------- ---------- 배타적 이용권----------.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①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58조(배타적 이용권자의 의무) ① 배타적 이용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설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9월 이내에 그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배타적 이용권자---------- ---------- 계속하여 ----------.
③ 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복제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배타적 이용권자----------. ---------- ---------- ---------- ----------.
제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①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제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① 배타적 이용권자가 배타적 이용권---------- 다시 ---------- ----------.
② 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배타적 이용권자는 배타적 이용권---------- 발행하거나 복제·전송---------- ----------.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①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제59조(배타적 이용권의 존속기간 등) ① 배타적 이용권---------- ---------- 이용한 ----------. ---------- 배타적 이용권----------.
②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중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 배타적 이용권 존속기간 ------- 배타적 이용권의 ---------- ---------- 발행하거나 복제·전송----------.
제6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지) ①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지할 수 있다.	제60조(배타적 이용권의 소멸통지) ① -------- 배타적 이용권자 ---------- 배타적 이용권의 ----------.
②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등의	② ---------- 배타적 이용권자---------- 이용하는

현 행	개 정 안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지할 수 있다.	---------- ---------- 배타적 이용권의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지한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통지를 받은 때에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 배타적 이용권의 ---------- 배타적 이용권자---------- 배타적 이용권이 ----------.
④ 제3항의 경우에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발행등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 배타적 이용권자 ---------- ----------.
제61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배타적발행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다.	제61조(배타적 이용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이용) 배타적 이용권이 ---------- 배타적 이용권을 ---------- ---------- 배타적 이용권의 ---------- 이용---------.
1. 배타적발행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1. 배타적 이용권 ----------
2.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	2. 배타적 이용권---------- ---------- ----------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제한 등) ①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62조(배타적 이용권의 양도·제한 등) ① 배타적 이용권자---------- 배타적 이용권을 ---------- ----------.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② 배타적 이용권---------- 이용 ---------- ---------- 제29조---------- ---------- ----------.
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삭 제〉
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삭 제〉
제63조의2(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삭 제〉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관하여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 ----------

현 행	개 정 안
는 제45조제1항을,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배타적 이용권----------.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변경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 배타적 이용권----------. ----------.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 ③ (생 략)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 배타적 이용권---------- 저작인접권 ----------.
제142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14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88조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5. 결론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을 통합하고, 저작물의 배타적 이용의 범위를 모든 지분권으로 확대한 '배타적 이용권'의 도입은 단순히 두 권리를 합치는 법적 기술을 넘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저작물 이용 활성화의 핵심 전략이라고 본다. 이는 현행 제도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저작권 산업 참여자 모두에게 명확하고 강력한 법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배타적 이용권의 도입은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과 이용의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해법이자 저작권 제도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배타적 이용권을 도입하여 배타적 이용허락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권리자의 이익과 권리 보호를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배타적 이용허락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권리자는 출판과 발행 이외의 모든 이용 방식에서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효율적인 법적 보호와 다양한 수익 창출의 기회를 얻게 된다. 저작권법상 배타적 권리의 설정은 이용자에게 준물권적인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받은 이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 대세적으로 저작물 이용을 배제할 수 있게 되고 저작권자는 이용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설정해 줌으로써

이용자들 통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보호받게 될 수 있다. 또한 배타적 이용권을 도입하여 모든 저작물 이용 형태에 대한 배타적 이용허락의 설정이 가능하게 되면 권리자는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 시 선택적으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배타적 이용권의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용자가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받을수록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 개발, 마케팅 등에 더 적극적으로 자본을 투입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권리자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저작물의 시장 확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를 사용료 수입의 증대라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모든 저작물 이용 방식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의 인정은 저작권자에게는 법적 안정성 위에서 이용자의 투자를 유인하며 최종적으로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으로 본다.

제3절 OSP 책임 제한 규정상의 통지 및 삭제 절차 운용 실태

1. 서론

디지털 혁명은 인류의 문화 향유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은 저작물의 창작과 유통을 가속화했으며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가 운영하는 플랫폼들은 이제 저작물 공유의 주요 통로가 되었다. 웹하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소셜미디어 등 OSP의 역할은 단순한 정보 전달자를 넘어 수많은 저작물이 복제·전송되고 소비되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대량 유통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했다.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국경과 시간의 제약 없이 침해되는 상황에 직면했고, OSP는 자신들이 직접 침해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내 침해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에 직면할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 각국의 저작권법은 OSP 책임 제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OSP의 기술적 중립성과 혁신을 보장하는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지대를 제공하고 있다. OSP가 침해 사실을 인지했거나 침해에 대한 통지받았을 경우 해당 불법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책임을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상 OSP 책임 제한 제도의 법적 근거와 핵심 작동 원리인 '통지 및 삭제(Notice and Takedown)' 절차를 중심으로 저작권자의 침해 통지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이용자의 이의 제기에 따른 복제·전송의 재개에 관한 개별 플랫폼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 저작권법상 해당 절차의 개선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저작권자·OSP·이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권리 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OSP 책임 제한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OSP 책임 제한 제도 개요

(1) OSP 의의 및 책임 제한 제도의 도입 배경

1) OSP의 의의

OSP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저작권법 제2조제30호가목) 또는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제2조제30호나목)를 의미한다. 저작권법 제6장(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에 규정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도는 OSP의 유형을 인터넷접속서비스, 캐싱서비스, 저장서비스 그리고 정보검색서비스로 나누고 각각의 책임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2) OSP 책임 제한 제도의 도입 배경

인터넷의 발전은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OSP 책임 제한 제도의 목적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OSP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나아가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통지 및 삭제 절차를 통해 권리자 보호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OSP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문제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OSP가 직접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가 이고 다른 하나는 OSP가 제3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판단하여 OSP에게 방조 책임과 같은 간접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OSP가 플랫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인터넷상에 유통한 경우라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의 주체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OSP의 책임 제한은 플랫폼 이용자들을 통해서 야기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OSP에게 법원이 직접 책임 또는 간접 책임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대두된 문제이다.

OSP가 인터넷을 통하여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과 확산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반면,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이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OSP에게 인터넷상에서 발생한 이용자의 저작권 책임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OSP에게 방조 책임을 인정하는 일련의 판례들이 나오게 되었고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들

이 부가적으로 침해 예방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OSP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권리자 보호의 균형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OSP의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우리 저작권법의 OSP 책임 제한 제도는 2003년 5월 27일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다. 2006년 12월 28일 전부 개정 시에도 조문의 내용은 거의 변화가 없이 유지되다가 2011년 6월 30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OSP 책임 제한 규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개정 전에는 제102조에 따른 책임 제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서비스 유형을 상세하게 구분하지 않았고 책임 제한의 내용도 임의적 책임 감경 또는 면제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제2조 OSP 정의 규정과는 별도로 OSP 서비스 유형을 현재와 같은 4개로 나누고 각각의 책임 제한 요건을 규정하였다. 당시에는 저장서비스와 정보검색서비스를 구분하였으나 2020년 2월 4일 개정으로 두 서비스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문에 담아 면책 요건을 규정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서비스가 저장과 저작권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OSP에게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책임을 면제하도록 한 것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법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2) OSP 책임 제한 제도

1) OSP 유형별 책임 제한 요건

가. OSP의 유형

저작권법 제102조는 각 OSP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OSP의 유형을 ① 인터넷접속서비스 ② 캐싱서비스 ③ 저장서비스 ④ 정보검색서비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각 서비스의 내용과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인터넷접속서비스(단순 도관)란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1]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제103조제1항제1호). 이는 KT, LG와 같은 통신망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서버까지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연결해 주는

1) 제2조(정의)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를 말한다.[2)]

② 캐싱서비스란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제103조제1항제2호). 이는 콘텐츠를 중앙 서버가 아닌 캐싱서버에 자동적으로 임시 저장하여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③ 저장서비스란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OSP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제103조제1항제3호). 카페, 블로그, 웹하드 등과 같은 공간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업로드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정보검색서비스란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제103조제1항제3호). 정보검색도구에는 목록(Directory), 색인(Index), 포인터(Pointer), 하이퍼텍스트 링크(Hypertext Link), 검색엔진(Search Engine), 목록 나열(Directory Listings) 등도 포함되는데,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OSP에 해당한다.[3)]

나. OSP의 책임 제한 요건

저작권법은 OSP의 유형에 따라 책임 제한 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모든 OSP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네 가지의 책임 제한 요건은 저작권법 제10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1) 저작물등의 송신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2) 저작물등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3)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 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가 공통으로 요구되는 책임 제한 요건이다.

언급한 위의 네 가지 요건을 필수로 하고 OSP의 유형에 따라 저작권법에 규정된 책임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터넷상에서 발생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OSP의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저작권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제102조제2항은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은[4)] "구 저작권법(2008. 2.

2) 박성호, 「저작권법」 제3판, 박영사, 2023, 720쪽.
3) *Id.,* 721쪽.
4)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판결; 서울고법 2007. 10. 10. 자 2006라1245결정 등.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란 온라인서비스의 제공 자체는 유지함을 전제로 이용자들의 복제·전송 행위 중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되는 복제·전송을 선별하여 방지 또는 중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므로, 비록 온라인서비스이용자들이 해당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전송함으로써 그 저작권 침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와 같은 침해 사실을 알고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복제·전송을 선별하여 이를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아가 단순히 '금칙어 설정' 또는 '해시값 등록·비교'를 통한 필터링 방식만으로는 당시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최선의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5)]

OSP 책임 면제 요건(제102조제1항)	단순 도관	캐싱	저장 또는 정보검색
저작물의 송신을 개시하지 않을 것(제1호가목)	○	○	○
저작물과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제1호나목)	○	○	○
반복 침해자의 계정 폐지 정책 운용(제1호다목)	○	○	○
표준기술조치의 수용 여부(제1호라목)	○	○	○
저작물등을 수정하지 않을 것(제2호나목)		○	
일정조건 충족하는 이용자만 캐싱된 저작물에 접근 허용(제2호다목)		○	
복제·전송자가 제시한 현행화 규칙 준수(제2호라목)		○	
저작물 이용 정보를 얻기 위하여 업계에서 인정한 기술 사용을 방해하지 않을 것(제2호마목)		○	
본래 사이트에서 접근할 수 없게 조치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제2호바목)		○	
침해행위에 통제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적 금전적 이익이 없을 것(제3호나목)			○
침해행위 인지 시 해당 저작물 복제·전송 중단(제3호다목)			○
복제·전송 중단 요구 대상자 지정 및 공지(제3호라목)			○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한·EU FTA 이행 개정 저작권법 해설, 2011

5)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판결.

저작권법 제104조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수한 유형의 OSP란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OSP를 말한다(제104조제1항 전단).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한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로 규정하고 있다.[6] 구체적으로 웹하드나 P2P 서비스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서비스에 추가적인 의무를 도입한 것은 불법복제물 유통의 주요한 채널이 되었기 때문이다.[7] 특수한 유형의 OSP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104조제1항 후단).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제142조제1항). '기술적 조치'의 의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해석하는 것이 주류적인 태도이고[8] 대법원의 태도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불법적인 전송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9] 제104조제1항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에는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필터링 의무가 부과되어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금지하는 제102조제3항과 충돌할 수 있다.[10] 특수한 유형의 OSP는 저장서비스 또는 정보검색서비스에 해당할 수 있어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제102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6)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3호, 2025.1.7., 일부개정]
제1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본다.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고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 제공 예시: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 감상, 현금교환 등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고 등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자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경우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비용지급예시: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으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다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상업적 이익 예시: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 사이트 회원 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7) "2011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11.5., 219쪽.

8) 박성호, 앞의 책(주2), 731~732쪽.

9) 대법원 2017. 8. 31. 자 2014마1609결정.

10) 박성호, 위의 책(주2), 732~733쪽.

다. OSP 책임 제한 제도의 적용 범위

OSP 책임 제한의 범위는 민사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에도 적용된다. 민사 책임은 면제되었는데 형사 책임은 인정된다면 법체계의 정합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 우리 대법원은 OSP의 책임 제한이 형사 책임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구 저작권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02조제1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3조제5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로부터 불법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받고 즉시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조항의 입법 취지나 각 조항의 해당 문구상 별다른 제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항은 형사상 책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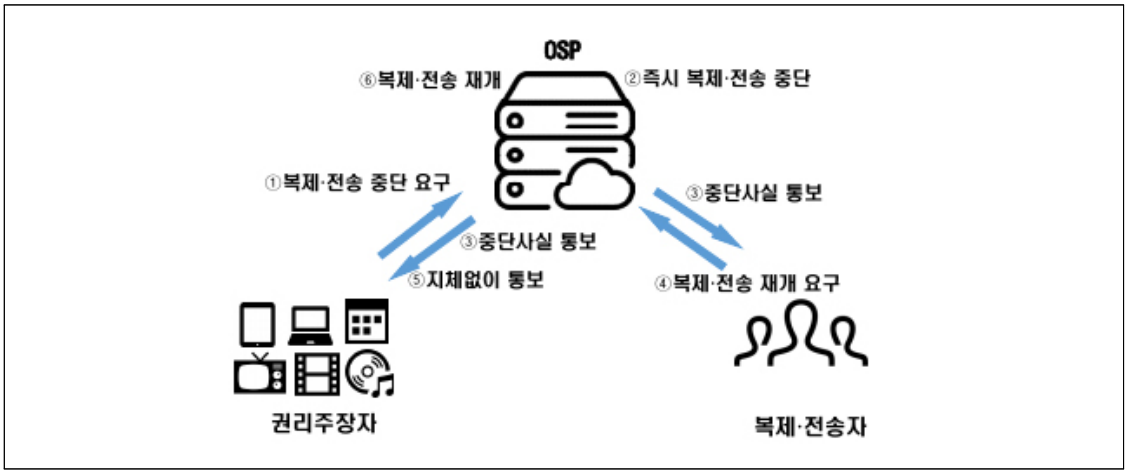
2) 현행 저작권법상 통지 및 삭제 절차

저작권법 제103조는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캐싱서비스, 저장서비스 그리고 정보검색서비스에 대하여 불법복제물에 대한 통지 및 삭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접속서비스는 단순히 인터넷 접속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침해 주장에 대한 통지를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이다.[12)] 제103조는 미국 저작권법의 통지 및 삭제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OSP의 모니터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주장자의 침해 통지에 의해 OSP가 침해 사실을 인식했을 때의 삭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13)] 이 절차는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익 보호 및 온라인 기술과 시장의 발전을 모두 조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에 가장 근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11)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도1435 판결.
12) 오승종, 「저작권법」 제5판, 박영사, 2020, 1529쪽.
13) 나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 체계 개선에 대한 소고, 동아법학 제80호, 2018, 307쪽; 박준석, 「인터넷상 정보유통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 규율 방향 모색」, 집문당, 2015, 63쪽.

우리 법원은[14] 통지 및 삭제 절차의 취지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03조에서 말하는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는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권리자가 위 제103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저작물등의 복제·중단을 요청하는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지, 이와 같은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 즉, '권리 보호 요청'이 권리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한 저작권등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필요한 권리행사 요건이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복제·전송을 중단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 요건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출처: 김혜창, 메타버스 플랫폼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KIPnet 보호분과 3차회의, 2012

유의해야 할 부분은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제103조제6항).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 등으로 불법복제물을 특정해야 하는데, 단순히 저작물을 찾는 검색어와 OSP 카페의 대표 주소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차단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15]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

14) 서울고법 2007.10.10. 자 2006라1245 결정; 서울중앙지법 2008. 8. 5. 자 2008카합968결정 등.
15)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 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삭제의무 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 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리주장자가 시행령에 따른 정당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경우에는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하고 이 사실을 권리주장자에게 알려야 하며, 저장서비스 및 정보검색서비스의 경우에는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복제·전송자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개해야 하는데,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개시 의무가 없다(제103조제3항). 이는 권리주장자와 복제·전송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OSP가 더 이상에 이에 개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 미국 및 EU 제도 현황

(1) 미국

1) 저작권법상 OSP 책임 제한 제도

미국 의회는 인터넷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을 통해 저작권자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침해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OSP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OSP의 책임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함으로써 인터넷 기반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권리자 보호에도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였다.

이를 모델로 유럽연합은 2000년 제정된 전자상거래지침(E-Commerce Directive)을 통해 OSP의 책임 제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의 OSP 책임 제한 규정은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를 입법례로 한 것으로, 동조에서 정한 OSP의 유형 및 책임 제한 요건은 우리 저작권법 제102조부터 제103조의3까지에 규정된 내용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에 규정된 OSP의 4가지 유형은 우리 저작권법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에 따라 모든 OSP 유형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책임 제한 요건으로는 '반복적 침해자에 대한 정책'의 채택과 '표준기술조치'에 대한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OSP는 적절한 상황에서 반복 침해자인 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가입자 및 계정 소유자

의 해지를 규정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합리적으로 이행하고(제512(i)(1)(A)항),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식별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표준기술조치(Standard Technical Measure)'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제512(i)(1)(B)항). '표준기술조치'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보호하고 식별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자발적이고 다양한 산업 표준 과정에서 저작권자와 OSP의 합의에 따라 개발되었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OSP에게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거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실질적인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조치를 의미한다(제512(i)(2)항). 이 요건들의 충족을 전제로 각각의 OSP는 별도의 책임 제한 요건을 부여받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에 따른 통지 및 삭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저작권자가 OSP에게 침해 콘텐츠의 위치정보 등을 명시하여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하면(Notice)(제512(c)(3)항), OSP는 해당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Takedown)(제512(c)(1)(C)항). 저작권자가 통지한 사실을 콘텐츠 게시자에게 전달해야 하고(제512조(g)(2)(A)항), 저작물의 게시자는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소명하여 저작물을 복제 및 전송을 재개할 수 있다(Counter Notice)(제512(g)항).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OSP 및 콘텐츠 이용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512(f)항).

2) 미국 저작권청의 최근 논의[16)]

가. 논의 배경

미국 저작권법의 OSP 책임 제한 규정은 1998년에 도입된 제도로 초기 인터넷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고 대규모 플랫폼이 등장한 이후에는 20여 년 전에 도입된 OSP 책임 제한 제도의 균형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OSP 책임 제한 제도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제512조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을 미국 저작권청에 요청하였다. 이에 미국 저작권청은 5여 년에 걸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수만 건의 서면 답변, 실증 연구,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에서의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OSP 책임 제한 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제512조가 처음에 의도하고자 했던 플랫폼 사업자와 저작권자 간의 균형이 달성되었는지에 대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저작권자는 견해에 차이를 보였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 제도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의 불안에서 벗어나

16) Section 512 of Title 17, U.S. Copyright Office, May 2020, pp.1~7. 요약.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내렸고, 저작권자들은 삭제 후에도 계속적으로 업로드되는 상황인 소위 '두더지 잡기(Whack-A-Mole)' 효과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표시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보고하였다. 2020년 5월 미국 저작권청은 현재의 제512조가 의회가 원래 의도하였던 균형을 갖추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OSP 책임 제한 제도에 대한 심층적 연구보고서인「제512조(Section 512 of Title 17)」를 발간하였다.

미국 저작권청의 연구 목적 중의 하나는 최초의 균형이 더 이상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방안을 의회에 제시하는 것이었다. 미국 저작권청은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세우고 이를 준수하며 제512조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용하였다.

①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하며 권리자가 침해를 당했을 때 그 권리를 적절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성실히 운영되는 OSP는 법적 안정성과 혁신의 여지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단순히 주주뿐 아니라 일반 대중과 콘텐츠 산업 전체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③ 의회는 OSP와 권리자 간의 협력을 장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협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발적 협력 체제는 분명 일정한 역할을 하지만, 경험상 균형 잡힌 입법을 대체할 수는 없다.
④ 가능한 한 정부의 의사결정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제512조의 운영은 대부분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 기초가 되는 데이터의 상당 부분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정책 입안자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하여 정보에 기반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⑤ 21세기의 인터넷 정책은 획일적일 수 없다. 정책 입안자는 이해관계자 집단 내의 차이뿐만 아니라 집단 간의 차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나. 보고서 주요 내용

미국 저작권청은 제512조와 관련하여 12개 쟁점 분야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고 권고 사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적용 대상 OSP 유형(Eligible Types of OSPs)

의회는 새로운 기술 환경을 포용하기 위해 네 가지 OSP 범주를 비교적 폭넓게 규정했다. 그리고 법원도 대체로 이러한 면책의 범위를 의회의 본래 취지에 맞게 해석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저작권청은 현재 제512(c)항의 면책 범위가 의회가 의도했던 원래의 균형과는 다소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제512(c)항은 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이를 서비스제공자가 직접 또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저장된 자료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OSP의 민사 책임을 면제한다. 하지만 법원의 해석은 '저장으로 인한(By Reason of the Storage)'이라는 문구가 단순한 '저장' 행위를 넘어, 호스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고, 이는 의회가 애초에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밖에도 의회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적격성 관련 쟁점들이 남아 있다. 예컨대 제512(b)(1)항의[17] 면책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일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터넷 인프라 제공을 넘어서는 기술 서비스(예: P2P 시스템, 결제 처리 서비스 등)까지 제512(a)항에[18] 포함될 수 있는지 등이 그 예다.

② 반복 침해자 정책(Repeat Infringer Policies)

'반복 침해자'의 의미를 두고 이해관계자들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으나, 제4항소법원은 제512조의 '반복 침해자(Repeated Infringer)'는 '반복적으로 판결을 받은 침해자(Repeat Adjudicated Infringer)'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침해 혐의가 제기된 자(Repeat Alleged Infringer)'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미국 저작권청은 의회가 필요시 정비해야 할 제512조의 '반복 침해자 요건'과 관련하여 두 가지 쟁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면책을 받기 위해 OSP는 '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가입자 및 계정 보유자 중 반복 침해자들을 적절한 상황에서 해지하도록 규정한 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해석에 따르면 OSP는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정책을 채택하고 그 정책을 합리적으로 시행하기만 해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이용자에게 공개되지 않아도 된다. 저작권청은 이러한 비공개·비서면화된 정책이 의회가 기대한 대로 침해 억제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면책 범위가 광범위

17) 512. Limitation on liability relating to material online
(b) System Caching.–
(1) Limitation on liability. – A servic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for monetary relief, or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j), for injunctive or other equitable relief,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by reason of the intermediate and temporary storage of material on a system or network controlled or operated by or for the service provider in a case in which –

18) (a) Transitory Digital Network Communications. – A servic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for monetary relief, or,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j), for injunctive or other equitable relief,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by reason of the provider's transmitting, routing, or providing connections for, material through a system or network controlled or operated by or for the service provider, or by reason of the intermediate and transient storage of that material in the course of such transmitting, routing, or providing connections, if—

함을 고려할 때, 반복 침해자 정책은 명확하고 문서화되어 있으며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하는 것이 법 적용상의 최소 요건이자 실효적인 억지 수단이라고 저작권청은 주장하고 있다.

둘째, 의회는 이용자의 반복적인 침해행위를 이유로 계정을 해지할 수 있는 '적절한 상황(Appropriate Circumstances)'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입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이 권리자의 공식적 삭제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③ OSP 인식 요건(Knowledge Requirements for OSPs)

보고서는 제512조의 OSP '인식(Knowledge) 요건'에 대한 현재의 해석이 의회가 애초 의도한 범위보다 더 협소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중 세 가지 영역을 문제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실제적 인식(Actual Knowledge)'과 '명백한 침해 인식(Red Flag Knowledge)'의 구분 문제이다. 여기서 '명백한 침해 인식'이란, OSP가 구체적인 삭제 통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침해가 명백한 경우 침해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규정에 따르면, 제512(c)항 또는 제512(d)항에 따른 면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OSP가 (i) 자사 서비스상의 자료 또는 활동이 저작권 침해임을 실제로 알고 있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ii) 침해 여부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실이나 정황을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 저작권청은 이와 관련해, 의회가 '실제적 인식'과 '명백한 침해 인식'의 구분을 재확인하거나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저작권청은 또한 법원이 제512(m)항(일반 모니터링 의무 금지)과 제512(c)항 및 제512(d)항의 인식 요건 사이에서 적절한 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제512조 각 조항 간에 의도된 균형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와 법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저작권청은 OSP 간의 구조적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인식 요건에 '합리성 기준(Reasonableness Standard)'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문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둘째 쟁점은 '고의적 인식 회피(Willful Blindness)' 기준의 적용과 관련된다. 이는 OSP가 이용자의 침해 행위에 대한 인식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는지를 묻는 보통법상의 원칙이다. 만약 OSP가 고의적으로 인식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는 '실제적 인식(Actual Knowledge)'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제512조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미국 저작권청은 법원이 전통적인 보통법상의 고의적 인식 회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수정된 별도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법원은 침해행위 전반에 대한 인식

회피가 아니라 특정 침해 사례에 대한 의도적 회피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고의적 인식 회피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고의적 인식 회피 원칙을 제512(m)항(일반 모니터링 의무 금지)과 조화시키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저작권청은 이러한 접근이 의회가 애초에 의도했던 취지와 반드시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저작권청은 의회가 제512조의 고의적 인식 회피 개념의 적용 범위, 그리고 이 원칙이 제512(m)항과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세 번째 인식 요건과 관련된 쟁점은 보통법상의 '대위 책임(Vicarious Liability)'의 기준에 관한 것이다. 이 기준은 제512(c)(1)(B)항을 통해 미국 저작권법에 도입되었으며, 해당 조항은 저장 서비스 OSP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저장된 자료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 OSP가 해당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는다면 책임을 면제한다'고 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단순히 침해 자료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만으로는 통제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며, 통제 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소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청은 이 기준을 크게 강화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지만, 현행 해석이 의회가 처음 의도한 균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의회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④ **대표 목록 및 위치 식별(Representative List and Identification of Location)**

적법한 삭제 통지를 제출하기 위해 권리자는 침해가 주장되는 저작물을 명확히 특정해야 하며, '하나의 온라인 사이트 내에서 여러 저작물이 단일 통지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사이트의 저작물에 대한 대표 목록'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권리자는 OSP가 침해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문은 모호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 법원이 이 두 가지 요건(대표 목록 제시 요건과 위치 식별 요건)을 별개의 의미로 구분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입법적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청은, 'OSP가 침해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라는 조항이 의회의 본래 의도와, 많은 OSP 및 일부 법원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구체성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청은 이 요건을 'OSP 내 침해 자료의 각 개별 사례마다 고유하고 파일별로 특정된 URL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

부를 의회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⑤ 고의적 허위표시 및 남용적 통지 또는 이의통지
(Knowing Misrepresentation and Abusive Notices or Counter-Notices)

삭제 요청 통지(Notice and Takedown)와 이의 통지(Counter-notice)의 발송자는, 삭제 대상 자료가 침해물인지 또는 해당 자료가 실수나 오인으로 삭제되었는지에 대해 '고의적으로 중대한 허위 표시'를 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원은 이 조항을 단순한 과실이나 부당한 허위 진술이 아닌, 허위성에 대한 '현실적 인식' 또는 '고의적 인식 회피'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성립하는 것으로 적절히 해석해 왔다. 그러나 저작권청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허위 표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⑥ 고의적 허위표시와 공정 이용(Knowing Misrepresentation and Fair Use)

저작권청은 Lenz 판결[19]에서 법원이 제512(f)항의 '고의적 허위 진술'에 적용한 기준에 주목하고 있다. 이 사건은 'Dancing Baby'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한 어머니가 아기가 '프린스'의 노래에 맞춰 춤추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 Universal사가 이를 저작권 침해라며 삭제를 요청한 사례이다. 법원은 '저작권자가 삭제 요청 통지를 보내면서 공정 이용 가능성을 선의로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통지는 고의적 허위 진술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저작권청은 이 판결이 단순히 통지에 적용되던 '선의' 판단 기준을, 제512(f)항의 고의적 허위 진술 책임 판단에도 확장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즉, 삭제 요청을 하는 저작권자는 단순히 자료가 침해라고 믿었는지만이 아니라, 공정 이용 여부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통지가 선의로 이루어졌는지까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 것이다. 공정 이용 검토를 하지 않았다면 통지가 선의가 아니므로 허위 진술로 간주될 수 있다.

저작권청은 제512(f)항의 '고의적 허위 진술(Knowing Misrepresentation)' 요건에 적용된 이러한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Lenz 판결은 삭제 통지 발송 시의 '선의(Good Faith)' 요건(제512(c)(3)항)을 제512(f)항까지 확장 적용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는 자료가 실제 침해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자가 삭제 요청 전에 공정 이용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19) Lenz v. Universal., 801 F.3d 1126 (9th Cir. 2015).

따라서 저작권청은 의회가 Lenz 판결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시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는 입법 조치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⑦ 표준 및 비표준 통지 요건(Standard & Non-standard Notice Requirements)

본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저작권청은 최근 다수의 대형 OSP들이 채택한 삭제 요청 통지서 제출 방식이 제512(c)항에 규정된 통지 요건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OSP가 새롭게 도입한 웹 기반 제출 양식 및 통지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요건은 결과적으로 소규모 권리자들이 삭제 요청 통지를 제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동시에, 제512(c)항에 규정된 일부 통지 기준 자체는 시대 변화에 따라 점차 구식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저작권청은 의회에 대하여 삭제 요청 통지의 최소 필수 요건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대신 행정 규제 절차로 이전하여, 저작권청이 보다 유연한 규칙을 제정하고, 통신 방식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⑧ 제512조상 기간 요건(Time Frames Under Section 512)

저작권법은 OSP가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복제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요건을 해석할 때 사안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는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해 왔으며 저작권청도 이러한 유연성의 필요성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반면, 저작권청은 현재 법정 기간 내 이의 신청(Counter-notice) 수령 후 콘텐츠 접근을 재개하는 절차가 현행 비즈니스 모델과 연방 소송 실무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용자와 권리자 모두에게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제512(g)(2)항에 따른 10~14일의 기간은 합법적인 표현행위가 차단되기에는 지나치게 길고, 반대로 권리자가 침해물의 재개를 막기 위해 연방 소송을 준비하고 제기하기에는 지나치게 짧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청은 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모델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20]

---

20) 미국은 2020.12.27. 저작권 침해 소액사건 대체적 분쟁 해결법(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claims Enforcement Act of 2020, 'CASE Act')이 의회를 통과했고, 이 법을 통해 저작권청구위원회(Copyright Claim Board)가 설립되어 2022년 6월 16일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저작권청구위원회를 통해 저작권 침해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동일하게 업로드 재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경우 이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통상 10~14일내에 해당 자료의 업로드를 재개해야 한다. 단 저작권자가 14일이 만료되기 전에 OSP에게 '사용자의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을

⑨ 소환장(Subpoenas)

제512(h)항은 권리자가 OSP를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받아 침해 주장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실제로 권리자들에 의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법원이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소환장을 통해 얻은 정보가 실제로는 크게 유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울러 제512(h)항이 단순 전달자 역할만 하는 ISP에도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ISP들은 P2P 파일 공유와 같은 활동에 참여한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보원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청은 의회가 제512(h)항의 문언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⑩ 금지명령(Injunctions)

제512조는 OSP에 대한 민사 책임을 면제하면서도, 제512(j)항에 명시된 제한적인 형태의 금지명령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대체로 제512(j)항에 따른 금지명령의 범위를 통지 및 삭제 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해석해 왔다. 저작권청은 이러한 해석이 의회의 당초 의도보다 협소하다고 보고 있으며 통지 및 삭제 이후에도 제512(j)항에 따른 다양한 금지명령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청은 현재 이 문제가 의회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만약 의회가 권리자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금지명령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통지 및 삭제 절차에 따른 절차와 제512(j)항에 따른 금지명령 절차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⑪ 법적(Non-statutory)이외의 접근방식

앞서 제시한 의회 검토 가능 접근 방식 외에도, 저작권청은 의회의 개입 없이도 활용될 수 있는 추가적 접근 방식에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저작권청은 제512조 체계의 모든 참여자에게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기 위한 교육 자료를 준비·배포할 계획이며,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업로드 재개 의무가 면제된다. 저작권청구위원회에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소송 제기'에 해당하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저작권청구위원회에 소를 청구하여 업로드 재개를 방지할 수 있다(https://copyrightalliance.org/filing-claim-with-small-claims-court/).

아울러 저작권청은 온라인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 자발적 협력 체제를 촉진하고, 특정 산업 분야에서 채택할 수 있는 표준 기술적 조치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한다.

⑫ **대안적 이해관계자 제안(Alternative Stakeholder Proposals)**

보고서는 다른 국가에서의 OSP 책임 제한 제도 관련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청은 제출된 의견 중 일부가 미국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통지 및 차단 유지(Notice and Staydown)' 그리고 '웹사이트 차단(Website Blocking)'과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적 의미뿐 아니라 잠재적 영향까지 포함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공공 의견 수렴을 통해 면책이 가능한 범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EU

1) 전자상거래지침

유럽연합은 역내시장에서의 특정 전자상거래와 정보사회서비스에 관한 법적 지침(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이하, '전자상거래지침')을 통해 OSP 책임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지침은 OSP의 저작권 침해를 포함하여 명예훼손, 지식재산권 침해 등 모든 유형의 불법행위에 공통으로 적용된다.[21] 전자상거래지침은 전자상거래에서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Information Society Service Provider)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이를 통해 회원국 간의 정보사회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온라인상의 상거래에 대한 법적 확실성과 소비자의 신뢰를 보장하는 틀을 마련하였다.[22] 전자상거래지침상의 OSP 책임 제한 규정은 이용자의 개별적 요청에 따라 전자적 수단에 의해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되는 모든 '정보사회서비스'에 적용된다.

전자상거래지침은 OSP를 '중개서비스제공자(Intermediary Service Provider)'로 명명하고 그 유형을 단순도관서비스, 캐싱서비스, 저장서비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단순 도관(제12

21) 나강, 앞의 논문(주13), 316쪽.
22) Tambiama Madiega, "Reform of the EU liability regime for online intermediaries – background on the forthcoming digital service act –" ,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May 2020, p.1.

조)의 경우에는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있지만, 캐싱(제13조)과[23] 호스팅(저장)서비스(제14조)는[24] 객관적 요건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인식(Actual Knowledge)을 요구하고 있다.[25] 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는 OSP에게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의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26] OSP 책임 제한의 핵심 요건인 '실질적 인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전자상거래지침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유럽사법재판소와 회원국 국내법에 해석을 유보하고 있었다.[27] 통지 및 삭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는 '실질적 인식'의 의미를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 요청 통지가 있었던 때로 해석하고 있다.[28]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은 통지 및 삭제 절차의 도입 여부를 회원국의 재량으로 하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제3항).

유럽사법재판소는 오스트리아 최고 법원이 선결문제로 신청한 사안에서[29]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가 OSP에게 '적극적인 침해 방지 의무'를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제15조의 일반적인 모니터링 금지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제14조가 OSP에게 적극적인 모니터링 의무나 저작권 침해의 사전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후적으로 특정 콘텐츠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의 반복적인 게시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지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적극적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가 아니라 제한적이고 구체화된 재발 방지조치의 허용이라는 점에서 제15조의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30]

---

23) 제13조 캐싱 서비스 수신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신망에 송신하거나 통신망에 접근을 제공하는 정보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원국은 다음 조건하에서 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이용자의 요청에 응해서 정보의 재송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목적만으로 행한 정보의 자동적·매개적·일시적 저장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e) 서비스제공자가 송신이 시작된 정보원에서는 그 정보가 네트워크상에서 제거되었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이 무력화되었거나 또는 행정관청이 그러한 제검력화를 명령했다는 사실을 실제 인식한 시점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지체 없이 제거 또는 무력화하기 위해 행동한 경우

24) 제14조 호스팅 1. 서비스 수신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정보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원국은 다음 조건하에서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 수신자의 요구로 저장된 정보에 대해 책임이 없도록 보장한다. (a) 서비스제공자가 불법한 활동 정보에 대한 실질적 인식이 없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불법한 활동 정보가 분명한 사실이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b) 서비스제공자가 그러한 인식·의식을 한 시점에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제거하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한 경우

25) 박정훈, "유럽연합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리 책임에 관한 법제", 경희법학 제58권 제1호, 2013, 537쪽.

26) 제15조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의 면제
1. 회원국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송신하거나 저장하는 정보를 모니터링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되며 불법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사실이나 상황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

27) 나강, 앞의 논문(주13), 319쪽; 박정훈, 위의 논문(주25), 541쪽.

28) 박정훈, 위의 논문(주25), 541쪽.

29) OGH Wien, Beschluss von 25.10.2017 - 6 Ob 116/17b: 이 사건은 오스트리아 최고 법원이 Facebook에서 발생한 인격권 침해 관련 분쟁에서 OSP의 책임 제한과 관련해서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에 따라 의미가 같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삭제는 물론 장래 발생하는 이러한 내용 역시 삭제해야 한다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이 부분이 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의 일반적인 모니터링 금지 의무와 저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결 문제로 판단을 요청한 사안이다.

30) C-18/18-Glawischnig-Piesczek v. Facebook Ireland Limited, 2019.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은 우리나라와 미국과 달리 정보검색서비스에 대한 책임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전자상거래지침 제21조는 향후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 검색 엔진과 하이퍼링크에 대한 책임 제한 여부를 재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DSM지침

가. 개요

2019년 3월 26일 유럽의회를 통과한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Resolution of 26 March 2019 on the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for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이하 'DSM지침')은 유럽연합이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한 중요한 개정 지침이다. 디지털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이란 상품,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면서 개인과 기업이 국적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공정한 경쟁과 높은 수준의 소비자 및 개인정보 보호의 조건하에서 온라인 활동에 접근하고 수행할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31] DSM지침은 기존의 정보사회서비스지침(2001/29/EC)이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자 권리자 보호 강화와 함께 이용자의 접근성 및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간 균형을 추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제정되었다. 특히 OSP의 책임과 관련하여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Online Contents Sharing Service Provider, 이하 'OCSSP')'라는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면서 플랫폼의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하여 책임 요건을 강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DSM지침의 주요 내용에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의 예외와 제한(제4조),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제5조), 문화유산의 보존(제6조), 절판 저작물의 비상업적 이용(제8조), 확대된 집중 관리(제12조), 언론 출판물의 발행인의 저작인접권(복제권과 공중이용제공권) 인정(제15조), OCSSP의 콘텐츠 이용(제17조), 저작권자 및 실연자의 공정한 보상청구권 보장(제16조) 등이 있다.[32]

---

31) European Commission,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COM(2015) 192 final (2015.5.6.), p.3.
32)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 이용과 관련한 언론 출판물의 보호(박희영)", 저작권 동향 2019-6, 2쪽.

나. OCSSP 책임 제한

(가) OCSSP의 의의

DSM 지침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OCSSP'란 그의 주된 목적이나 주된 목적의 하나가, 이용자가 업로드 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량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 대상을 저장하고 이에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제2조제(6)항). 'OCSSP'는 영리를 목적으로 콘텐츠를 체계화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비영리 온라인 백과사전, 비영리 과학 및 교육 리포지터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유 플랫폼, 전자통신코드 지침(Directive (EU) 2018/1972)상의 전자통신서비스, 온라인 시장, B2B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것을 허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는 이 지침상의 'OCSSP'에 해당하지 않는다. OCSSP는 영리 목적으로 콘텐츠를 조직하고 이용을 촉진해야 하는데 이용자에 의해 광범위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콘텐츠 다음에 광고를 넣거나 이용자로부터 저장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은 영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33] 전자상거래지침에 따른 OSP 유형에 의한다면 OCSSP는 저장서비스에 해당한다.

DSM지침 제17조에 규정된 OCSSP 책임 제한 규정의 취지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자와 OSP 사이의 수익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가치 차이(Value Gap)'라고 하는데 이는 OCSSP가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만들어서 부당하게 수익을 얻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불법콘텐츠로 인해 OSP는 이용자들을 유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지만 그러한 이익이 권리자에게 귀속되지 않아 OCSSP와 저작권자 사이에 '수익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OSP에게 이용자들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DSM 지침 제17조는 정보사회지침 제3조[34]와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에 대하여 특별법적인

33) European Commission, "Guidance on Article 17 of Directive 2019/790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Com(2021) 288 final, Brussels (2021), p.5.

34) 제3조 저작물의 공중전달권과 기타 보호 대상의 공중이용제공권
1. 회원국들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공중에 이용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한다.
2. 회원국들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다음 각 호를 공중에 이용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a) 실연자에게는, 실연의 고정물;
(b) 음반제작자에게는, 음반;

지위를 가지므로 제17조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35]

(나) OCSSP의 책임 제한 요건

이용자가 온라인상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OCSSP에 의한 공중 전달 또는 공중 이용제공에 해당한다(제17조제1항).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일반공중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OCSSP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제17조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정당하게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가 다시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용자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업로드한 경우라면 OCSSP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저작물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다(제17조제1항제2문). 서비스제공자가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공중전달 또는 공중이용제공의 범위에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복제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복제를 위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36] 나아가 제17조에 의해 계약의 자유의 원칙이 영향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강제할 수는 없다.[37] DSM지침은 OCSSP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이용자에게도 미치도록 하고 있다(제17조제2항).

OCSSP가 저작물 등의 공중 전달 또는 공중 이용제공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고 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였는지는 서비스제공자의 유형, 시청자 및 규모, 서비스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제17조제5항).[38] (1)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2) 상당한 주의의무에 대한 산업계의 높은 기준에 따라

(c) 영화를 최초 고정한 제작자에게는, 영화의 원본과 사본;
(d) 방송사업자에게는, 방송이 케이블이나 위성 혹은 유선이나 공중파에 의해서 송신되는 것이건 관계없이 방송의 고정물.
3.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본 조에서 기술하는 공중 전달 행위 또는 공중 이용 제공 행위에 의하여 소진되지 않는다.

35) 한국저작권위원회, 「OSP 책임 제한에 관한 입법 동향」, 2022, 42쪽.

36) European Commission, *supra note* (87,) p.6.

37) *Id.*

38) 5. 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그의 의무를 준수하였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리고 비례 원칙의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a) 서비스제공자의 유형, 시청자 및 규모,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 대상의 유형; 그리고
(b) 적합하고 효과적인 수단의 이용 가능성과 그럴 시 서비스제공자에게 유발되는 비용

저작권자가 서비스제공자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특정 저작물이 이용될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3) 저작권자로부터 충분하게 구체화된 통지를 받은 즉시 웹사이트에서 통지받은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삭제하고, 상당한 주의의무에 따라 장래에 업로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39] 마지막에 규정된 내용을 소위 '통지 및 차단 유지(Notice and Staydown)'라고 한다. 일반적인 통지 및 삭제는 권리자가 통지한 불법복제물을 삭제하는 것으로 책임 면제가 가능하지만, 통지 및 차단 유지의 경우에는 장래 유사한 저작물이 업로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 책임 제한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유의해야 할 부분은 전자상거래지침은 OSP에게 불법복제물에 대한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DSM지침 제17조제8항도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3) 소결

미국 저작권청의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현재의 OSP 책임 제한 제도는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플랫폼 사업자와 저작권자 보호의 균형을 상실하고 권리자의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다. 유럽연합도 대규모 OSP의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놓았다. DSM 지침의 경우 OCSSP라는 OSP의 유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적용 대상을 구글과 같은 대규모 플랫폼으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이 저작권자에게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고 통지 및 차단 유지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의 '통지 및 차단 유지' 조치는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에서도 OSP 책임 제한과 관련한 해외의 최신 동향으로 언급되었다. 이후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Thom Tillis 의원이 '통지 및 차단 유지'를 포함한 'Digital Copyright Act of 2021'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고[40]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법안 발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4. 주요 플랫폼의 통지 및 삭제 절차 운용 현황 파악

(1) 개요

저작권법 제102조부터 제103조의3, 시행령 제39조의3부터 제44조의4, 시행규칙 제13조부터 제16조의2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에 따라 플랫폼들은 침해 신고 절차를 운용하고 있다. 저작권법

39) 한국저작권위원회, 앞의 보고서(주35), 45~46쪽.
40) https://www.tillis.senate.gov/services/files/0B0551E3-4CA2-4B49-9896-56427B7B7F77.

에 근거한 OSP의 책임 제한을 위한 통지 및 삭제 절차가 실무에서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주요 플랫폼인 다음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의 권리 처리 현황을 확인하였다. 국내 플랫폼들의 경우 크게 권리자의 신고에 의한 처리와 외부 공공기관을 통한 저작권 침해 신고로 구분하여 불법복제물을 처리하고 있다.

(2) 다음카카오

1) 권리 보호 현황[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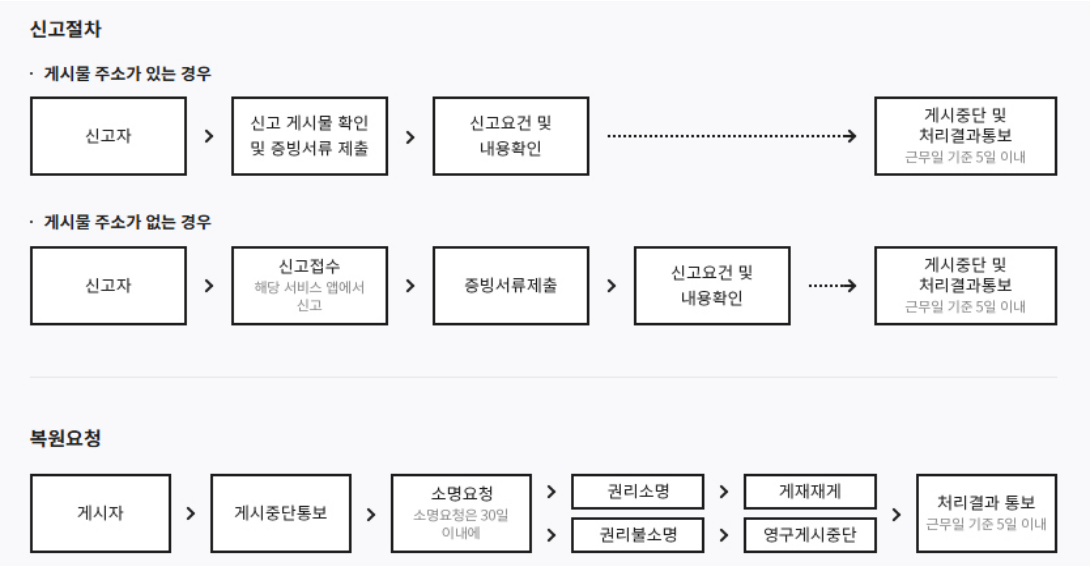
카카오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에 대하여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 표의 외부 기관 저작권 침해 신고는 저작권보호원 등을 통한 신고에 의한 처리 절차를 의미한다.

		22년		23년		24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저작권 침해	신고건수	18,666	7,192	5,411	9,419	6,608	4,817
	처리건수	17,613	6,246	3,583	7,762	5,757	4,284
외부기관 저작권침해	신고건수	3,868	5,886	1,388	2,315	1,701	2,139
	처리건수	3,858	5,886	1,388	2,315	1,701	2,139

2) 저작권 침해 처리 절차

카카오는 kakao신고센터를 통해 저작권 침해 신고를 처리하고 있다. 상세한 처리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신고된 게시물의 처리 시에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신고자의 정보가 게시자에게 메일로 안내된다. 저작권법 제103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게시자는 30일 내에 복원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데, 30일이 경과된 게시물은 삭제되어 복원이 불가하며 정당한 권리 없이 복원신청을 접수할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는다.

41) https://clean.kakao.com/transparence/report



(3) 네이버

1) 권리 보호 현황

네이버는 “그린인터넷 운영리포트”를 통해 매년 상하반기 이용자 보호 활동과 관련한 리포트를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은 ‘권리 침해 콘텐츠에 대한 조치 절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플랫폼에서는 ‘권리 침해 콘텐츠’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초상권 등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또는 상표법, 특허법 등에 따른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게시물이 게시 중단된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경우 권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는 경우 게시 중단 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네이버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저작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체적인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저작물이 등록되는 것을 감지하여 즉시 차단을 진행하게 된다.

네이버는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운영정책에 따라 게재 중단 조치를 통해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권리 당사자의 권리 소명을 통해 명확히 권리 침해가 확인된 사안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년도별 저작권 침해에 따른 게재 중단 처리 건수는 각각 아래 그림과 같다.

(건수, URL 단위 집계)

		22년	23년	24년	25년
권리자 신고	상반기	-	54,787	39,174	71,529
	하반기	55,856	50,557	49,377	-
한국저작권보호원	상반기	-	5,672	3,024	2,028
	하반기	4,150	4,651	4,853	-
게임물관리위원회	상반기	-	1099	1,098	115
	하반기	1,168	6,62	3,943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반기	-	2,991	2,445	3,811
	하반기	1,285	1,204	5,238	-

또한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현행 법률에 근거한 공문 접수 등의 방식으로 게시물에 대한 조치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근거 법률에 따라 조치가 되고 있다. 공문을 통해 네이버로 게시물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주요 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소 등이 있다. 방송통신심의의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에 대해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에 대한 게재 중단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의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대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네이버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가 확인된 경우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42)]

네이버는 사이트 내 등록된 게시물 내에 본인의 저작물(게시문 본문, 이미지, 동영상 등)이 허락 없이 포함된 경우 권리 보호 센터를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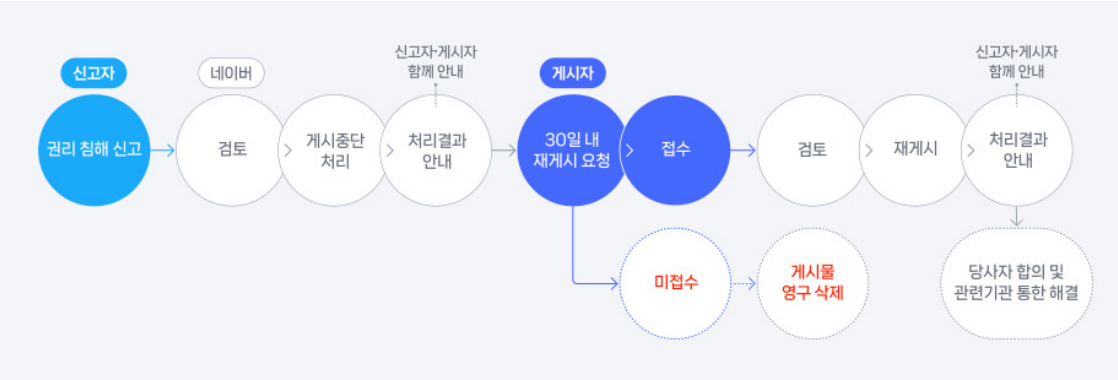
우선 신고자가 저작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한데 1) 자신이 그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 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 저작권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42) https://right.naver.com/

자료 그리고 추가로 저작권자가 단체인 경우 단체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와 단체 직인이나 대표의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을 함께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가 개인이나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직인이나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을 함께 접수해야 한다.

3) 저작권 침해 처리 절차[43]

네이버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절차를 진행한다.



1. 게시 중단 조치 시, 게시물 작성자에게 게시중단 요청사유와 함께 요청자명(개인은 권리주장자, 단체는 단체명)이 안내된다.
2. 저작권 침해 사유로 조치된 게시물의 재게시 요청은 저작권자이거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
3. 재게시 대상 게시물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하여 복제·전송의 개재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후에 복원되며, 게시 중단 요청자에게도 안내된다.
4. 재게시된 게시물에 대한 게시 중단 요청은 불가능하며, 이후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심의 판단을 요청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5. 저작권법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게시 중단 요청자가 게시물 작성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게시 예정일 전에 네이버에 알린 경우 게시물이 재조치될 수 있다.

43) https://right.naver.com/type/ipr/post/copyright

4) 저작물 사전 보호 절차[44)]

저작물 사전 보호 요청을 신청하면 네이버는 저작물이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확인이 완료되면 요청자가 전달해 주는 저작물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등록하게 된다. 보호 대상으로 등록된 저작물의 복제 파일이 카페, 블로그, 포스트, 네이버TV 서비스에서 네이버 이용자 작성 콘텐츠의 첨부 파일 등의 형태로 유통되지 않도록 필터링을 하게 된다. 사전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저작물 종류는 동영상, 음원, 기타 파일 총 3가지이며, 사전 보호는 저작물 정보가 등록된 이후 새로 작성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사전 보호가 요청된 저작물이 동영상 또는 음원인 경우 네이버는 제출된 저작물 원본에서 핑거프린트를 추출하고, 핑거 프린트를 이용하여 이용자 작성 콘텐츠에 복제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필터링을 한다. 이 과정에서 복제 저작물이 검출되면 저작물이 재생되지 않도록 차단한다. 사전 보호 요청된 저작물이 기타 파일인 경우 네이버는 제출된 저작물 원본 파일로부터 해시값을 추출하고 이용자 작성 콘텐츠에 동일한 해시값을 갖는 파일이 첨부되는지 검사한다. 이 과정에서 복제 저작물이 검출되면 파일을 열어볼 수 없도록 차단하게 된다.

저작물 사전 보호 요청은 요청이 처리 완료된 이후 새롭게 작성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만 필터링을 한다. 이용자가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보호 요청된 복제 파일을 첨부하면 필터 시스템이 이를 검출하고 검출된 복제 파일은 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재생이 차단되는데 이때 해당 콘텐츠가 담긴 게시물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신고는 타인이 작성하여 이미 노출되고 있는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법한 기관으로부터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추가적인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게시물을 임시로 게재 중단하게 된다.

저작물 사전 보호 요청의 철회는 원본 파일의 삭제를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보호 요청된 저작물 원본 파일의 삭제 요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네이버는 30일 이내에 파일을 삭제하며 원본 파일이 삭제되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사전 보호 필터링이 즉시 중지된다(파일 삭제 요청을 위해서는 기존 사전 보호 요청 시 부여된 접수 번호가 필요하다).

44) https://right.naver.com/type/copyright-protection

(4) 구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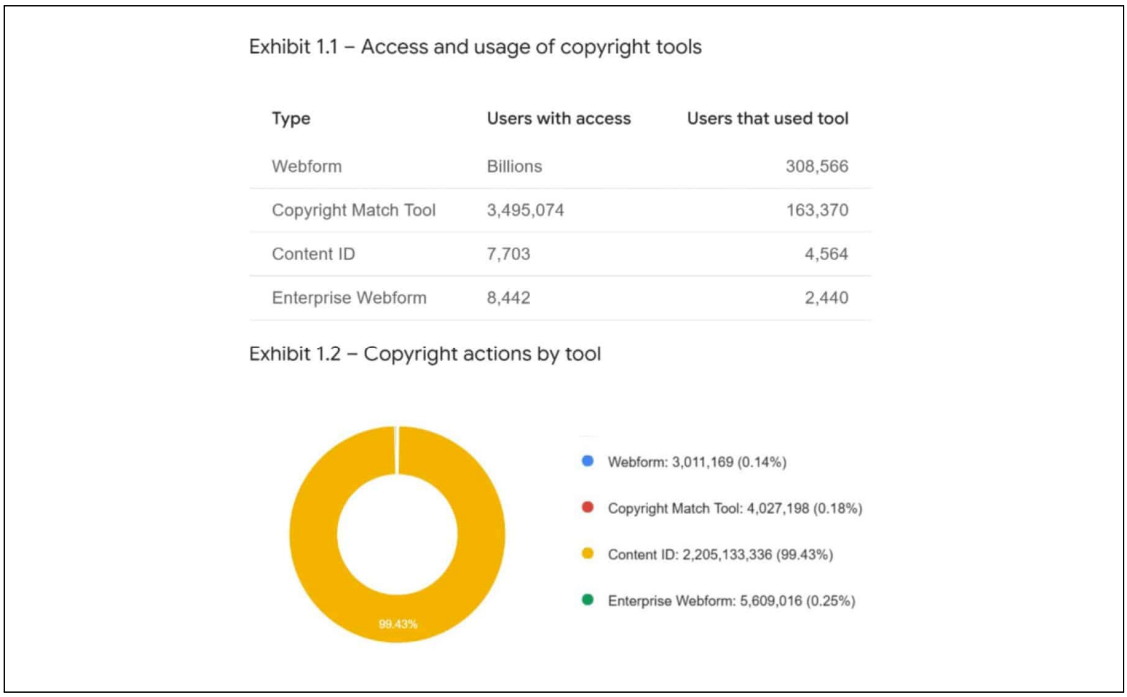
1) 개요[45]

구글의 유튜브(YouTube)는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동영상을 정기적으로 삭제, 비활성화 또는 수익 창출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튜브의 투명성 보고서에 의하면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신고의 약 99%가 Content ID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대부분의 신고가 자동화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접근 권한은 검증을 거친 저작권자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2024년 투명성 보고서(Transparency Report, 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화된 저작권 침해 신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유튜브는 22억 건 이상의 신고를 처리했는데 이는 전년도의 약 20억 건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유튜브에 의하면 현재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는 7,703명의 저작권자 중 4,564명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웹 양식을 통해 300만 건이 넘는 신고를 접수한 308,556명의 사용자 수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에서 한 해 동안 접수된 모든 저작권 침해 신고의 99.43%가 Content ID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었다고 한다. 이 중 대부분은 자동화된 신고이지만 Content ID 사용자가 수동으로 신고한 경우는 0.31%에 불과하다. 비율로는 매우 적은 수치이지만 약 690만 건이 수동 청구 건수에 해당한다. 엄청난 수치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Counter Notice)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에는 22억 건이 넘는 Content ID 신고 중 수신자가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1% 미만이었다. 이는 상대적으로는 낮은 수치이지만 2,200만 건의 이의 신청에 해당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수동으로 접수된 신고는 자동 감지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고(0.54%)에 비해 이의가 제기되는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았다(1.13%). 이는 사람의 개입이 더 많은 불만을 유발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이의 신청은 65% 이상이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결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주장을 포기하거나 제때에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Content ID는 저작권자들에게는 큰 기회가 되었는데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을 삭제하는 대신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들은 2024년에 Content ID 신고 건의 90% 이상을 수익화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이러한 영상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은 이용자가 아닌 저작권자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수익 창출 전략은 저작권 침해 신고자에게 상당한 수익을 안겨주는 것으로 입증되었는데 유튜브는 설립 이후 Content ID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해 총 120억 달러의 수익을 지급했다고 한다.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저작권 관련 조치는 Content

45) https://transparencyreport.google.com/youtube-copyright/intro

ID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사용자는 웹 양식이나 저작권 일치(Copyright Match) 도구와 같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많은 저작권자들이 Content ID를 이용하고 싶어 하지만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검증된 몇천 명의 사용자에게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잠재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 때문이다. 부정확하거나 악용된 파일은 수천 건의 허위 신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Content ID는 자동화된 특성 때문에 그 영향이 증폭되는데 잘못된 참조 파일 하나가 사이트 전체의 수백, 심지어는 수천 개의 동영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Content ID 와 Copyright Match Tool의 경우 악용 사례가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는 시스템을 조작하려는 사용자들이 주로 유튜브의 확장된 도구에 접근할 자격이 없는 유튜브 사용자임을 시사한다.[46]


Exhibit 1.1 – Access and usage of copyright tools

Type	Users with access	Users that used tool
Webform	Billions	308,566
Copyright Match Tool	3,495,074	163,370
Content ID	7,703	4,564
Enterprise Webform	8,442	2,440

Exhibit 1.2 – Copyright actions by tool

출처: 유튜브 2024 투명성 보고서 중 '도구별 저작권 침해 처리 건수'

46) https://legalblogs.wolterskluwer.com/copyright-blog/youtubes-transparency-report-july-2023-december-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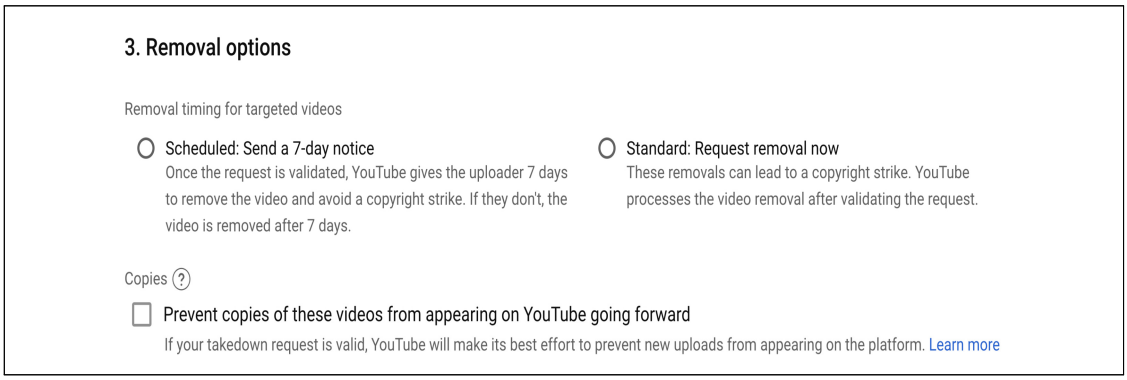
2) 저작권 관리 도구

유튜브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저작권 관리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유튜브의 저작권 관리 도구는 웹 양식, Copyright Match Tool, Content ID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작권자의 특정 요구와 리소스에 맞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든 도구는 기술을 사용해 일치하는 콘텐츠의 재업로드를 방지한다. 특히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Content ID를 통해 저작권을 주장하고 수익을 창출한 콘텐츠에서 광고로 발생한 120억 달러가 넘는 수익금이 저작권자에게 지급되었다. Content ID를 통해 저작권자 및 유튜브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했다.

	웹 양식	Copyright Match Tool	Content ID
적격 대상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거의 재개시되지 않는 유튜브 채널 및 기타 저작권자 – 주로 개인	자신의 저작권 콘텐츠가 간혹 재게시되는 유튜브 채널 및 기타 저작권자 – 일반 유튜브 채널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빈번하게 재게시되는 영화제작사,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음반제작사 등
자격 요건	모든 사용자	유효한 삭제 요청을 제출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회원 또는 저작권자	복잡한 자동 일치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확장된 도구의 필요성, 저작권에 대한 이해, 리소스 필요성을 입증한 저작권자
리소스	자체	자체	전문 지식을 갖춘 전담 팀
재업로드 차단	차단	차단	차단
자동화	중간: 삭제된 동영상과 일치하는 부분 표시	높음: 모든 사용자에 대해 삭제된 동영상과 일치하는 부분 표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등 일부 사용자에게는 자체 채널의 동영상과 일치하는 부분 표시	매우 높음
악용	높음	낮음	낮음

가. 웹 양식

모든 저작권자는 웹 양식을 이용할 수 있다. 웹 양식은 저작권 삭제 요청을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80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유튜브에 콘텐츠가 거의 없는 창작자가 가끔씩 사용하도록 고안되었다. 대다수의 저작권자는 웹 양식만 사용해도 충분한데 동영상을 삭제한 크리에이터는 삭제된 동영상의 사본이 다시 업로드되지 않도록 유튜브에 자동으로 요청하는 기능에 접근할 수 있다. Copyright Match Tool은 웹양식을 통해 삭제된 동영상의 잠재적인 사본도 찾아 신고자에게 제공한다. Content ID 접근 권한이 있는 스튜디오 콘텐츠 관리자의 인터페이스 내에서 '기업용 웹 양식'을 통해 일치 항목을 저작권 삭제 요청으로 전환할 수 있다.



출처: 유튜브 투명성 보고서 '웹 양식 인터페이스 일부'

나. Copyright Match Tool

유튜브는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공유하여 게시하는 빈도가 비교적 높아 저작권 삭제 요청을 빈번하게 제출해야 하는 저작권자를 위해 Copyright Match Tool을 제공하고 있다. Copyright Match Tool은 웹 양식을 통해 유효한 저작권 삭제 요청을 제출한 모든 유튜브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다. 게시 중단 요청이 승인되면 Copyright Match Tool이 삭제 요청에 신고된 동영상과의 일치 가능성 확인을 위해 유튜브 업로드 항목을 검색하고 신고자는 향후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한 크리에이터 또는 저작권 관리 도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급 저작권 관리 도구의 필요성을 입증한 채널의 경우 Copyright Match Tool이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동영상이 일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Copyright Match Tool의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는 유튜브 동영상을 공개, 비공개 여부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업로드하면 된다. Copyright Match Tool은 각 동영상 일치 항목에 대해 총 조회수, 이를 업로드한 채널, 해당 콘텐츠가 동영상에서 차지하는 비율, 동영상의 일부 프레임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표시한다. 이 도구는 동영상의 오디오 부분에서만 일치가 발생하는지 또는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는지 즉 콘텐츠가 샘플링되었지만 동영상이 단순 재업로드된 것은 아닌지 표시하게 된다. 사용자는 이 인터페이스에서 일치 항목을 보관처리하고 동영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게시 중단 요청을 제출하거나 업로더에게 연락할 수 있다. 현재 Copyright Match Tool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 수는 300만 개 이상이다.

다. Content ID

가장 복잡한 저작권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예: 영화제작사, 음반사, 집중관리단체)를 위한 저작권 관리 도구이다. Content ID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소규모 독립 크리에이터도 여러 서비스 제공 업체를 통해 이러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유튜브와 유튜브의 Content ID 파트너는 도구 사용에 대한 매개변수를 설정하고 유튜브에서 Content ID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의 콘텐츠를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파트너는 소유한 저작물의 참조 파일과 함께 제목 및 자세한 저작권등의 메타데이터를 유튜브에 제공한다. 이러한 참조 파일을 바탕으로 유튜브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디지털 '지문'을 만들고 플랫폼을 자동으로 스캔하여 업로드된 동영상의 콘텐츠가 참조 콘텐츠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다. 저작권자와 서비스제공업체는 유튜브의 스튜디오 콘텐츠 관리자를 사용해 시스템에 일치하는 콘텐츠에 대한 차단, 수익 창출 또는 추적을 지정한다. 저작권자는 저작권 주장에 적용할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콘텐츠를 그대로 두고 수익을 창출하거나 콘텐츠를 그대로 두고 시청 통계를 추적하거나 유튜브에서 해당 콘텐츠를 볼 수 없도록 차단할 수 있다. 2024년에 저작권자는 전체 Content ID 저작권 주장의 90% 이상에 대해 수익 창출을 선택했다.

3) 저작권 침해 처리 절차

저작권자가 저작권 도구 중 하나를 통해 저작권 주장 또는 삭제 요청을 하면 유튜브 시스템이 제출된 영상과 파일을 대조하여 일치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다음 중 원하는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영상 차단(Block/Removal), 영상을 유지하면서 수익화(Monetize)하는 방법, 그리고 단순 조회 통계 추적 중에서 원하는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영상이 차단되는 경우 이용자는 이의 신청(Counter Notice)이 가능하고 이 경우 저작권자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권리 주장을 철회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 주장이 철회되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이용자는 영상을 유지하게 되고 수익은 이용자에게 귀속된다. 이의 신청 절차는 통상적으로 최초 통지 후 약 30일 내에 해결되는데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이용자의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을 위해 설계된 것이다. 자동화된 Content ID 처리는 방대한 양이므로, 권리 주장 자체는 사실상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웹양식이나 저작권 일치 도구를 통한 신청은 자동화 시스템보다 처리 지연이 있을 수 있고 실제 저작권자의 선택 여부에 따라 결과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5. 결론

본 연구는 현행 OSP 책임 제한 제도를 검토하고 실제 대표적인 플랫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의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저작권법상 OSP 책임 제한 제도의 내용을 해외 입법례와 함께 살펴보았고, 특히 국내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하였다. 유튜브의 경우 미국 저작권법에 따른 통지 및 삭제 절차를 적용하여 처리 절차를 운용하고 있고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우리 저작권법에 따른 통지 및 삭제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의 '저작물 사전 보호 절차'와 유튜브의 '저작권 관리 도구'들은 통지 및 삭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저작권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의 경우 단순히 불법복제물의 삭제가 아니라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다.

저작권법상의 통지 및 삭제 절차는 저작권자에게 저비용으로 광범위한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자구책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SP는 이 절차를 통해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안전지대를 확보함으로써, 플랫폼 운영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는 대량 복제·전송이 용이한 디지털 환경에서 권리자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호하는 핵심 기제로 기능하였다. 즉, 현행 통지 및 삭제 절차는 신속한 침해 차단이라는 본래의 입법 목적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각 플랫폼의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의 가장 고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물 사이트의 반복적인 등장의 문제는 OSP 책임 제한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하고 신속한 제재의 필요성으로 수렴된다고 보여진다. 최근 국회에서는 긴급 접속 차단 제도 개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최대 5배), 불법 복제물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 등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47] 개정안의 내용들은 디지털 환경 변화를 통해 경험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보여진다.

47) 저작권법 일부개정안(긴급 접속차단,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불법 링크 규율 등) 국회 본회의 의결(2026. 1. 29.)

제4절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1.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 및 최초의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 설정 등 권리의 변동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제도이다. 저작권은 재산권으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지만, 권리의 목적물이 추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권리의 성립과 변동에는 아무런 외부적 표상이 따르지 않는다. 저작권 등록은 이러한 권리의 성립과 변동에 대해 일종의 외부적 표상을 만들어 주어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1)]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는 저작권 일정 사항 및 권리 변동을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창작 환경과 권리 관리 방식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 양도 등록과 동일한 대항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 입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필명 또는 예명 등 이명으로 창작 활동을 하는 저작자가 실명 공개 없이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제도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으로 AI를 활용하여 창작된 저작물이 급증함에 따라, 저작권 등록 과정에서 생성형 AI 활용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고 AI 산출물 부분과 인간의 창작적 기여 부분을 구분하여 공시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법상 저작권 신탁은 저작권 양도의 일종으로 해석되어 실무상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 등록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양도 등록의 공동 신청 원칙, 복잡한 절차 및 등록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신탁 등록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12개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저작물 수는 1억 2천만 건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신탁 저작물은 3천 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등록제도가 신탁 관리 저작물에 대한 공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웹툰·웹소설 작가 등 필명을 사용하는 창작자들의 경우, 저작권 등록 과정에서 실명이 저작권 등록부 및 등록공보를 통해 공개됨에 따라 악성 댓글이나 비방 등 부작용에 노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창작자들은 저작권 등록 자체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

1) 최진원·강보라, 「2023 저작권 등록 심사 편람」,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3쪽.

으로 저작권 등록제도의 활용 저조와 공시 기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저작물에 대해 AI 활용 여부 및 활용 정도를 구조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 등록 신청 서식과 등록부상에는 생성형 AI 산출물의 포함 여부나 인간의 창작적 기여 범위를 명확히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에 대한 정확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작권 등록제도가 공시제도로서 가지는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K-콘텐츠의 거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저작권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저작권 신탁 등록, 이명 등록 및 AI 활용 창작물 등록 관련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먼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저작권 신탁의 법적 성질과 관리 신탁의 특수성, 현행 등록 실무 및 등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 등록과는 구별되는 신탁 관리 저작물에 특화된 등록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저작권법상 신탁 등록에 대한 명문의 규정 부재, 절차 및 비용 부담으로 인한 등록 저조 문제를 중심으로, 신탁 등록의 명확화, 절차 간소화 및 공시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설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음으로 저작자의 실명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에서 실명 공개가 원칙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필명 또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창작자들이 겪는 현실적 문제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미국·일본·독일 등 외국의 저작권 등록제도 및 익명·이명 저작물 관련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함께, 부동산 등기 등 국내 유사 공시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저작권 등록부 및 등록공보에서의 성명 공개 방식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명 등록 없이 이명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등록공보 및 온라인 공개 과정에서 비식별 처리를 허용하는 등 공시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실명 등록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생성형 AI 기술 확산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 실태와 현행 등록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한다. 특히 현행 등록 신청 서식과 등록부 체계에서 생성형 AI 활용 여부, AI 산출물 부분과 인간의 창작적 기여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공시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미국 저작권청의 인공지능 결과물 등록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 이를 참고하여 국내 저작권 등록제도에 적용

가능한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는 생성형 AI 활용 여부의 표시, AI 산출물과 인간 창작 부분의 구분 기재, AI 산출물을 포함하는 등록 신청 서식 및 등록부 개선 방안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54조의2 신설을 통한 신탁 등록제도의 명문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실명·이명 등록제도의 개선, 그리고 저작권법 시행규칙 및 관련 등록 서식 개정을 통한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등록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2. 신탁 등록제도 개선 방안

(1) 현행 등록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신탁을 저작권 양도의 일종으로 보아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 역시 실무상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 등록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은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와는 그 성격과 기능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등록제도는 이러한 신탁 관리 저작물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구조와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다수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1억 건에 이르는 저작물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신탁 관리 저작물 중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건수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저작권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문제로 이에 대한 회의론[2]이 주장되기도 하였으며,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대항력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는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게 대항력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

저작권법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용민 의원안 ('22.12.15.): 임기만료폐기	현행법의 저작권 등록제도는 저작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며,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에 대해서는 그 권리 변동을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음악저작물 등의 경우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의 신탁계약 및 작품 등록에서 필요한 사항이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사항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해야만 대항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비용 및 행정상의 부담이 크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2) 안효질, [기고]저작권 등록제도 이대로 좋은가?, 전자신문, 23쪽(2023.07.25.).

저작권법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또한 대형 영화 제작사나 OTT 업체와 같은 음악저작물 이용자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자로부터 신탁을 받으면서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당한 사용료의 징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탁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위탁의 조건, 범위 및 사용료·보상금 등 정당한 대가수준 등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 등)
한준호 의원안 ('23.7.5): 임기만료폐기	현행법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저작권 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저작재산권의 양도·처분제한, 배타적발행권·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된 저작재산권이 저작자 개인의 계약으로 제3자에게 양도되고, 이를 별도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저작자가 제작사에 저작권 일체를 넘기는 이른바 '매절계약' 관행이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은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면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을 신탁한 경우 등록 없이도 저작재산권의 양도·처분제한, 배타적발행권·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에 대하여 제3자 대항력을 갖도록 하여,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해 양도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작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54조제2항, 제106조제1항 등).
이상헌 의원안 ('23.12.5): 임기만료폐기	현행법의 저작권 등록제도는 저작권신탁관리제도에 따른 저작물 등록과 중복되는 절차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등록 시 제3자 대항력을 박탈하는 역할을 하여 저작권자의 권익을 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을 동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비용의 지출을 막고자 함. 또한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해 양도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매절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4조, 제55조 및 제136조).
김재원 의원안 ('25.4.8.)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 설정 등의 권리변동 사항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음. 이는 권리변동의 공시를 통해 저작권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하지만 위탁 저작물의 경우, 신탁관리업자가 이미 별도의 공시 절차를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등록 절차가 중복되어 저작자에게 행정적·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등록 저작물이 증가하는 실정임. 또한, 구름빵, 검정고무신 사건 등에서 보듯 일부 대형 제작사에서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신탁 계약을 우회하여 저작자에게 직접 양도를 요구하거나 이중 양도 및 매절 계약 등을 체결하여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본 개정안은 신탁관리업자가 「저작권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저작물 목록을 공개한 경우 별도의 저작권 등록 없이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도록 하여, 중복된 등록절차를 생략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신설 등).

(2) 저작권 신탁의 법적 성질[3)]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저작권신탁관리제도는 저작자의 입장에서는 직접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저작자를 일일이 확인하여 교섭하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저작자가 신탁기관에 권리를 신탁하고 그 권리를 일괄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저작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위탁자인 저작자는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저작권을 저작자에게 반환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5)]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저작권 신탁은 신탁법상 신탁으로 권리의 종국적인 이전을 수반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6)]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하면 그 권리는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며,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는다.[7)] 이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신탁받은 저작재산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저작재산권 등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로서 스스로 민형사상 조치를 할 수 있다. 신탁 이후에 저작재산권은 신탁단체에게 종국적으로 이전되고 신탁자(위탁자)는 수탁자인 신탁단체의 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신탁법 제2조[8)]에서도 저작재산권 등을 이전하기 위한 경우를 신탁법상 신탁으로 규정하면서, 제4조제1항[9)]에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록 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

---

3) 신탁 중 금융신탁 등은 제외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저작권 신탁만을 논의하기로 한다.

4) 저작권법 제2조제26호.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9가합553870 판결(광화문 연가 1심).

6)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저작권신탁관리의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고(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참조), 신탁은 권리의 종국적인 이전을 수반하여 신탁행위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신탁법 제31조) 신탁자가 수탁자의 행위에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것이 대리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이다. 그에 따라 신탁관리업자는 신탁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스로 신탁받은 저작재산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저작재산권 등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로서 스스로 민·형사상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7)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16872, 216889 판결,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등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2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하면 대내외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등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권리가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8)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9)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탁법상 규정을 저작권법 제54조에서도 두고 있는바, 단순히 신탁법상 신탁뿐만 아니라 일반 양도 등의 경우에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거래 안전을 위해 저작권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등록을 먼저 마친 양수인이 권리자로 보호받는다. 즉 제1양수인보다 늦게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제2양수인이 양도 등록을 먼저 한 경우 제2양수인은 제1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10]

다만, 저작권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는 자신 명의로 양도등록을 완료했더라도 원양수인의 등록 결함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정당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11] 단순히 이중양도사실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이미 저작권이 양도되었음을 알고 있으면서 이중양수했을 뿐만 아니라, '제1양수인에 의해 양도인이 저작권양도등록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는 등' 분쟁이 야기된 후에 이르러 양도인 명의의 저작권 및 저작자 등록과 제2양수인명의의 저작권양도등록을 경료하는 등 배임행위와 이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12]

---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가합3187 판결[본 더치(Von Dutch) 사건], "원래 저작권자였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제1-1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선순위 양수인인 ◎◎◎◎로부터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경우를 가리켜 대항요건주의 내지 의사주의 원칙에 따라 상속인들이 무권리자가 되었다고 전제한 다음, 후순위 양수인인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은 무권리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는 경우에는, 결국 후순위양수인은 저작권양도등록을 먼저 경료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나 선순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중 양수인들 사이에는 저작권등록을 먼저 경료한 사람을 권리자로서 보호하는 우리 저작권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제1-1양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보다 수년 전에 저작물 발생국인 미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1)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5. 23. 선고 88가합51561 판결, "저작권등록을 대항요건으로 규정한 현행 저작권법하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당사자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이 경우 제3자라 함은 그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에 한하므로, 저작권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저작권을 이중으로 양도받은 자는 설사 자기 명의로 저작권양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원양수인의 저작권양도등록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12)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의 이중담보의 경우는 부동산 이중매매와 다르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동산의 이중매매 및 이중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2.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즉 부동산 이중매매를 제외한 부동산 이중저당, 동산의 이중매매와 이중양도담보 모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민사적인 거래에 형사적 제재를 완화시키려는 법원의 최근 경향과 일맥상통하며,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국민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이중매매 방지 수단의 부재라는 거래현실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견해로는 정해윤, "이중매매, 이중담보와 배임죄", 법률신문(2021.08.30.).

양도인의 이중양도행위가 배임행위인지 여부는 최근 〈광화문 연가 사건〉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다. 원심인 1심 법원이 신탁계약의 위탁자(신탁자)인 저작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수탁자인 신탁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위탁자의 이중양도 행위는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13] 동 사건 항소심에서는 설사 위탁자의 이중양도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제2양수인이 이러한 배임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다.[14] 신탁단체에 신탁한 저작물에 대한 양도인의 이중양도행위가 형법상 배임행위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민법상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례는 부정적이다. 제1양수인에 해당하는 신탁단체는 양도인의 이중양도로 인해 '제2양수인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없을 뿐,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서는 등록 없이도 얼마든지 권리주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저작권료 징수 또는 배분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도 아니므로 저작권신탁관리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하여 단순한 신탁계약 약관 위반행위만으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15]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경우, 양도 사실을 단순히 알고 있었다고 해서 제3자에서 제외되지는 않고, 제3자는 선·악 불문 보호된다.[16] 법문상 제3자에게 선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제3자의 인식 여부를 불문하고 거래 안전을 위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17] 이러한 제3자에는 저작권양도인으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이중으로 양수한 자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18]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더라도 수탁자가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이중양수인이나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9가합553870 판결(광화문 연가 1심).
14) 서울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1나2052403 판결.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9가합553870 판결.
16) 악의의 이중양수인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로는 최준규, "민법의 관점에서 본 저작권 신탁의 법률관계-대법원 2006.7.13. 선고 2004다10756 판결 및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다1272 판결-", 저스티스(제192호), 2022, 310~311쪽; 저작권이 포괄신탁된 후 제2양수인이 개별 저작물에 대해서 먼저 등록을 마친 경우 포괄수탁자가 우선한다는 견해로는 서달주, "저작권법상 권리변동 등록제도의 문제점-포괄신탁과 관련하여-", 계간 저작권(제91호), 2010, 71쪽;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로는 최승수·이규호, "저작권법상 등록제도의 제3자 대항력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제121호), 2018, 144쪽.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9가합553870 판결.
18) 대법원 2016. 1. 14, 2014다202110 판결; 오승종, 「저작권법(제5판)」, 박영사, 2020, 1194쪽,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 이용허락을 받은 자,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받은 자 등도 제3자에 해당하나, 일반 채권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신탁적으로 양도받은 사람은 신탁법 및 저작권법상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9] 즉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그 양도에 관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 다만 저작재산권 침해 이후에 이를 양수한 경우, 양수인은 적법한 고소권자가 될 수 없다.[20]

또한 위탁자의 해지청구 등으로 저작권신탁이 종료하더라도 저작권이 위탁자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까지는 수탁자인 신탁관리단체가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신탁관리단체는 청산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므로 신탁 해지 시 해당 저작물이 더 이상 관리저작물이 아님을 이용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21] 위탁자인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을 다시 이전받을 때까지는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하여 침해될 저작재산권도 없으므로, 저작재산권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

---

19)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10756 판결(편집 앨범 사건), "저작권법 제5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양도등록은 그 양도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때의 '제3자'란 당해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신탁적으로 양도받은 사람은 신탁법 및 저작권법상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849 판결(유로델리세스 요리책 사건), "구 저작권법 제5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양도등록은 그 양도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때의 "제3자"란 당해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므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그 양도에 관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고소가 이 사건 요리책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적법한 고소권자에 의한 고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는 정규진임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정규진만이 고소권자이고 이 사건 범죄 이후 정규진으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였다는 김도영은 고소권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김도영이 정규진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볼 자료도 없다".

21)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위탁자의 해지청구 등으로 신탁이 종료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저작재산권 등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까지는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종결과 최종 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귀속권리자를 위한 법정신탁의 수탁자로서 그와 같은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며, 귀속권리자는 신탁수익권 형태로서 신탁재산 등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게 될 뿐이다. 나아가 구 신탁법에는 신탁 종료 시 수탁자의 청산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였거나 해당 신탁 취지 등에 의하여 달리 볼 수 없는 한 수탁자는 청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데,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체결한 쌍무계약에 관하여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귀속권리자에게 인수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신탁이 종료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저작권 신탁의 특수성 및 등록 현황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 저작자 등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들도 거래비용을 낮춰 저작물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집중관리단체(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CMOs)를 활용하는 제도이다. 집중관리단체는 저작자 등 권리자를 대신하여 이용자와의 협상에서 사용료율과 이용 조건을 결정한다. 이들은 관리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이후 사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개별 권리자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관리단체가 대신하여 저작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방식은 저작권자들의 관리 부담을 덜어주고, 이용자에게는 권리자를 찾아서 직접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즉 저작권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저작권 시장을 활성화하고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을 촉진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집중관리제도로 저작권위탁관리업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후자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저작권법 제105조제1항).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제26호).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제27호).[2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탁자가 수탁자의 행위에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것이 대리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이다. 그에 따라 신탁관리업자는 신탁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스로 신탁받은 저작재산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저작재산권 등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로서 스스로 민·형사상 조치 등을 할 수 있다.[23]

그리하여 저작권법에서는 신탁 관리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 제54조의 권리변동 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신탁 등록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반 양도등록으로 밖에 진행할 수 없고, 행정 절차적·경제적 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신탁 등록이 저조하다. 12개 신탁관리단체의 총 신탁 관리 저작물 수는 1억2천 건을 초과하나, 이중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신탁등록한 건수는 3천 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22) 다만 정의 규정에서 저작재산권자와 별도로 배타적발행권자와 출판권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은 그 성질상 집중관리대상이 되기 어렵고, 양자 모두 저작재산권의 일부로서 저작재산권에 포함되므로 별도 명시는 필요하지 않다.
23)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 12개 신탁관리단체 저작권 관리 저작(인접)물 수* 〉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5,181,627	5,892,709	6,635,898
	한국음반산업협회	373,114	425,323	458,990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2,572,388	2,730,243	2,920,381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2,491,881	2,734,280	3,869,273
어문 24)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46,947,140	42,019,788	58,677,337
	한국방송작가협회	367,806	507,851	625,579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173	173	222
영화	한국영화배급협회25)	-	-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55	55	55
방송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4,245	4,198	4,917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38,224,347	45,996,670	55,320,531
공공	한국문화정보원	82	18	17
전체		96,162,858	100,311,308	128,513,200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통계집(2024년 제13권 제2호), 30쪽, 68~77쪽.

〈 근 3년간 신탁 등록 현황*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계
22년	5	0	0	5건
23년	33	2,215	485	2,733건
24년	0	101	111	212건
계	38건	2,316건	596건	2,950건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팀 자료

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은 등록수수료 등 등록비용이 과다하고 등록신청절차가 번거롭고 신탁 등록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양도 등록으로밖에 등록할 수 없음을 이유로 신탁 관리 저작물을 거의 등록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 신탁은 일반 저작권 양도와는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판례가 저작권 신탁의 법적 성질을 저작권의 양도로 보아 수탁자인 신탁단체가 대내외적인 권리의 주체가 된다고 하기는 하나, 관리물의 자유로운 처분까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저작권 신탁은 '저

24)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2021년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와 통합함

25) 한국영화배급협회 관련 통계는 협회 사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위탁관리시스템 등에 관련 통계를 미제공함에 따라 수집·제공 불가

작물 관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이용허락 및 사용료 징수 등 권리행사가 가능할 뿐이고, 위탁자는 언제든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관리 신탁의 특수성으로 일반 양도와는 구별되는 점이다. 이에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의 저작권 양도에서 신탁 등록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권리 변동 등록 체제하에서는 신탁 등록을 일반 저작권 양도 등록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는데, 신탁의 실질과 등록부를 통해 외부에 표상되는 것(양도)과 불일치하여 오히려 거래 안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제대로 된 공시효과를 가져오기도 힘들다.

(4) 저작권 신탁단체들의 주장의 타당성 검토

신탁관리단체에 신탁된 저작물에 당연대항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신탁관리단체의 저작물 정보 공개가 공시효과로서 적절한지, '특정 행위주체'인 신탁관리단체에게 당연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도록 하겠다. 또한 저작권 이중양도 및 매절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연대항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도 검토한다.

먼저 일본과 독일 등 당연대항제도를 도입한 국가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관리 저작물에 대하여 대항력을 부여해 달라고 하는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독일은 저작권은 이전될 수 없으나(독일 저작권법 제29조제1항), 저작자는 다른 자에게 저작물을 개별적 또는 모든 이용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독일 저작권법 제31조제1항). 또한 이런 이용권에 대한 확장효력으로 후순위 이용권자나 이용권 설정자의 변경, 포기 등의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20년 개정을 통해 이용권의 당연대항력에 관한 조항(제63조의2와 제80조제4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이용권자는 저작권을 취득한 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독일 저작권법

제29조(저작권에 관한 법률행위)

(1) 저작권은 이전될 수 없으나, 사인처분(死因處分) 또는 상속재산분할로 인하여 공동상 속인에게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이용권(제31조)의 설정, 활용권에 대한 채권법적 동의와 약정, 그리고 저작인격권에 관하여 제39조에서 규정하는 법률행위는 허용된다.

제31조(이용권의 설정)

(1) 저작자는 다른 자에게 저작물을 개별적 또는 모든 이용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용권)를 부여할 수 있다. 이용권은 단순 또는 배타적 권리로서 장소적, 시간적 및 내용적으로 제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

제33조(이용권의 확장효력)
배타적 및 단순 이용권은 추후에 설정된 이용권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이용권을 설정한 권리보유자가 변경되거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일본 저작권법

제63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 그의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전 항의 허락을 얻은 자는 그 허락과 관련된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그 허락과 관련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이용권(제1항의 허락에 관련된 저작물을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음 조에서 같다.)은 저작권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양도할 수 없다.
제63조의2(이용권의 대항력) 이용권은 그 이용권에 관련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취득한 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일부 신탁관리단체가 주장하는 독일과 일본의 '당연대항제도'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라이선시)에게 물권자가 아닌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이용권자가 계약당사자인 저작권자가 아닌 저작권 양수인이나 후순위 이용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어 불측의 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등 일방적인 이용허락 계약 해지나 금지청구 등으로 인해 이용권자가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권 자체를 등록할 방안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예외적인 제도이다.[26]

이에 반해 저작권 신탁은 단순한 채권인 이용권과는 구별되며, 저작권 등록이 없어도, 저작권 신탁계약만으로 저작권은 수탁자인 신탁관리단체에 이전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권리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과는 달리, 신탁단체의 저작권양도등록청구권은 물권적 권리로 그 저작권이 저작권법상의 존속기간을 경과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저작권법은 다만 거래안전을 위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러한 신탁에 대해 대항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저작권법 제54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 신탁은 신탁자(위탁자)와 수탁자와의 대내관계뿐만 아니라 대외관계에 있어서까지 저작권 이전(양도)의 효력을 가져온다. 우리 저작권법 제54조에서 제3자 대항력을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거래안전을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또한 신탁단체도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2양수인 등에게만 대항하지 못할 뿐, 저작권 침해자에게는 등록 없이도 얼마든지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제2양수인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료 징수 등에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 또한 제2양수인에 대해서도 저작권 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얻어 권리행사가 가능함에도, 등록절차가

26) 김병일외3인, "K-콘텐츠의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저작권 등록제도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24, 182쪽.

번거롭고 등록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당연대항력을 인정해달라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또한 '특정 행위주체'인 신탁관리단체에게만 당연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27]

신탁관리단체의 「저작물 신고·등록」 및 목록 공개는 회원의 저작권료 징수·지급을 위한 사적인 절차로, 저작권법에 따른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공적인 공시제도인 「저작권 등록」과 동일시할 수 없다. 사인 간의 계약에 불과한 신탁에 공적장부 등재(등록)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해 달라는 것은 공정성, 중립성, 거래 안정성,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 신탁단체 등이 주장하는 저작권 이중양도 문제 또한 현재 또는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 모두를 일률적으로 포괄하여 이전하는 제도인 '인별 신탁'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저작자 1인이 창작한 모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장래 창작할 저작물에 대한 권리까지 포괄하여 신탁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만약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 중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신탁 범위에서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애초에 이중양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저작자는 자신의 개별 저작물에 대해서 신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이에 따라 신탁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이중양도 문제는 저작권자 등의 권리자가 신탁단체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물 또는 권리나 이용형태 일부를 유보하여 권리자가 스스로 관리하고 나머지 권리나 이용형태를 분리하여 신탁하는 신탁범위선택제의 도입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28] 당연대항력을 주장하면서 분리신탁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달리 이러한 분리신탁을 실제로 인정하고 있는 신탁단체들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등 현재 다수 존재하고 있다.

〈분리신탁의 예〉

o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신탁계약약관 제5조(관리위탁 범위의 선택)**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관리위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된 저작재산권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에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① 이용형태에 따른 선택

1. 악보, 도서 등을 출판하는 경우
2. 영화, 광고에 복제하는 경우 (싱크로나이제이션)

27) 제54조에 적용제외규정을 두어 포괄신탁의 수탁자와 그와 위탁계약 체결한 뒤에 저작자와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제3자 사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자는 견해(서달주, 앞의 논문, 88쪽)도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28) 신탁범위 선택제를 도입하여 이중양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당연대항'이라는 특혜를 집중관리단체에게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으로는 박성호, [박성호의 지재공방] (70) 음악저작권의 이중양도, 사용료의 이중징수와 '인별신탁', 법률신문(2024.05.08.)

3. 선거로고송에 복제하는 경우
4. 음반, 음반자판기 및 뮤직비디오 등 영상물을 복제하는 경우
5. 아케이드 게임기, 음악저장장치 부착제품 등을 복제하는 경우
6. 노래반주기에 복제하는 경우
7. 전송(주문형 스트리밍, 주문형 다운로드, 주문형 배경음악, 홈페이지 배경음악, 방송물 재전송(VOD, AOD),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전화를 이용한 장식형 서비스, 전화서비스-Music on Hold 등)
8. 웹캐스팅
9. 방송
10. 공연

② 관리범위에 따른 선택

1. 전곡신탁
2. 일부신탁 : 이 경우, 제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o 한국음반산업협회 신탁계약약관

제2조(권리의 신탁) ① 위탁자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음반제작자의 권리 중 다음 각호의 권리(이하 '신탁권리'라 한다) 를 선택하여 본 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이를 관리하고 이로 인하여 얻은 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1. 유·무선 온라인상 복제/전송권
2. 오프라인 음반의 복제/배포/대여권
3.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라 함은 통상적인 오프라인상의 LP, CD, MC의 음반 판매를 제외한 전자적 기록 매체 등을 통하여 복제가 반복되어도 원본과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으며, 동시다발적으로 복제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및 이를 통한 배포/대여권
4. 저작권법령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음원의 복제/전송/배포권

o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신탁계약약관

제2조(권리의 신탁)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 중 별도로 지정한 실연에 대한 제5조 각호의 권리를 위탁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권리의 관리 범위) 수탁자는 신탁목적권리를 다음의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

1. 실연자의 복제권 2. 실연자의 대여권 3. 실연자의 방송권 4. 실연자의 전송권 5. 기타 저작권법상의 관리범위

o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신탁계약약관

제2조(저작재산권의 신탁)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리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된 건의 신탁관리는 수탁자가 제외통보를 받은 날의 익월 1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되는 날 종료하고, 해지시점 이전 체결된 수탁자와 이용자 간 이용계약에 의한 사용료 산정, 징수 및 분배는 수탁자의 징수 및 분배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1. 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중송신(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전시, 공연,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지분권을 선택하여 통지하는 경우
2. 저작물별로 선택하여 통지하는 경우
3.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선택하여 통지하는 경우

(5) 신탁 등록제도 개선 방안

저조한 신탁 등록을 활성화하고 신탁 사항의 투명성을 높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K-콘텐츠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신탁 등록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저작권법에는 신탁 등록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제4항[29]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신탁저작물 등록은 법 제54조제1호에 따른다는 것에 의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앞서 살펴본 저작권 신탁 관련 판례들에서 법 해석상 저작권 신탁을 신탁법상 신탁으로 보고 신탁 등록을 양도 등록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30]

이에 저작권법에 신탁 등록에 대한 별도의 명문의 규정을 두어 법적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부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등록수수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저작권 신탁관리 저작물이 원활하게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저작권법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저작권 신탁 등록을 명문화하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하고 등록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 계약에 의한 저작(인접)권 양도 등록'에 해당한다. 양도 등록은 등록권리자와 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31]으로 신탁관리업자의 양도 등록은 신탁관리업자(등록권리자)만의 단독신청이 가능[32]하나, '등록의무자의 단독신청승낙서'만 면제[33]되며, 등록의무자의 신분증명서류 등[34]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신탁 등록의 경우 '등록의무자 증명서류' 등을 면제하도록 시행규칙 서식 상에 명시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는 저작물의 권리 발생 단위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음악의 경우 작사 부분은 어문저작물로, 작곡 부분은 음악저작물로 각각 등록되며, 편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로 별도로 등록된다. 반면, 신탁관리단체의 징수·분배 실무에서는 작사자·작곡자·편곡자 등이 관여한 하나의 곡을 공동저작물로 파악하여, 해당 곡에서 발생한 저작권료를 분배율에 따라 분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저작권 등록의 단위와 신탁관리 실무상의 관리 단위가 상이함에 따라, 현행 등록부

---

29) 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등록신청)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제1호에 따라 신탁저작물을 등록할 때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30)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대법원 2016. 1. 14, 2014다202110 판결;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16872, 216889 판결 등.

31) 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32) 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33)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첨부서류 제8호.

34)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첨부서류 제4호, 7호.

만으로는 신탁 관리에서의 권리 지분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공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저작물 등록 체계는 유지하되, 신탁 등록을 통해 저작물의 구성 관계와 분배율 등 신탁 사항을 별도로 공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등록과 신탁관리 실무 간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2개 신탁관리단체의 총 신탁 관리 저작물 수는 1억2천 건을 초과하나, 이중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신탁 등록한 건수는 3천 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탁관리단체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 사문화된 저작권 신탁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관리 저작물의 경우 등록수수료 유형 중 최저금액 수준(예, 일반저작물 다량등록의 경우 10,000원)을 적용하도록 수수료를 낮추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등록제도 개선과 비용 경감은 신탁 등록 증가로 이어져, 공시 부재로 인한 현실과 등록의 괴리를 줄이고 거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신탁 등록에 대한 등록수수료 부담 경감과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저작재산권자 등이 신탁 계약을 해지하여 회원 탈퇴를 하는 경우 신탁 소멸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탁 등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사문화된 신탁 등록을 활성화하여 제대로 된 공시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신탁 변동 사실에 대해서도 정확한 공시가 되도록 신탁 소멸 등록을 의무화하여 일반국민이 신탁 계약 해지 사실을 저작권 등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저작권법 제54조 개정안 및 제54조의2 신설안 〉

저작권법	
현 행	**개 정 안**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신탁,**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신 설〉	**제54조의2(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신탁저작권 등록·효력)**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 등')로부터 신탁받은 권리에 대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35]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이 신탁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 소멸 등록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5) 저작권법 제54조의2 신설에 따라 동법 제55조의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은 "제53조, 제54조 및 제54조의2에 따른"으로, 제55조의2의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는 "제53조, 제54조 및 제54조의2에 따라"로, 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의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은 "제53조, 제54조 및 제54조의2에 따른"으로 함께 개정해야 한다(제54조의2 명시).

〈 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 개정안 〉

저작권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등록신청)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제1호에 따라 신탁저작물을 등록할 때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등록신청)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의2**에 따라 신탁저작물을 등록할 때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실명 등록제도 개선 방안

(1) 문제의 제기

현행 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3호는 저작권 등록 시 저작자의 성명을 저작권 등록부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7조의4제2항에 따라 이것이 공보에 그대로 공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무상 저작권 등록은 실명과 함께 이명을 병기하여 등록하는 것만 가능하고, 실명 등록 없이 이명만 등록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로 인해 필명 또는 예명 등 이명으로 창작 활동을 하는 저작자의 경우에도 저작권 등록을 위해서는 실명을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명 등록 중심의 제도는 저작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원을 공개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웹툰·웹소설 작가, 대중문화 분야의 창작자 등 필명을 사용하는 창작자들은 저작권 등록 과정에서 실명이 외부에 공개됨에 따라 악성 댓글, 비방, 사생활 침해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저작자들은 저작권 등록 자체를 회피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저작권 등록제도의 이용 저조로 이어지게 된다.

더 나아가, 현행 실명 등록제도는 저작권법 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안고 있다. 저작권법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제12조(성명표시권), 제37조(출처의 명시) 등은 실명 또는 이명을 기준으로 저작자를 특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제53조제1항제1호는 저작권 등록사항으로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공표 당시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는 실무상 실명만을 등록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상위법과 하위법 간에 체계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현행 실명 등록제도는 법체계상 정합성의 문제, 창작자 보호 측면의 한계, 그리고 등록제도의 활용 저조라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저작권법 〉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함으로써 한다.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한 등록 사항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저작권법 시행령 〉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등록번호
2. 저작물의 제호
3. 저작자 등의 성명
4. 창작·공표 및 발행 연월일
5.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6. 등록의 내용
7.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및 생년월일

제27조의4(등록공보의 발행등) ① 위원회는 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2개월에 1회 이상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등록공보의 내용을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공보에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

일본, 독일의 경우에는 익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실명을 위한 등록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무명 또는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자가 그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명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된 자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된다.[36] 또한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을 실명 등록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에 "공표 후 70년"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원칙대로 "저작자 사후 70년" 적용되어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37] 독일의 경우에는 익명 및 가명저작물의 실명 등록을 인정하면서, 등록을 하면 보호기간 연장효과를 부여한다.[38] 이에 따르면 보호기간이 "공표 후 70년"가 아닌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된다. 실명 등록을 위한 익명 및 가명 저작물 등록부는 특허청이 관리하며, 특허청은 신청인의 자격 유무 또는 등록을 위해 신고된 사

36) 일본 저작권법 제75조.
37) 일본 저작권법 제52조제2항제2호.
38) 독일 저작권법 제66조.

실의 진실성에 대한 심사 없이 등록을 이행한다.[39] 중국의 경우 저작권법에는 저작물 등록 규정은 있으나, 이명 등록에 대한 조항은 없으며 실무상 실명에 병기하여 이명을 표시하는 것만 인정한다.[40]

일본 저작권법

제52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물의 공표 후 70년이 경과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그 존속기간 만료 전에 그 저작자의 사후 7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자의 사후 70년을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기간 내에 제75조제1항의 실명 등록이 있는 때

제75조 (실명의 등록)

① 무명 또는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물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그 실명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저작자는 그 유언으로 지정하는 자에 의하여 사후에 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실명 등록이 된 자는 해당 등록과 관련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한다.

독일 저작권법

제64조(일반규정)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66조(익명 및 가명저작물)

(1) 익명 및 가명저작물에 있어 저작권은 공표 후 7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다만 저작물이 창작된 후 70년이 지나도록 공표되지 않은 경우 창작 후 7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 저작자가 자신의 신원을 제1항제1문의 기간 내에 밝혔거나 저작자가 사용한 가명이 의심의 여지없이 본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되면,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계산된다. 제1항제1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저작자의 실명이 익명 및 가명저작물 등록부(제138조)에 등록을 위해 신고된 경우도 또한 같다.

제138조(익명 및 가명 저작물 등록부)

(1) 제66조제2항제2문에서 정하는 등록을 위한 익명 및 가명 저작물 등록부는 특허청에서 관리한다. 특허청은 신청인의 자격 유무 또는 등록을 위해 신고된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심사 없이 등록을 이행한다.

중국 저작권법 제12조

① 저작물에 성명을 표시한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이 저작자이며, 또한 해당 저작물에 상응한 권리가 존재한다. 다만, 상반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작자 등 저작권자는 국가저작권주관부처가 인정한 등록기관에 저작물 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에 준용한다.

39) 독일 저작권법 제138조.

40) 등록 시 저작권자 정보는 제출한 신분 증명서상 이름과 일치되도록 실명을 기재해야 한다. 저작물의 서명은 저작물에 있는 저자의 서명으로 필명이나 가명으로 서명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시하고 XX(필명) 또는 XX(별명) 형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https://www.ccct.net.cn/html/bqgg/2019/0109/549.html?utm_source=chatgpt.com(최종접속일: 2025. 9. 3.).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무명 또는 이명만의 등록도 허용하면서, 추후 실명 등록을 원하는 경우 보충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저작자가 실명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무명 또는 이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저작자는 무명(Anonymous) 또는 이명(Pseudonymous)으로 저작권청에 저작물 등록이 가능하고 저작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저작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으며, 저작자가 원할 경우 '보충 등록(Supplementary Registration)' 절차를 통해 추후 실명 등록이 가능하다.[41]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 성명, 창작 및 공표 연월일 등 일정 사항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권리 변동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등재·공시하는 제도이다. 그리하여 부동산등기부와 같이 저작권등록부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제도로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실명 등)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명 등록만 인정하는 국가들의 태도도 일응 타당하다.

그러나 해석상 저작권법 제53조에서 이명 등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명 등록을 허용하고 있어 입법례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은 아니며, 유사 제도인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는 온라인 등기정보광장에서는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로 한정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42] 판결서 등의 경우에도 법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는 모든 판결서 등은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처리를 한다.[43] 따라서 저작권 등록에서도 이명 등록을 허용하거나, 온라인 공개 시 비실명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공시제도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6조(등기정보광장의 구축·운영) 법원행정처장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활용공간(이하 "등기정보광장"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제7조(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① 등기정보광장에서 제공하는 등기정보자료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등기정보자료(이하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라 한다)로 한정한다.

②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는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③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되지 아니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41) https://www.copyright.gov/circs/circ08.pdf
42)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43)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제18조(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①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는 누구든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7조제3항의 신청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와 관련된 대법원 규칙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비실명 대상 판결서 등)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법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는 모든 판결서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비실명 처리한다.

다만,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에 대하여 비식별처리를 허용하는 경우, 저작권 등록제도가 갖는 공시 기능이 약화될 우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등록은 권리의 귀속 주체와 권리 변동 사항을 외부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인바, 성명 정보가 비식별처리될 경우 누구의 저작물인지, 누구를 상대로 이용허락이나 권리 처분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상 법정허락 제도는 신청인이 저작권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그 노력의 하나로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등록부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이 비식별처리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확인 절차의 실효성이 저하되어 법정허락 제도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저작권 등록부상 성명에 대한 전면적인 비식별처리를 허용하기보다는, 공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명 등록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3) 실명 등록제도 개선 방안

이명 등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3호의 "저작자 등의 성명"을 저작권법 제53조의 규정과 체계를 맞추어, "저작자 등의 실명 또는 이명(공표 당시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개정함으로써,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명 등록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시행령상 성명 기재 범위를 실명 또는 이명으로 한정하여 정비할 경우, 저작권 등록부의 공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저작자가 공표 과정에서 사용한 명칭을 등록에 반영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법률과 시행령 간의 규정 체계를 정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저작권 등록 실무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도 함께 제고될 것이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 개정안 〉

저작권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등록번호 2. 저작물의 제호 3. 저작자 등의 성명 4. 창작·공표 및 발행 연월일 5.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6. 등록의 내용 7.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및 생년월일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등록번호 2. 저작물의 제호 3. 저작자 등의 **실명 또는 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창작·공표 및 발행 연월일 5.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6. 등록의 내용 7.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및 생년월일

4.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등록제도 개선 방안

(1)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1) AI 시대의 저작권 등록제도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는 저작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등록의 주된 목적은 저작자와 저작물에 관한 정보를 공중에게 공개·열람하도록 함으로써, 권리 귀속과 내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권리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표시를 가능하도록 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고, 저작권 분쟁 시에는 등록 사실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등록일자 및 등록부에 기재된 정보는 민사소송 등에서 창작 시점 및 권리 귀속을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로 사용된다.

현행 제도에서 저작권 등록은 크게 네 가지 주요 문서로 구성된다. 첫째, 저작권등록신청서는 저작물의 제목, 종류, 신청인의 성명, 국적,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해당 서식은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기재란은 대부분 정형화된 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는 저작물의 제목, 종류, 내용,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등 저작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해당 서식은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의 경우 별지 제4호의2 서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셋째, 저작권등록부는 등록된 정보가 공식적으로 관리·보존되는 문서이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전산으로 보관된다. 저작권등록부는 누구나 신청하여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으며, 등록의 내용 및 변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저작권등록증은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서 제8조에 따라 발급된다.

최근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은 이러한 저작권 등록제도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창작자들은 텍스트·이미지·음악·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손쉽게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특수한 작업이 아니라 일상의 창작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생성형 AI 결과물 중 단순히 생성형 AI가 프롬프트 입력에 따라 만들어 낸 '생성형 AI 산출물'이 아닌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부가된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을 저작권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가 생겨났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5년 6월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안내서의 배포 후 7~9월간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 건수는 1~6월에 비해 8배 증가하며, 다양한 주체들이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을 등록하려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생성형 AI 활용 결과물이 주로 편집저작물 형태로 등록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등록 방식은 개별 AI 산출물 자체가 저작권법상 '인간의 창작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반하며, 신청자는 AI가 생성한 여러 산출물(이미지, 문장, 음악 등)을 선택하고 배열하거나 구성한 행위에 창작성의 여지를 두고 편집저작물로 등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AI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저작물을 편집저작물로 등록하여 온 것은 생성형 AI가 등장한 초기에 'Zarya of the Dawn'에 대해 미국 저작권청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했던 것을 참고한 것으로 생각된다. 'Zarya of the Dawn 사건'에서 미국 저작권청은 신청물 중 인공지능(미드저니) 산출물인 개별 이미지는 자연인 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였으나, 인공지능 산출물인 이미지와 신청인이 작성한 텍스트의 선택과 배열은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하였다.[44] 이후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Registration Guidance에서 "AI 산출물은 그 자체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간의 선택과 배열이 개입된 부분에 한해 보호가

44) 박준우, "인공지능(AI) 활용 저작물의 편집저작물성과 구성요서의 선택·배열", IP&Data법(제5권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84쪽.

가능하다"는 원칙을 유지하였다.[45]

미국 저작권청이 'Zarya of the Dawn 사건'에서 '구성요소의 선택·배열'만을 근거로 '편집저작물'이라 결정한 것은 '편집물' 요건을 간과했거나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이 편집물에 고유한 요소라 착각했기 때문이다. 편집저작물은 창작성 있는 편집물(Compilation) 또는 편집물(Compilation)인 저작물이며, 편집한(Edit) 저작물이 아니다. 편집저작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저작물은 '편집(Edit)'과정을 거치며, 편집(Edit) 또한 선택·배열 작업 중 하나다. 따라서 모든 '편집된 저작물(Edited Work)'이 '편집저작물(Compilation Work)'은 아니며, '편집된 편집물(Edited Compilation) 중 창작성 있는 것이 편집저작물(Compilation Work)'이다.[46]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등록 실무에서도 미국 등록 사례를 참고하여 AI 산출물 자체의 저작권성을 부정하는 대신, 인간이 개입한 선택·배열·구성 행위를 통해 저작물로서의 보호 범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어문·미술·영상·음악 등 기존 저작물 종류별로 등록을 신청받고 있으며, 등록기관 역시 이에 맞추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2)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의 문제점

안내서 발간 및 등록 실무 개선을 통해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등록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창작 행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등록 신청서 서식에는 생성형 AI 활용 여부를 기재하거나, 해당 저작물에 AI 산출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기술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제도적으로 생성형 AI가 창작에 일부 기여한 저작물에 대한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등록 정보에 반영하거나 공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내포한다. 미국 저작권청이 AI 창작물의 등록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이유도 등록제도의 한계에 따른 것이다.[47]

생성형 AI가 작성한 텍스트 초안을 인간이 수정 및 추가 작업을 하거나,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인간이 후처리하여 완성한 작품, 인간이 작성한 글을 바탕으로 생성형 AI가 그림을 그리는 만화 등의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은 이미 콘텐츠 시장에서 다수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에 대해 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서상에서는 해당 저작물이 AI의 산출물을 포

45)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2023, p.4.
46) 박준우, 위의 논문, 106쪽.
47) 김윤명, "AI생성물의 저작권 등록의 입법방안", 입법과 정책(제15권 제2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186쪽.

함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이 인간의 창작인지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서 단순히 프롬프트 입력에 따라 생성형 AI가 생성하여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생성형 AI 산출물'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생성형 AI 이용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저작권 등록이 형식적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등록 신청 시 생성형 AI 활용 여부 등 창작 구조에 대한 기재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등록 시스템은 '저작물 내용'란에 저작자가 자율적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구조에 의존하고 있어, 신청인이 스스로 생성형 AI 활용 여부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저작권 등록제도의 공시 효과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향후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등록 정보가 실질적인 권리 귀속 판단의 근거로 기능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예컨대, AI가 전적으로 만들어 낸 '생성형 AI 산출물' 부분이 전체 저작물의 핵심을 이루는 경우, 인간의 창작 기여가 실제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독창적인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등록 서식상 그러한 기여 범위가 명확히 기록되지 않으면 분쟁 대응력 또한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생성형 AI 활용 여부가 등록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나 제3자는 해당 저작물이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창작되었는지를 전혀 인지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저작물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향후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실질적 권리행사, 이용허락 비용 산정 등에 있어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는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이라는 새로운 창작 양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등록제도는 변화하는 창작 환경에 대응하지 못한 채 형식적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존재한다.

(2) 개선방안

1) 미국 인공지능 결과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 분석

미국 저작권청의 기존 등록 지침은 오래 전부터 저작물은 인간 저작(Human Authorship)의 산물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1973년판 '저작권청 실무 편람(Compendium of Copyright Office Practices)'에서 저작권청은 인간 행위자(Human Agent)에 기원을 두지 않은 자료는 등록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였다. 1984년에 발간된 제2판에서는 "'저작(Authorship)'

이라는 용어는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인간에게 기원을 두어야 함을 내포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현재판 편람은 "'저작물(Authorship)'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인간에 의해 창작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인간 저자의 창작적 개입 없이 무작위적(Random) 또는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기계나 단순 기계적 과정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은 등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48]

AI 산출물이 포함된 작품의 경우, 미국 저작권청은 해당 AI의 기여가 "기계적 복제(Mechanical Reproduction)"의 결과인지, 아니면 저작자가 "자신의 독창적 정신적 구상(Original Mental Conception)을 가시적 형태로 표현한 것"인지를 검토한다. 답변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AI 도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최종 작품을 만드는 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이는 필연적으로 개별 사안별(Case-by-Case) 심사가 필요하다.[49]

신청인은 등록을 위해 제출하는 작품에 AI 산출물이 포함된 경우 이를 반드시 공개(Disclose)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해당 작품에서 '인간 저자의 기여(Contributions)'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야 한다. AI 기술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만든 개인은, 그 저작물 중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권 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 신청서(Standard Application)를 사용해야 하며, 신청서에서 저자를 식별하고, "Author Created"란에 인간이 기여한 저작 부분을 간략히 기술해야 한다.[50]

예를 들어, 신청인이 AI 생성 텍스트를 더 큰 텍스트 저작물에 포함시킨 경우, 인간이 창작한 텍스트 부분을 청구해야 한다. 또, 신청인이 인간 창작물과 비인간(AI) 생성물을 창의적으로 배열한 경우, "Author Created"란에 "저자가 창작한 [인간 창작물 부분 기재]와 인공지능이 생성한 [AI 생성물 부분 기재]의 선택(Selection), 조정(Coordination), 배열(Arrangement)"과 같이 기재할 수 있다. 단순히 작품 제작 과정에서 AI 기술이나 이를 제공한 회사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AI나 회사를 저자 또는 공동 저자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51]

최소한을 넘어서는 AI 산출물은 신청서에서 명시적으로 제외(Disclaim)되어야 한다. 이는 신청서의 "Limitation of the Claim(청구 제한)" 섹션에서 "Other(기타)" → "Material Excluded

48)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2023, p.3.
49)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2023, pp.3~4.
50)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2023, pp.4~5.
51)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2023, p.5.

(제외된 자료)" 항목에 기재할 수 있다. 이때 신청인은 AI 산출물을 간단히 설명하면 되며, "[AI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 설명]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와 같이 입력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은 표준 신청서의 "Note to CO(저작권청 비고란)"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52]

신청인이 신청서 기재 방법에 확신이 없는 경우, 단순히 해당 저작물에 AI 산출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일반적으로 진술하는 것만으로도 된다. 이후 저작권청은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처리 방법을 결정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AI 도구의 사용이 인간 저작성에 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저작권청은 신청서에서 별도로 제외(Disclaim)할 필요가 없음을 안내할 것이다.[53]

2) 국내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방안 검토

가. AI 활용 사항 기재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는 인간의 창작 행위를 전제로 하는 체계에 기반하고 있어, 생성형 AI를 활용한 저작물에 대한 정보는 등록 단계에서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의 창작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저작권 등록 신청서에는 생성형 AI 활용 여부나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등록 정보의 공시 기능과 분쟁 대응력 모두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등록 서식 및 절차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등록 신청서상에 '생성형 AI 산출물 포함 여부'를 명시할 수 있는 체크 항목 또는 기술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신청자가 저작물 생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했는지를 스스로 밝히도록 유도하고, 향후 해당 정보가 저작권등록부 및 저작권등록증에도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생성형 AI 관련 정보의 공시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생성형 AI 산출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성형 AI의 역할, 사용한 생성 도구, 생성된 산출물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등록 정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기존 연구를 통해서도 생성형 AI 산출물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되어온 바다.[54]

---

52)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2023, p.5.
53)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2023, pp.4~5.
54) 김윤명, 앞의 논문, 190쪽.

따라서 저작물의 구성 요소 중에서 인간의 창작 기여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는 구조로 등록 서식을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를 표시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저작물 내용' 항목을 〈1. 저작물 전체 개요〉, 〈2. 생성형 AI 산출물 부분〉, 〈3. 인간의 창작적 기여 부분〉으로 구분 기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체 저작물 중에서 어느 부분이 인간의 창작행위로 인해 형성된 것인지를 분명히 밝힐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저작권 보호 범위와 실질적 권리 귀속 판단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을 장려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접근성과 등록 편의성 또한 함께 제고되어야 한다. 예컨대, 온라인 등록 시스템에서 생성형 AI 관련 항목을 선택 입력 방식으로 설계하거나,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등록을 위한 별도 안내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신청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신청자가 생성형 AI 활용 여부나 기여 구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사례 기반의 서식 작성 예시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기존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에 생성형 AI 활용 여부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등록 서식을 개편한다고 가정하면, 우선 등록 신청서에는 "생성형 AI 산출물 포함 여부"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체크박스를 추가하고,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별도로 기술하게 해야 한다.

① 저작물 전체 개요

- 등록 대상 저작물 전체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저작물의 장르, 주제, 소재, 구성, 표현 방식 등 일반적인 정보에 대해 기술한다. 이는 기존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에서 기재하던 내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I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저작물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서술하면 된다.

② 생성형 AI 산출물

- 해당 저작물 중 생성형 AI가 만들어 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항목이다. 사용한 AI 도구의 명칭 및 버전, 입력 프롬프트,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역할 및 전체 저작물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명시하도록 하며, 생성형 AI 산출물의 범위가 명확히 식별 가능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시, 생성형 AI 산출물 원본이나 생성 과정을 나타내는 이미지, 영상 등 보충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등록 정보가 보다 실효성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인간의 창작적 기여

- AI가 산출물을 생성하기 그 이전 또는 이후에 인간이 직접 창작한 부분에 대해 기술한다.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아이디어가 실제 저작물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획, 구성, 편집, 수정 및 보완, 창작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 항목 역시 필요시 인간 창작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스케치, 작업 과정 캡처, 편집 전후 비교 자료 등을 이미지나 영상 형태로 보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의 신청 시 작성례[55] 〉

(미술저작물) GAI 산출 이미지를 참고하여 포토샵을 통해 인간이 수작업으로 그려낸 이미지의 등록 신청 시 작성례

① 신청물 전체 개요
- 장르: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
- 주제: 미래 도시에 사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
- 소재: 하늘을 나는 대중교통, AI 로봇과 인간이 함께 걷는 거리, 친환경 건축물
- 구성: 이미지 중앙에는 AI 로봇과 인간 아이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위치하며, 배경에는 다양한 미래적 요소가 배열되고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희망적인 분위기를 연출함
- 표현 요소: 형광 계열의 밝은 색채 사용, 원근법에 기반한 입체감 표현, 빛과 그림자의 극적인 대비, 디지털 브러시 및 텍스처를 활용하여 디지털 일러스트의 느낌을 강조함

② 활용된 GAI 산출물
- 활용한 도구: Midjourney v6 (텍스트 프롬프트 기반 이미지 생성)
- 프롬프트: "a futuristic cityscape where humans and AI coexist, flying cars, neon lights, high-rise buildings with vertical gardens, digital painting style"
- 산출물 역할 및 비중: 생성된 이미지 10종 중에서, 소재 구성 아이디어 및 시각적 구도 설정에 적합한 이미지 1종을 선택하여 참고용 이미지로만 활용함

③ 인간의 창작적 표현 부분

최종 작품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간 창작자의 수작업 변형, 드로잉 및 페인팅 작업을 통해 아래의 표현 요소들을 부가하여 창작됨
- 구도 재설계 및 핵심 주제 전달
  - GAI 산출물 이미지에서 제시된 배치를 바탕으로, 작가가 전체적인 장면을 재구성하였으며 AI 로봇과 인간 아이의 상호 교감과 감성이 중심에 오도록 배치하고 시선과 미소 짓는 표정을 따뜻한 느낌으로 표현함
- 세부 디테일 구현
  - 건물 디자인은 실존 도시 건축물을 참고하되 SF 요소를 융합하여 그래픽 이미지로 표현함
  - 인물(아이와 로봇)은 GAI 산출물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로 직접 스케치하고, 디지털 브러시로 채색함
- 색상 및 광원 연출
  - GAI 산출물에는 없는 형광 계열의 밝은 색채를 추가하고 음영 대비와 하이라이트를 통해 미래 도시에 대한 긍정적인 감성을 표현함

* (별첨) GAI 산출물 자체와 창작 과정의 기록 사진 자료를 기타 자료로 제출

55)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 49쪽.

이와 같은 기재 항목은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뿐만 아니라, 저작권등록부와 저작권등록증에도 연계되어야 하며, 나아가 저작권 등록 누리집의 저작권등록부 열람 기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확인 가능하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즉, 생성형 AI 활용 여부를 공시 정보로 기능하게 함으로써, 제3자가 저작권의 범위와 귀속 구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 단계에서 그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저작권청(USCO)의 등록제도는 유의미한 비교 대상으로 참고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AI가 생성한 저작물을 등록할 때, 인간의 창작 기여 부분만 등록이 가능하며, AI가 생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 신청자가 스스로 저작권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청구의 제한 – 제외된 자료' 항목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56] 이와 같이 등록 과정에서 생성형 AI 산출물 부분에 대한 권리 포기 제도를 함께 운용함으로써, 등록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생성형 AI 산출물 부분에 대해 권리 주장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현행 등록제도에는 이러한 '권리 포기'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등록 신청 시 입력된 창작자의 기여 범위가 등록 신청한 저작물의 보호 범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를 검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절차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신청자에게 등록 보호 범위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이로 인해, 생성형 AI가 만들어 낸 산출물을 전체 저작물로 등록하면서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등록 정보와 실제 보호 범위 사이의 괴리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저작권 등록 신청 시 등록 보호 대상이 되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그 외의 생성형 AI 산출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한해서만 등록이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저작권 제도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일반 등록자에게 생성형 AI 산출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 생성형 AI 산출물 등록 문제 개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전혀 없는 단순히 생성형 AI가 만들어 낸 '생성형 AI 산출물'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생성형 AI 산출물'을 저작권 등록 신청하는

56)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2023, p.5.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57], 등록 실무 과정에서는 생성형 AI 활용 여부나 인간의 창작적 기여 정도를 확인할 수 없어 이러한 생성형 AI 산출물이 저작물로 등록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한다.

'생성형 AI 산출물'과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생성형 AI 산출물에 대한 별도의 표시 제도 도입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산출물 표시 의무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현행 제도에서는 등록 실무 과정에서 제출된 등록 신청물의 생성형 AI 활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 해소되기 전까지 현행 등록 실무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가가 과제로 남는다. 등록 담당자가 제출물의 창작성 여부나 생성형 AI 활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등록 시스템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최대한 걸러내는 방식이 유일한 수단이 된다. 즉, 절차적·기술적 장치를 통해 생성형 AI 이용 여부를 직접 질문하고 신청인의 자기진술을 명확히 요구하는 구조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등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생성형 AI 산출물과 인간 창작적 기여를 구조적으로 구분해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편하고, 등록 시스템 자체를 보완한 이후, 온라인 등록 시스템에서 해당 항목이 실제로 입력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거나, "이 저작물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생성되었습니까?"라는 경고창을 통해 신청자의 자의적인 등록을 방지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방적 장치가 작동한 이후에도 분쟁이 발생하거나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난 경우에는, 이론상으로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의 "허위 등록죄"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허위등록의 인식 또는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58] 즉,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적으로 등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고의 입증의 어려움, 확인 불가 등으로 인해 허위 등록이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등록 신청 단계에서

57) 생성형 AI의 보급이 본격화된 이후, 생성형 AI를 이용해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어문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의 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2025년에 약 40% 증가하였다.
58)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 4806 판결.

의 사전적인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벌 조항만으로는 허위 등록 문제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현행 등록 실무에서는 생성형 AI 산출물의 등록을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며, 허위 등록에 대한 형사적 제재 역시 그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효적인 대응 수단이 되기 어렵다. 결국 생성형 AI 산출물 등록 문제는 생성형 AI 산출물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산출물 표시 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등록제도가 공시제도로서 수행해야 할 기능을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개정안 제시

현행 등록 신청 서식은 인간 중심의 전통적 창작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 생성형 AI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상세히 기술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형 AI 활용 여부를 저작권 등록 신청 단계에서 어떻게 기재할 것인지에 관한 서식 개정 방안을 세 가지 유형으로 검토하였다.

첫 번째 방안은 기존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서식 내에 '생성형 AI 활용 여부'를 추가하고, 생성형 AI 활용 관련 사항을 내용란을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기존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생성형 AI를 이용하지 않은 일반 저작물과 동일한 서식에서 생성형 AI 관련 정보가 혼재하여 등록 신청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생성형 AI 활용 정보는 사용 도구, 프롬프트 입력 내용, 인간 창작자의 기여 범위 등 비교적 상세한 기술이 요구되는 영역임에도, 기존 명세서의 제한된 구조는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담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두 번째 방안은 저작물의 종류에 '생성형AI활용저작물'을 신설하고, 프로그램저작물 등록 서식과 같은 전용 등록 신청 서식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에 따른 저작물의 종류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생성형 AI의 활용 여부는 저작물의 본질적 속성을 변경하는 요소가 아니며, 결과물은 여전히 어문·음악·미술 등 기존 저작물 종류 체계에 속한다. 생성형 AI 활용을 기준으로 별도의 저작물 종류를 신설할 경우, 동일한 종류의 저작물이 생성형 AI 활용 여부에 따라 이원화되어 불필요한 분류 체계의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다.

세 번째 방안은 기존의 저작권 등록 서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생성형 AI가 활용된 경우에 한하여 생성형 AI 활용 내용 등을 기재하는 별도의 첨부서식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기존 등록체계에 구조적 변화를 가하지 않으면서도, 생성형 AI 활용 내용 등을 독립된 서식으로 상세하게 기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AI 기술의 빠른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별도 첨부서식 방식은 전체 서식을 개정할 필요 없이 해당 서식만을 탄력적으로 수정할 수 있어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세 가지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기존 등록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생성형 AI 활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성형 AI가 활용된 경우 별도의 AI 활용정보 기재서식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세 번째 방안이 가장 적합한 개선 방향으로 판단된다.

가.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9호 신설

생성형 AI 활용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서식으로 '생성형인공지능활용정보명세서'를 신설하는 경우, 이를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중 어느 위치에 배치할 것인지는 조문 체계와 기능적 역할을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제6조제1항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 각 권리 유형별로 어떤 등록신청서와 등록신청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제1항은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기본 신청서류의 종류'를 열거하는 조항으로, 저작권 등록 신청 필수 서식을 규정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조항의 성질상, 생성형 AI 활용 여부와 같이 특정 경우에만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이 항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면 제6조제2항은 등록신청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야 하는 '추가 서류'를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조문이다. 이 항에는 복제물, 등록사유 관련 증명서류, 공동저작자 목록, 대량등록 목록, 제3자의 동의서, 등록권리자 증명서류, 감면 대상자의 증명서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항목의 공통점은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의 기본 신청서류와 함께 추가 제출되는 '보조 문서'라는 점이다. '생성형인공지능활용정보명세서'는 창작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하였을 경우만 제출되는 첨부 문서라는 점에서 이러한 항목들과 동일한 체계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AI 활용정보 명세서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첨부서류 목록의 한 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이 조문 구조상 가장 타당하다.

또한 제2항은 원칙적으로 "별지 ○○호서식"을 첨부하도록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새로운 별지 서식을 신설하는 방식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별지 서식을 추가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위치를 제공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생성형인공지능활용정보명세서'를 제6조제2항의 새로운 항목으로 배치하는 방식이 조문 체계에 가장 부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생성형 AI 활용 여부를 기재하기 위한 별도 서식을 저작권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9호를 신설하여, 생성형 AI 관련 정보를 저작권 등록 신청 시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개정안 〉

저작권법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6조(등록신청서)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2.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공동저작자·공동저작인접권자·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공동상속인·공동등록권리자 또는 공동등록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4.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제6조(등록신청서)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2.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공동저작자·공동저작인접권자·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공동상속인·공동등록권리자 또는 공동등록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4.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9.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20의3호서식에 따른 서류**

나. 별지 제20호의3서식 신설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9호의 신설에 따라, 생성형 AI가 창작 과정에서 활용된 경우에 한하여 기존 저작권등록신청서 및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와는 별도로 생성형 AI 활용 정보를 기재한 보조 서식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행 등록 관련 별지 서식이 제3호서식부터 제20호의2서식까지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 서식을 별지 제20호의3서식으로 신설하는 것이 조문 체계상 가장 타당하다.

새롭게 신설되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은 '생성형인공지능활용정보명세서'라는 명칭으로 생성형 AI가 창작 과정에 활용된 경우 생성형 AI 관련 정보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아래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첫째, 생성형 AI가 산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인간의 창작 부분만 등록대상이 됨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생성형 AI 산출물에 대한 등록 제외 내용을 별도로 배치한다. 이는 신청인이 생성형 AI 산출물 자체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음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대해서만 등록이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생성형 AI 산출물은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등록 단계에서부터 인식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사용한 AI 모델명, 입력한 주요 프롬프트, 산출물의 역할 및 비중 등 생성형 AI 산출물 제작 과정의 핵심 정보가 포함되도록 생성형 AI 산출물에 관한 구체적 정보와 함께 해당 산출물에 대해 인간이 어떠한 창작적 기여를 하였는지를 명확히 기술하도록 한다. 생성형 AI 산출물과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구조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인간 창작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인간 중심의 저작권 제도와 AI 시대의 기술적 변화를 조화시키기 위한 필수 요건이기도 하다.

입력 프롬프트 항목을 별도로 마련한 이유는 창작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우와 단순한 보조 도구로서 AI를 사용한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과거에도 문법 교정, 색 보정, 노이즈 제거 등과 같이 AI 기술을 창작 활동에 활용한 사례는 존재했으나, 이러한 이용은 인간의 창작물에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수준에 그쳐 저작권 판단에 실질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

반면, 생성형 AI는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따라 저작물의 표현과 구조가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산출물을 제공하므로, 인간의 창작적 기여 범위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프롬프트 입력을 통해 이미지 전체가 생성형 AI에 의해 산출된 경우와 단순히 사진 보정 프로그램의 AI 색상 보정 기능을 사용한 경우는 창작 과정에서 AI가 담당한 역할의 질과 비중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결론적으로, 위의 내용과 같이 기재 항목을 구조화함으로써 신청인은 창작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고, 저작권등록부에도 관련 정보가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나아가 등록 정보에 대한 공시 기능을 실질화하고, 향후 저작권 분쟁 시 등록 정보가 보다 명확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서식 개정은 미국 저작권청(USCO)의 등록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간 창작 부분만 등록 인정하고, 생성형 AI 산출물은 등록에서 제외시키는 구조와도 유사한 방식으로, 국제적 흐름과의 조화도 확보할 수 있다.

〈 생성형인공지능활용정보명세서 서식 신설안 〉

[별지 제20호의3서식(안)]

생성형인공지능활용정보명세서

저 작 물	제 호 (제 목)		종 류	

☐ 인간의 창작적 기여로 평가되지 않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산출 부분에 대해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음을 인지하며, 본 등록 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합니다.

생성형 AI 산출물	사용한 AI 도구명	
	입력 프롬프트	
	AI 산출물의 역할 및 비중	
인간의 창작적 기여		

※ 이 서식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된 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다. 저작권등록부 서식 개정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누리집(www.cros.or.kr)을 통해 제3자가 타인의 저작권등록부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성형 AI 활용 여부 및 창작 구조에 관한 정보를 등록부 단계에서 공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등록부 서식에 생성형 AI 활용 여부를 표시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해당 저작물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된 것인지 여부를 "예/아니오" 형식으로 명확히 드러내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이 항목은 신청인이 별지 제20호의3서식(생성형인공지능활용정보명세서)을 제출한 경우, 등록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구현함으로써, 행정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등록부 후면에 기재되는 '저작물 내용' 항목을 구조화하여, 생성형 AI가 활용된 저작물의 창작 구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저작물의 내용, ② 생성형 AI 산출물, ③ 인간의 창작적 기여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생성형 AI의 산출물 범위와 인간의 창작적 기여 내용이 등록부상에서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한다. 이는 등록부를 열람하는 제3자가 해당 저작물의 창작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향후 저작권 침해, 저작물성 판단, 기여 범위 산정 등과 관련된 분쟁에서 등록정보의 증거력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생성형인공지능활용정보명세서에 포함된 생성형 AI 산출물 등록 제외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등록 신청 과정에서 생성형 AI가 만들어 낸 부분이 저작권 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신청인이 확인할 경우, 해당 내용이 등록부에는 "생성형 AI 산출물 부분은 저작권 등록 대상에서 제외됨"과 같은 간결한 문구를 기재하여, 해당 부분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저작권등록부의 공시 기능을 강화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저작물 이용자·플랫폼 사업자·법원 등 이해관계자가 저작물의 권리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저작권등록증에 생성형 AI 산출물 포함 여부 및 창작 기여 구조를 기재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저작권등록증은 저작물의 등록 사실을 외부에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위해 발급되는 문서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요약형 공문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우선 고려하였다. 등록증에는 통상적으로 저작물의 제호, 종류, 저작자, 창작일자, 등록일자 등 기본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되며, 그 주된 기능은 '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데에 있다.

등록증의 본질적 기능이 '등록 사실 자체의 증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생성형 AI 활용 여부나 창작 구조와 같은 상세 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은 등록증의 기능 및 형식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생성형 AI 활용 여부 및 창작 구조는 저작권등록증이 아닌 저작권등록부에 공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등록증은 기존의 간단한 형식을 유지하되, 보다 상세한 정보는 등록부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 법제 체계상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 저작권등록부 서식 개정안 〉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table>
<tr><td colspan="4">저 작 권 등 록 부</td><td>등록번호</td></tr>
<tr><td rowspan="6">저작물</td><td>① 제 호(제 목)</td><td colspan="2"></td><td>② 종 류</td><td></td></tr>
<tr><td>③ 생성형 AI 활용 여부</td><td colspan="4">예/ 아니오 * 생성형 AI 산출물 부분 등록 대상 제외</td></tr>
<tr><td>③ 형태 및 수량</td><td colspan="2"></td><td>④ 창작 연월일</td><td></td></tr>
<tr><td rowspan="2">⑤ 원저작물
※ 2차적저작물인 경우에만 기재</td><td>제 호</td><td colspan="3"></td></tr>
<tr><td>저작자</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5">저작자</td><td>⑥ 성 명
(법인명)</td><td colspan="4">(한글) (한자)
(영문)</td></tr>
<tr><td>⑦ 국 적</td><td colspan="2"></td><td>⑧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td><td></td></tr>
<tr><td>⑨ 주 소</td><td colspan="4"></td></tr>
<tr><td>⑩ 전자우편 주소</td><td colspan="2"></td><td>⑪ 전 화 번 호</td><td></td></tr>
<tr><td>⑫ 사 망 연 도</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맨처음공표</td><td>⑬ 연 월 일</td><td colspan="2"></td><td>⑭ 국 가</td><td></td></tr>
<tr><td>⑮ 맨 처음 공표 후 30일내에 공표된 국가</td><td colspan="4"></td></tr>
<tr><td>⑯ 맨 처음 공표 시 표시한 저작자 이름</td><td colspan="4"></td></tr>
<tr><td>⑰ 공표매체 정보</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⑱ 관련등록번호</td><td colspan="2"></td><td>⑲ 등록연월일</td><td></td></tr>
<tr><td colspan="6">등 록 의 내 용</td></tr>
<tr><td colspan="2">순위</td><td colspan="3">등 록 사 항</td><td>확인</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3"></td><td></td></tr>
</table>

210mmx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저작물의 내용
○ 생성형 AI 산출물 **- 사용한 AI 도구명** **- 입력 프롬프트** **- 생성형 AI 산출물의 역할과 비중**
○ 인간의 창작적 기여

04

결론

제4장 | 결론

1. AI 학습 데이터 이용에 관한 제도 개선

AI 학습 저작물 이용에 관한 국내외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공정이용과 TDM 예외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경직된 TDM 예외 조항 신설보다는 현행 공정이용 규정(제35조의5)의 보완 및 고도화가 더 적절한 정책 방향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권리자의 정당한 보상이 전제된 자생적 데이터 시장 형성을 유도하여 창작 생태계와 AI 산업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

2.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

생성형 AI 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의 출처 및 이용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제공 의무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등의 목록 또는 요약 정보를 공개하고, 권리자가 보호대상물의 이용 여부 및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단계적 투명성 모델'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이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상 방안 마련을 통해 투명성 확보가 책임성 강화로 이어지도록 설계하였다.

3. AI 결과물의 표시

인공지능 기술의 보편화에 따른 창작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해 국내외 입법 동향 및 표시 기술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모든 결과물에 대한 일률적인 강제 규제보다는 저작권 등록 및 신탁관리 등 권리관계 확인이 시급한 영역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이원적 접근 방식을 고려하였다. 아울러서 산업계의 자율적인 표준 레이블링 시스템 도입과 정책적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는 유연한 법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실연자 권리 확보

현행 법률 체계로는 디지털 모사물로 인한 실연자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어 실연자 보호 방안에 관한 입법안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모사물의 대상은 실제 실연으로 오인될 수준의 '디지털 모사'로 한정하였고,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여 디지털 모사물의 무분별한 생성을 제어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디지털 모사물을 영리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5. AI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제한

생성형 AI 등장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양상의 변화와 다양한 행위자 개입에 따른 책임 귀속의 불명확성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AI 사업자는 해당 모델이 결과물을 직접 생성한다는 측면에서 콘텐츠 생성에 있어서 능동적 행위자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수동적 중개자를 전제로 한 기존 OSP 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분석했다. 이에 현행 저작권법의 적용 가능 범주를 확인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단계에 따른 조치 의무에 기반한 책임 분배 체계 마련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향후 AI 산업의 혁신과 창작 생태계 보호를 조화시킬 실효적인 대안의 하나로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인터넷 실시간 송신 서비스의 법적 성격 재정립

영상이 포함된 인터넷 실시간 송신 행위가 현행 공중송신 개념에 그대로 포섭되기 어려운 적용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적용 범위와 법적 성격의 불명확성으로 이어져 규범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적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현행 공중송신 체계 내에서의 해석·포섭 가능성, 별도의 실시간 송신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 그리고 권리 범위 및 보상처리 기준을 보완하는 혼합적 접근을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입법적·해석론적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7. 배타적 이용허락 범위 확대

디지털 환경에서의 다변화된 콘텐츠 활용 방식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다. 발행 방식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현실을 고려하여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을 통합한 '배타적 이용권' 제도를 도입하고, 전송을 포함한 모든 이용 형태에 대해 배타적 권

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콘텐츠 비즈니스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권리 관계의 안정성을 높여 적극적인 2차 창작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8. OSP 책임 제한상의 통지 및 삭제 절차

온라인상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행 통지 및 삭제(Notice & Takedown)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현행 저작권법상의 통지 및 삭제 절차는 저작권자에게 저비용으로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자구책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SP는 이 절차를 통해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안전지대를 확보함으로써 플랫폼 운영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였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9.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신탁 관리 저작물에 특화된 등록제도의 도입, 실명 등록제도의 개선,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등록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저작권법 제54조의2 신설을 통해 신탁 등록제도를 명문화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 개정을 통해 실명·이명 등록제도를 합리화하며, 저작권법 시행규칙 및 관련 등록 서식 신설을 통해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9개 과제의 제안과 개선안이 실제 입법과 정책 집행으로 이어져,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으로서 창작자와 이용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으면 한다.

참고문헌

1. AI 학습 데이터 이용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 국내문헌 】

1. 단행본

이해완,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2019.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2023,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2012.

정진근 외, 「미래 저작권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2. 논문

고수윤, “디지털저작물에 있어 일본의 유연한 권리제한규정(柔軟な権利制限規定)의 시사점 -비향수이용 규정(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을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2019 가을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이일호·박윤석, “공정이용 판단 기준의 구체화-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에 관한 평석 -”, 정보법학, 2024.

류시원,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평석 -”, 법조, 2024.

3. 기타

최승재, “TDM 예외와 베른 협약의 3단계 테스트,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제18호, 2025.

이일호,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AI-저작권 관련 첫 선결적 판단 요청받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제8호, 2025.

박희영, “[독일] 뮌헨지방법원, OpenAI ChatGPT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 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슈리포트 2025-11, 2025.

장예영, “[일본] 닛케이·아사히 신문, 퍼플렉시티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동향 2025 제13호, 2025.

장예영, “[일본] 문화청, AI와 저작권에 관한 보고서 발표”,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슈리포트 2024-11, 2024.
타츠히로 우에노, 2025서울 저작권 포럼 자료집(생성형 AI와 저작권 : 정책),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

【 해외문헌 】

1. 논문

Matthew Sag, “The New Legal Landscape for Text Mining and Machine Learning,” 66 Journal of the Copyright Society of the U.S.A. 291, 300-302, 357-358 (2019).
Jason Wei et al., “Emergent Abilities of Large Language Models,” Transactions on Machine Learning Research (August 2022).
Carlini, Nicholas et al. (2023). “Quantifying Memorization Across Neural Language Models.”

3. 기타

P. Bernt Hugenholtz, “The New Copyright Directive: Text and Data Mining (Articles 3 and 4)”, Kluwer Copyright Blog, 2019.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도소위원회, “AI 저작권에 관한 논점 정리”, 2024.
U.S. Copyright Office,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2023, 2024.
ChatGPT Is Eating The World, 2026.1.18. 최종 접속, https://chatgptiseatingtheworld.com
일본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보고서(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報告書)」, 2017.
일본 문화청, “AI와 저작권에 관한 생각(안)(AIと著作権に関する考え方について)”,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기본문제 소위원회, 2024.03.15.
호주 법무부(Attorney-General’s Department), “Albanese Government to ensure Australia is prepared for future copyright challenges emerging from AI”, 2025.
미국 저작권청, 「제3부 인공지능과 저작권」, 2025.
유럽의회 법제사법위원회(JURI), “Draft Agenda: Committee meeting, Tuesday 23 September 2025”, JURI(2025)0923_1, 2025.

European Commission, “Call for Tenders for a feasibility study on a central registry of opt-outs under the Text and Data Mining (TDM) exception,” EC-CNECT/2025/OP/0002, 2025. 1. 23. [URL]

2.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 방안

【 국내문헌 】

1. 단행본

박성호,「저작권법」제3판, 박영사, 202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AI 학습데이터 구축 안내서」, 2025.

2. 논문

류시원,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정책 형성절차에 관한 제언,「법제」, 704, 2024.

3. 기타

한국저작권위원회,「생성형 AI 학습에 이용된 저작물의 공개에 관한 연방법안 발의(류시원)」, COPYRIGHT ISSUE REPORT 2024-16.

【 해외문헌 】

1. 논문

Ribeiro, Marco Tulio, Sameer Singh, and Carlos Guestrin, “Why Should I Trust You? Explaining the Predictions of Any Classifier,” Proceedings of the 22nd ACM SIGKD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nowledge Discovery and Data Mining, 2016.

Wang, Qin, et al., “Is Your AI Truly Yours? Leveraging Blockchain for Copyrights, Provenance, and Lineage,” IEEE Transactions on Services Computing, 2025.

Spoczynski, Marcin, Marcela S. Melara, and Sebastian Szyller, “Atlas: A Framework for ML Lifecycle Provenance & Transparency,” arXiv preprint, arXiv:2502.19567, 2025.

Chen, Wendi, Wensheng Gan, and Philip S. Yu, “Digital Fingerprinting on Multimedia: A Survey,” arXiv preprint, arXiv:2408.14155, 2024.

Ji, Tianxi, et al., “Privacy-Preserving Database Fingerprinting,” NDSS Symposium, 2023.

Peng, Zhizhi, et al., “A Survey of Zero-Knowledge Proof Based Verifiable Machine Learning,” arXiv preprint, arXiv:2502.18535, 2025.

Xiong, Haoyi, et al., “Towards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XAI): A Data Mining Perspective,” arXiv preprint, arXiv:2401.04374, 2024.

Choe, Sang Keun, et al., “What Is Your Data Worth to GPT? LLM-Scale Data Valuation with Influence Functions,” arXiv preprint, arXiv:2405.13954, 2024.

Chang, Tyler A., et al., “Scalable Influence and Fact Tracing for Large Language Model Pretraining,” arXiv preprint, arXiv:2410.17413, 2024.

Park, Sung Min, et al., “TRAK: Attributing Model Behavior at Scale,” arXiv preprint, arXiv:2303.14186, 2023.

2. 기타

Adam Buick, Copyright and AI training data—transparency to the rescu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Volume 20, Issue 3, March 2025.

Abdallah El Ali et al., “Transparent AI Disclosure Obligations: Who, What, When, Where, Why, How,” arXiv preprint, arXiv:2403.06823v2 [cs.HC], 2024. 3. 13.

3. AI 결과물의 표시 방안

【 국내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공지능(AI) 워터마크 기술 동향 보고서」, 2025.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20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2025.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323호 등) 검토보고서, 2024.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627호) 검토보고서, 2024.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713호) 검토보고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932호 등) 검토보고서, 2024.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304호) 검토보고서, 2025. 8.

권순철, "생성형 AI 콘텐츠 진위 검증을 위한 워터마크 기술의 현황", SK Shieldus, 2025

문화체육관광위원회(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048호) 검토보고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 8.

정준화, "딥페이크 식별을 위한 AI 생성물 표시 의무 입법 방안", 『이슈와 논점』, 제227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10. 18.

【 해외문헌 】

1. 단행본

Ingemar J. Cox et al., 『Digital Watermarking and Steganography』, 2nd ed., Morgan Kaufmann, 2007.

2. 논문

Agnibh Dasgupta & Xin Zhong, "Robust Image Watermarking based on Cross-Attention and Invariant Domain Learning", arXiv:2310.05395v1 [cs.MM] 9 Oct 2023.

Holger Hermanns et al., "AI Act for the Working Programmer", arXiv:2408.01449v1 [cs.CY] 23 Jul 2024.

Joseph J. Avery et al., "Attributing AI Authorship: Towards a System of Icons for Legal and Ethical Disclosure", Northwestern Journal of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22 (1), 2024.

Joseph Galen Lindley et al., “Signs of the Time: Making AI Legible”, DRS International Conference, 2020.

Kateryna Militsyna, “Can Copyright Law Benefit from the Marking Requirement of the AI Act?”, Vol. 56, International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Law, 2025.

Lianshan Liu et al., “Screen shooting resistant watermarking based on cross attention”, Scientific Reports, vol. 15, 2025.

Melissa Lawson, “A Forensic Analysis of Digital Image Characteristics Associated to Flickr® and Google Plu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Recording Arts Program, 2017.

Rongfeng WEI, “Visual Watermark Removal Based on Deep Learning”, arXiv:2302.11338v1 [cs.CV] 7 Feb 2023.

Thomas Gils, “A Detailed Analysis of Article 50 of the EU’s Artificial Intelligence Act”, SSRN, 2024.

3. 기타

Tommaso Giardini & Nora Fischer,「AI Transparency and Explainability(Operationalising the OECD AI Principle 1.3)」, Digital Policy Alert, The St. Gallen Endowment, 2024.

4. 디지털모사물(Digital Replicas)에 대한 실연자 권리 확보 방안

【 국내문헌 】

1. 단행본

박성호,「저작권법(제3판)」, 박영사, 2023.

심현주 외 3인,「지식재산법 조문별 해설서-부정경쟁장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실용신안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4.

양창수,『민법입문(제9판)』, 박영사, 2013.

이해완,「저작권법(제4판)」, 박영사, 2019.

정상조 편,『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정상조 편집대표,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박영사, 2024.
지원림, 『민법강의(제21판)』, 홍문사, 2024.
최정열·이규호, 「부정경쟁방지법(제6판)」, 진원북스, 2025.

2. 논문

권태상, “인격권 보호체계에 관한 법률적 검토”, 언론중재(Vol. 162), 언론중재위원회, 2022.
김범진, “명예훼손법상 명예·평판 개념과 그 시사점”, 저스티스(통권 제161호), 한국법학원, 2017.
김용주, “AI 커버곡과 목소리에 대한 보호”, The Journal of Law&IP(제14권 제1호),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2024.
김재형, “인격권, 그 형성과 전개”, 김재형(편), 『언론과 인격권』, 박영사, 2012.
김현숙, “AI 커버곡의 저작권법적 쟁점과 실무적 접근 방안”, The Journal of Law&IP(제15권 제1호),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2025.
노현숙,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인격권 침해 검토-초상권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제11권 제1호), 언론중재위원회, 2025.
문건영,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해석의 쟁정 및 금지·손해배상 청구권자”, 산업재산권(제75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23.
박경신, “NFT 아트와 유명인의 초상 사용의 허용 범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규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제35권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박유선, “디지털 모사권(Digital Replica Right) 도입을 통한 실연자 보호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제79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24.
박유선,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모사권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38권2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
박준석, “인격권과 구별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지에 관한 고찰-최근의 비판론에 대한 논리적 재반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제56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박준우,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으로(下)-‘영업을 위한 사용’과 ‘공정한 상관행 위반’ 및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제66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21.
박준우, “인공지능(AI)이 합성한 실연 보호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제38권 제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
심석찬, “음성 디지털 레플리카의 퍼블리시티권 적용에 관한 비교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8권 제3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5.
양천수, “인격권의 법철학적 기초-인격권의 구조·성장·분화”, 법과 정책연구(제11집 제3호), 한국법정책

학회, 2011.
윤기택, “초상권침해의 기준”, 한국사회과학연구(제40권 2호),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9.
이동명,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곽윤직(편), 「민법주해XVIII-채권(11)」, 박영사, 2005.
이재홍, “인격권침해”, 곽윤직(편), 『민법주해XIX-채권(12)』, 박영사, 2005.
정문기, “부정경쟁방지법상 유명인의 인적식별표지”, 법학논총(제46권 제4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정진우, “딥보이스·딥페이크 관련 실연자 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 산업재산권(제81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25.
조영선, “저작권법상 실연 개념에 대한 검토와 재조명”, 사법(통권 73호), 사법발전재단, 2025.
한지영, “저작권법상 성명사칭죄 및 미수범 처벌에 관한 고찰-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제26집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3. 기타

구혜나, “인공지능(AI) 커버곡과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이슈 리포트,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성호, “(박성호의 지재공방 98)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애물단지”, 법률신문, 2024. 12. 4. 기사
백지연, “[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 인공지능 관련 주요 판례(8건) 발표”, 이슈리포트(2025-7),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
이정은, “[덴마크] 딥페이크 규제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저작권동향(2025년 제8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
채수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의 무단사용행위 규제〉이철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7846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
채은선, “美 테네시주, 「초상·음성·이미지 보호 보장법」(ELVIS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디지털 법제 Brief,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특허청,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사항 안내서」, 2022.

【 해외문헌 】

1. 단행본

半田正夫, 『著作権法概説(第16版)』, 法学書院, 2015

2. 기타

Latham & Watkins, “The ELVIS Act: Tennessee Shakes Up Its Right of Publicity Law and Takes On Generative AI,” Client Alert, April 8, 2024

US Copyright Office, Digital Replicas: Copyright and Artifical Intelligence, Part1, 2024

5. AI 서비스 사업자 책임 제한 방안

【 국내문헌 】

1. 단행본

박성호, 『저작권법』, 제3판, 박영사, 2023.

오승종, 『저작권법』, 제6판, 박영사, 2024.

이해완, 『신저작권법입문』, 박영사, 2024.

최경수, 『저작권법 개론』, 제2판, 한울아카데미, 2023.

허희성, 『2011 신저작권법 축조개설』, 명문프리컴, 2011.

2. 논문

박정훈,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최근 저작권 쟁점 분석: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의 쟁점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49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5.

임원선, “한·EU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해설”, 『계간 저작권』, 제24권 제3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3.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4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 2025

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개정 저작권법 해설」, 2007.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2012.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2020.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한·EU FTA 이행 개정 저작권법 해설」, 2011.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025. 6. 30.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2025
유계환·김윤명,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 IP Focus, 제2024-06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4. 4. 29.
한국저작권위원회, "[독일] 함부르크 고등법원, TDM은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셋 작성에도 적용된다고 판결(박희영)", COPYRIGHT ISSUE REPORT 2025-18

【 해외문헌 】

1. 논문

Bingjie Xiao, "Reimagining Safe Harbors: A Systematic Review of Liability Frameworks for Generative AI". Lecture Notes in Education Psychology and Public Media. 121(1), 2025.
Christoph Schuhmann et al., "LAION-5B: An open large-scale dataset for training next generation image-text models", arXiv:2210.08402 [cs.CV], 2022.
Edward Hu et al., "LoRA: Low-Rank Adaptation of Large Language Models", arXiv:2106.09685 [cs.CL], 2021.
Eleonora Rosati, "Infringing AI: Liability for AI-Generated Outputs under International, EU, and UK Copyright Law". European Journal of Risk Regulation, 16(2), 2025.
Gabriel Ernesto Melian Pérez, "From Curators to Creators: Navigating Regulatory Challenges for General-Purpose Generative AI in Europ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Technology and E-Commerce Law, 16(2), 2025.
Herbert Zech, "Liability for AI: public policy considerations", ERA Forum, Vol. 22, 2021
Jennifer Cobbe & Jatinder Singh,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Service: Legal Responsibilities, Liabilities, and Policy Challenges",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Vol. 42, 2021.
Kavya Mohan & Jansi S, "Determining due diligence principles to enable safe harbour protection for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Publication and Reviews, 5(11), 2024.
Yang Lin & Taorui Guan, "From safe harbours to AI harbours: reimagining DMCA

immunity for the generative AI era",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20(9), 2025.
Yue Yang, "The Study of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Lecture Notes in Education Psychology and Public Media, 34(1), 2024.
Zhangzhi Yang, "Intermediary Liability for IP Infringement in the Age of AI: Duty of Care and Institutional Design", Journal of Cultural Analysis and Social Change, 10(3), 2025.

2. 기타

USCO,「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3: Generative AI Training」, PRE-PUBLICATION VERSION, A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2025.

6. 영상물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 행위의 법적 성격

【 국내문헌 】

1. 단행본

김찬동·박윤석·김세창·안진영,「공중전달 개념에 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박성호,「저작권법(제3판)」, 박영사, 2023.
박성호,「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현암사, 2006.
방석호,「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개정판)」,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손경한 편저,「방송과 저작권」, 법문사, 2016.
송영식·이상정,「저작권법개설(제9판)」, 세창출판사, 2015.
오승종,「저작권법(제6판)」, 박영사, 2024.
이원태·유지연 외,「방통융합의 사회적 이슈와 정책과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임원선,「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제4판)」,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임원선,「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제7판)」,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멀티미디어와 저작권-각국의 동향과 우리 저작권법상 문제점 점검」, 1995.

정두남·정인숙, 「방송개념 재정의를 통한 규제체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7.
정윤경, 「저작권과 방송 콘텐츠 유통」,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최경수·오기석, 「디지털방송과 저작권법」, 문화부, 2003.
한종범·이재호·이현규 외, 「방송론 : 아날로그를 넘어 디지털 뉴미디어까지」, DIMA 출판부, 2008.

2. 논문

김경숙, "미국 저작권법상 인터넷송신을 위한 권리", 「재산법연구」 제25권 제1호, 2008.
김민호·김현정, "방송통신 융합의 기술적 개념과 법적 개념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46권, 2009.
김현경,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성송신의 법적 취급에 관한 고찰", 「미국헌법연구」 제27권 제3호, 2016.
박익환, "인터넷상 방송 및 전송을 통하여 본 저작권문제", 「디지털재산법연구」 제1권 제2호, 2002.
박준석,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따른 IPTV 사업자의 법적 책임", 「계간 저작권」 통권 제85호, 2009.
박성호, "저작권법상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관련 쟁점의 재검토", 「정보법학」 제21권 제1호, 2017.
신재호, "지적재산법과 기술의 긴장관계", 「창작과 권리」 제55호, 2009.
심동섭, "개정 저작권법 해설", 「계간 저작권」 통권 제76호, 2006.
이해완, "인터넷방송의 저작권법상 위상정립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2001.
이해완, "인터넷송신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방향 연구", 「성균관법학」 제33권 제3호, 2021.
이해완·김인철·이헌묵, "디지털음성송신의 적격요건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이대희, "방통융합에 따른 저작권 법제도의 개선방향", 「산업재산권」 제21호, 2006.
이대희,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저작권 쟁점 및 전망", 「계간 저작권」 통권 제78호, 2007.
이호현, "미디어융합에 의한 저작권법상 방송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장민기, "방송 시청 트렌드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 권리 개선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조형찬, "저작권법상 공중이용제공",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지성우, "멀티미디어 시대에 있어 방송개념의 확장 가능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16권 제2호, 2004.
하동철, "방송·통신 융합시대에서 디지털 송신에 대한 저작권법 규율방안 연구", 「미디어와 경제문화」 제6권 제1호, 2008.

황근, “디지털시대에 대비한 방송법 개정 논의의 방향과 한계”, 「방송문화연구」 제15권 제2호, 2003.
윤종수, “저작권법상 방송 및 웹캐스팅의 지위에 관한 고찰”, 「정보법학」 제11권 제1호, 2007.

3. 기타

김종원, “새로운 OTT, FAST의 가치”, 「방송영상 트렌드&인사이트」 Vol.32, 2022.
김세창, “일본의 방송 프로그램 인터넷 동시 송신 관련 개정 논의 경과”, 「이슈리포트」, 2021.
㈜전자신문사·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CT 시사상식 2023」, 2022.
박희영, “유럽연합에서 방송사업자의 디지털 플랫폼 활용과 저작권 해결 방안”, 「방송문화」 제422호, 2020.

【 해외문헌 】

1. 단행본

Büscher, Wolfgang / Dittmer, Stefan / Schiwy, Peter, a.a.O., S.2116.
Ficsor, Mihály, The Law of Copyright and the Internet,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加戸守行, 『著作権法逐条講義』(六訂新版), 著作権情報センター, 2013.
半田正夫·松田政行 編, 『著作権法コンメンタール』(第2版) 第1巻, 勁草書房, 2015.
松田政行, 『著作権法プラクティス』, 勁草書房, 2009.
松村信夫·三山峻司, 『著作権法要説—実務と理論』, 世界思想社, 2009.

2. 논문

Madiega, Tambiama, “Regulating online TV and radio broadcasting”, EPRS, 2019.
「利用可能化との関係を含めて」, NBL No.1124, 2018.

3.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해설』, 1997.
WIPO, Main Provisions and Benefits of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2016.

7. 배타적 이용허락 범위의 확대방안

【 국내문헌 】

1. 단행본

박익순 외, 「출판계 권리 확대 방안 도출 연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4.
박성호, 「저작권법(제3판)」, 박영사, 2023.
송덕수, 「신민법강의(제13판)」, 박영사, 2020.
오승종, 「저작권법(제5판)」, 박영사, 2020.
장인숙, 「저작권법원론(개정판)」, 보진재, 1996.
허희성, 「신저작권법 축조개설(上)」, 명문프리컴, 2011.
한국저작권위원회, 「배타적발행권에 관한 연구」, 2012.

2. 논문

박성호, “전자출판의 법적 의미와 그 한계‘, 정보법학 제14권 제2호, 2013.
한지영,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에서 라이선시의 법적 보호”, 「계간 저작권」 통권 103호, 2013.

3. 기타

김혜선, “저작물의 배타적 이용에 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박성호, “(48) 저작권법 분야에서 오용(誤用)되는 ‘매절’(買切)이라는 용어”, 법률신문, 2023.11.22.자.
박익순 외, “배타적발행권 본격 도입 8년, 출판권과의 통합이 필요하다”, 「저작권 문화」, vol. 313, 2020. 9.

【 해외문헌 】

1. 단행본

K. Fromm/W. Nordemann, Urheberrecht, 13., überarbeitete Auflage, 2024.
半田正夫·松田政行 編,『著作権法 ゴン^ンタール 2』第2版, 勁草書房, 2024 .
中山信弘, 著作権法 第3版, 有斐閣, 2020.

8. OSP 책임 제한 규정상의 통지 및 삭제 절차 운용 실태

【 국내문헌 】

1. 단행본

박성호, 「저작권법」 제3판, 박영사, 2023.
박준석, 「인터넷상 정보유통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 규율 방향 모색」, 집문당, 2015.
오승종, 「저작권법」 제5판, 박영사, 2020.

2. 논문

나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 체계 개선에 대한 소고」, 『동아법학』 제80호, 2018.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 이용과 관련한 언론 출판물의 보호(박희영)", 『저작권 동향』 2019-6.

3. 기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11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 2011.5.
한국저작권위원회, 「OSP 책임 제한에 관한 입법 동향」, 2022.

【 해외문헌 】

1. 논문

Madiega, Tambiama, "Reform of the EU liability regime for online intermediaries – background on the forthcoming Digital Services Act –",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May 2020.

2. 기타

European Commission,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COM(2015) 192 final (2015.5.6.).
European Commission, "Guidance on Article 17 of Directive 2019/790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COM(2021) 288 final, Brussels (2021).

9.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 국내문헌 】

1. 단행본

최진원·강보라, 「2023 저작권 등록 심사 편람」,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오승종, 「저작권법(제5판)」, 박영사, 2020.

2. 논문

최준규, “민법의 관점에서 본 저작권 신탁의 법률관계-대법원 2006.7.13. 선고 2004다10756 판결 및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다1272 판결-”, 저스티스(제192호), 2022.
서달주, “저작권법상 권리변동 등록제도의 문제점-포괄신탁과 관련하여-”, 계간 저작권(제91호), 2010.
최승수·이규호, “저작권법상 등록제도의 제3자 대항력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제121호), 2018.
김병일 외 3인, “K-콘텐츠의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저작권 등록제도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24.
박준우, “인공지능(AI) 활용 저작물의 편집저작물성과 구성요서의 선택·배열”, IP&Data법(제5권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김윤명, “AI생성물의 저작권 등록의 입법방안”, 입법과 정책(제15권 제2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3. 기타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

【 해외문헌 】

1. 단행본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2023.

DX, AX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 연구

발 행 일 : 2026년 2월
발 행 처 :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인 쇄 : 행복한 나무

I S B N : 979-11-6357-783-6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DX, AX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비매품/무료
93010
9 791163 577836
ISBN 979-11-6357-783-6